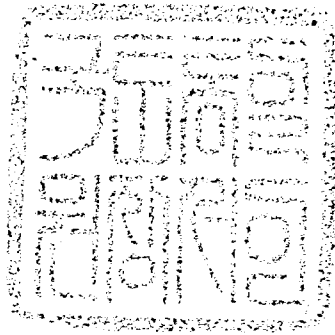


東西獨關係文獻集

(1)

1973. 9



머 리 말

1. 이 資料集은 西独의 統独政策 및 東西独 接觸關係의 主要 文을 翻譯·發刊計劃의 一環으로 發刊한 것임.
2. 이 1輯에 収録된 文獻은 「에어푸러터」 및 「캅셀」 東西独正常會談을 前後하여 東西独間의 往來한 主要書信, 公式 發表文等を 包含하고 있으므로 東西独接觸의 經緯를 아는데 좋은 資料가 될 것임.
3. 當院에서는 東西独問題뿐만아니라 統韓問題研究의 參考資料로 서 東西独關係의 主要文獻을 앞으로 繼續하여 翻譯·刊行할 計劃임.

차 령

연방공화국수상 브란트, 정부선언 (1969.10.28)	1
프랑케장관, 독일연방공화국 국회에서의 연설 (1969.11. 5)	43
독일연방공화국 기민당/기사당 원내교섭단체 총무 라이너바르첸박사, 전구라파를 위한 평화와 안전에의 기여에 대한 연설 (1969.12. 7)	47
독일연방공화국 국회사회민주당 원내교섭단체 (원내)총무 헤르베르트 베에너, 분할 된 독일에 있어서의 정치의 제가능성에 대한 연설 (1969.12. 7)	62
독일사회주의 통일당 (SED 독일공산당) 중앙위원회 (ZK)제일서기 (장) (동독)의 연설 (1969.12.12)	79
독일민주주의 공화국 국가위원회 의장 울브리히트, 독일연방공화국 하이네만 대통령 에게 보낸 편지와 조약의 초안 (1969.12.17)	131
연방공화국장관 프랑케, 독일연방공화국 국회에서 연설 (1970.1.15)	137
연방공화국의 Scheel장관, 독일연방공화국 국회에서 행한 연설 (1970. 1.15)	148
독일민주주의 공화국 국가위원회의장 울브리히트, 국제신문회의에서 행한 연설 (1970. 1.19)	162
독일연방공화국정부의 성명 (1970. 1.19)	182
브란트 독일연방공화국수상,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내각수반 (수상) 슈토프에게 서한 을 내다 (1970. 1.22)	184
셰엘 연방정부장관, 독일 외교정책의 현실문제에 대한 강연 (1970. 1.28)	186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내각수반 (수상) 슈토프, 본의 브란트 독일연방공화국 수상에게 서한 (1970. 2.11)	205

독일 연방공화국 브란트수상, 독일 민주주의공화국 슈토프에게 서한 (1970. 2.18)	209
독일 연방정부 대변인의 성명 (1970.2.18)	211
프랑케장관,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의 회담에 응할 용의 (준비) (1970. 2.19)...	213
독일 민주주의공화국 내각차관 코울,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실 책임자에게 서한 (1970. 2.20)	219
엠펜게장관, 독일 민주주의공화국 내각실차관 코울에게 서한 (1970.2.20)	220
브란트수상, 독일 연방공화국 국회에서 연설 (1970. 2.25)	221
브란트 연방공화국수상, 독일 민주주의공화국의 슈토프 수상에게 서한 (1970. 3. 8)	243
독일 민주주의공화국내각의 성명 (1970. 3. 9)	244
독일 민주주의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 대표단의 콤포니케 (1970. 3.12)	247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대변인의 성명 (1970. 3.12)	248
독일 민주주의공화국의 슈토프수상, 에아푸르트 회담에 즈음하여 원칙적인 제문에 대한 견해외력 (1970. 3.19)	249
브란트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 에아푸르트 회담에 즈음하여 원칙적인 문제에 대한 기조 연설하다 (1970. 3.19)	279
에아푸르트에서의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과 독일 민주주의공화국 수상간의 회담에 관 한 공동 콤포니케 (1970. 3.19)	299
브란트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 독일 연방공화국 국회에서 성명 (1970. 3.20)	300

독일 민주주의공화국 내각수반 (수상) 슈토프, 인민의회에서 보고를 행하다
(1970. 3.21) 305

프락제장관,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슈피겔지와와의 인터뷰) (1970.3.23) 324

연방공화국 수상, 브란트 정부선언 (1969. 10. 28)

빌리 브란트 수상은 1969년 10월 28일에 개최된 독일 연방공화국 국회(하원) 제5차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정부선언을 행했다.

국회의장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우리는 독일 연방공화국(서독)의 안전과 독일민족의 단결을 유지해 나갈 굳은 결심을 갖고 있으며, 또한 평화를 유지하고 구라파의 평화질서 확립에 협동하고 우리 민족의 자유권과 복지를 신장하여 내일의 세계에서 독일이 차지할 위치가 인정을 받고 동시에 보장되어지도록 할 굳은 결의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은 일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항상 새로운 변화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유연성을 지닌 정책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년간의 업적》 지난 여러해 동안의 연방공화국과 각 주(州)들과 그리고 시·읍·면들에서 행해진 즉 우리 민족의 각계 각층이 망라되어 이룩해 놓은 업적에 대하여 우리의 존경을 표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이 걸어온,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길을 밝혀준 많은 선구자들의 대표자로서 본인은 여기에 「콘라드아데나워」, 「테오도르 호이스」, 「루트 슈마허」와 같은 분의 이름을 들고자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이루어진 여러가지 업적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또한 의심하거나 과소 평가할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업적들은 이제 역사(歷史)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유주의적인 기본질서는 9월 28일에 다시 한번 그 연속성이 인정되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싸워나가야 할 극단주의자들을 유권자들이 분명하게 거부하고 나선데 대하여 본인은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세계에서 받은 신임》 우리의 의회 정치에 입각한 민주주의는 독일 연방공화국이 건립된지 20년이 지난 오늘날 변천에 때를 맞추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였으며, 따라서 그가 당면한 시련을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훌륭히 이겨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나라 밖에서도 또한 주목되어졌으며, 따라서 연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어진 것입니다.

의회정치에 입각한 민주주의의 제 형태(제도등)들을 엄정하게 지키는 일은 사실 이제 100여년째 독일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해 오고 막심한 희생을 치러 가면서 지키고 그리하여 많은 고생과 노력을 다하여 다시 민주주의를 재건해 낸 우리 민족의 정치사회로 볼 때는 자명하고도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까.

정부와 정부에 당이 한편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야당이 서로 자리를 따져서 반대적 입장을 취하고 거족적으로 또한 협동해 나가면서 우리 독일 연방공화국에(희망찬) 훌륭한 내일(장래)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의 책임이며 또한 과제입니다.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제 목적을 다하기 위하여 입법부와외 성실한 협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화국 정부는 독일 연방공화국 의회와(하원) 그리고 또한 상원(각 주 수상의 연방제인)에 대하여도 물론 효의적인 뜻을 표하여 두는 바입니다.

우리 민족은 세상의 그 어느 민족이나 다 그러하드시 내적인 질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0년대에 우리는 이 나라에서 상호의 공동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을 수 있을 만큼의 질서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민주주의적인 질서는 남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비상한 인내를 필요로 하며 또한 서로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비상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의 개혁>> 우리는 지금까지 보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천에 옮겨 보도록 과감한 노력을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취하고 있는 정책이나 일 처리의 방법(Arbeitsweise)을 공개하고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이와 같은 필요에 응할 수 있는 응분의 충분한 백려를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연방공화국 국회(하원)에서 행해지는 청취같은 일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제(諸) 대표적인 「구류」들과 항시 접촉을 하고 또한 연방공화국 정책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알려 들임으로써 모든 시민이 국가와 사회의 개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도록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기성세대의 책임이 있지 않고 또 그러한 짐이 지워져서도 안되기를 평화스럽게 성장하여 자라난 세대들에게 호소하는 바이다. 즉 젊은 세대들은 우리의 말을 사실 그대로(액면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젊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즉, 그들도 국가와 사회에 대하여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선거권 행사 연한을 내리다》 선거권 행사 연한(즉 선거권 연한)을 21세에서 18세로 내리고 피선거권 행사 연한(피선거권 연한)을 25세에서 21세로 내리도록 하는 내용을 가지는 법안을 우리도 본 국회에 앞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성년(成年)연한 규정을 또한 재 검토할 것입니다.

《공동(연대)책임감의 강화》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경영등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 결정(권)과 공동 책임등은 앞으로 더욱더 협력에 대한 역동(力動)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원전하) 완벽한 민주주의를 이룩해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많은 자유를 제공해 주는(향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다 많은 공동의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연방공화국 정부는 상호 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책임을 느끼고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비판적인 파트너 관계(Partner schaft)를 이룩하도록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예술과 학문과 경제, 다시 말해서 이밖에도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이러한 대화와 상호의 비판적인 파트너 관계를 모색코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노동 조합들에도 또한 적용되는 것이며, 우리는 이를 노동조합들과 상호 선의에 찬 협동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 여러 노동조합들이 나라에 대하여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고 그리고 이 나라를 계속 발전시켜 사회적인 법치 국가로 커나가게 하는데 남다른 의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은 여기에 새삼스럽게 증명하여 밝혀 둘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행해져야 할 일들을 우리가 성취하려면, 우리는 우리 사회의 모든 능동적인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힘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세계관적인 확신이나 종교적인 확신에 대하여 이를 허용하고 솔직한 태도를 취하려는 사회는 이웃에 대한 연대 책임감에 입각한 봉사를 하는데서 그 실이 입증되는 윤리적 힘에 그 바탕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나 가정에서 청소년 활동분야에서나 혹은 교육부문에 대하여 행하여

지는 교육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의 과제로 생각하는 분야로서는 특히 늙은이들과 병든 사람들과 그리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 성장 발육이 저해받은(불구)자들이 어려울 때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협동에 의한 연대 책임같은 뒷받침이 필요할 때, 더욱 우리의 공동과제가 주어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국(自國)내에서 뿐만 아니라 발전도상 국가나 저개발 후진 국가들에 있어서도— 인간을 위한 일에 중사(봉사)하는 데서 교회와 사회의 각층이나 세 구름들이 정치적인 행동으로서 서로 협동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제 세력(계층)이 바라는 정당한 그리고 근거있는 소망들과 연방공화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意志)가 하나로 통일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끊임없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현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히틀러 정권에 의하여 자행된 민족적 배반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독일 국민에게 제기된 문제들이 중궁적으로 하나의 구라파 평화질서의 형태로서만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다(즉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논점으로 그 시발을 삼는 것입니다. (즉 현 정부의 기본태도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독일 국민이 세계의 다른 모든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민족적 자결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부터 확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 << 민족의 통일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앞으로의 몇년 동안에 행해 나가야 할 실제적인 정치의 과제는 현재 처하고 있는 동·서독간의 정체된 경연상태에서 벗어나가야 함으로써 동·서독간의 제 상황이 개선되어 민족적 일체로서의 통일성(Einheitlichkeit)을 유지해 나가는 일입니다. 우리 독일 사람들은 언어와 역사를 통해서 —그 영광된 역사와 치욕의 역사를 포함하여— 서로 일체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모두가 독일이라는 이 나라에 그 삶의 터전인 본 고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아직까지도 공동의 과제와 공동의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독일인들 간의 평화와 구라파에 있어서의 평화를 위한 공동의 과제와 책임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 ^{민주}인민공화국(DDR = 동독)이 세워진지 2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우리 독일 민족이 앞으로도 계속

하여 서로 분리 분할되어 생활하는 상황을 막도록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법칙에 따라서 병존하여 살고 (Nebeneinander)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함께 같이 살 수 있는 상황 (Miteinander) 에 도달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독일 사람들에게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구라파에 있어서의 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동·서 양진영간의 관계에 대하여도 또한 중요한 의미 (意義) 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독이 국제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관계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우리 우방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 (태도) 에 대한 동독 자신의 태도 여하에 상당히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우리 동족 (同族) 인 동독 사람들이 국제적인 무역과 문화교류상 차지하고 있는 여러가지 유리한 이점 (利点) 들을 빼앗으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 << 동독과의 협상을 노력한다. >> 현 연방공화국 정부는 1966년 12월에 당시의 키징거 수상과 그분이 영도하던 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창도되어진 정책을 계속 수행해 나가며, 동독 내각에 대하여는 아무런 차별대우를 둠이 없는 정부 차원의 협상을 동·서독이 상호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 제안하는 바이며 이러한 협상을 통하여 협정체결이 되고 따라서 협약에 의한 협동이 가능케 할 그러한 협상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독일 연방공화국 (서독) 정부가 동독 (DDR) 을 국제법상으로 승인한다는 것은 고려되어 질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독일에 두개의 국가 (Zwei staaten) 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두 국가는 서로가 외국은 아닌 것입니다.

이들 두 국가가 상호 갖는 관계는 단지 특별한 종류의 관계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결코 외국간의 관계와는 다른 것입니다.

요전번의 연방정부 (선임정부) 의 정책에 뒤이어 현 정부는 무력과 폭력의 사용과 이외 이용을 기화로 하는 위협을 상호 포기할 것에 관한 구속력 있는 협정 (조약) 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은 동독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여기에 선언해 두는 바입니다.

√ << 백림 (베를린) 입장의 개선 >> 연방공화국 정부는 미국, 영국, 불란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해줄 것을 권고할 것입니다. 즉 이를 세나라가 백림의 현상을 완화시키고 또 개선할 것에 관하여 이왕에 시작한 소련과의 회담을 강력히 강조하여 앞으로 계속하도록 권고코자 하는 바입니다.

4대국의 특별한 책임하에 놓여 있는 백림시(市)의 (현상) 법적일장은 불가침한 것으로 계속 남아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者註: 백림에 대한 공산측의 부당한 임의적인 점령이나, 상황의 악화 조직등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이같은 백림의 법적 지위로 인하여 백림시내에 있어서의 교통과 백림으로 통하는 교통의 어려움을 개선 완화하자는 시도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백림시의 생활능력을 계속 확보하여 놓을 것입니다. 서 백림은 독일의 양부분 (즉 동·서독)의 정치, 경제, 문화관계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가능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동·서독간의) 내독 무역이 다시 증가되는 것을 환영합니다. 1968년 12월 6일에 이루어진 협약을 통하여 성취된 여러가지 관계개선들도 역시 이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는 이웃간의 무역관계가 계속 확장되어가는 것을 소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독일 정책 >> 우리는 지금까지의 전독관계성(全獨 關係省)을 이부가 지니고 있는 과제와 사명의 성격에 따라서 내독 관계성(內獨 關係省)이라고 이름을 고쳤습니다. 독일 정책(Deutschlandpolitik) 전체는 한 부의 관할 소관일 수는 없습니다.

이 독일 정책은 행정부 전체의 상임과제이며, 여기에는 외교정책과 안보정책 그리고 구라파 정책의 제 측면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 민족의 단결을 도모하고 분할된 독일에 있어서의 제 관계와 이의 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제 노력도 또한 이 독일 정책의 제 측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독일 연방공화국내에서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여러가지 개혁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꼭 필요한 개혁을 이행하고 생활면에 있어서의 복지수준을 계속 높이는 일은 경제가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재정이 건전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튼 이 정부는 어려운 경제

정책적인 문제들을 선임 정부로부터 위임 받았읍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신속한 행동을 강요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제부터 독일 화폐(DM)의 평가는 8.5% 상승되어졌읍니다. 세금 부담을 조절함으로써 대외 무역에 대한 보장조치를 취하던 것을 이제 종국적으로 철회했읍니다.

우리는 경제안전과 성장 촉진법의 제 요구조건을 이행할 것입니다. 이 법은 제5대 독일 연방공화국 국회의 개혁 업적의 하나로서, 만약에 전체 경제에 있어서의 균형상태가 위태롭게 될 때에는 행정부가 행동으로 이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러한 의무가 1969년초부터는 그런데 등한시 되어져 버렸읍니다.

지난 금요일인 10월 24일에 정부가 행한 결정은 국제 대차(貸借)면에 나타나 있던 불안전 상태를 중식시키고 따라서 근본적인 불균형 상태를 제거하게 됩니다.

대외 무역적인 관점에서 볼것 같으면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세계 무역을 계속 한결음 더 나아가 자유화 시키고 세계 통화체제를 안정화 시키는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입니다.

국내 경제적인 입장에서 볼것 같으면 화폐 절상 조치는 1970년도의 가격발전(추세)를 둔화시킬 것입니다. 이 전번의 연방공화국 정부가 적시에 행동했더라면 아무튼 보다 많은 일이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홀히 된 일들로 말미암아 가격발전의 추세로 보아 최고가격으로 치달는 상대는 도리어 앞으로 우리에게 닥아올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화폐 절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상(商) 경기 상태는 계속 극화되어 결국에는 상당한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위험한 상태에 빠져들어 갈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 및 재정정책상의 긴급조치〉 우리의 목표는 침체상태에 빠짐이 없이 안정을 도모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목표에 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우리의 경제 및 재정 정책상의 긴급조치가 취해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품과 물품공급이 국내시장의 형편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개조 내지 개편되도록 하는 일을 장려하는 재정 정책

2. 독일 화폐 (DM) 의 절상조치 이후에 나타난 상태 변동에 적절한 자료 및 (신용) , 대부정책에 관하여 독일 (중앙) , 은행과 계속 협의할 일
 3. 소위 집중조치 (Intensivierung) 라고 불리는 조치의 테두리 안에서 노동조합들과 기업가 협회들과 행해진 협동은 유용한 것이었는데 이러한 협동을 앞으로 계속하여 나갈 것이며 또한 더욱 집중적으로 가치있게 추진해 나갈 것임. 여기에는 장차 농업부문의 대표들도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4. 연방과 각주들과 그리고 각 시·읍·면들간의 공식성격을 띤 (상업 - 산업) 경기위원회에서의 협동을 심화시키는 일
 5. 독일 연방공화국 (서독) 정부는 구주 공동위원회 가맹국가들간의 보다 강력한 협동과 그리고 세계 화폐 체제가 꼭 이루어야 할 앞으로의 발전부문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동하는 일
- 독일 화폐 (DM) 의 절상조치는 농업부문에 대하여 일종의 수입 균형조치 (Einkommensausgleich) 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 訳註) . 우리 독일 농부들에 대하여 우리가 취해야 하는 의무는 그렇지만 로마에서 체결된 구주 공동위원회 조약과 조화 (일치)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 구주 공동위원회 》 구주 공동위원회는 독일 농업이 (이와 같은 화폐 절상조치로 말미암아 수입 - 訳註) 수입상의 손실 (Einkommensverlust) 은 완전히 변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협의를 거친뒤에 이 구주 공동위원회는 오늘 아침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 대표단의 제언에 따라서 우선 6주 동안의 사이에 적용될 잠정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지금까지 통용되어 온 화폐의 환율에 따른 가격이 계속 그냥 적용될 것이며, 그리고 이 가격은 경계 균형대체 (Grenzausgleichssystem) 를 통용하여 보장될 것입니다.

이 잠정조치기간이 지난 뒤에는 독일 농업은 수입균형 조치의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균형조치는 부분적으로는 부가세법 (Mehrwertsteuergesetz) 을 고침으로써 취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개별 항목별로 보아 어떻게 행하여 질 것인가에 관하여는 곧 이 국회와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도 남은 부분에 대하여는 직접으로 균형조치

지불을 함으로써 변제할 것이며, 여기에는 공공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구주 공동위원회는 장기조치에 필요한 세부 개별 사항을 확정짓기 위하여 곧 다시 모임(회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가 여러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강력히 뒷받침하여 제출한 제안인 지금까지의 가격수준을 경제균형 체계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유지하자는 안건을 유감스럽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주 경제공동체(EWG)의 회원국들과 동 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치가 장기적으로 위하여 진다면 이를 통하여 공동 농업정책과 공동시장의 기초가 뒤흔들리고 마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농업정책》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타협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즉,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농업시장의 집중화와 경기 및 화폐정책간에 결여되어 있는 상호협동이 양자사이에는 모순되는 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주 경제 공동체(EWG)의 범위안에서 취해지는 농업정책의 앞으로의 발전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경제 및 화폐 정책면에서 취해지는 발전에 입각하여(즉 이를 참작하여)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농업구조 정책에 대한(민족)국기적 책임이수 제도를 만드는 것이 여전히 독일 정부가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농업(경제)의 꼭 필요한 구조개선을 취하는 경우에 결코 가격 압박(Freisdruck)정책이 행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공동 경제시장이 계획보다 먼저 실현됨으로써 독일 농업이 내포하고 있는 내적인 적응에 관계되는 여러가지 문제들(Anpassungsprobleme)들이 의심할 여지없이 훨씬 첨예화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독일 농업이 지니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독일 농업이 극복해 나갈에 있어서 이를 돕는 일을 우리는 미할 수 없는 일로 생각합니다(즉 정부는 농업부문에 원조를 제공해야 합니다. - 認註).

독일 농업은 일반적인 수입발전과 부지의 발전에 전체적으로(완전히) 참여하는 우리 독일의 현대 국민경제에서 다른 부문과 똑같은 수준의 한 부문으로 발전되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5개 항목에 걸쳐서 그 개략을 받아들인 바의 긴급조치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대하여 취한 현 정부의 확실하고도 명확한 제안이라고 하겠습니다.

항상 (변화) 발전을 보이는 경제는 사회발전을 위한 가장 좋은 기틀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발전은 개인 (사유)기업이 취하는 이니시아티브와 어느 정도의 위험에 대처할 자세와 그리고 업적과 능률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발전게진되어 나갈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언제나 (변화) 발전을 나타내 보이는 경제는 일자리 (직장)를 보장해 주며,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짐중하는 지출에 직면하여 수입의 검증과 절약의 짐중을 보호하게 됩니다 (즉, 수입이 늘어나고, 절약과 저축도 늘어나도록 해줍니다. - 訳註).

《효과적인 경쟁》 장기적인 입장에서 볼때 안전과 성장이라는 것은 제기능과 구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장 경제질서의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대내·외적으로 효과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경쟁 (능력)이야말로 국민경제와 업적 (실적)을 내는데 가장 틀림없는 보장이며 이는 또한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국·내외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보호 (무역)적인 경향에 대하여는 우리는 분명한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바입니다.

경쟁제한을 반대하는 법은 현대화 되어 질 것입니다. 기업의 집중화는 물론 많은 부문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효과적인 경쟁을 제거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사등의) 합동을 사전에 콘트롤 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콘트롤 조치는 경제 전체 분야에 걸쳐서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독립된 중앙기구 (위원회 = Monopol-Kommission)를 세우는 것이 이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될 것입니다. 시장을 지배 (독점 등) 하고 시장에서 강력한 입장을 갖고 있는 분야들이 부당한 행위물 하는데 대한 콘트롤 (통제)은 더욱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이와는 달리) 업적 능률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들이 행하는 협동은 그리고 수공업과 상업의 경우에도 쉽게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협동이 소규모 기업등의 합동 과지 조치같은 것이 취해짐으로써 실패에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않되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경쟁에서 동일한 손발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또한 실제면에서 경외당하는 경우에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합동 통제 (Fusionskontrolle)는 매스컴의 경우에도 또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 정부는 언론권리 종합법 (Presserechts-Rahmengesetz)을 제한한 계획입니다. 텔레비전의 경우 새로운 공학기술의 가능성들이 사회에 최대 최선의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문제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공익의 이해가 우선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활동 법 (을) (Kartellgesetz)을 보다 낮게 고침으로써 효율적이고도 건보적인 중류층 (을 위한) 정책 (Mittelstandspolitik)을 수행해 나가는 도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이러한 법이 그 도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 訳註). 이와 같은 기초에 바탕을 두어서 재정지원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앞으로의 조치와 자문기구의 확장을 위한 조치와 그리고 기업 (즉)과는 관계없이 자립활동자들을 위한 양로보장 (Alterssicherung)이 더욱 효율적으로 조치 되도록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계획적인 재산정책 (Gezielte Vermögenspolitik) >> 현 연방 (공화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중요점에는 계획적인 재산정책을 위한 노력이 포함됩니다. 넓은 대중층에 있어서의 재산형성 - 특히, 피고용 노동자층에 있어서 - 은 아주 (완전히) 불충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중층에 있어서의 재산형성 (즉 넓은 대중이 자기 재산을 모아서 돈을 혹은 재정능력을 갖도록 하는 일) 강력히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정부는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연방 정부는 재산형성법 (Vermögensbildung)을 확장 보완하기 위하여 법초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이 재산형성법의 개정 초안에서는 그 첫 조치로서 지금까지 312 마르크 (DM)이던 재산형성 업적을 624 마르크로 올릴 것입니다.

연방 정부는 노동조합들과 고용주들이 정부의 이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기대합니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재산형성은 다음과 같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그 구조가 짜여져야 할 것입니다(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와 동시에 경제(분야)에 있어서 자본형성(Kapitalbildung)이, 그리고 참여 가치면에서(자본의)투자가 쉽게 될 수 있도록, 그러나 법적으로 강제저축조치(Zwangssparen)를 취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주의 사회질서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견해로는 저축(절약)은(그) 자체적으로 일반저축 강령조치에 포함되어 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건축저축(Bausparen)의 제 가능성들이 확장되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재산정책(Vermögenspolitik)에 대한 여러가지 제안(건의)이 그리고 특히 저축장려에 꼭 필요한 개혁과 관련하여서도 그 가능성이 모색되어 지고 있습니다. 저축자 보호(조치)를 개선(改善- 좋게, 유리하게 함)하고 그리고 주식시장(Börsenwesen) 제도를 개혁하는 일은 이점에 있어서 중요한 보조조치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양성, 수련)교육과(본습, 성인)교육》(Ausbildung und Fortbildung)(고도로) 발달된 사회에 있어서 계속적(장기적)인 안전이라는 것은 변화시킴으로서만이(veränderung-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즉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창도해 내는 변화시키는 일- 사회의 여러가지 면이나 제도등에서-을 뜻한다-訳註)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70년대에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경제사회의 변천은 우리들 모두에게 대한 일종의 도전(Herausforderung)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변천은 개개인의(독자적인)이니시아티브가 없이는 결코 극복되어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즉 한나라 한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주체적 참여로 이 변천에 뒤집이 없이 사회발전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함-訳註). 그렇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개인들마다의 주체적 이니시아티브는(정부외)정책상의 뒷받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결코 남으로부터 보호와 원조를 받고만 사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사는 누구나가 다 저마다의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그냥 그들의 운명에 내팽겨쳐

(방치)적서는 압되지 않습니다.

70년대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경제적 장래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고 특별히 집중적으로 양성교육과 성년교육 그리고 연구와 혁신을 우리의 책임으로 수행코자 하는 바입니다.

이점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간에 아직도 존재하고 교육상의 차(差)가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상당수의 잠재능력을 동원하고 그리고 모든 개인이 갖게 되는 저마다의 기회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안정(일관성 있는 연대책임 같은 안정 - Solidarität)만이 우리 정부가 취하는 재정정책의 기본 노선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의 우리 정권이 어느 특정한 측에서 주장하는 것 보다는 덜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이자리에서 비밀로 해 두어서는 압되지 않습니다.

현(연방) 정부는 우선 다음과 같은 두가지 과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첫째로 1969년에서 1973년까지를 위한 중기(中期)적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1970년 연방정부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바입니다.

《중기적(즉 단기나 장기가 아닌) 재정계획의 수립》 새로운 중기 재정계획은 우리(정부)의 정치적 목표를 숫자로 표현해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지난번에 이루어진 중기 재정계획을 세울때 고려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던 점들이나 혹은 그때까지는 아직 사대를 전망할 수 없었던 여러가지 점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1. 1968년에서 1972년까지의 기간을 포괄한 지난번의 재정계획에는 지난번 정부에 의하여 작년에 취하여진 많은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현 정부는 제 5대 국회가 내세운 일련의 정치적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재정 가능성을 조사 체크해야 합니다.
3. 국민 농업정책을 위하여 1969년도(국가) 예산에는 34억 DM가 계산되어 있고 내년도의 재정계획개산(概算)으로 보아서는 27억 DM만 주어지는 것인데, 농림 장관이 지난 행정부로부터 물려받은 문헌(도큐먼트)에 의하면 이 액수는 절대 부족한 금액입니다. EWG의 시장질서를 위하여 앞으로는 분리하여 명시해

야 할 지출금액은 1970년에는 지금까지 보다 14억DM가 더 많은 것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4. 독일 화폐의 가치절상 조치가 지연되므로 인하여 연방(국가)예산에는 상당한 부담이 생겨났습니다. 화폐 절상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시장에 나타난 상황의 결과로 공무(상) 부문에는 지불금 부담이 늘어났고, 농업에 대하여 지출되어야 할 상대(균형) 보조금의 액수는 금년초에 보다 지금이 훨씬 높은 액수에 달한다.

<<세제개혁>> 의원 여러분! 지난 회기동안에 공시된 세제 개혁(Steuerreform)을 현 행정부는 실현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또한 사회적인 법치국가 건설에 대한 헌법의 규정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금하는 재산(Vermögen)을 몰수나 차압같은 역할을 하는 세제조치로서 침해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선 우리는 세제 개혁 위원회가 완성할 보고서를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우리의 목적(표)은 공평하고 간단하고 그리고 일목 요연한 세금체계(Steuer-system)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개혁된 납세조치(Abgabenordnung)법안이 곧 제출되어 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합리적인 경영을 하고 그리고 현대적이고 비용절약 방법을 사용할 것 같으면 공익예산(öffentlicher Haushalt)은 1969년도의 세금부담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앞으로 몇년 사이에 생겨날 재정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세제 개혁 위원회가 하는 일을 앞질러 타치함이 없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변경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1. 1964년이래 변하지 않고 연 240 DM로 되어 있는 노동자(피고용자)의 면세금액(Freibetrag)은 1970년 1월 1일부터는 두배로 되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피고용자(노동자)에게 유리하도록 사회 균제(均齊)를 이룩하기 위한 꼭 필요한 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2. 1970년 1월 1일부터는 지금까지 보충납세의무관계로 통하던 수입한계(Einkommensgrenz)도 중류층 수입자들을 위하여 두배로 올릴 것입니다. (면세점의 인상-誤註)

1970년 12월 1일부터는 이 보충납세 규정은 완전히 철폐되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치는 원래 1966년에 있었던 재정 경제상의 위기가 있는 후에 연방(정부)의 예산을 전전하게 하기 위하여 시행하게 된 조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연방과 각국의 그리고 시·읍·면의 관심시간에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조 조치인 것입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도 상원(각주 수상들로 이루어지는 제2의 의회 입법기관)과 유용한 협동이 행하여 질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중앙부(部)의 수>> 개혁이라는 문제가 논의될 때에는 정부는 스스로 문제를 제기해 보아야 합니다. 중앙부서(각부)의 수가 감소되었으며, 부서 관할소관에 대한 첫 정리조치가 시도되었습니다.

우리는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한정하고, 또 이중 일을 피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노력을 계속 진행시켜 나갈 것입니다.

(연방)수상실과 부들은 그 구조면에서 그리고 그 업무면에서 현대화 되어갈 것입니다.

지금 통용되고 있는 관할소관과 그리고 앞으로 새로 구성될 내각위원회들의 구성과 직무 분야들을 밝혀줄 개의를 앞으로 국회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통합이 되어 하나의 연방부(성)가 될 체신부와 교통부의 경우 지금까지는 분리되어 있는 관할분야를 통합하려는 노력이 벌써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체부문과 장거리 통신부문은 중앙부의 통괄이 정치적으로 필요 불가결한 경우에 한정되어 진다면 지금보다는 우리 사회를 위하여 그 맡은바 임무를 보다 넓게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방(우)체신부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경제적인 면에서 보는 기업적인 실행도 쉽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연방 정부는 연방 우체당국에 새로운 법적 형태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면에 있어서의 몇가지 변경조치는 우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편리와 우체국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이해에 보답하게 될 것이며, 이와 같은 변경을 준비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박해 이주민 부(Vertriebenenministerium)는 내무부에 합병되어 질 것입니다.

전(前)차관 Nahm 박사가 여기에서 자기가 하던 이전의 직무분야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태도를 밝혔는데, 나는 이를 환영합니다. 현(연방)정부는 추

방자(옛독일 영토지역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추방되어진 사람들, 즉 체코슬로바키아나 유고등의 동구라파 공산지역등에서 - 訳註), 피난민, 그리고 전쟁부상
상자들에 대하여 정부가 지니고 있는 책임을 계속 의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관할부서에 관하여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여러가지 조치를 완성
할 것입니다. 정부는 피해보상과 그리고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를 대상으
로 할 법률제정이 동독으로부터 온 피난민들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정당하게 제정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뿐만 아니라 동독이 행하는 문화적 업적이나
가치있는 일들이 유지되고 발전 전개되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
인 노력을 또한 장려할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금번 회기동안에 연방과 각주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치가들과
그리고 행정관리들과 학자들이 그 회원이 될 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연방공화국(서독)의 국가구조의 앞으로의 발전에 대한 제안을 연
구제의토록 하는 임무를 수행토록 할 것입니다.

《각주의 새행정개편》 주 귀속 개편을 위하여는 우리의 기본법 제29조에 명
시되어 있는 바에 따라서 행할 것입니다. 행정개혁과 공공사회법 개혁의 경우는
우리가 제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행정개혁과 공공사회법 개혁은 둘을 서로 종합하여 다룰 것입니다. 경력개혁
(Laufbahnreform)의 경우는 능력원칙이 보다 더 강조되어야 겠으며, 인사처리
는 보다 유연성 있게 해 나가고, 인사결정(Personalentscheidung)은 또한
보다 명확한 방법으로 처리되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공공업무에 종사하는 사
람들이 일반 경제부문의 발전(성장)의 혜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범죄의 퇴치》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는 범죄
(예방과) 퇴치(Verbrechensbekämpfung) 방법을 현대화 시키고 보다 집중적으로
심화시키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 일을 긴급조치 계획에 즉시 포함시킬 것이며, 이것을 1970년도에
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현 연방공화국 대통령께서 법무장관 재직시에 시작해 놓은 법률
개혁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개혁
법률안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정당을 초월하여 이 법률개혁 사업에 관한

를 훨씬 증가하는 다수의 지지 활동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와 같은 개혁안이 의도하는 것은 급속히 번진하여 가는 경제 공학 및 사회 형편에 법률조항들이 불가결하게 적응케 하자는 것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산업 및 공무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보다 많은 실력을 지닌 사람들과 동일한 기회를 갖고, 또 그들로부터 시민에게 보호조치를 제공해 주는 사회적이고 인도적인 법질서와 생활질서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 소송 재판등》 우선 우리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우리의 산산조각이 난 (즉 통일성이 결여된) 소송, 재판등의 업무가 법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습니다. 행정 재판권과 재정 재판권의 관할문제들은 법무장관에게 위임될 것입니다.

적법한 재판권은 3단계로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시민에게는 좋은 재판절차가 부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신속한 재판업무의 처리가 행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법관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의물 같습니다. 이밖에도 우리는 법관들의 양성과 차후 교육 (Fortbildung)을 숙고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들이 기꺼히 법관으로 거의 의미와 책임을 갖도록 이를 강력 권장해야 하며 - 예를 들어 각 법관들을 발탁해 낼으로써 -, 이들 법관이 그들의 교육의 업무분야에서 참여하여 함께 이를 수행해 나가는 것이 보다 유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그들의 신분에 알맞는 봉급을 지불해야 하며, 그리고 법원에 대하여는 현대 공학기술의 계가능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적어도) 헌법재판소 법관 (판사)에게는 다수의 의견과는 차이나는 그의 판결 (abweichendes Votum) 투표를 공포할 수 있는 권한 (권리)이 주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민법의 경우 혼인법의 개혁은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다. 연방 정부는 이미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의 건의 (서)에 바탕을 두어 내년에 개혁에 필요한 재정법률을 국회에 제안할 것입니다. 세계관의 차이 때문에 오는 의견의 상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구제할 여지없이 산산조각이 된 혼인생활 상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하여 강구되어야 할 해결책을 발견하는 일에 결코 방해역할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즉 세계관적인 의견의 차

이는 있다 하더라도 본인에 실패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거해주는 일을 법적으로 가능케 해야 한다는 입장(訳註). 여기에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결혼한 남녀가 이혼하는 경우에 아내된 사람과 자식들이 사회적으로 비통한 입장을 당하는 피해자(Leidtragende)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번 회기동안에 형법개혁이 완성되어야 하며, 여기에 이어서 형의 집행에 관한 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두개의 형법 개혁법(Strafrechtsreform-gesetz)이 의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좋은 시말이 이루어졌을지나, (연방) 정부는 형법권(Strafgesetzbuch)에 대한 그밖의 개정안들도 각시에 제안함으로써 이들 개정안들이 이미 통과된 법(률)과로부터 1973년 10월 1일부로 효력을 발생토록(시행되도록)할 것입니다.

<<서독 군(軍) 현황>> 우리 독일 군인들이 많은 부대에서 그리고 많은 기능면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현 정부는 알고 있습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군인과 일반군인의 수와 그리고 교육훈련과(장비) 무장현황이 모든 경우에 대비할만큼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 안전과 공학기술의 진보가 우리의 군인들이 실제면에서 쌓는 경험이 오늘날 독일 연방공화국 군대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비판적인 현황파악을 불가피 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현황파악은 즉시(지체함이 없이) 시행될 것입니다.

군인들과 학계(Wissenschaft)와 그리고 연방정부가 이 경우 함께 일을 추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1970년도 방위(국방)백서(Weissbuch)에서 정부는 이 전반적인 목록작성(즉 점검)의 결과와 그리고 동시에 예정된 변화에 관하여 의회에 보고를 제출할 것입니다.

우리는 독일 연방군대를 우리 사회의 한 중요한 부분으로 파악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인은 5개 항목으로 정부의 의도를 요약하고자 합니다.

1. 우리는 병역의무에 해당하는 젊은 청년들을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최대의 공평성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병역의 무이행에 있어서 비의와 견제(제도)는 절대적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본병역 근무기간에 어떠한 영향도

의 변화가 결과적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2. 국방부(내부)에서는 참모진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군사(학)상의 업무수행방법(Arbeitsweise)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참모진들은 관료적인 폐습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술과 장비는 현대 산업운영(경영)의 방법에 따라서 합리화 되어 질 것입니다.

3. 우리는 적당한 교관(Ausbilder)과 부대 지휘관과 그리고 기술면의 전문가들을 확보하려던 지금까지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더욱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도 군대측 대한 배려는 우리 노력의 핵심적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4. 우리는 독일 연방공화국 국회의 방위전문 위탁위원(Wehrbeauftragter)의 효과적인 업적을 또한 신임합니다. (소위) 내적지휘(즉 정신면을 강조한 군통솔 訓誥)(Die Innere Führung) 원칙들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각 군 참모총장(Kommandeure) 지휘관들과 그리고 모든 계층의 군인들이 이 내적지휘 원칙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존하는 법적, 도덕적 기준위에서 여러가지 개별 규정이나 규범들이 발전과 경험에 적응하는 일들이 필요 불가결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5. 양심(良心)을 이유로 하여(Gewissengründen) 군 복무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앞으로도 인정할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공정한 평형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관료주의적인 성격을 탈피하여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인과 민간인들이 군대에서 하는 일들은 그들이 공공사회 여론의 인정을 받고 지원을 받을 때에만이 완전히 그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교육과 양성, 학문과 연구가 우리가 시도하는 개혁의 첨단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소관사업인한 우리는 이에 대한 책임을 교육과 학문부(部)에 통합시켰습니다. 교육과 학문이 다해야 할 과제는 연방과 각국과 그리고 시·읍·면의 지방자치기관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서만이 해결되어 질 수 있다는 점에 아마도 우리는 국회와 의견을 일치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5대 국회는 연방과 주가 협동할 수 있는 일련의 새로운 가능성들을 이루어

능했는데 현 정부는 이 가능성들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각주들의 관찰소관을 침해함이 없이 각주를 도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4대부문인 학교(일반국민학교, 중등학교등을 포함
하는), 대학, 직업교육, 그리고 성인교육을 망료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서 병
렬 협동시키는 일이 지금까지도 성공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전체 교육제도는 중
대한 지장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는한 인력과 재력 및 수단을 최대의 효
과가 이룩되도록 투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장기 교육계획》 연방정부(Bundesregierung)는 기본법(=헌법) 제 91조
b항에 의거하여 각주들과 공동으로 교육계획을 입안시킬 헌법상의 기본바탕을 가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15년에서 20년까지를 위한 장기 교육계획을 연방공화국(서독)이 세
우는 일이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방국회(Bundestag)와 주의회(Länderparlamenten)에 제출될 이 계
획은 또한 동시에 이러한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설명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5년에서 15년까지의 기간을 위한 국가적 교육예산(Ein Nation-
ales Bildungsbudget)이 수립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할 수 있는대로 최대한으로 종합교육계획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문제도 설명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5년에서
15년까지의 기간을 위한 국가적 교육예산(Ein Nationales Bildungsbudget)
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할 수 있는대로 최대한으로 종합교육계획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렇
게 하는 목표는 영속적인 학습과정(Permanenten Lernprozeß)을 통하여 그들의
사회생존의 제 조건을 인식하고 이와 같은 조건에 알맞게 행동할 수 있는 비판
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시민의 교육인 것입니다. 민족의 배움터는 학교인 것
입니다. (Die Schule der Nation ist die Schule)

우리는 10년제 교육 연한을 필요로 하며(즉 의무교육의 연장이라 하겠음),
만 18세가 될 때까지 분화된 학교교육을 받는 사람의 수요가 우리 사회에서

될수록 높은 비율을 차지해야겠습니다. 교육정책을 위한 재정예산은 앞으로의 몇년동안 이에 알맞게 (맞추어) 증가되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기본법(헌법)에 명시된 기본과제가 즉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기회를 준다는 기본과제가 아직까지도 어느정도로 완수되어지지 않았다는 인식을 그 출발점으로 삼을 것입니다. 교육정책의 수립은 사회적인 민주주의 (die soziale Demokratie) 를 실현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 정부가 해야 할 새로운 과제중의 하나가 대학 종합개혁법을 제출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법률은 지금까지의 전문대학 (Fachhochschule) 의 현황도 전체 대학제도 (체제) 의 범위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구조 (Personalstruktur) 문제가 우선 제일 중요한 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학과 국립 연구기관들의 경우 지나치게 노년현상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계층적 형태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안들이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방에 관계되는 한에 있어서는 이에 적절한 조치가 신속히 취해질 것입니다.

《대학의 확충》 대학의 확충은 보다 강력히 추진되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대학의 수용능력을 단기적으로 확장하는 일이 채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 건축에 쓰일 재원중에서 될수록 많은 부분을 즉시 다음과 같은 건축물을 위하여 마련해야 합니다. 즉 건축방법 (Bauverfahren) 을 합리화 함으로써 12개월 내지 15개월 완공되어질 수 있는 건물들.

연방정부는 각주가 중요한 전문분야에서 정원제한 (Numerus clausus) 제를 극복해 나가려는 노력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를 각주들에 가장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조사 검토할 것입니다.

제일 시급을 요하는 일은 또한 현대적인 수업방법 (기술) (die modernen Unterrichts-Technologien) 과 거리 수업 (Fernstudium) 제도를 이용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학개혁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독일의 일반 교육제도를 개혁하려는 일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육정책은 교육단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분리시켜 고찰될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분리시켜 고찰해서도 결코 안될 것입니다. 교육 (Bildung) 과 양성 (Ausbildung) 과 연구 (Forschung) 는 하나의 전체 체제로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전체 체제는 동시에 시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그리고 될수록 높은 수준의 전문가와 연구결과를 필요로

하는 사회의 요구를 고려하는 체제가 될 것입니다.

교육과 연구(부문)의 근본적인 제 개혁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앞으로 경쟁 능력을 갖기 위한 조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본조건(상황)연구의 장려》의원여러분! 근래에 와서 어떤 사람들이 결핍에 대한 용기(Mut zur Mut zur Lücke)라고 부르는 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여러 부문의 연구영역에 있어서 또 이를 연구 영역들간에 있어서의 우선 순위를 결정함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준에 관하여 많이들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독일 연방공화국(서독)만한 규모를 가진 나라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본조건(상황)에 대한 연구(Grundlagenforschung)를 장려할 수 있으며 그리고 또한 장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실이 제한된 경제(재정)적인 지원가능성 때문에 연구(Forschung)와 발전시켜 나가는 일(Entwicklung)을 국가가 지원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 중점을 두어야 할 부문을 선정(전체 부문에 걸치지 않고)하는 일과는 결코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방 정부가 뜻하는 중요한 목적은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할 구부문(Forschungsprioritäten)에 대한 점차적(알진) 전개과정 방법을 발전시키는 일인데 이러한 방법들은 현재 제대로 시작도 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정보(통보)학(Informatik)과 컴퓨터 언어의 개발을 장려함에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이 부문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개로처리 부문(Datenverarbeitung)은 아주 광범위한 것인데, 원래의 계산기계(Rechenmaschine)를 개발하는 일보다 더 많이 돈이 듭니다.

컴퓨터 기술이 앞으로 전체 학술 및 공학개발, 발전에 촉매적 작용(katalytische Wirkung)과 효과를 가질 것이며, 또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산업부문의 생산과 행정과 그리고 기타 제 부문에 대하여 서로 이러한 작용과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현대 연구계획들이 전세계에서 서로가 긴밀한 관계에 얽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문에 있어서의 국제적 그리고 특히 구라파(제국간)의 연구 분담일을 어떠한 것이든 장려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 구라파에는 (현재) 그들의 힘을 합친다면 미국과 소련 과학자들 보다 못지 않은 능력을 가진 일군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구조정책》 의원 여러분! 연방 정부는 지금보다 더 강력히 (경제) 성장 위주의 구조정책 (Strukturpolitik) 을 취할 것입니다. 재무부 (Bundesschatzministerium) 를 없애고 ERP의 재산을 경제부 (Bundswirtschaftsministerium) 에 지속시킴으로써 지역단위 정책과 분야별 단위정책 그리고 기업단위정책 (Unternehmens-größenpolitik)에 있어서의 구조정책적인 조치들이 보다 잘 조절되고 심화되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일괄 구조정책》 (Eine Strukturpolitik and einem Guß) 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조정책상의 중점》 백림과 그리고 동·서독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는 지역들의 우선 순위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농촌지역의 (생산등을 포함한) 업적능력을 강화하는 일이 구조정책상의 중점으로 앞으로도 계속 남을 것입니다.

발전능력을 가진 위치 (분야) 에 재정력을 집중시키는 것은 최고의 효과를 보장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지역적인 경제구조를 향상시키는 공통과제는 이 점에서 연방과 각주들간에 새로운 형태의 협동을 필요로 합니다.

본인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해 두고자 합니다.

구조정책상의 큰 과제가 우리 독일의 농업을 현대화 하는 일입니다.

농업은 에너지와 원료의 계속적이고도 염가 (싼) 공급을 필요하는 분야인 것입니다. 우리는 석탄탄광의 (손실) 회복을 가능케 하는 정책과 광유 (鎔油) 생산보장정책, 새로운 에너지원을 위한 시장의 개설을 가능케 하고, 전력산업의 경쟁능력을 향상시킬 정책을 계속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적인면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전 배려하려면 생활에 중요한 수입 생필품을 충분히 비축해 두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3276
3276
《지역정리》 (Raumordnung) 70년대에는 주위 세계와 (Um Welt) 와 생활 형편이 점점 더 빨리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역정리, 도시건설 (축) 과 주택건축 (립) 제 분야에 있어서의 체계적인 예상 (전망등) 과 계획의

수립은 무엇보다도 점점 더 중요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첫 시발로서 도시건축(설) 장려법(ein Städtebauförderungsgesetz)이 빨리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그들이 수립하는 계획을 사리에 알맞게 시행하는 것을 가능케 하고 토지에 대한 환상(Bodenspekulation)을 방지할 수 있는 토지법 개혁을 뒤따르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잊어서는 결코 안되고 또 잊지 않으려고 하는 사실은 이러한 법의 제정이나 개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농부의 토지소유를 지켜주자는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회의 주택건축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각 구들과 이에 대하여 조정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기계획은 수요를 그 기준으로 하여 수립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에 접하여 또한 동등하게 추진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은 주택금법(Wohngehdgesetz)의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의 지역(공간)개발에 관한 목표의 설정(구상)(Zielvorstellung)은 연방지역(공간)계획(Bundesraumordnungsprogramm)에 포함시켜 그 윤곽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구조정책과 지역별 경제장려 및 도시건축과 주택건설을 위한 제 조치들은 이 연방지역(토지)계획에 합리적으로 조정 포함될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장기계획에 입각한 도시건축(건설모함)을 위한 여러가지 구상을 개발해 주도록 각주들과 지방자치단체들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것을 제2도시계획(건축)보고(Städtebaubericht)에서 구체화 시킬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연방공화국 정부는 국회밖에 계신 많은 이 나라의 국민들과 그리고 본 국회내 즉 많은 국회의원 여러분들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연의 보호와 휴양지를 두는 일들과 또한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보다 많은 주의와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데에는 능률을 낼 수 있는 교통체제(Verkehrswesen)가 필요합니다.

<<교통정책>> 연방정부는 지난 회기동안에 제출된 여러가지 개혁안들을 강력히 추진시키며 또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현대 교통정책은 광범위한 기획(계획의 수립)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보다는 훨씬 더 많이 교통학(交通学= Verkehrswissenschaft)의 지식을 이어받아 들여야 하겠습니다.

연방정부는 본 정부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자유주의에 입각한 교통경제(Verkehrswirtschaft)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교통운영자(Verkehrsträger)들에게 동일한 경쟁조건을 갖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독일 연방국철(国鉄)(Deutsche Bundesbahn)은 미래의 교통수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를 시작한지가 벌써 어려워 됩니다.

이 독일 연방 국유철도가 경제기업의 경우와 비교할 만한 것으로서 현대 상업상의 제원칙에 따라서 그 활동과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기 위하여는 조직과 행정(관리)면에 있어서 지속적인 개혁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공화국)은 독일 국유철도의 소유자로서 제2차 세계대전이후의 재건으로 인하여 독일 국철에 생겨난 채무(빚)을 받아들일(인수할) 때가 또한 된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연합된 교통체제에 있어서 각 교통(사업)운영자들간의 협동(제휴)을 계속 장려할 것입니다.

아우토반 도로(고속도로= Autobahn (Straßen)Netz)와 연방국도(Bundes Straßen Netz)가 1971년에서 1985년까지의 전체 도로계획의 일부로서의 5개년계획에 지금까지 보다 더욱 강력히 확장되어 질 것입니다.

중점사업의 하나로서 구조적으로 약세에 있는 지역의 기회향상(Chanceverbesserung)을 기하는 일이 행해질 것입니다. 이밖에도 1970년에는 새로운 도로 교통질서(Straßenverkehrsordnung)(법) 초안이 제출되어 질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중부 구라파의 고속교통체제(제)(Schnellverkehrs-System)에 속하게 될 시속 200 Km 이상의 운행속도를 가진 고속교통체제를 위한 사전 준비사업을 추진(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노동법과 사회법>> 의원 여러분! 연방정부는 사회법체국가(soziale Rechtsstaat)에 기본원칙을 준수할 의무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그 기본 노선입니다)

본 연방정부는 이와 같은 헌법상의 위임사항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일관하여

그 전체를 통관해 볼 수 없게 되어버린 노동법을 하나의 노동법전(法典) (Arbeitsgesetzbuch)에 통합할 계획입니다. (현) 본 연방정부는 또한 현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사회법전(Sozialgesetzbuch)을 위한 일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회업적(Sozialleistungen)을 보다 일목요연하게 통합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사회예산을 사회 및 경제정책상의 결정을 내림에 필요한 기본 요건(바탕)(Grundlagen)으로 확장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회기동안에 제출된 법률초안과 집약하여(바탕을 두어) 경영기본법(Betriebsverfassungsgesetz)과 인력분포법(Personalvertretungsgesetz) 개정(개혁)이 시행될 것입니다. 인력분포법 개혁의 태두리 안에서 인력분포(대표)가 끼치는 영향(협동)력을 물질 및 형식상 더욱 확장시킬 것을 제안할 것입니다.

이와는 무관하게 연방정부는 현행법(률)에 의하면 아직까지 그 서속범위에 속하지 않는 문제들의 경우에도 인사담당관들(Personalrate)의 의견을 듣는데 큰 비중을 두는 일을 이미 벌써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동안에 요구되었던 기획 및 결정에 참여하는 문제를 조사연구할 임무를 띤 위원회(Mitbestimmungskommission)가 작성한 보고서가 앞으로 심의되고 논의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원하는 것이며 이러한 민주주의 사회에 대하여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책임(Mitverantwortung)과 공동(기획 및 결정)에 참여전(Mitbestimmung)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강의 보호>> 의원 여러분! 기계화 되고 자동화된 주위세계 때문에 생겨나는 건강피해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문과 연구, 건강관계 법률의 제정(Gesundheitsgesetzgebung), 질병예방(Gesundheitsvorsorge)와 그리고 건강계몽등의 제 분야에 있어서의 광(보건)범위하고도 상호 구분된 일련에 조치를 취하여 이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앞으로 사회의학(Sozialmedizin) 연구소를 설치할 것이며, 이 연구소는 우리시대에 있어서의 넓게 퍼져 있는 큰 병들(Große Krankheiten)에 대한 폭넓고 계획적인 예방연구조사와 조기진단을 위한 충분한 기초를 마련하

는 기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암연구 (Krebsforschung) 와 암예방을 위한 조치를 보다 확장하는 데 특별한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공기오염 (Luftverunreinigung) 과 수질오염 (Wasserverunreinigung) 과 그리고 소음 피해 (Lärmbelastigung) 등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상응하는 법률제안이 행해질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건강을 다시 회복하고 그들의 활동능력을 다시 회복하여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최상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현 연방정부는 한편으로 1970년에 수요에 알맞는 능력을 갖춘 병원체계가 가능토록 하는 경제적 보장법을 제출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의사 양성 (교육) 제도를 개혁하고 현대화 시킬 것입니다. 이에 알맞는 규정의 제정이 1970년 초안으로 행해지도록 할 것입니다.

현 연방정부는 환자들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의사를 선택함에 있어서 자유의사에 입각하여 그들의 의사결정을 행하는 원칙과 그리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또한 그들의 직업활동을 수행해 나갈 때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다는 기본원칙을 선봉합니다.

이 부문에 있어서의 구라파의 발전을 쫓아서 연방정부는 의약품 부문에서는 국가와 제조업자들이 책임을 느끼고 (책임성 있게) 최대의 안정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입니다.

생필품에 관제되는 법률개혁 (Lebensmittelrechtsreform) 과 관련하여 1970년에 연방국회에 광범위한 법률초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되고 중요시 되는 것은 소비자 보호를 제일 목표로 하는 것이며, 광고선전과 포장등의 점에 있어서 명확성을 기하고 (직위선정등이 아닌) 진실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점등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아동 (원조) 금 (Kindergeld) , 세금혜택 (Steuerbegünstigung) 과 기타의 다른 물질적 원조를 가정들이 받도록 함에 있어서 이 여러분야는 서로가 상호절충이 되어지고 양성족진 (추진) 의 가능성을 보다 확충하는 일과 관련시켜서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직장에 종사하는 산모들과 어머니들에게 상당히 부족한 인건원조를 앞으로 향상 개선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아동보조금액의 인상 (지출) 문제는 1970년

에 그 결정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적인 산업국가를 사회정책적인 면에 입각하여 개혁하고, 현대적인 면모를 갖추도록 그 모습을 형성해 나가도록 하는 데에는 연방정부는 부녀자들의 강력한 참여가 있기를 바라며, 또한 강력한 참여가 필요합니다.

《여성들의 동등전》 여성 (Frauenquote) 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지금보다 더 돕고, 가정과 직장과 정치와 그리고 사회에 있어서의 여성들의 역할이 동등하다는 취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질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합리화 (Rationalisierung) 와 자동(기계화)화 (Automatisierung) 가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사회발전 (진보) 를 장려 촉진하는 것이 되도록 유의할 것입니다. 경제정책과 노동시장정책 그리고 교육정책은 불가피한 구조(적) 개선 (Umstrukturierung) 을 함에 있어서 안전한 직장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취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노사 (Tarifparteien) 쌍방의 이에 해당되는 모든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공학기술의 진보와 경제부문에 있어서의 발전은 모든 생업종사자들을 동원할 것을 항상 요구하는 새로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육휴가 (Bildungsurlaub) 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하나의 중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생활 (Arbeitsleben) 을 인도주의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입법부 (Gesetzgeber) 와 임금당사자 쌍방은 피고용자 (Arbeitnehmer) 들의 직장을 보장하는 일을 다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노동보장 (Arbeitssicherheit) 과 근무처에 있어서의 건강관리제도들은 더욱 확충되어질 것입니다.

《임금자율(권)》 연방정부는 임금자율(제)을 계속 유지하고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것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며 그리고 특히 경기상승과 완전 취업상태에도 불구하고 음지에서 (어두운 그늘속에서) 살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과 나이가 많거나 혹은 병으로 인하여 혹은 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귀찮을 당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배려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직업과 사회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거나 지장을 받고 있는 사람
들에게 가능한한 기회를 마련해 주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더욱 배가할
것입니다.

1970년 1월 1일부터 전쟁회생자 연금이 인상될 것입니다. 이연금은 경제부
문의 발전에 맞추어 매년 조절될 것입니다. 구조적 개선책들로 계획되어져 있
습니다.

<<사회적 배려>> (Sozialleistungen) 시민이 누구나 저마다 어떠한 사회배
려 (Sozialleistungen)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히 인식토록 하기
위하여 연금계산을 항목별로 하는 제도를 실시할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
(보장) 배려제도를 쉽사리 개관하고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
다. 현 연방정부는 이번 회기동안에 획일적인 정년퇴직 연한 (Feste Alters-
grenze)을 점차적으로 없앨 것이며, 그 대신 유동적인 정년퇴직을 규정하는
법률 (Ein Gesetz über die flexible Altersgrenze)을 제정하도록 노력할 것
입니다.

법적으로 고령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일이 다른 사회층들에게도 앞으로 그 기회
가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질병)보험제도가 더욱 발전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현 연방정부는 건
문위원회 (Sachverständigenrat)를 구성할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건강 (질병)보험을 규정하는 현대적 법률제정을 위한 철저한 현
실파악 (gründliche Bestandsaufnahme)과 새로운 제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
니다.

회사원 (고용원 = Angestellte)에 대한 건강 (질병)보험 가입의무한제 (Krank-
enversicherungsgrenze)는 앞으로 재검토되고 유동성 있게 규정되어질 것입니
다. 보험의무기준을 넘어서 모든 (고용원) 회사원들에게 대하여도 고용주 부담
(Arbeitgeberbeitrag)제도를 실시할 것입니다. 1970년 1월 1일부터 발효
되는 보험금 환인액도 (들어드는 돈) (Beitragsrückgewabr) 지속적인 재검토를
받을 것입니다.

청소년 법률제정 (Jugendgesetzgebung)과 연방 (공화국) 청소년 계획
(Bundesjugendplan)의 개혁을 준비하는데에 우리는 청소년 자신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구라파(공동) 청소년법(Jugendwerk)(사업)을 제정하는 것을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르는 이같은 계획의 수립에 동구라파의 젊은이들도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그렇게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체육의 진흥》 우리는 체육의 진흥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물론 체육(운동)은 국가의 감독(후견)하에 있지않는 자유스러운 활동이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는 조금도 변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체육에 관계되는 행사중 최고절정은 뮌헨과 키엘에서 개최될 제20차 하계 올림픽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세계(여론)에 현대독일을 보여줄 기회를 갖게 됩니다.

현 연방정부는 지난번 국회에서 3개 원내 교섭단체의 대표들과의 회합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독일 체육위원회의 구성(Die Bildung einer Deutschen Sport-Konferenz)을 착성합니다.

이 위원회의 구성은 독일 체육연맹(Deutschen Sportbunde)대표들과 연방대표 각주 대표들과 그리고 기타 지방자치단체 대표들로 구성되어질 수 있을 것이며, 모든 체육관계행사(조치)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일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현 연방정부는 새로 시작되는 1970년대의 그 첫해인 명년에 지금 행하고 있는 본 정부선언을 보충하여(보완하여) 우리나라의 내적 개혁부면에서 행하여져야 할 정부의 계획과 의도들 개별 보고형식으로 국회와 대중에게 제시하여 밝힐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1970년 1월에 국정백서(Bericht zur Lage der Nation)를 제출할 것이며, 2월에는 연차 경제보고(Jahreswirtschaftsbericht)를 토론에 붙힐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3월에는 농업 현황보고를 제출할 것이고, 4월에는 사회보고(Sozialbericht)를 제출할 것입니다. 5월에는 연방정부의 교육정책(Bildungspolitik)과 학술정책(Wissenschaftspolitik)을, 6월에는 국방정책백서(Das Weisbuch zur Verteidigungspolitik)을 각각 제출할 것입니다.

국회 휴회 (Parlamentsferien)가 끝나면 교통정책과 보건정책에 관한 보고와 그리고 지역정리 (Raumordnung)와 도시건축 (Städtebau)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할 것이며, 재산형성 (Vermögensbildung)과 세제개혁 (Steuerreform)에 관한 보고를 또한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회와 대중 (사회)은 70년대의 첫해에 본 (현) 연방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개혁정책 (Reformpolitik)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경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즉, 단지 평화만이 우리의 세계를 안전하게 한다는 사실을 안전 (안보) (Sicherheit)의 기초위에서만 평화는 전개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인식을 이 지구상의 대부분의 민족들과 함께 공동으로 느끼는 바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연방정부는 이의 실천을 위하여 우리 독일의 담당해야 할 몫을 다할 결의가 되어 있으며, 독일이 구라파에서 지니고 있는 의무 (책임)을 특별히 의식하고 있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이를 이행할 것이나, 결코 우리 자신의 힘을 과대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평화에 대한 연구>> 우리는 연방공화국 대통령이 제창한 이니시야티브를 받아들일 것이며, 평화연구 (Friedensforschung)를 협동가능케 할 것입니다.

-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수가 현재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평화연구가 지녀야 할 자주성 (독립성) (Unabhängigkeit)을 정부가 결코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또한 위기과 전쟁에 만신창이된 오늘의 세계에 만족이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독일의 기여를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의 국가적 관심사입니다 (국가적 이익과 직결됩니다).

이렇게 국제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제민족은 그들의 국위세계에 대한 이해를 보다 낮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카알 프리드리히 폰 바이켈커 (Carl Friedrich von Weizsäcker) 교수가 이 분야에서 연방정부를 좌문하면서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국제적 협력》 국제적 협력에는 정연 분화의 업적을 상호 교환하는 일이 필요 불가결한 요건중의 하나라 하겠읍니다.

독일 문화를 외국에 소개하는 일은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다음과 같은 점에 많은 착안을 하여야겠읍니다. 즉, 다른 민족들에게 지난 과거의 불멸의 업적을 소개하는 일에 결하여 과도기인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 독일에서도 정신면의 업적과 값있는 불안(즉 정신문화면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논쟁과 그리고 불안 - 값있는 가치와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전개되어지고 있는 전통에 대한 도전등의 질서에 대한 불안 - 이것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보다 나은 내일의 건설을 위한 불가결한 과정이라고 보는 견해 - 訳註) 등의 문세와 관련시켜 본 하루하루의 현실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일을 지금보다도 더욱 강화해야겠읍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은 상호 파트너 정신에 입각하여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와 그리고 아시아의 제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후진국 원조》(Entwicklungshilfe) 제2 발전단계가 시작되는 전야인 이제 연방정부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여 두는 바입니다. 즉, 우리는 공동발전 전략에 참여하여 기여할 것이며 피어슨 위원회(Pearson-Kommission)의 보고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제안을 고려할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이 보고서에 제기되고 예정되는 후진국 원조(Entwicklungshilfe)에서 공익사업(Die Öffentlichen Leistungen)에 해당하는 목표를 연 평균 11%의 증가율을 통하여 이룩달성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공적 재정원조(Öffentliche Kapitalhilfe) 자금에서 나오는 재원을 다시 전적으로 후진국 원조 목적에 사용되도록 하는 길을 모색할 것입니다.

후진국 원조 부문에 종사하는 독일 전문가(Entwicklungsexperten)들과 후진국 원조에 종사하는 협조자(Entwicklungshelfer)들의 수는 70년대 중반기까지 두배로 늘일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점차 증가해 나갈 것입니다.

독일 연방정부(서독)는 서독이 제공하는 후진국 원조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다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앞으로 계획의 수립과 계획의 실행을 간소화 하고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3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실행하여 나가는 것은 국가만의 전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 연방정부는 이들 제 국가들에 있어서의 발전과정을 더욱 신속히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국가가 주도하는 것 이외의 (즉 개인의) 이니시아티브도 또한 권장할 것입니다.

세계는 우리 독일과 같은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로부터 모든 나라의 무역을 장려하는 자유경제정책 (eine liberale den Handel aller Länder fördernde Außenwirtschaftspolitik) 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즉 서독정부는 이러한 대외경제정책을 취할 것입니다 - 訳註).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첫째로 우리 자신의 독자적인 노력을 통하여 얻는 일과 둘째로는 세계무역 (Welthandel) 과 관계되는 모든 기구에 참여함으로써 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개발도상국 (후진국 = Entwicklungsländer) 들의 무역 (Handel - 상업활동) 을 장려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가지만 언급한다면 그중에서 후진국산 (産) 상품에 대한 세계일반의 우위성 (Die universellen Präferenzen für Waren aus den Entwicklungsländern) 을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 외교정책 >> 의원 여러분! 본 (현) 연방정부의 외교정책은 1966년 3월에 행하여진 평화로서 (Friedensnote) 와 그리고 1966년 12월에 행하여진 정부선언 (Regierungserklärung) 에 기본이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두 문서에 기술된 정책은 그당시 이 국회의 모든 원내교섭단체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계속성과 일관성 있는 발전을 이룩해 나가자는 의지는 많은 반복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 연방정부는 유-엔에서, 유엔의 제 특별기구들과 그리고 기타 다른 국제기구들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협동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동일한 논리가 전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되어야 할 군비축소와 군비제한 협정에도 적용되겠으며 이 문제는 점차 그 비중과 의의가 커가고 있습니다.

현 연방정부는 본인이 1968년 9월에 당시의 연방정부 외무장관으로서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비핵국 위원회회의 석상에서 (auf der Konferenz der Nichtnuklearmächte) 피력한 바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적인 협동을 바라는 우리의 희망을 함께 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수립 유지하고 현존하고 있는 무역(교역)관계를 더욱 존재할 원칙적인 우리의 준비자세를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연방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것이던 아무튼 멸시(Diskriminierung)와 압박(Unterdrückung)과 그리고 외세에 의한 지배(fremde Beherrschung)형태는 이를 부정하여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 있어서도 세계의 제 민족이 평화적으로 공존해 나가는 일을 되돌이 하여 언제나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동맹>>(Nordatlantisches Bündnis) 의원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의 존립사에서 그 신가를 증명해준 바 있는 북대서양 동맹기구는 앞으로(장래에도) 우리의 안전(Sicherheit)을 보증해 주는 기구입니다.

이 기구를 공고히 하는 것이야 말로 구라파에 있어서 긴장의 완화에 달하려는 확고한 노력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안보정책(Sicherheitspolitik)이 갖는 두가지면중 어느쪽을 우리가 고찰하여 보던지간에 즉 준비제한(Rüstungsbegrenzung)과 준비감시(Rüstungskontrolle)라는 두가지 일을 동시에 그리고 대동할 것으로 동시에 이룩하려는 우리의 진지하고도 지속적인 노력의 면을 고찰하면 혹은 독일 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서독)방위에 충분한 국방의 보증에 관한 문제이던간에 하여간 이 두측면중 어느쪽을 고찰의 대상으로 삼던간에 연방정부는 우리가 취하고 있는 안보정책(Sicherheitspolitik)은 (세력의)균형(Gleichgewicht)과 평화의 보장(Friedenssicherung)을 위한 정책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연방정부는 이 두가지 측면을 고찰할 때에 우리나라에 외적인 안전(Die äußere Sicherheit)을 우리가 속해 있고, 그리고 기구의 일원으로서 동·서 양진영간에 세력의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우리가 우리의 몫을 다하고 있는 북대서양 동맹기구의 기능이 수행되는가 하는 점과 일치시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보정책>>(Sicherheitspolitik)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친구(Freunde)와 동맹국(Verbündete)이 필요합니다.(즉 우방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의 친구와 우방이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기

여를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에 바탕을 두어 이룩한 나라는 정치적, 안전을 위한(에 대한) 상호신의 (gegenseitiges Vertrauen)가 없이는 동맹이란 유지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안전이라는 것도 도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대서양 동맹기구 내에서 그리고 이 기구전체에 대하여도 지금까지 취하여 온 정책을 계속하여 추구해 나갈 것이며,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들로부터도 동일할 것을 기대하고(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맹국들이 공동의 안전정책 (gemeinsame Sicherheitspolitik) 과 그리고 이미 협약된 안전(보장)의 노력 (Sicherheitsanstrengung)을 위한 우리의 동맹국들의 기여를 우리는 또한 기대하는 바입니다.

서방진영의 국방(안전-안보) 태세가 방어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Defensiv-즉 공격체제가 아니고 방어체제) 우리 자신의 기여나 체제도 역시 방어체제를 그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독) 독일의 군대 (Bundeswehr = 연방군)는 그 교육면에서나 그 구조면에서나 그리고 그 무기와 장비체제면에서 어느면으로 보든지간에 공격전술 (offensive Strategie)에 알맞지 않습니다.

연방정부는 정부의 국방(방위)정책 (Verteidigungspolitik)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방위원칙 (Defensivprinzip)에 관하여 조금도 의심이나 회의를 품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독일과 미국과의 사이에 이루어져 있는 긴밀한 유대관계는 조약과 그리고 확신에 의하여 미국이 구라파와 독일 연방공화국(서독)과 그리고 백림(베를린)에 대하여 진 제 의무(책임)의 신빙성 (Verbindlichkeit)을 조금도 의심할 바 없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양국의 공동의 이해와 관심은 더 첨가하여 어떠한 보장을 한다던가 혹은 되풀이하여 어떤 선언같은 것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관심을 보다 능동적인 파트너 관계 (Partnerschaft)에서 하나의 지금보다는 비교적 독자적인 독일정책 (eine selbständigere deutsche Politik)을 수행해 나가는데 충분한 힘을 가진 것입니다.

《군비제한》(Rüstungsbeschränkung) 연방정부는 우방 제 동맹국들과 함께 구라파에서의 군사적 대치현상을 (대결현상) 해체 (제거) 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우리의 동맹국들과 함께 동·서 양진영에서 동서적으로 그리고 균형있게 군비제한과 군비축소 (Truppenreduzierung) 를 행하도록 하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구라파 안보회의》(Europäische Sicherheitskonferenz) 구라파의 안전 (Sicherheit) 에 기여할 회의문제에 대하여는 현 연방정부는 금년 9월 12일에 헬싱키에서 제출한 바 있는 교서 (Memorandum) 에 언급한 (표명한 바 있음) 태도 (입장) 를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회의는 용의주도한 준비를 거친후에 (는) (경우에 따라서 - 訳註) 적은 군비 (Rüstung) 를 가지고 보다 큰 안전을 도모하고 동·서 양진영 구라파의 제 당사자들 사이에 일련의 진보 (발전) 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단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긴장의 초점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중동 (노동) 문제가 특별히 걱정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국제연합의 안보이사회 (Sicherheitsrat) 에서 1967년 11월 22일에 결의된 것과 같은 일종의 해결을 모색하여 찾는 것이 중동분쟁에 관여되어 있는 제 민족들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의 모든 국가들과 우호관계 (gute Beziehungen) 를 갖게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 긴장지역에 (Spannunggebiete) 무기를 공급하지 않을 결심을 동시에 강조하는 바입니다.

월남에서의 전쟁이 모든 당사자측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적 해결 (politische Lösung) 을 통하여 종국적으로 (드디어) 종전되어져야겠다는 희망을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국가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나라들 못지않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지역의 사람들과 그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월남에서의 전쟁이 종전되어 모든 문제가 진척을 보게 되면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되어져 버린 월남 (Vietnam) 의 양국토의재건 (Wiederaufbau) 에 협동하여 참여할 것이라는 우리의 태도를 (즉 군비가 되어 있다는 태도) 여기에서 강조하여 둡니다.

《구주 공동체》(공동시장) (Europäische Gemeinschaft) 의원 여러분!
덴 하그(Den Haag)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이번의 6개국 회의는
특별한 의의를 갖습니다. 금번 개최될 6개국 회의는 앞으로 객관적으로(사실
적으로 보아서) 서로 유기적 관계에 있는 일련의 문제들, 즉 구주공동시장(체)
의 내적 확충 (Innerer Ausbau) 과 동기구의 관체심화 (Vertiefung) 와 그리
고 확장 (Erweiterung) 문제들에서 구라파가 전진을 할 수 있는 용기있는 일
보 (Einem mutigen Schritt) 를 내 디릴 수 있는가 혹은 아니면 위험한 위
기에 빠져들어가고 말 것인가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
라파 제 민족들은(오늘날) 정치가들 (Staatsmänner) 이 역사의 논리에 성공 (
(결과를 맺음)을 위한 의지를 부여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리고 또한 이를
강력히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불 양국이 이점에서 일치된 견해(태도)
를 취할 수 있다면 (Gleichklang) 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연방정부는 조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긴밀한 유대관계 (Die enge vertragliche Bindung) 에다가 앞으로 구라파적 당사국들 사이에 이루어질 수도 있
을 관계의 종류에 전형적인 예가 될 수도 있을 불멸의 굳은 유대를 부여할
(verleihen)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구주 공동시장(체)을 확장하는 일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일입니다. 구주
공동체(시장)은 영국(의 가입)을 필요로 하며 또한 영국 이외에도 본 구주
공동체에 가입할 준비가(의사가 있는)되어 있는 다른 나라들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구라파의 소리가 합하여 화음을 냄에 있어서는 결코 영국의 소리가 결여되어
서는 안되겠습니다(즉 영국이 반드시 구라파의 일원이 되어야겠습니다 - 訳註).

만약 구라파가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해를 스스로 끼치기를 원치 않는다면,
영국의 정치와 정책면에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요소로서 역시 영국은 또한
구라파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확신을 우리로서는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지금이 물론 어렵고도 또한 지금 예상으로는 많은 시간의
소비를 대동할 한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즉 이 프로세스의
끝에 가서는 우리의 구주공동체가 보다 넓은(광범위한) 기초위에 세워질 그러한

작업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경제적 협력》(협동) 이와 관련하여 연방정부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즉 구주공동체는 이에 가입할 수 없거나 혹은 가입할 의사가 없는 구라파의 여러나라들과도 경제적 협력관계를 할 수 있을 새로운 형태의 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일에 연방정부는 그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구라파에 있는 나라들이 세계 정치문제들에 관련하여 (in weltpolitischen Fragen) 공동의 태도(입장)를 점차(한걸음 한걸음) 확충해 나간다는 목적을 가지고 구라파에 있어서의 보다 긴밀한 정치적 협동(eine engere politische Zusammenarbeit)을 앞으로 장려할 것입니다.

이점에 있어서 우리는 또한 이태리와 베네룩스 삼국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적 이익이 동·서 양진영의 그 중간에 위치하는 것을 허락치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방진영과의 공동협력(Zusammenarbeit) 상호간의 의견조정(Abstimmung)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동부진영과의 의사소통(Verständigung)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삼아 나는 독일민족은 평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평화라는 말이 지닌 완전한 의미의 평화를 필요로 합니다. 소련 연방의 제 민족들과 그리고 동구라파의 모든 민족들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독일로서는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동부진영과 진지한 이해를 위한 시도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범죄적 도당(히틀러 일당을 말하는 것임-訳註)이 구라파에 끼친 불행의 결과들이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결권》(自決權) 이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현신적 희망도 갖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해와 힘(권력)의 상황(세력분포등-訳註-Interesse Machtverhältnisse)등과 사회(구조적) 차이점들은 변증법적으로도 해소시킬 수가 없으며 또한 그 차이등도 결코 안개쳐지듯 눈가림해도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당사국들(Gesprächspartner)도 다음과

같은 점을 알고 있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즉, 국제연합 헌장에 명기되어 있는 바와 같은 자결의 권리 (Das Recht auf Selbstbestimmung)는 독일 국민에게도 또한 적용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회담당사국들로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주장할 위와 같은 권리와 의지는 결코 어떠한 협상의 대상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화해한다는 일 (das Werk der Versöhnung)이 쉽게 이루어지거나 혹은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환상에서 우리는 떠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일은 쉽고 빨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 訳註)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은 하나의 긴 프로세스를 통해서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세스 (긴 과정)를 시작하여 진척시켜 나아가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폭력의 포기》 (Gewaltverzicht) (전쟁의 포기등도 포함 - 訳註)

현 연방정부는 전임 정부가 취해온 정책을 계승해 나감에 있어서 폭력 (군사력 포함)을 통한 위협이나 폭력의 사용을 상호 포기하는 것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진지한 협정의 체결을 적극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준비태세는 -이 점을 나는 여기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 동독 (DDR)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즉, 우리와 직접 이웃하고 있는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하여도 이러한 조약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해두고자 하며, 이는 지나간 과거를 초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직접 당사국들의 (지역적) 영토의 불가침성 (영토 총주권 = die territoriale Integrität)을 감안하는 무력포기 (불가침등) 정책은 구라파에 있어서의 긴장의 해소 (완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연방정부는 굳게 확신하는 바입니다. 무력포기는 그밖의 다른 조치들도 가능케 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역의 장려와 공작기술상의 상호협동과 문화적 교류를 증진 장려할려는 공동의 노력도 또한 이같은 목적에 기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이 선언에서 밝혀진 바 있는 한계를 초월하여 어떠한 약정을 미

리 행한다던가 혹은 어떠한 형식을 여기에 밝히는 일을 의식적으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이나 형식들은 연방정부에 의하여 추구되고 있는 협상들을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연방정부는 우리들의 이와 같은 준비태세에 결하여 와로샤의 동맹국들의 수도들에서도 또한 협동하는 태세가 있을 때에만 진보와 진척 (Fortschritte)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현 연방정부는 지금까지의 정책을 일관성있게 그리고 철저하게 계승해 나갈 정부의 뜻을 분명히 할 다음과 같은 일련의 단기적 결정을 행할 것입니다.

즉, 첫째로

<< 구주 공동체 >> (Europäische Gemeinschaft) 연방정부는 구주 공동체를 심화시키고 (Vertiefung) 확장시키는데 (Erweiterung)에 효과적인 조치가 행하여지고 그리고 구라파의 정치적 협력관계가 강화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효과적인 조치가 행하여지도록 덴 하그에서 개최될 회의에서 진력할 것입니다.

둘째로,

<< 우주 개발연구 >> (Weltraumforschung) 연방정부는 우주 연구에 제한된 영역에 독일 산업의 능률업적을 참여시키자는 미합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에 응할 것입니다.

셋째로,

<< 현대 사회의 계문제 >> 연방정부는 북대서양 동맹기구 (Nordatlantikpakt organisation) = NATO 이사회에 의하여 세워진 현대사회문제 위원회의 사업 (일)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네째로,

<< 무력 포기 >> 연방정부는 무력포기 (Gewaltverzicht) 문제에 대한 소련의 아이드 각서 (Aide-memoire)에 곧 답할 것이며, 소련이 제안한 모스크바에서의 협상 일자에 대한 제안을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 << 포올랜드와의 회담 >> 연방정부는 폴란드 인민공화국 정부에 협상재개(개시)에 대한 제안을 할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는 금년 5월 17일자의 블라디스라브 고물카(Wladislaw Gomulka)의 발언(언급)에 대하여 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섯째로,

√ << 원자무기 금지조약 >> (Atomwaffen-Sperrvertrag) 연방정부는 - 지난 연방정부(내각)에 의하여 행하여진 결의에 따라서 아직도 행하여지지 아니한 해명들이 행하여지는대로 원자무기 전파금지조약(Die Nichtverbreitung von Atomwaffen)에 서명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만약에 바로 오늘 워싱턴에서 이 문제에 대한 회담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이제 방금 이 국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조소하는 소리처럼(höhnischen Zurufe)에 답할 것입니다. 나는 이에 답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회담의 성공이며 이 순간에 여기에서 행해지고 있는 고무한 힐란(Polemik)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힐란하는 일을 우리는 내일에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하여 우리는 아직도 내일이나 혹은 모레도 우리로서의 힐란을 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논박하는 일)

의원 여러분!

이 연방정부는 절대로 입말만 하지 않습니다. 이 정부는 요구하는 점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요구하는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요구하는 것도 많습니다. 현 연방정부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하는 바들은 시민이 자기 국가에 대하여 갖는 관계에서 여러가지가 변경되어야만 성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시민의 참여 >>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의 정부는 그 정부가 시민의 민주주의적인 참여에 의하여 뒷받침 받을 때에만 성공적으로 그 작용과 영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맹목적인 동의물 전연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이것은 우리 민족이 허세적인 위엄(gespreizte Würde)과 장중한 간격(honeitsvolle Distanz)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찬탄자 (Bewunderer) 를 찾고 구하고 (경모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판적으로 함께 생각하고 (Kritisch mitdenken), 함께 결정을 내리고 (Mitentscheiden) 그리고 함께 책임을 지는 (Mitverantworten)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이와 같은 자의식 (Selbstbewußtsein) 은 관용의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부는 비판 (Kritik) 에 나타나는 (포현되는) 굳은 단결심 (Solidarität) 을 또한 높이 평가할 줄을 알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선택된 사람들 (Erwählte) 이 아니며, 우리는 선거된 사람들 (Gewählte) 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하여 진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를 모색하고 회구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몇년동안에 제 2차 민주주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독의 민주주의 - 訳註) 가 제 1차의 민주주의가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주의 - 訳註) 절어진 것과 같은 길을 절어가지나 않을가고 염려하신 분들이 더러 있었읍니다.

나는 이러한 사실 (이렇게 되리라고) 을 절대로 믿어본 일이 없었읍니다. 나는 이렇게 될 가능성을 지금은 그 어느때 보다도 덜 믿읍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의 끝 (장) 에 서 있지 않고, 우리는 이제서야 비로소 민주주의를 제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선량한) 이웃의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그 려하며 또한 밖으로도 (세계에 대하여도) 그러하고자 합니다.

1969년 10월 28일자의

독일 연방공화국 국회 제 5차
총회의 회의록 (Protokoll)

프랑케 (Franke) 장관,

독일 연방공화국 국회에서의 연설 (1969 . 11 . 5)

내독 관제장관 에곤·프랑케 (Egon Franke) 씨가 1969년 11월 5일에 개최된 제 8차 연방공화국 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행했다.

<< 연방공화국 내독관계부 (성) >> 국회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의 연방공화국 전독관계성 (Bundesministerium für gesamtdeutsche Fragen)을 연방공화국 내독관계성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으로 그 이름을 고쳐 부르게 된 것에 관하여 몇가지 설명을 행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전체로서의 독일정책이 지난 여러해동안 발전해 내려온 과정과 이 정책의 가능성을 주의깊게 그리고 비판적으로 관찰해 온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점점 더 분명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한때 이 부 (성 - 部)의 그 첫시발을 이루던 대상들이 오늘날에는 더 이상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이 부가 할 일의 첫부분 (시발)을 이루는 것은 효과 (Wirksamkeit)를 중심으로 한 확고한 제한조치 (eine festgelegte Beschränkung)를 강조하며 그리고 그 효용성도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선전적이고 (propagandistische) 계몽적인 (informative) 횡단면에서 그러하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임무의 소관 (aufgabenzuweisung) 사항을 1959년의 경우에서 알고 계실겁니다. 1966년에 대연립내각의 구성과 더불어 (große Koalition) 이 부가 그때까지 하던 이러한 목표설정 대신에 독일의 분할된 두 부분이 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주범있게) 병존토록 (Nebeneinander) 하는 일이 가능케 하려는 여러부서가 (각부처) 담당하던 다각적인 노력을 유효하게 (뜻있게) 협동시켜 보려는 임무 (과제)가 등장했습니다.

<< 협동과제 >> (Koordinierungsangabe) 1966년 12월 3일에 행하여진 정부선언에 밝혀진바 있는 규범있는 (법의 규칙에 따른) 공존을 목표로 하는 모든 노력과 가능성들을 상호 유기성 있게 조절하는 과제를 위하여 1966년말에 이 부에 존재했던 것은 꼭 필요한 기구로서 (notwendige Apparat) 그 시

초적인 것 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래로 이와 같은 정치적 과제를 다 해내는데 꼭 필요한 기구 (Apparat)가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알아볼 수 있도록 그 활동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1967년 4월 12일에 행하여진 정부선언으로써 정부의 독일정책 (: Deutschlandpolitik)의 기본취지에 입각하여 동독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16개 구체적인 회담의제가 제안되었습니다.

즉, 분할된 양독에 살고 있는 독일사람들의 하루하루의 생활을 보다 쉽게 영위해 나가는데 기여하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경제적 및 교통정책상의 협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학술 공학 및 문화적 교류를 위한 종합 계획 (Rahmenvereinbarungen)에 관하여 조약체결등을 이룩하려는 목적하에 협상을 하자는 16개의 구체적 회담의제 (Gesprächsthemen)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 정치적 과제 >> 이 부의 경제적 활동 (Wirksamkeit)이 대연정에 의하여 새로 이루어진 독일정책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 당초보다 더 커져나갔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방공화국 내독관계장관은 독일의 분할로 인하여 생겨난 여러가지 문제들을 취급하고 이와 같은 독일의 분할이 양독의 독일사람들에게 가져온 결과들을 (견딜 수 있게) 완화시킬 과제를 (임무를) 띄고 있습니다.

<< 독일 연방공화국 (서독)이 독일정책상 갖는 의무 >> 내독관계성 장관은 연방공화국 정부가 갖는 독일정책상의 의무를 공히 지각할 사명을 띄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법률제정 (Gesetzgebung)과 행정 (Verwaltung) 부문에서 상이한 여러 부서의 노력들을 상호 유기적으로 조절할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내독관계성 장관은 특히 모든 내독관계를 주무적으로 담당하여 (federführend) 상호 조절하고 전문분야별 소관 관서들과 그 분야의 조절 (관할사항 조절)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독관계성 장관은 그뿐만 아니라 자기부의 일반 소관 사항의 범주내에서 제반 내독관계들을 인지할 임무를 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각개 전문관서들 (Fachressort)이 내리는 사항결정 (Sachentscheidungen)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들 제 사항들이 독일정책과 관계되는 것일 경우에는 함께 협력할 사명을 띄고 있으며, 공공활동사업 (Offentlichkeitsarbeit)과 교육사업 (Bildungsarbeit) 부문에서 활동 (협력)할 임무를 지고 있습니다.

《공공(활동)사업과 교육사업》. 독일의 분할된 두 부분사이의 관계를 감안하여 서독의 있어서의 발전(Entwicklung)과 동독에 있어서의 발전에 관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장려하기 위하여 내독관계성 장관은 계속하여 동독과 인접하여 있는 지역의 경제적 부흥을 위한 조치와 체코슬로바키아(CSSR) 접경지대의 경제적 부흥조치를 유기적으로 연관시킬 임무를 특히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이 지역들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들에서도 문화영역과 교육영역에 걸쳐서 장려조치들(Förderungsmaßnahmen)을 실행할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연구사업》 그리고 학문과 교육부문에서 적당한 성질의 연구사업에(Forschungsarbeiten) 참여하고 이들 사업들을 장려하는 것이 내독 관계성이 해야 할 특별한 과제중에 속합니다.

본 부(성)가 해야 할 이와 같은 과제들(Aufgabenstellung)을 대외적으로도 보다 분명하게 인식되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 부의 명칭을 고치려는 생각을 하게된 동기중의 하나입니다. 이들 일련의 과제들의 경우 본 부(성)가 해야 할 상호협동을 하는 직무(Die Koordinierungszuständigkeit)를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형편에 알맞는 일로 생각됩니다.

독일정책 영역에 대하여는 외교정책 부문의 경우에 비교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즉, 외무부(성)가 주무관청으로 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이러한 부문에 대하여도 정치적 협력(상호)관계(Die Politische Koordinierung)가 외무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독일 국가들간의 조정》(Regelungen zwischen beiden deutschen Staaten) 의원 여러분! 정부 선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합니다. 즉, 독일의 두 분할된 부분과의 사이가 현재 처해 있는 경련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 민족이 더 이상 계속하여 흩어져 나뉘어 살게 되는 상태(ein weiteres Auseinanderleben)를 방지하고, 따라서 규제되어진 병존(Nebeneinander) 상태를 넘어서 하나의 공존상태(Miteinander)에 달하는 일을 통하여 민족의 통일(Die Einheit der Nation)을 유지하는 일은 이제 우리앞에 놓여 있는 앞으로의 몇년 동안에 행하여져야 할 실제정치적 과제라는 사실을 정부 선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서독과 동독간에 충실을 기할 수 있는 법률이나 규정의

제정을 위한 노력을 중요시 함으로써, 그러나 독일의 통일과 독일인에 자유의사에 의한 자결권 목표를 달성한다는 자명하고도 남음이 있는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 없어 민족의 통일을 이룩해 내는 일이 앞으로 닥아오는 몇년동안에 실제 정치가 행해내야 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부가 지녔던 원래의 과업과 가능성에 속하는 일들은 전연 변경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구체화 되어질 따름입니다 (Versachlicht) ! 본인이 오늘 이 기회에 그리고 여기 이 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한다면 즉 모든 가능한 일들(사건들)에 관하여 이 국회의 모든 의원 여러분들과 될 수 있는대로 공동의 협의를 진행시키고, 그리고 상호의 신의가 될 요로운 영역에 속하는 모든 문제들을 국회의 야당에 속하는 의원 여러분들과도 공공하게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하듯이 의논하는 것을 본인의 아주 특별한 관심사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이 기회에 그리고 국회의 이 자리에서 강조한다면 이것은 결코 값싼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이 이 국회의 출신으로 걸어나온 행적에도 알맞는 일로-당연지사 (Eine Selbstverständlichkeit)로서 이의 실행을 위하여 본인은 주장하고 진력할 일입니다.

전체 국회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이같은 사실을 일종의 명령과 같이 엄연한 사실로 고정시켜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만 할일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큰 일치점 (Einer großen Gemeinsamkeit)에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1969년 11월 5일자의 제 8차 국회
(연방)총회 회의록

라이너 · 카르켈 박사
독일 연방공화국 기민당 (CDU) / 기
사당 (CSU) 원내 교섭단체 총무

전구라과를 위한 평화와
안전에 대한 기여 (1969.12.7)

독일 연방공화국 국회 기민당 / 기사당 원내 교섭단체 원내총무 라이너 · 카르켈 박사가 1969년 12월 7일에 개최되었던 베를린에서의 불가분의 독일 판리국 (Kuratorium Unteilbares Deutschland) 연차 대회를 맞이하여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행했다.

√ << 구라과 안보회의 >> 와르샤와 동맹 가맹국들은 1970년에 구라과 안보회의 (eine europäische Sicherheitskonferenz) 를 개최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헬싱키를 이 구주 안보회의 장소로 제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과 이 문제 (테마) 가 바로 우리들에게 특별히 관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들은 이 나라에서 너무나 적게 토의되고 있는 것은 유감된 일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희망이 정당한 것입니까?

우리의 판단에 대한 기준은 어떠한 것들인가?

모든 오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본인은 처음부터 여기에 본 토론의 기본 원칙이 어떠한 데의 출발해서 나가는가 하는 점을 말해두고자 합니다.

영국이 구주 공동 (체) 시장 (EWG) 가입원을 제출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회담조차 시작하고 있지 않는 것을 나는 그 근본부터가 비구라과적 (uneuropäisch) 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또한 우리의 동부진영에 속하는 이웃나라들이 회담을 원하는데 이 회담을 거절하고 나온다는 것도 똑같이 비구라과 적이라고 봅니다. 서로 서로가 (Miteinander) 얘기를 하고 또 상대방이 반대되는 (Gegeneinander) 선전을

하는 것보다 좋은 일인 것입니다. 무력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것은
아예 논외로 하고라도

《와르샤와 조약동맹국들의 프라그 회의》 구라파 안보회의 (europäische
Sicherheitskonferenz)에서 무엇이 토의되어야 할까?

1969년 10월 31일에 프라그에서는 와르샤와 조약기구 동맹국 회의가 개최되었
다. 이 회의 참가국들에 의하여 채택된 한 성명서에서 전구라파 회의가 최초
로 정국 의사일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성명에 나타난 두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1. 구라파 제국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무력 (Gewalt)이나 무력적 위협의 사
용을 포기하고, 구라파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
2. 상호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무역관계, 경제관계와 그리고 학술, 공학부문에서
의 관계와 유대를 확장해 나가는 일은 구라파 제국간의 경제적 공동협동
(Zusammenarbeit)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66년 3월에 행한 브레쾨네브의 제안》 구라파의 여러가지 문제의 해결
책을 논의할 회의에 관한 생각 (구상)은 1966년 3월에 개최되었던 제23차
소련 공산당 대회를 위한 준비가 있는 뒤에 착상된 것입니다.

레오니드 브레쾨네브 (Leonid Brezhnev)는 중앙위원회의 (중합) 보고서에서
여러가지 문제중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안을 당대회에 대하여 행했습니다.

구라파 안보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여 토의를 시작하는 일. 구라파의
모든 국가들간에 상호 유익 (리)하고도 평화스러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구라파에 있어서 군사적면의 긴장완화를 이룩하고 준비제한을 하는 일에 관하여
회담을 하자는 구라파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그리고 그밖의 국가들의 제안을 토
의하는 일. 이 목적을 위하여 국제 상설 자문위원회 (Beratung)를 소집 개
최하는 일.

구라파의 안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인 즉, 독일 문제의 평화
적 규제 (Friedensregelung)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능성을 계속 모색
하는 일. 이렇게 함으로써 현존하는 구라파 제국, 그리고 그중에 또한 동·서
양독간의 국경선을 인정하면서 출발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 구라파에 남긴 잔
여 문제들 (Überreste)을 남김없이 (restlos) 제거할 수 있도록

《카알스 바드 (Karlsbad) 에서의 브레즈네프》 부카레스트 (1966년 7월) 와 카알스 바드 (1967년 4월) 에서의 양차 회의에서 이 생각 (구상) 은 계속 논의의 의 되었다.

긴장을 해소하는 것이 구라파 정책을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 발전시켜 나가는 데 대한 절대 불가결한 결제조건이라고 언급되었다.

브레즈네프의 분석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여러해 동안의 경험으로 보아서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는 반공 (反共 - Antikommunismus) 이 장려되었는데 반하여, 국제적 긴장 관계가 줄어든 때의 여러가지 여건에서는 정치적 바르메타는 왼쪽 (좌경) 으로 돌려졌다 (즉 공산주의에 유리했다) 는 것이다.

그러나 브레즈네프는 긴장의 완화가 소련이 생각하는 의미의 서구라파를 사회주의화 시킨다는 혁명적 변혁을 기하려는 원래의 목적에서 후회하는 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였습니다. 브레즈네프의 분석에서 다음 문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라파 안보문제는 단지 외교상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최고의 중요성을 갖는 사회문제다.

브레즈네프는 북대서양 동맹기구 (나토= NATO) 와 와르샤와 조약기구 대신에 동·서 구라파간의 쌍무적 조약 (bilaterale Verträge und Abkommen) 을 위한 유기적 기구 (Netzwerk) 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다.

《1969년 3월의 부다페스트 호소》 (Budapester Appell) 그 다음 조치로서 - 체코의 비극이 있는 뒤 - 는 1969년 3월 17일에는 와르샤와 동맹국들의 부다페스트 호소가 있었다. 그중에서 중심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회의에 관여한 국가들은 구라파가 다시 새로운 군사적 분쟁에 말려들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제국들간의 사회질서에 상관없이 평화적 공존이라는 기본원칙에 바탕을 두어 구라파의 모든 나라들이 상호 협동을 해 나가도록 하는 일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일을 앞으로도 하는 것을 본 회담 참가국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여러가지 문제들이 아무리 복잡하다 할지라도 이들 제 문제는 평화적인 수단으로 협상을 통하여, 그리고 무력의 사용이나 혹은 무력적 위협의 사용이 없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구라파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구상중의 하나가 구라파에 현존하고 있는 국경의 절대적 불가침성이라 하겠으며, 따라서 오더·나이쎬 경계선과 동시에 동·서독간의 국경선의 불가침성이며, 서독이 전 독일민족을 대표한다는 그들의 주장을 포기하고 또한 어떠한 종류나 형태로도 원자무기를 소유하는 것을 포기하는 일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서백림(베를린)은 특수 상황에 있으며 결코 서독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 1969년 10월에 프라그 선언 》 동부진영에서 행하여진 일련의 회의와 제안에서 우선 최종 문제점이 되는 것이 10월 31일에 행한 초두에 언급한 바 있는 외무장관의 프라그 선언입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프라그에서는 무력포기 문제를 쌍무적으로(bilateral)가 아니라, 다원적으로(Multilateral) 처리하자는데 상호 양해하고 또한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독일에 대하여는 차별대우를 하는 국제연합(유엔)헌장 53조와 107조를 계속 고수한다는 점에 상호 양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희망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

《 미국과 캐나다의 참여 》

1. 한동안 서방진영은 미국과 캐나다가 구라파 안보회의 같은 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않된다는 요구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이 구라파 안보회의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라파 안보회의를 원하는 책임있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구라파 안보회의에 미국과 캐나다 두나라가 참여하는 것을 반대(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 구라파 자유진영에서는 자유구라파가 보다 많은 통일과 형체를 이룩할 때까지는 이와 같은 구라파 안보회의 같은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이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판적인 의의를 제거하는 데에 어떠한 문제가 개재해 있건간에 다음의 사실은 언급되어야 합니다. 즉, 자유 구라파가 계속 성장하여 계속되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덴·하그에서 개최되었던 회의 후에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소련이 주도하는 회의의 이니셔티브는 최대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회의시기》 그런데 이에 대하여 본인은 단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도대체 외교적 조치 (diplomatische Aktionen) 라는 것이 이와는 달리 시작되어진 적이 언제 있습니까?

4. 충분히 준비되어지지 않은 거창한 회의는 전연 회의를 하지 않는거 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본인은 찬동합니다. 왜냐하면 회의가 실패로 돌아간 후에는 일이 그 이전보다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회의는 구라파 평화질서로 행하는 발전과정의 중국에 가서는 틀림없이 꼭 있어야 할 것인데, 내 생각으로는 이 과정의 시발을 완성된 어느 단계보다 시작자체에 벌써 상당한 의의가 있겠다고 봅니다.

5. 또 다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4개의 회의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나는 이 의견에 찬성합니다.

《긴장완화문제》

- a) 그런데 - 베를린 문제, 동·서독 양독문제, 동·서 양진영간에, 국가들간에 상이한 이해면등에서 -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현실면에서 긴장완화 풍토가 징후로 나타나 있습니까?

현실을 감안할 때 이와같은 회의가 시의에 맞는 (zeitgerecht) 것이라고 생각케 하는 긴장완화의 징후가 있습니까?

《무력포기》

- b) 우선 (사전에) 쌍무적인 무력포기 (불가침) 조약같은 것을 통해서 구라파에 준비 축소조치 (Abrüstungsmaßnahmen) 와 안보조치 (Sicherheitsmaßnahmen) 의 바탕을 마련해 놓고 그와 같은 회의 (구라파 안보회의) 를 갖는 것이 보다 의의가 더 있지 않을까? 만약에 구라파 회의가 사실에 있어서 모든 국가들간의 쌍무적 접촉 (bilaterale Kontakte) 을 방해하는 두개 진영 (Blöcke) 의 만남이라면, 이는 하나의 진보라기 보다는 오히려 퇴보 (Rückschritt) 를 뜻하는 것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안보문제》

c) 그런데 안보문제 (Sicherheitsfrage) 를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이 옳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경제, 사회, 문화면의 협동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미국과 소련이 헬싱키에서 개최하는 살트(SALT) 무기에 관한 회담이 구라파의 안보에 대하여 보다 큰 의의를 지니는 것이라 하겠으니 더욱 그러 하겠습니까.

《발표명령》 (Schießbefehl)

d) 안보와 무력포기(불가침=Gewaltverzicht)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이러한 일이 거론되고 행해진 뒤에는 베를린에서 가령 앞으로도 계속하여 베를린 장벽에서 발포행위가 자행될 것입니까?

《1969년 4월의 북대서양 동맹기구 (=나토)회의》

6. 1969년 4월 10일과 11일에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던 나토 각론 회의(Die NATO Ministerkonferenz)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어떠한 구체적인 문제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협상의 대상이 되고 또 짧은 시일안에 해결을 볼 수 있는 문제들인가에 관하여 소련과 다른 동구라파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알아내는 일을 하자는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이와 같은 탐색(Sondierung)의 결과가 무엇이었는데에 대하여 아는 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다음의 방법에 대하여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즉 공동의 관심사가 되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모색하고 이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려는 방법에

《군비축소》 (Abrüstung)

7. (동·서) 양진영 대신에 그리고 공격과 위협 대신에 친구라파를 위한 안보체제를 이룩하려는 목적을 추구하던 모든 서방진영의 노력은 언제나 군비축소 문제와 긴장의 원인을 해결하려는 것을 함께 유관된 문제로 보아왔습니다. 군비축소조치(Abrüstungsschritte)를 일련의 문제중 기업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 위에 언급한 상관관계, 즉 군비축소 문제와 긴장의 원인 해소가 지니는 밀접한 관계를 쉽게 해이시키는 결과를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문제가 지니고 있는 긴밀한 관계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Nicht Krieg) 것보다 추구하는 것이 더 크며, 또한 안전 (Sicherheit) 보다는 우리가 찾는 것은 바로 평화 (Frieden) 인 것입니다.

<< 자유권과 사회적 현실 >> (Freiheitsrechte und soziale Wirklichkeit)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1. 카알 마스 (Karl Marx) 와 그의 여류 (후에 Epigonen) 들과 그러나 또한 다른 사람들도 형식적 자유 (formale Freiheit) 와 실제적 자유 (reale Freiheit) 를 구분하는 안목을 가능케 해 놓았으며, 그들은 또한 형식적 민주주의 (formale Demokratie) 와 실제적 민주주의 (reale Demokratie) 를 구분하는 가능성을 주었습니다.

즉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종합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자유권 (Freiheitsrechte) 이란 것이, 만약에 헌법에만 명세되어 있고, 이 자유권의 혜택이 극히 적은 얼마안되는 사람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이라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문제와 관련시켜 볼 때에 다음과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구라파 안보회의란 것이 - 긴장의 현실성을 조금도 제거함이 없이 - 종이위에만 써 놓은 형식적 안전 (안보) 에 그친다면, 실사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 동구라파 사람들이 제안하는 회담을 거절하지 말자는 처음부터 밝혀둔 본인의 원칙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 (질문) 를 제기치 않을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즉 소련을 비롯한 동구라파의 우리의 이와같은 구라파 일체감 (europäische Verbundenheit) 에서 오는 회담취지 (Gesprächswillen) 를 받아 들이려는 마음의 준비자세 (Bereitschaft) 가 어떠합니까?

독일 연방공화국 (Bundesrepublik Deutschland-서독) 은 오래전부터 구라파

의 모든 나라들과 (국교) 정상화와 회담을 바라고 있다는 점을 누구나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도 또한 많된 일이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도 잘 알려져 있는 일입니다. 즉 이들 동구라파의 나라들중에 어떤 나라들은 이 일련의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는 있으나, 그들의 결으로 나타나는 실제적 행동 (Haltung)은 왜 부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게 강요되고 있는가 하는 점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내가 이러한 말을 여기에서 하는 것은 "do ut des" 같은 유치한 의미의 사전조건 (Vorbedingungen)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해의 균형 (상쇄 - Interessenausgleich) 없이는 - 따라서 상호 의무이행 (Gegenleistung) 없이는 - 영속적인 외교정책상의 문제의 해결이나 판계를 이룩하는 토대가 생겨날 수 없다고 본인은 보기 때문에, 본인은 이 상호의무 이행 = 성의표시 (Gegenleistung)은 언제나 동시적이고 (gleichzeitig), 같은 종류의 것이고 (gleichartig) 또한 같은 급의 것 (gleichrängig)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확실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입니다. 상호 성의표시 (의무이행 포함 - Gegenleistung) 없이 어느 한쪽만의 성의표시나 의무이행만 있을 때에는 실제로는 항복 (Kapitulation)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인은 1969년 5월 8일에 행한 빌리 브란트 (수상)의 말은 (서독) 국회록 (Bulletin)에서 다음과 같이 인용코자 합니다.

<<내독관계의 해명>> "명확성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본인은 부다페스트 호소 (Appell)가 가질 수 있는 가능한 영향을 서로 다른 여러말을 함으로써 (durch Doppelzüngigkeit) 문제시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내 생각으로는 필요한 일이다.

서독 자체에 대하여는 바로 이와 같은 경험에 비추어 보아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은 구라파 (안보) 회의가 행해지기 전에 동·서 양독간의 내독관계가 해명되어지는 것이 그 어느때 보다 더 중요한 일로 생각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얘기가 됩니다. 즉 불쾌한 돌발적인 일을 맛보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상대방을 경멸하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가

진 협상을 동·서독간에 가짐으로써, 1967년에 연방공화국(서독) 수상이 동독의 수상(Vorsitzender des Ministerrats)에 보낸 편지에 제안한 바 있는 것과 같은 동·서독간의 협상을 통하여 우리는 독일의 두 지역간의 상호관계를 해명하는 것이 나에게는 시급을 요하는 필요한 일로(erforderlich.)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라파 안보회의는 다른 부담되는 일들에 더하여 지나치게 독일 불평(deutscher Querelen.)을 털어놓음으로써 원래의 사명(과제)에서 벌어져 버릴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태도)는 옳은 태도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협상제안》 동독의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회담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는 대신에 구체적인 협상제안을 하는 것이 연방공화국(서독) 정부에게는 잘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독일의 양부분(동·서독)간의 <특수관계>라는 말을 되풀이 하여 사용하는 것은 별 중요한 의의가 없으며, 최대가능성을 내포하는 제안(Maximal vorschläge)을 할 것을 동부 베를린(동독)에 위임해 버리는 것 또한 아무런 중요한 의의를 갖지 못합니다. 즉, 특별한 관계를 또한 수립시켜 보려고 하고, 예를 들어 교통문제(동·서독간의)를 국제법상 완전한 국가조약(Staatsvertrag)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아주 틀이 잡힌 국제법상의 관계를 수립해 놓자는 것이 그들이 시도하는 바입니다.

《인권의 실현》

3. 인권(Menschenrechte)과 이와 같은 인권의 사회적 바탕이 보다 일상현실(Alltagswirklichkeit)화 되어 있는 곳에 진보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 나는 10월 29일에 독일 국회의 나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 인권이 통하지 않는 곳에 퇴보(Rückschritt)가 있다고 봅니다. 인권을 억압하거나 혹은 인권이 효과적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을 저해하는 구조체계가 정착하는 곳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퇴보만이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권이 헌법에 수록되어 있고, 소송을 제기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우리에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권이 모든 사람들에게 현실로 되어지는 그러한 사회적인 바탕을 마련하려고 노력

합니다. 이와 같은 출발점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군사력 (militärischer Macht)의 점차 분명해져 가는 한계와, 그리고 정신면과 사회정책적인 면의 세반 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지위 (Rang) (차원등)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이것은 전체 구라파를 생각하고 한 것이었으며 (1969년 11월 18일 - 마인츠 (Mainz)에서), 따라서 우리는 확연히 다음과 같이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즉,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인권의 인정 (Anerkennung der Menschenrechte)입니다.

이 인권의 인정을 받는 일이 확실히 보장된다면, 우리는 서명하는 서류 (Unterschriftsformular)의 형식이나 서명에 들어는 잉크의 색깔같은 것은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1969년 10월 29일 - 국회에서).

이와 같은 일이 점진적으로만 성취되어 질 수 있는 것이라 하는 점은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 국가적 주권 >> (Nationale Souveranität)

4. 모든 구라파인들이 모든 구라파인들과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것이 유용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국가적 주권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일 (Zwangsbeschränkungen)은 사라져야 할 것이며, 모든 간섭 위협이나 협박 (Interventionsdrohung)은 자취를 감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인은 연전에 이어 이에 대하여 레겐스부르크의 제국의회의 모형시도 (das Modell des Regensburger Reichstages)에 관하여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킨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에서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서로 적대시 되는 (Feindlich) 종교를 가지고 사회적 신분이 다르고 그리고 서로 상이한 국가형태 (Staatsformen)를 가진 구라파인들이 함께 협동을 해나갔던 것이며, 그리고 때로는 성공적으로 진작시키기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구라파의 나라들이 물품 (상품)수송 (Warenverkehr)과 지불계정 (Zahlungsverkehr)을 위하여 공동제도 (gemeinsame Institution)를 마련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이 계속 유효한 우리의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형식적으로 (formal) 평화와 안전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전구라파를 위한 평화와 안전을 실제적으로 (real) 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따라서 전구라파를 위하여는 독일 내부자체의 발전상태 (상황) (der Stand der Innerdeutscher Entwicklung) 뿐만 아니라 독일 국민과 포올랜드 국민간의 이해가 또한 꼭 있어야 한 일입니다 (unerlässlich).

독일 국민과 포올랜드 국민은 자유의사에 의하여 (frei) 협약되어 지고 그리고 양 (두) 민족의 동의를 반드시 얻는 안전한 국경을 가진 상태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에 대한 회담 (Gespräche) 을 개최하는 것은 평화조약 (Friedensvertrag) 전여화로 의의가 있겠습니다 (sinnvoll). 최종적인 규제 (Regelung) 는 독일 민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국경의 극복 》 (Überwindung der Grenzen) 국경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문제의 심각성을 둔화시키기를 원하는 사람은 - 무력의 포기 (불가침) 이외에도- 문제가 되는 국경문제에서 그 전체성을 포착하여 다루어야 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우주여행시대에 있어서는 - 19 세기의 규범서 (Formelbücher) 들을 뒤지는 대신에 - 국경을 극복하고 (überwinden), (서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durchlässig),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건너어 나갈 수 있도록 (erträglicher) 해 주는 일이 행하여져야 합니다.

거주·이전권이 보장되고 (Freizügigkeit), 구라파 민족의 권리 (Volksgruppenrecht) 가 실시되고 구라파 전역에 걸쳐서 출신 (Herkunft), 신분 (Stand), 종교와 의견 (Meinung) 의 차이에 따른 차별 (Diskriminierung) 현상을 일체 없애버린다면은 국경문제 (Grenzfragen) 는 그 양상이 달라집니다.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는 다른 나라들이 제기하는 전구라파 관계에 관한 이니시아티브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는데 그치지 말고, 스스로도 능동적인 입장을 취하고, 그리고 구라파의 모든 나라들에 대하여 거주·이전의 보장 (Freizügigkeit) 과 민족군법 (권리) (Volksgruppenrecht) 과 비 차별대우 원칙 (nicht Diskriminierung) 에 관한 일종의 헌장 (Charta) 초안을 제안하는 것도 장하

는 일이 될 것입니다.

✓ 구라파의 평화질서에 기여해야 할 구라파 안보회의 (Eine Europäische Sicherheitskonferenz) 는 현존하는 국가적 현황 (der Staatliche Status Quo) 을 그 토의의 중심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케 하는 보장 (Die Sicherheit Menschenwürdigen Lebens) 문제를 그 핵심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구라파의 안보체제 (Sicherheitssystem) 그리고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구라파의 평화질서 (Friedensordnung) 는 구라파의 형편을 내적으로 경교화 시키는데 있어야 할 공동의 규범 (Gemeinsame Normen zur inneren Festigung der europäischen Lage) 을 필요로 합니다.

포올랜드와의 협상에서는 우리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현재 포올랜드 정부의 행정구역 (Verwaltungsberesch) 에 살고 있는 백만명의 독일인의 형편 (문제) 에 관하여도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란서 사람들과 독일 사람들은 공동의 협력을 통하여 미래 (장래) 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시켜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든 구라파인들에게 증명했습니다.

✓ 포올랜드 사람들과 독일 사람들은 공동의 규범 (규제) 을 통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보장을 위하여, 민족군 (Volksgruppen) 을 위하여 그러나 차별대우를 반대하는 (gegen Diskriminierung) 입장을 취할 수 있는 평화 동토 (Die Landschaft des Friedens) 와 그리고 모든 문제들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는 규범 (규칙 - Regelungen) 에 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5. 구라파의 안전 (안보) (Sicherheit) 에 관하여 심사 숙고하는 모든 구라파 인들은 (동·서) 양진영을 통하여 그리고 상호의 원자무기등으로 인한 위협 (Wechselseitige atomare anbreckung) 때문에 유지되는 비전쟁상태 (Nicht-Krieg) 를 분명 너무나도 위험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구주의 상황을 너무나도 진보성이 적은 것으로 여기며, 너무나도 비지적이고 (zu wenig Intelligent) , 비 구라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 전쟁상태의 기초가 되어 있는 공학 (기술) 의 변천을 감안할 때 너무나도 불안정 하다고 (zu labil)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대륙(Der entwickelteste Kontinent)인 구라파가 빈곤과 기아(Hunger)와 무지(Unwissenheit)에 대하여 전개해 나가야 할 투쟁을 감안할때 지금 이 비 전쟁상태 때문에 좁어지고 있는 부다는 너무나 큼니다(zu teuer).

그리고 구라파인들 - 독일사람도 구라파인이니까 - 은 구라파 여러나라의 국가(민족)적 문제(Nationale Probleme)들은 아마도 구라파 적으로만(구라파 전체와 관련시켜서야만) 그리고 모든 이곳에 대하여 안전을 가능케 하는 형태로만 해결되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벌써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 1968년 6월의 나토 각료회의 >> 1968년 6월 25일에 북대서양 동맹국(NATO) 각료들이 레키야비크(Reykjavik)에서 다음과 같은 결의를 했을 때 그러니까 좋은 날을 갖은 셈입니다.

즉, 아직까지도 여전히 구라파를 분할해 놓고 있는 일련의 미해결된 문제들은 평화적 수단을(방법)을 통해서 규제되어야만 한다는 입장에 나도 가맹국 각료들은 모든 일의 기초를 둡니다.

구라파에 있어서의 영속적인 평화질서(Eine dauerhafte Friedensordnung)의 최종 목표는 신뢰하는 분위기(Eine Atmosphäre des Vertrauens)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최종 목표는 점진적으로만 달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나토 가맹국 각료들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모든 구라파의 국가들이 이러한 중구적 목표에 분명한 관심을 갖고 또한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의식속에서 나토 가맹국 각료들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균형있는 그리고 쌍방동시에 실시하는 군대축소(Truppenmilderung)를 포함한 이 분야에 있어서의 일련의 조치들은 긴장도를 줄이고 그리고 전쟁위험을 더욱 줄여 나가는데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균형있고 쌍방 동시적으로 행하는 군대의 감축(Ausgewogene beiderseitige Truppenminderungen)은 - 그것이 형식적(formal)으로나 혹은 구두(말)로만 얘기되는 것이 아니고 - 실제로 추진되어 진다면 구라파의 안전(안보)으로 향하는 중요한 일보가 될 것입니다.

바로 지난번의 북대서양 동맹회의 (Die jüngste NATO-Tagung) 가 레이키야비크 (Reykjavik) 에서 취한 입장을 강조하고 새롭게 한 것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 군비제한 >> (Rustungsbegrenzung)

6. 미국과 소련은 헬싱키에서 군비제한에 관하여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은 그 협상이 나타내는 제 현실과 마찬가지로 결코 구라파를 위한 모델 (Ein Modell für Europa) 은 아니라는 점을 여기에서 지적해 들 때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상 (Modell) 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즉, 구라파 제 국가와 민족간의 관계에 있어서 세력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An die Stelle des Vormachtstrebens), 구라파 제 민족과 국가들에 통일의 실현 (Die Gestaltung ihrer Einheit) 을 위하여 노력한다. 불란서가 1950년 5월에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보다 더 적절하고 좋은 표현을 알지 못합니다 (즉 가장 좋고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헤게모니와 적대성 (Rivalitäten) 을 강화시키지 말고 이 헤게모니와 적대성을 평등과 협동으로 대처시켜 나가라는 것인데, 이것은 구라파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형성하여 나감에 있어서 구라파를 돕는 원리·원칙 (Die Maxime) 입니다. 이와 같은 구상을 원칙으로 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모두가 틀린 일이 되겠습니다.

(abwägig) 즉, 구라파 안보회의가 뜻하는 것과 이것이 진영 (Blöcke) 을 굳히는데 이용되고 (Fixierung) 하는 일이라던가, 무력포기 (불가침) 와 기타 다른 일들을 쌍무적 회담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고, 원칙적으로는 집단적인 진영의 해소에 귀속시킨다는 일이라던가, 그리고 권력장악 현실 (Vormacht-wirklichkeiten) 과 구라파의 양분 (Die zweiteilung Europas) 을 굳히는 일같은 것은 다가 잘못된 일들입니다.

<< 구라파 정책 >> (Europapolitik) 본인이 토론에 유도해 넣으려고 하는, 우리의 판단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와 같은 기준들을 이제 사람들은 6개항목에 대한 선진적인 것으로 (plakativ) 으로 생각하여서는 안되겠고, 이것을 우리의 논거 (Argumente) 로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찬·반(Alle Fur Und Wider)을 고려하여서만이 그 해결책이 강구되어 질 수 있는 일련의 문제들의 경우에 (조약등의) 잠정협정 (Punktation)을 취한다면은 너무나도 쉽사리 일련의 유보조건 (Vorbehalte)과 전제조건 (Vorbedingungen)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서 오히려 방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구라파인들은 우리의 문제들을 규범있는 질서를 통하여, 힘 (폭력 - Gewalt)을 정치의 도구로 행사하는 일을 완전히 버림으로써, 모든 무지와 빈곤과 사회적 불안 (Soziale Unsicherheit)의 일체의 잔재를 영속적으로 멀리함으로써 여러 민족들과 언어와 정치적 제 방법들과 국가질서들 (staatliche Ordnungen)이 평화적으로 병존 (Nebeneinander)하고 평화적으로 공존케 함으로써 (Miteinander) 세계에 대하여 하나의 예 (例 : Beispiel - 모범)를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는 인권문제 (Eine Sache der Menschenrechte)라는 사실을 증명해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라파의 이념 (생각 - Idee)을 확실성 있게 (Glaubhaft) 몸소 실천하여 보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정치 (Weltpolitik)에서 담당해야 하는 구라파의 기능을 완전히 다해 내는 것이 구라파가 장차 해내야 할 과제입니다 (Die Künftige Aufgabe Europas).

우리들 구라파인들이 이렇게 행동할 것 같으면, - 착취와 압박을 초월하여, 어떠한 형태의 식민지주의 민족주의 (Rassismus)도 초월하여, 그리고 어떠한 유의찬탈행위 (Usurpation)나 후견·감독행위 (Bevormundung)나 불손행위 (Arroganz)도 초월하여 - 우리는 우리 자신들과 세계에 대하여 좋은 일 (ein guter Dienst)을 하는 것입니다.

<<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의 언론 및 공보처 간행보고 >>

발행지 : 본

일 자 : 1969.12.17

원문 : " Bulletin des Presse-und Informationsamtes der Bundesregierung "

독일 연방(공화국) 국회 사회민주당
원내교섭단체 (SPD-Fraktion)
(원내) 총무 헤르베르트 베에너
(Herbert Wehner) (1969.12.7)

분할된 독일에 있어서의 정치의 제 가능성

독일 연방공화국 국회 사회민주당 (SPD) 원내 (교섭단체) 총무 (위원장) 헤르베르트 베에너씨는 1969년 12월 7일에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던 Unteilbares Deutschland (분할 불가능한 독일) 와 Kuratorium (위원회) 의 연차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다.

친애하는 신사 숙녀 여러분!

지난 몇일동안 여기에서 행하여진 그렇게나 진지한 토론을 끝맺으려는 이 순간 본인은 그 어느 특정한 강연이나 토론문제를 선택하여 저기에다 어떤 평가를 가한다거나 혹은 내것으로 받아들인다던가, 아니면 거절해야 할 문제에 대한 예 (본) 로 제시한다던지 하는 시도를 할 의사는 없습니다.

저가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의 첫 시발로 아주 다른 어떤 출발점을 택할 생각도 없으며, 내가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그렇게나 진지하고 때로는 동떨어지기까지 했던 이번의 토론에서 합의점에 달할 수 있는 점들을 짜 맞추어 연결시켜 보고자 하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물론 저는 누구에게서도 의심치 않는 여러분들의 선의의 신뢰 (guter Glaube) 에 대하여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의 토론발언 (Diskussionsbemerkung) 의 서두에 여러가지 상이한 의견의 표시를 여러분들께서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여 두하고자 합니다.

바르첼 박사는 여기에서 전적으로 안보회의에 관한 여러가지 측면만을 다루고, 거기에 대하여 관심을 기우릴 필요가 있고 고려해 마지 않을만한 견해들을 개진했습니다. 바르첼 박사의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하여는 말 할이 여러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바르첼씨가 그의 발언 끝에 가서 그가 제시한 몇가지 견해들을

사람들은 잠정협정 (Punktation)에 짜맞추어 연결시키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말했다는데, 이점에 대하여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는 자기의 이러한 태도 표명의 이유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사람들이 그 반대의 경우에는 그가 모든 사람들이 국경문제에 관하여 서로 서로가 토론해야 한다고 말한 다른 사람들과의 토론이란 것이 아예 처음부터 그냥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주안보회의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의 몇달동안이나 아무튼 명년(明年)이나 혹은 앞으로의 몇년동안 항상 되풀이 하여 우리의 관심사로 등장할 문제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이번의 토론은 이 문제에 관하여만 특수하게 논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 70년대 초반의 독일정책 》 칼렌다가 가리키는 바와 같이 이제 70년대가 시작되는 이 문턱에서 - 확실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Jeder Mensch) 그리고 모든 일꾼이 (Alle Menschen) 보조수단 (Hilfsmittel)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대 감각에는 이 보조수단의 역할을 하는 것은 칼렌다입니다. - 토론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어조 (Unterton)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던 점을 간단히 나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다루어 불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사들이 어떠한 입장 (Standpunkt)을 선택하였거나 그리고 무엇을 지지하고 나왔거나에 관계없이, 그들의 말의 근처에서 어느정도의 작용을 했다고 여겨지는 점을 여기에 두각시켜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1969년인 금년에 독일연방공화국 (서독 - Bundesrepublik) - 기본법 (Grundgesetz = 헌법) - 이 수립된지 20년이 될 뿐만 아니라 동독 (DDR) 이 수립된지 또한 20년이 되는 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점을 여기에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이에 대한 다른 (기억)에 나대로 또 하나의 회상을 추가시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며, 나의 동지 (Freunde) 중의 한분이시며 독일 기본법 (=헌법)의 아버지 역할을 담당하신 분들중의 한분이신 - 그리고 이것은 지당한 일입니다 - 카를로 슈미트 (Carlo Schmid) 교수께서 지금부터 20년전 기본법이 결정되던 날에 말씀하신 점을 바탕으로 하여 카를로 슈미트 교수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 (Bundesrepublik)은 오늘 (날) 다른 모든 나라들 (Staa-

ten) 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국가 (Staat) 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서독은 물론 몇가지 조약을 통한 (Seu vitute) 사용권으로 인하여 제한을 받기는 하나,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서 (dem geltender Rechte nach) 자기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자유스러우며 (frei)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혼자서 (allein) 그리고 전적으로 (voll) 책임을 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베를린은 제외되고 경우가 다르겠습니다.

《주권》 오늘날 주권 (Souveränität) 은 단지 형식적인 개념으로만 (nur noch als Formaler Begriff) 이해되어 질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나라들에 대하여 의무를 지는 일을 받아들이는 권한 (Das Recht-anderen Staaten Gegenüber Verpflichtungen über Nehmen Zu Können) 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문제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의 이해를 고려에 넣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다른 나라들의 이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국가가 자기의 생활조건과 상황을 유지해 나가는데 이들 다른 나라들의 선의 (善意: guter Wille) 가 필요하고 또 이들 다른 나라들이 저기에다가 강대국들일 경우에는 이들 국가들의 이해를 무시한다는 일을 아예 있을 수 없는 것이겠습니다.

《두개의 독일부분국가》 우리 민족은 독일 연방공화국 (Bundesrepublik: 서독) 을 하나의 정규 국가 (Ein regulärer Staat) 로 생각하는 일에 점점 습관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서독은 오늘과 같은 기구를 가지고서 그 실체상 (Der Substanz nach) 결코 하나의 단순한 단편국가 (Staatsfragment) 는 아니라는 점을 - 아무튼 이러한 단편국가보다는 더 되는 것이라는 점을 - 우리 사회민주당원들 (Sozialdemokraten) 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독일 영토상에 두개의 독일 부분국가들 (Teil staaten) 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독일 민족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과는 아니며, 따라서 독일 민족의 자결권 (Selbstbestimmungsrecht) 밖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

독일 영토상에 두개의 독일국가 (Zwei deutsche Staaten.) 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농·서 양진영의 비공개적 세력투쟁의 소산이며 (Ein Stück unausgetragen

en Machtkampfes), 구라파에 적용되어야 할 평화질서 (Friedensordnung) - 그리고 국제연합 (유엔 - UNO)도 이를 마련하는데 무능력한 것으로 밝혀진 이 평화질서 편하에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 국가들이 아직도 완전히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서 나온 소산입니다. (Ein Stück Noch Nicht vollzogener Einigung der Sieger des letzter Krieges Über die Friedensordnung).

카를로 슈미트씨가 20년전에 결정된 것을 회상하면서, 즉 기본법 (헌법)을 회상하면서 5월 8일에 한 얘기를' 여기에 인용함으로써 나는 말을 계속하여 나가 고자 합니다.

즉, 그러므로 독일 영토상에 존재하고 있는 두개의 국가는 그 형성 (수립)의 원인으로 볼 것 같으면 과도기의 산물 (Produkte des Übergangs)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독일의 상황 (처해있는 입장)을 나타내 주고 있는 과도 (일시)상태 (Provisorismus)가 지금까지 달할 수 있던 정도가 곧 이 산물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안점에서 볼때 독일 영토상에 존재하고 있는 두개의 국가는, 그 도덕적 정당성 (Die moralische Legitimität)으로나 민주주의적인 정당성 (Ihre demokratische Legitimität)으로 보아서는 서로 상이한 지위 (랭크)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정치적으로 볼때 두개의 점령정부의 잔재 (Residuen zweier Besatzungsregime)이며, 그 수립 (형성)의 면으로 볼 것 같으면 형식상으로는 두 국가가 같은 지위 (랭크)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서독의 두 국가는 서로가 외국으로서 인정 (승인)할 필요도 없으며, 또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일을 함이 없이) 서로 유통 (교역 Miteinander Verkehren)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두 국가가 지니고 있는 내적인 질서의 민주주의에 입각한도 (廣-랭크-Rang)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문제는 위에 지금까지 언급한 얘기와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인식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할 우리의 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즉, 구라파에 평화질서가 성취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또한 함께 기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이러한 평화질서 (조약)에서는 모든 민주주의의 기본권 (Grundrecht aller Demokratie)이 정당하게 취급되어지는 것이어야 겠으며, 따라서

이 말은 여러 민족들이 그들의 정치적 실존의 형태와 내용을 스스로가 자유속에서 (자유스럽게) 그리고 자유를 위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에 가서 우리 독일의 국내나 밖에서 (외국에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이 세계를 위하여 가치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카를로 슈미트 교수는 그의 이러한 얘기를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었습니다.

여기에 이르는 길은 오래 걸리는 먼 길이 될 것이며, 그리고 난관(Mühsal)이 흥만한 길일 것입니다 (Das wird ein eanger Weg werden ein Weg voller Mühsal).

우리는 토론이 행하여진 이 몇일 동안에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 보았으며, 앞으로의 전망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능한 한도내에서 (Menschermöglich) 위에 말한 이 긴 여정의 길이 어떠한 것인가에 관하여도 우리는 상상해 보았으며, 이점에서 매우 상이한 기질 (Temperamente) 과 약속 (Engagements) 과 정열 (Leiden'schaften) 을 발전시켜 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행한 가치평가 (Bewertung) 의 차이가 얼마나 세대의 차이에 따라시 다른가 하는 점을 알았으며, 그렇지만 단순히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절실하게 바라더라도 역사의 흐름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며 (Denn Aus der Geschichte kann Mannichft Augsteigen) 그리고 또한 어떤 특별한 자리 (Sondsplatz) 를 예약해 놓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는 이것은 결코 어떤 가치판단 (Werturteil) 이 아닙니다. 실제가 내가 말하는 것처럼 그러합니다.

<< 쿠라토리움의 과제 >> Das Kuratorium Unteilbares Deutschland 는 다른 많은 기구들 처럼 자기 자신의 토론에서도 -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이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는 점입니다 - 언제나 되풀이 하여 스스로의 존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며, 또한 항상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이 Kuratorium 은 독일정책 (Deutschlandpolitik) 을 수립 (조안을) 하거나 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Kuratorium은 독일인들이 서로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서로 깊이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까지 보다는 보다 낮게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함께 같이 지내나가며, 이곳에서(서독) 살 수 있도록 하고 따라서 다른쪽(동독)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하고도 어느정도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나이가 많은 세대(Die Älteren)와 젊은 세대들(Die Jüngeren)이 함께 살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miteinanderleben).

오늘 젊은 세대이고 또 젊은 세대로서 발언하고 있는 사람들도 앞으로 몇년만 지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이가 많은 세대(Die Älteren)로 보일 것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일이 이러한기 때문에 완전히는 일치는 하지 않지만 역전 릴레이 경주(Stafettenlauf)와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평화의 보장을 위한 건설적인 기여>> 우리 민족이 자기 자신의 공동의 미래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할 것인가는 결정적인 의의를 지니는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이 죽고 또 남까지 죽이지 않으려면 이번에 이와 같은 스스로의 결정권한(미래-장래에 대한)을 행사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포기하는 일은 하지 말 것을 나는 긴급히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상황(형편)에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있어야 남의 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 다른 나라들의 파트너가 되고 또 될 수 있다고 하는 민족적(국가적) 요구면에서도 또한 이러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요구(Auspruch)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점에서 항상 주의하고 또 주의를 환기시켜야 할 일은 이것으로써 우리가 다른 민족들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70년대에 우리에게 주어질 논의(토론)의 핵심문제(Kernfrage)라고 생각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함께 같이 살 수 있는(miteinander leben können) 법적 형편(Rechtsverhältnisse)을 마련하는 일에 우리가 다해야 할 일을 분할되어 살지 않으면 안되는 민족으로서(Als Volk, das Gespalten leben muß) 건설적인 기여를 다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는 앞으로 70년대에 항상 우리의 관심사가 될 토론의 핵심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점을 명확히 해 두는 일에 성공한다면 여러가지일들이 보다 간단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됨으로써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 밝혀지겠지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느 한쪽이 주장하는 권리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희생시켜 가면서 그위에 성립되어 있는 것인가 혹은 그위에 성립되어져야만 하는가, 아니면 누구에게나(어느 국가에게나 - Jedem) 자기의 권리가 보장되어 질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점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의 몇년동안에 바로 이 몇년동안에 이와 같은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으므로 70년대가 시작하려는 문턱에 서서 가능한 대로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를 분할시키고 있는 여러가지 요소들에 덧붙여서 더욱 우리를 분리시키는 일들은 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 해야겠습니다.

가령 토착적인 것(Einheimische)과 비 토착적인 것(Nichteinheimische)과 그리고 이와 비슷한 카테고리로서 서로 분열해 들어가는 일들을 삼가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아무튼 이상에 언급한 일련의 일들을 다해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여, 이 과제를 다해내는 데에는 50년대에 논란이 많다가 증축에 가서 그래도 다수에 의하여 결정되어지고 60년대에는 더 이상(사회-세계)발전과 서로 맞지 않던 그러한 일련의 일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60년대에는 50년대에 발전되어진 것(Das in den 50er Jahren Entwickelte)을 60년대에 우리가 다루던 일과 연결시켜 이와 조화시킬 수 있는 힘(Kraft)이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평화정책》 독일 연방공화국 (Bundesrepublik서독)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가 (ein Staat)입니다. - 여기에서 나는 독일 기본법 (헌법)이 제정된지 20주년을 기념하여 말해진 (슈미트 교수의 말)것에서 인용했던 점에 다시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바입니다 - 우리 독일 사람들에게 대하여는 서독 (독일 연방공화국)은 그 비중을 국제적 결정과 구라파의 결정에 쓰이는 지울추에 갖다 놓도록 (즉 국제 및 구라파의 중요한 결정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비중을 차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요소 (Faktor.)라 하겠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실이 분명해 지겠습니다.

즉, 우리는 구라파와 세계에서 명화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을 위하여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하여 줌으로써 이 일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함으로써도 이 일에 협동,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아무리 일들이 이점에서 어렵게 우리에게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몫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토론도 진지한 것에는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바르셀 기민당·기사당 원내총무가 <구주 안보회의>에 관한 토론에서 행한 점에 다시 되돌아 올리고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아무리 철저하게 논의하더라도 충분치 않을 것이며, 아무리 진지하게 이점에 관하여 토론하더라도 충분히 진지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즉 철저하고도 진지하게 이점에 관하여 논의하여야만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과 같은 단 한가지 경고를 말해두고자 합니다.

도대체 이러한 회의가 안보회의 (Sicherheitskonferenz)라고 이름 불리워 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여) 점을 찍고, 도장 찍는일 (Mit Akribie Punktieren, Paraphieren zu wollen)을 할려는 시험에 결코 빠져들어가서는 안되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가지 점으로 보아 특유하게 독일적인 것 같지 여겨집니다. 될 수 있는한 이 일련의 라운드들 (Runden - 정치적 과정을 말함) 우리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들은 어차피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 << 포올랜드와의 화해 준비태세 >> 포올랜드 문제가 어제 여기에서 얘기되었고, 오늘은 또한 동료의원인 바르첼 박사가 이 문제에 관하여 언급했습니다.

여기에서 각 개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무엇이며, 단순히 감동 (Emotion) 이라는 대중적인 용어로만 처리해 (판단해) 버릴수 만은 없는 감정 (Gefühle) 즉 느끼는 점이 어땠던가에 관계없이 이 모든 경우 본인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해 두고자 합니다.

즉 지금으로부터 30년전에 소위 전격전쟁 (Blitzkrieg) 과 전격적 승리 (Blitzsieg) 가 있는 후에 - 이 일은 그 당시 전격적으로 깨끗하지는 않은 것이었으나 (Blitzzauber) 아무튼 정말 전격적으로 빠른 (Blitzschnell) 것이었습니다. -

미안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다음과 같은 엄청나고도 (entsetzlich) 뻔뻔스러운 (vermessen) 7자로운 얘기가 말해졌습니다.

✓ 포올랜드는 국가로서 존재하는 것을 중지했습니다. (Polen bat als Staat Aufgehört zu existieren) 즉 포올랜드는 이제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음).

친애하는 신사 숙녀 여러분! 이러한 일이 단순히 단언 (Beteuerung) 을 하는 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즉 포올랜드와 같은 나라 하나를 이 세상에서 없애 버리는 이 엄청나고도 뻔뻔스러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안됩니다.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민족과 포올랜드 두민족의 화해 (Aussöhnung) 는 즉 그렇게나 서로가 나쁜 일들 (soviel Schlimmes) 을 많이 저질러 놓은 이 두민족이 화해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학교 교과서들에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사용하던 학교 교과서들에서와 현행되고 있는 학교 교과서들에서도 수십년간이나 대천지원수 (戴天之怨讎 - Erbfeind) 라고 기록되어 있는 서방의 다른 한나라 즉 불란서와 맺은 화해와 비견될 수 있는 일이라고들 말해지고 있는데, 나도 역시 여기에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논의 대상이 되어 있는 포올랜드의 경우는 불란서의 경우와 비교하여 훨씬 더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언급한 그 7글자의 말 - 이 말은 단순히 그냥 (고무로) 지워

버릴 수 없는 성질의 것이며, 또한 그냥 덮어 버릴 수도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오랜시일을 통하여 그리고 공동으로 이룩해 내야 할 경험이 필요하며, 이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해 내야 하겠습니다. 즉, 우리는 (즉·현재의 독일인들) 다르다는 사실과, 그리고 현재 독일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다수)이 1939년에 감행되었던 그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을 실제로 원치 않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이 일은 정말 어려운 기도(모험)(企圖: Unterfangen)이며, 우리는 이 어려운 일을 나라(국토)의 분할된 상태에서 해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 << 동·서 양진영간의 이해균형을 가능케 하는데 대한 기여 >> 안보회의는 위에 언급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보회의를 준비함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Ecke Und Kurven)이 제기될 것이며,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한가지 사실을 잊어서는 않되겠습니다. 즉, 구라파의 안전과 그리고 구라파의 평화질서에 속하는 일중에는 우리 독일인들이 스스로가, 적어도 혼자서는 -아무리 우리가 원하더라도- 다해낼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점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압박하는 일이라 하겠으며(erdrückend),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의 위안(Ein Trost)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Faktoren)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다해 낼 수 없거나 혹은 주로 우리가 담당해서 다해 낼 수 없는 것에는 동·서양진영에 있어서의 동맹국들간의 이해균형(Interessenausgleich)을 이룩해 벌려는 노력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해의 균형상태(혹은 이해 상쇄현상)가 없이는(즉 이루어지지 않고는) 안보회의(Sicherheitskonferenz)는 개최해 보았댔자 제2차 세계대전후에서 오늘날까지 있어온 많은 회의들중의 하나나 다름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 만약 이 소위 구라파 안보회의가 이러한 유의회가 된다면 벌써 틀린(잘못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 내 생각으로는 1966년 소련공산당의 당시 회의에서

이 구라파 안보회의를 앞으로 닥아올 몇년동안에 가장 중요한 과제들중의 하나라고 불렀던 사람들도 지금까지 있어온 무수히 많은 회의들중의 한 회의가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며, 또한 지금까지 그렇게나 많이 개최되었던 그러한 회의에다가 또 하나의 회의를 첨가시킬려고 이러한 구주 안보회의를 제안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또한 이 일을 아주 확실하게 그렇게 알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동맹체계의 역할>> (Rolle der Bündnis Systeme) 우리는 국토와 민족이 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같이 협력할 수는 있으나 기둥 (Grundfeiler) 의 역할은 다해 낼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범위에 속하는 일은 이를 다하도록 우리로서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기본역할 (Hauptrolle) 은 동맹체제 (Bündnisssysteme) 가 다하게 될 것이며, 우리들은 이를 위한 특정한 전제조건들 (Voraussetzungen) 을 마련하는 일에도 도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독 공산당 (SED) 과 동독 정권 (DDR) 의 수뇌진들은 현재 이와는 정반대되는 일 (das Gegenteil) 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독정부는 자체내의 비평을 받을 수도 있을 여러 분야에서 서로가 성의 (Gegenseitlichkeit) 를 표시한다고만 하면 중요한 진척이 될 수도 있을 그 어떤 출발 (시발) 을 위한 입장 (eine Ausgangstellung) 을 정립하려고 지난 몇해동안 진력하여 왔습니다. 이 모든 얘기는 어디까지나 장래 (미래) 를 내다보고 하는 얘기며, 이미 이루어진 그 무엇 (etwas Abgeschlossenes) 으로 여기에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단독 대표 월권 (Die Alleinvertretungsanmaßung) - 이 표현은 자주 쓰이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인용한다면 - 이 할슈타인 원칙 (Die Hallstein Doktrin) 같은 무시무시한 공포의 대상 (Schreckgespenster) 도 차례 차례로 일이 진행되어 나가면 해소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은 일들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이를 교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양단원 독일에 있어서의 상황은 양측이 서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며 (miteinander rechnen) 서로가 배타적으로 다른 일방을 제거하려고 하는 일 등은 결코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동·서 양측의 구조적 차이도 너무나 크고 하므로 이같이 완전하게 위에 언급한 점을 지키기란 불가능하겠읍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와 같은 전체적인 계산(계획) (solche globalen Berechnungen)에 대하여 언제나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여 왔읍니다.

이러한 계획은 지나치게 완전하게 (Perfekt) 주어져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희롱하거나 혹은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읍니다.

이렇게 되면 복수를 서로가 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Das rachsich).. 우리들이 양단원 독일에서 필요로 하고, 우리가 서독에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내구능력(耐久能力)을 보여야 할 것은 독일에 있어서의 실제적 주권자에 대하여 (Gegenüber dem Wirklichen Souveran) 즉 다시 말해서 전체 독일민족 (Das ganze deutsche Volk)과 구라파에 있어서의 독일민족이 갖는 생존필연성 (Lebensnotwendigkeiten)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충성 (Das erreichbare Mindestmaß von Loyalität)을 보이는 일이겠읍니다.

나는 이점에 있어서 아무런 환상도 갖고 있지 않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일을 계획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일을 위하여 행하는 그것에 관계시키는데 그치지 말고, 우리의 이러한 태도를 언제나 되풀이 하여 그리고 아무런 잡념없이 천명하다면 이것으로 우리는 옳은 일 (Etwas Richtiges)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나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 능동적인 공존과 평화보장정책 》 (aktive Koexistenz and Politik der Friedenssicherung)

양단원 독일에 있어서의 정치는 능동적(적극적인)공존 (Die aktive Koexistenz)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칭 주권자들의 병존 (Das Nebeneinander)이나 혹은 서로 대치하여 사는 상황 (Das Gegeneinander) 이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 방금 위에서 말한 실제주권자 (Das wirkliche Souveran)인 독일민족 (Das deutsche Volk)이 자기 주장을 하게 되어야 합니다 (muß zur Gel-

tung Kommen). 그리고 또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힘써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통일된 민주주의 국가상태에서 실현 불가능한, 분할된 동·서 양국은 국토와 민족의 분단이 독일민족과 구라파의 협동에 불려 이르는 손실(손해 = Schaden)을 실제적인 원인을 적어도 줄이는 것이 될 내륙간의 규제 (zwischen-deutsche Regelungen)를 성취시켜야만 하겠습니까.

이것은 급속한 승인 형식등에 대한 찬(贊), 반(反)을 가지고는 (mit dem Pro Und Contra zu dem Lapidaren Anerkennungsformeln) 해결되어 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회담 테이블에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정치적 생각과 계산때문에 (aus Falschen Politischen Erwägungen Und Berechnungen) 이전에는 서방진영에 이에 대한 능력표시가 결여되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다른쪽에 (즉 동부진영 - auf der Gegenseite) 그릇된 그리고 잘 이해할만한 정치적 생각때문에 이러한 능력의 표시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내구능력(耐久能力) (Stehvermögen) 과 인내 (Beharrlichkeit)를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동·서 양진영간의 분쟁의 둔화》 (Entschärfung des Ost-West-Konflikts)

나의 생각으로는 우리민족의 분할은 동·서 양진영간의 분쟁이 둔화되는(적어지는) 정도만큼만 극복되어 질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즉 우리민족의 분할은 동·서 양진영간의 분쟁이 줄어들어가는 것이 전제로 되어서야만 극복되어 질 수 있는 것이며, 이 동·서 양진영간의 분쟁의 둔화됨이 없이는 우리민족의 분할을 극복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 - 訳註).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되는 시발점을 갖는 계산(예상-생각-견해 - Berechnungen)이 있었습니다.

동·서 양진영에 똑같이 있었으며, 지금도 되풀이 하여 양진영에서 피력되어 지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국(Suppe)을 제3자의 분쟁에서 일어나는 불에다가 줄이나 혹은 끌이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하는 상상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민족과 국가의 분단을 남의 분쟁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 訳註) 그러나 이렇게는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서독 -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은 평화를 보장하는 세력(als eine Friedenssichernde Kraft)으로서 물론 서·동 분쟁(West-Ost-Konflikt)이나 동·서 분쟁(Ost-West-Konflikt)을 완화시키는 일을 혼자서 수행해 낼 수는 없지만, 이 분쟁의 완화(줄어들게 하는 일)를 함께 결정하는 일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시의 연방공화국 외무장관이었으며, 현 수상이신 브란트의 다음과 같은 말을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독일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정치는 전부 평화의 보장(Friedenssicherung)이라는 공통분모(公分母 - Generalneuner)(즉 공통슬로건)를 그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독에 있어서 정치가 허락하는 한 이 평화의 보장이라는 공통분모에 바탕을 두어 그 기본성격을 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말은 독일의 다른 한쪽(즉 동독)도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일을 해 나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아직도 이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 訳註).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해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행하고, 행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행하기를 원하는 것을 전제조건(Vorleistung)으로 격하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위에 언급한 일을 한다고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즉각적인 대응반응(Gegenleistung)을 기대(예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북부와 남부에서, 서부에서 그리고 동부(진영)에서도 이론의 여지가 없이 평화의 보장(안정 - Friedenssicherung)을 위하여 진력하는 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일을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행동하여야 하겠습니다.

《평화정책은 우리 민족의 생활(존)에 관계되는 이해(利害)다》(Friedenspolitik ist Lebensinteresse unseres Volkes)

평화정책은 내가 보기에는 하나의 전제(Vorleistung)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이해(Lebensinteresse)입니다.

평화정책은 독일 연방공화국(서독)에 함께 모여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한 부분에 의하여 독자적인(스스로의) 생존(활)이해로서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불과 몇일전에 연방정부(서독의)에 대하여 내용명세(Inhaltsangaben)

까지 제시하면서 공개적으로 (Öffentlich)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한 것을 나는 크게 잘한 일 (Meisterstück)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그 내용인즉 이제 연방정부는 동독수상 Stoph (슈토프)에게 편지같은 것을 넘으로써 이니시아티브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모스크바에서는 와르샤우 조약동맹국들의 정당 및 정부수뇌들이 앞으로 서독에 대하여 어떻게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마침 협의하고 있던 때입니다.

《동독 내각에 대한 협상제안》 (Verhandlungsangeboten dem DDR Ministerrat)

상당히 필요한 준비를 마친후에 동독의 (DDR) 내각 (Ministerrat)에 대하여 협상제안을 하는 것은 많은 독일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니시아티브를 장악해야겠다는 생각때문만으로 행하여지는 그러고 따라서 다른쪽이 먼저 그들의 제안을 우리에게 해 오는 것을 결과적으로 막자는 의도를 지닌 협상제안이라는 것은 현재 독일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 주기는 못할 것입니다.

《모스크바 커뮤니케》 (Moskauer Kommuniqué) 우리가 이 몇일 사이에 읽었고 그리고 이에 대한 해설을 주의깊게 (긴장하여) 주시하고 있는 커뮤니케가 모스크바 커뮤니케인데,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에 관하여는 그 가능성을 키지수로 두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케는 물론 10월 28일자에 연방정부(서독)가 행한 성명에서 얘기된 제안 (Angebot) 과 의도 (Absichten)에 대한 대답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와르샤와 동맹의 가맹국들이 그들의 이해 (Interesse)에 따라서 연방정부가 한 제안에 응할 수 있고 또 응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는 (객관적으로는 - sachlich) 모스크바 성명은 이해의 가능성 (Möglichkeiten der Verständigung)을 봉쇄하고 있지는 않으며, 단지 이와같은 이해를 위한 노력은 서독 정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사람들이 연방정부(서독)가 다른측, 즉 동독이 이니시아티브를 잡지 않도록 선수를 취하라고 정부에 대하여 되풀이 하여 요구를 하고 나오는 것과 위에 언급한 내용을 관계시켜서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일을 권하고자 하기 때문일

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쪽에 (동부진영에서) 무엇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으며, 그리고 또 어떤 일은 왜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등에 관하여 주의깊게 관심을 써서 평가·판단할 것을 나는 어느정도 권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렇게 함에 있어서 나는 결코 훈장식으로 고무하게 이를 강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경험과 사실을 놓고 볼때 동독의 지도층 (DDR-Führung)이 계속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독일 연방공화국 (서독 Bundesrepublik Deutschland)에 대하여 요구조건을 내시기를 노력하고, 그러나 그들이 독일 연방공화국이 하는 모든 일 (Schritte)을 부족한 것이라고 기질을 하고 나서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그냥 (모르는 체하고) 지나가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게 될 것입니다. 동등한 자격을 가진 파트너들과 협상을 하여 어떤 이해에 달하는 것을 원치 않고, 그리고 관계의 경화 (硬化) (Verstärkung)를 최상의 것이라고는 생각지는 않으나, 그들의 생각으로는 당장에는 (내다 볼만한 시일내에) 어차피 만일이란 없으니 이 경화현상을 그대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위에 언급한 것 같은 (공산-동부 진영의) 전략은 장점 (유리한점)을 의미하거나 되는 것입니다.

《Das Kuratorium unterlbares Deutschland의 사명 (과제)》 이 Kuratorium은 독일정책을 입안한다거나 혹은 집행하는 곳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일과 과제 (사명)을 다하는 곳이라는 점을 말했습니다. 즉, 이 Kuratorium은 그 해야 하는 과제는 불가피하게 변하더라도, 그리고 그 하는 일의 집착도도 변하더라도, 아무든 서로가 (miteinander) 이야기하고 또 서로가 다투기도 하고 (논쟁하고: Streiten) 그리고 서로가 의사를 나누어 고려할 수 있는 (abwägen) 그러한 기관으로서 있어야 하고 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이 기관의 위치는 거의 다른 어떤 기관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Kuratorium에서 서로 이야기 하고, 토론을 하는 일등을 통하여, 공적으로,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was offiziell-Politischgeschieht) 옹기 그리고 보다 낮게 이해되도록 하고, 또 이러한 일들이 강조되어지고, 관청일이 아닌 것들도 강조되고, 협회나 조직체들과, 개별적으로나 가정등이 그들의 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개인의 영역 (Der Private Bereich)도 강조되어 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정책은 따라서 이러한 모든 가능성들을 실행에 옮기고 그로 인하여 동. 서 양진영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점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었으며, 여러해 전에는 존재하던 희망들이 동결되어 버리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앞에 긍정적인 종류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능성들을 어려운 시련도 지나 보냈으므로 감사하게 토착할 뿐만 아니라, 유용한 것으로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정치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을 하는 출발점 (Ausgangspunkte)은 모두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 Kuratorium은 몇몇한 양심으로 (Mit gutem Gewissen) 뿐만 아니라, 사상 (생각 Gedanken)을 발표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발표하고 그리고 서로가 상호협조 (돕는)하고 지원하는 곳이며 또한 기구로서 지금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다 하려는 뜻을 가지고 70년대에 접하여 출발하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 (서독)의 언론 공보처 공보》 1969년 12월 17일 자본에서 발행됨. ("Bulletin des Presse-Und Informationsamtes der Bundesregierung" Bonn Vom 17. Dezember 1969)

발터 울브리히트 (Walter Ulbricht)

독일사회주의 통일당 (SED 독일공산당) 중앙위원회 (ZK) 제일서기 (장)
(동독) (1969년 12월 12일)

서부 독일 연방공화국 (Die westdeutsche Bundesrepublik)에 있어서의 새로운
상황과 두 독일국가 (Die Beiden Deutschen Staaten)의 관계

독일사회주의 통일당 (SED 즉 동독 공산당) 중앙위원회 (ZK)의 제일서기 발터
울브리히트 (Walter Ulbricht)는 1969년 12월 12일에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 (공산
당) 중앙위원회 (Zentral Komitee)의 제 12차 회의에서 행한 그의 <<1970년
에 있어서의 기본이 되는 중요과제>>라는 보고 연설 (Referat)의 제 2부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다 :

신애하는 동무여러분 (Genossen)

상당히 기본주의적 특색을 지닌 국가들의 정치가들 (Politiker und Staatsmänn-
ner)이 지금 현재 20년간의 성공적인 우리 (동독)의 발전에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 내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회담>> (Das Treffen in Moskau) 이 날 정치가들은 <<독일 민주
주의 공화국>>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 동독 = DDR)이 견고한 사회
주의 국가로서 더 이상 구라파 국가들의 <<콘체르트>> (Konzert)로 부터 지워버
릴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라파 전체문제를 해결하는 길
은 어떠한 것이든 결코 동독 (DDR)을 빼돌리고 될수없다는 인식이 시간이 감에
따라 점점 더 일반의 공지의 사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주에 있었던 모스크바에서의 사회주의 형제국가들 (Bruderländer)의 지도
적 인물들이 뭉였던 최고의 중요성을 갖는 회의에서도 언급되어졌습니다.

이 사회주의 형제국가들의 지도적 인물들 (지도자들)이 뭉였던 회의에서는 서독
에 대한 전략문제에 관하여도 의견표시가 있었습니다. 와르샤와조약 동맹국가들의
결정은 완전히 정당한 것이었다는 사실과 서독에 있어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새
로운 상황들에는 이러한 결정이 끼친 작용이 나타나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만장일체로 채택된 커뮤니티에는 서부독일 (Westdeutschland)의 정치세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호소가 들어있습니다. 즉, 드디어 역사로부터 가르친 (교훈)을 받도

록 하라는 호소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와르사과 조약 동맹국가들이 하는 구라파 안전에 대한 일련의 요구들은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구라파 여러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동독과는 국제법상의 승인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도록 호소가 행해졌습니다. 이 회담 참가자들은 아무런 조건없이 구라파의 모든 나라들이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참가한다는 원칙에 입각한 구라파 안보회의의 실행을 위하여 노력해줄 것을 모든 구라파 국가들의 정부들과 민족들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두개의 독일국가>> (Zwei deutsche Staaten)

70 년대에 접어드는 지금의 상황은 실제로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여 특징지어지고 있습니다. 즉, 구라파에 있어서 이제 벌써 30 년간이나 사회주의 국가인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과 독점자본 (Monopolkapital)에 의하여 지배되는 국가인 독일연방공화국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특징지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질서로나 내정으로나 혹은 외교정책으로 그렇게 서로가 다른 이들 두 나라는 - 이제 벌써 30 년째에 접어들었음 - 서로가 아무런 관계없이 자주적인 국가로서 그리고 국제법상으로 승인받은 국가로서 즉 국제법상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국제적 여러 가지 일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 서독 어느 쪽이든 독자적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두 나라는 다같이 구라파 문제들의 경우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구라파를 초월하는 여러 가지 국제 문제들에 있어서도 독자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독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지난 20 여년동안에 발전되어 공고히 굳혀진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 민주공화국 (동독)과 독일연방공화국 (서독) 사이에는 아무런 조약을 통하여 성립된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분할을 계속해나간 지금까지의 서부독일 정부들은 독일 민주공화국의 국제법적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해 왔기 때문입니다. 독일 민주공화국 (동독=DDR)으로서는 서부독일 연방공화국 (Die Westdeutsche Bundesrepublik)의 국제법적 존재를 부인하지 않으며, 평화적 공존과 선량한 이웃 (Die gute Nachbarschaft)이라는 근본바탕을 배경으로 동등한 자격을 갖춘 국가간의 관계 (Zwischenstaatliche Beziehungen) 를 수차 제안했던 것입니다.

서부독일 연방공화국도 구라파의 평화질서와 구라파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구

해야할 공헌(기여)을 이행하고, 한편으로는 패전후, 즉 히틀러 독일(Hitlerdeutschland)의 무조건 항복이래 그리고 이에 따라 행하여진 독일의 분할이래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포오츠담 협정을 실행함에 있어서 독일 민주공화국(동독)에 발전되어지고 정착되어진 현재 주어진 상황을 아무런 유보조건 없이 승인하는 일을 진작하였어야 했을텐데 여태 하지않고 있다.

✓ <<국경의 승인>> (Anerkennung der Grenzen)

즉 다시말하면 다음과 같은 일련의 일을 진작했어야 했을텐데 여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부독일 연방공화국도 독일 민주(주의)공화국과 오더-나이쎬 경계선(Oder-Neiße-Grenze)을 포함한 구라파에 있어서의 현존하는 경계선들을 인정하고 뮌헨의(강제명령에 의한)조약(Münchener Diktat)을 처음부터 무효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어떠한 종류의 핵무기와 생물학 및 화학무기의 사용을 포기하고, 그리고 구라파에 있어서 군비축소(Abrüstung)와 무력포기(놀가침조약등)(Gewaltverzicht)협정에 참가하여야 하는 것인데, 여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Bonn)에 이번 새로 등장한 새정부(die neue Regierung)는 참된 새로운 시작을 할 결정을 내릴 찬스(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계의 세력 균형 발전을 근거로하여 볼때 히틀러의 처방에 따라서 아테나위와 그리고 서독의 기독교민주당(CDU) 및 기독교사회당(CSU)에 의하여 전개되어온 복수주의정책(Revanchepolitik)은 지금 절박적으로 골목길에 흘러들어 있으니 더욱 그러합니다. 본에 새로 들어선 정부는 그렇지 않더라도 지나치게, 높게 걸려있는 표도(즉 지나친 일들)를 그러니까 포기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서부독일의 사회민주주의(die Westdeutsche Sozialdemokratie) 지도층은 사민당(CDU)의 오래동안의 민족배반(der nationale Verrat)과 반격을 독자적인 민주주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용했어야 했을텐데 이를 깨물리하여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모스크바 커뮤니케가 보여주는 바와같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 서부독일의 진보적인 세력과 일치하여 - 본의 새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즉, 평화와 집단안보(Kollektive Sicherheit)나 아니면 미국의 세계전략(USA-Globalstrategie)과 독자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무기(군비) 모노 폴(Rüstungsmonopole)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보복태세를 보존 유지해나가고(Konservierung der Revanchepositionen), 군비광기(狂氣)(Rüstungswahn)를 계속해 나갈 것

인가의 어느 한쪽을 택할 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데 나워와 기민당 . 기사당의 정책>>(Die Politik Adenauers und der CDU/CSU)

아데 나워와 기민당 . 기사당 (CDU/CSU)은 민족의 통일성(die Einheit der Nation)을 도박에 걸어 잃게했습니다. 즉 그들이 서부독일에 주둔했던 점령국들(Besatzungsmächte)의 지시에 따라 맹목적으로 그리고 남의 말은 일체 듣지도 않고 독일을 분열시키고, 서부독일의 분파국가(der Westdeutsche Separatstaat)를 세우고, 독점자본의 세력지위가 회복된 뒤에는 서부독일(Westdeutschland)을 두장시킬수 있기 위하여 민족의 이익(die Nationalen Interessen)을 북대서양 동맹기구(NATO)에 관아넘겨 버리고 말았을때 이 민족의 통일을 도박에 걸어 넘겨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포츠담 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독일의 비나치화(Entnazifizierung)와 비군비화(Entmilitarisierung) 그리고 노노포들의 세력집중을 제거하는 일(die Beseitigung der Machtkonzentration der Monopole)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일을 분할시켜 놓았습니다. 그들의 위로는 -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와 소위 미국의 원자무기독점(das Verrentlichte Atomwaffen monopol der USA)에 의지하여 - 소련에 압력을 가하고,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동독-DDR)과 그의 시민들을 서부독일의 독점자본(das Westdeutsche Monopolkapital)과 서부독일의 군국주의(der Westdeutsche Militarismus)의 지배하에 굴복케하여 서부독일 연방(die Westdeutsche Republik)에 병합시켜 버리자는 것입니다.

V <<1952년의 역사적 기회>>("Historische Chance 1952")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DDR)의 지지를 받은 관대한 소련의 제안(großzügige-sowjetische Vorschläge)에 바탕을 두어 1952년에는 통일적이고 민주주의적이고 평화를 애호하는 독일(ein einheitliches, demokratisches und friedfertiges Deutschland)을 이룩할 전망이 있는 역사적인 평화조약의 기회(die historische Chance eines Friedeens Vertrages)가 분할된 독일 민족(die gespaltene deutsche Nation)에게 다시 한번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민당(CDU) 기사당(CSU)과 몇몇 우익계 사민당 지도자들이 이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이렇게 하므로써 민족의 통일(die Einigung der Nation)에

반대되는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서부독일 연방 공화국의 정부와 제국주의적인
점령국들(die imperialistischen Besatzungsmächte)은 소위 세력(군사력 보
함)우위의 환상에 사로잡혀서 평화조약(Friedensvertrag)을 저절하고, 파리조약
(PariserVerträge)을 체결하고 그리고 서부독일을 북대서양 동맹기구에 가입시
키므로써 드디어 통일적이고, 민주주의적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독일을 이룩하는 일
을 끝내 폭파시키고 말았습니다.

군비투쟁(die militärische Aufrüstung)과 미국의 원자무기독점(Atomwaffen-
monopol)목적이 세계에 있어서의 세력관계(Kräfteverhältnisse)발전에 의하여
불합리 한것으로(ad absurdum)나타나고 따라서 일종의 환상(Illusion)으로 발
혀지자 기민당·기사당 정부(die CDU/CSU-Regierung)은 60년대에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DDR)을 약화시키고(die Aushöhlung), 피흘리게하고(Ausblutung)그리고
홀랑 터져버릴(약탈할)(Ausplünderung)일대 공세를 취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서부독일 경제계가 세운 평가 자체에만 의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동독)에 끼쳐진 손해는 일천억(동독)마르크(100Milliarden Mark)에
달하며,이로 말미암아 기업의 현대화가 방해를 받았으며,경제의 발전이 브레이당
했던 것입니다. 이 공세의 절정은 기브란덴부르크 성문을 통하여 노래하는 유괴
로 <<(mit klingendem Spiel durchs Brandenburger Tor)>>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동독)수도로 진군해 들어가자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반 민
족적이고도 평화를 위태롭게하는 정책(diese antinationale und friedensseffe-
ktierende Politik)이 물고온 실제로 나타난 현실적 결과는 1961년 8월에
취하여진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국경에 대한 불가피한 안전과 안전조치였던 것입
니다(die notwendige Sicherung und Stabilisierung der Grenzen der DDR)..
이렇게 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사회주의적인 사회질서의 성장과 확립(공고
화) 및 사회주의적인 독일국가의 안전화과정에 강력한 자극을 주었으며, 또한 보
호(Schutz)와 안전(Sicherheit)을 보장했으며, 지금도 보장해주는 결과를 낳았
습니다. 이러한 안전을 우리는 또한 앞으로 유지해 나갈 뿐만 아니라 더욱 공고
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음흉한 계획>>(graue Pläne)의 모든
추종자들의 계보에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이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 연립정부의 정책>> (Die Politik der großen Koalition)

드디어는 본 (Bonn) 정부가 기민당 외무장관 슈뢰더 (Schröder) 때와 기민당, 사민당 연립정부 때에 소위 하나의 새로운 대동구정책 (Ostpolitik) 을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대동구정책은 사회주의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을 그의 우방들로 부터 고립시키고,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침투하는 일을 준비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대동구정책>>은 우선적으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있어서의 인민민주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질서 (die volksdemokratische und sozialistische Ordnung)에 반대되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 언제나 그 주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단지 특별한 상황때문에 이 서독의 대동구정책은 체코슬로바키아 (CSSR)에 대하여 처음 시험적으로 적용되어졌던 것입니다. - 모든 여러가지 결과가 이에 따라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 이 소위 <<새로운 대동구 정책>>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기민당 . 기사당 (CDU/CSU) 과 그의 협조자들과 그리고 이들과 더불어 모든 서부독일 연방공화국의 보수세력과 복수주의세력은 따라서 지금까지의 20년 이상의 환상과 실패로 돌아간 정치적 계획의 폐허 (Trümmer)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 (Lehre der Geschichte)

그 유전자들이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고 있는 서부독일 연방공화국의 새 정부는 현재 주어져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불가결한 결론을 취할 때가 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결론을 내리기에는 현재의 시점이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부독일 연방공화국 정부가 역사에서 교훈을 받아들이고, 지나간 과거의 무익한 짐 (Der Ballast der Vergangenheit)을 벗어버리고, 시대정신에 알맞게, 현재 구라파의 나라들과 이에 있어서의 관계에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다루기에 임한다면, - 모스크바 커뮤니케에서 강조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 사회주의 국가들 뿐만아니라 모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들이 이를 환영할 것입니다.

현대 독일 역사에의 독일민족은 그들의 제국주의적인 통치자들에 의하여 두차례나 엄청난 세계전쟁의 재난에 빠져 들어가서 누구나 다 아는 결과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기민당 . 기사당 정부하의 지난 20년간의 서부독일 연방공화국에서는 절묘하게 이와같은 길을 세번째로 들어갈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서부독일에서 행하여진 여러차례의 선거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 주었습니다. 즉, 노동자계급(Arbeitsklasse)과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의 광범위한 대중이 이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들 넓은 층의 대중은 역사의 교훈을 배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민족을 굴복시키고 약탈하는 일(die Unterwerfung Und Ausplünderung anderer Völker)은 결코 참된 위대성과 존경에 달하는 길이 될 수 없으며, 노동(Arbeit)과 학문(Wissenschaften)과 예술(Kunste) 부문에 있어서 독자적인 업적을 남기고, 다른 국가들과 그리고 민족들과 평화적으로 협동해 나가므로서만이 참된 위대성과 존경을 받게 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다음에 열거하는 몇가지 일들은 서부독일 연방공화국 민족의 역사적 사명(과제)(Die geschichtliche Aufgabe des Volkes der Westdeutschen Bundesrepublik)이며, 역사적 교훈이 가르치는 명령(das Gebot aus den Lehren der Geschichte)이기도 합니다. 즉 거대한 모노포울을 이룩하려는 초대형 이원추구(Superprofite)와 군비경쟁환상(Rüstungswahn)을 단연코 끝장내 버리고, 보수주의(Konservatismus)와 신나치주의(Neunazismus)를 극복하고, 일대 개혁의 일환으로 민족의 민주주의적 권리(Die demokratischen Rechte des Volkes)를 관철하는 것은 서부독일 연방공화국 민족(국민)의 역사적 사명이며 또한 역사의 교훈이 내리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포츠담 협정>> (Potsdamer Abkommen)

반드시 이해되어야 하는 역사의 교훈중에는 포츠담 조약의 기본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 포츠담 협정이 체결된지도 벌써 4반세기가 흘러갔습니다. 이 기간동안 평화조약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사실에 직면하여 물 때 제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에 의하여 포츠담에서 확정되어진 기본결정(die grundlegenden Beschlüsse)은 구라파의 평화조약(Friedensregelung)과 그리고 추진중에 있는 구라파 안보(권)의 보장에 최종적이고도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기본 요소들(Endgültig, Völkerrechtlich Verbindliche und grundlegende Elemente der europäischen Friedensregelung)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제 2차 세계대전) 전후 구라파 국경의 확정문제, 비나치주의화(Entnazifizierung), 비군국주의화(Entmilitarisierung)와 제국주의적인 독일 모노포울의 제한에 관한 결정과 같은 포츠담 결의가 이에 해당됩니다.

✓ 벌써 25년동안이나 존재하지 않고있는 독일(제)국(Deutsches Reich)과 장차 언젠가 체결하여야 할 평화협정(ein irgendwann in der Zukunft noch abzuschließenden Friedensvertrag mit einem schon seit 25 Jahren nicht mehr existierenden Deutschen Reich)을 구실로 삼아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기본적인 포오츠담 결의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국제법상 허락되어 질수없는 성질의 것이며(unzulässig), 따라서 국제법에 저촉되고 평화를 위협하는 정책의 표현(als Ausdruck einer Völkerrechtswidrigen und Friedensgefährdenden Politik)이라고 간주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파리조약>> (Pariser Verträge)

만약에 본정부(서독정부)가 포오츠담 조약의 기본규정을 그 적용에의 무효한 조항으로 만들거 버리려고 노력하고, 여기에서 파리조약에 의존한다면, 본 정부는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며, 그들은 아직도 역사의 교훈에서 배우는 바가 없다는 점을 또한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파리조약은 공동으로 확정해 놓은 포오츠담 결의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약은 국제법에 위배되는 별개 협정(Separatabkommen)이며, 반히틀러 연합내각의 협정(die Vereinbarung der Antihitlerkoalition)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국주의적인 서방 강대국들이 이 파리조약에서 독일을 하나의 전체로 다루는 모든 문제들에 관하여 결정을 내릴 권리를 부당하게도 그들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또한 특히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일연방공화국(서독)(BRD)정부가 확실히 명료하게 이 파리조약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에 속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독일 연방공화국의 상황>> (Zur Situation in der Bundesrepublik)

1천 6백만명 이상의 서부독일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난번의 서부독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표명해냈다. 즉, 그들은 기민당·기사당 정권의 반민족적 정책(die antinationale Politik)에, 보수세력의 반동적이며 모험적인 복구정책(die reaktionäre und abenteuerliche Politik der Restauration)에, 많은 생활영역이 보수적으로 꽂어져 마비되어 버리는것(die konservative Erstarrung vieler Lebensbereiche)에, 그러나 기민당·사민당 연합내각정부에 실증이 나 있다는 사실을 표명해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

은 기민당·기사당을 정부(구정) 책임에서 제외시키고 사민당(SPD) 주도하의 연립 내각정부 구성이 가능토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기민당·기사당이 20년간 서독을 통치함으로써 서부독일과 서부독일 시민과 그리고 동·서독에 있어서의 모든 독일인의 일에 지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민족적 이익을 배반하다>> (//Nationale Interessen Verraten//)

독점자본(die Monopolkapital)과 기민당·기사당(CDU/CSU)은 국가(민족)적 이익(die Nationalen Interessen)을 배반하였습니다. 이들은 미국과 다른 제국주의적인 점령국들과 함께 과거에 집착한 보수적 국가권력(die Konservative, Vergangenheitbezogene Staatsmacht)을 복고시켰고, 독점자본의 지배(die Herrschaft des Monopolkapitals)를 다시 재생시키고, 신나치주의(Neonazismus)의 형식으로 나치주의(Nazismus)를 다시 활동시켰습니다. 그들은 서부독일(Westdeutschland)을 고의적으로 독일민족의 연합체(Nationalverband)로 부터 분리시키 내어 냈습니다. 그들은 서부독일을 미국 모노포울의 이익과 이와같은 미국의 세계전략(Globalstrategie)하에 귀속시켰으며, 서부독일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서부독일을 침략적인(공격적인) 북대서양 동맹(NATO-Pakt)에 가입시켰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제도를 희생시켜 가면서, 현대 경제구조를 희생시켜가면서 그리고 많은 인간의 사회적, 문화적 관심사를 희생시켜 가면서 무의미한 군비확장 히스테리(Aufrüstungshysterie)에 서부독일을 빠뜨려 넣었었으며, 이로 인하여 벌써 수백억 마르크가 탕진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썩어들어가는 미국 자본주의의 야만성과 비문화적 매개성(die Barbarei und Unkultur des Verfaulenden USA-Kapitalismus)을 서부독일에 수입해 들였으며, 그리고 이와같은 자본주의적 야만성과 미개성이 서부독일에 토착되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에 있어서의 더러운 전쟁(Der schmutzige Krieg in Korea)과 경탄할만큼 훌륭한 베트남 민족에 대한 미국의 침략전쟁(Der Aggressionskrieg)과 그리고 아랍 여러나라들에 대한 이스라엘 침략자들의 제국주의적 기습(Der imperialistische Überfall des israelischen Aggressors auf die arabischen Staaten)같은 모든 미국 제국주의자들의 악행들(alles Missetaten der USA-Missetaten)이 기민당·기사당 정부들에 의하여 그리고 또한(기민당·기사당·사민당에 의한)대연립 내각 정부들에 의하여도 지원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서부 독일 연방공화국의 소련과 그밖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그러나 특히 독

일 민주주의 공화국(동독)에 대한 관계를 체계적으로 망쳐버리는 일(die systematische Vergiftung)을 역시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민당·기사당의 정책으로 인하여 두 독일 국가간에 파여져 있는 도랑(Graben)은 점점 더 넓고 깊게 파여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동조자물, 즉 사회민주당의 연립내각 파트너들과 그리고 주전없는 기회주의자들(Mitläufer)이 없지 않는 기민당·기사당과 서부독일의 대 모노포울은 서부독일 경제의 장기적 종합 이익을 미국 독점자본의 이익에 예측시키므로써 그들이 취한 반민주적이고, 반사회주의적이고, 반 공산주의적인 기만(Verblendung)으로 서부독일 경제의 장기적 종합 이익에도 지대한 해를 끼쳤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의 독점부문에 대하여는 서부독일 경제에 침투하고 그리고 구조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산업부문의 경우에는 특히 절대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아주었습니다.

<<산업과 경제>> (Industrie und Wirtschaft)

미국의 독점기업이 무엇보다도 서부 독일의 광유산업(Mineralölwirtschaft), 전자공학과 전기산업, 컴퓨터기계(Datenverarbeitungsanlagen)와 자동차 제작산업, 화학산업의 중요부분, 비행기 산업과 로켓 산업등의 기업(Betriebe)의 지배에 집중하므로 인하여 이들 중요한 산업부문은 점점 더 미국독점의 콘트롤(지배)에 빠져들어가고 있다. 오늘날 벌써 수십만 서부독일의 노동자들과 고용직원들과 기술자들과 연구가들의 노력의 결과가 미국의 기업합동(USA-Trusts)에 의하여 탈취되어지고 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서부독일에 투입한 약 40억달러에 달하는 직접투자(Direktinvestition)로 인하여 학술(과학) 및 공학진보의 중심지들에서 연구(Forschung)와 발전개발(Entwicklung)이 점점 더 많이 미국의 모노포울에 의하여 지배되어지므로, 이로 인하여 앞으로도 계속하여 미국 제국주의자들에게 계속하여 숙명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천혈이 놓여진 것이라고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미국의 컴퓨터 대 콘체른(독점의 최고형태로서의 기업 연합)의 도움을 받아 가령 예를들자면 미국 모노포울이 서독의 대 콘체른의 연구실장부(Forschungszentren)와 지도층 중심부(Leitungszentren)에 침투하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서부독일 경제에 대한 콘트롤을 강화하는 그들이 그렇게나 열렬히 이용하던 가능성을 획득하였습니다.

<<농업정책>> (Agrarpolitik)

기민당·기사당과 서부독일의 대 모노포올들은 서부독일 농민들과 완전히 망쳐 버려진 서부독일의 농업정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년 동안이나 출근 그릇되고 전망이 없는 목표실정을 당하여 온 서부독일의 농민들이 오늘날 아무런 확실히 보장된 전망을 갖지 못하고 노출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기민당·기사당 정부의 책임입니다.

<<미국의 영향>> (Einfluß der USA)

그렇지만 이와같은 미국의 위험한 영향은 경제부문에만 한한 것이 아니다. 서부독일의 연방공화국이 반동적인 미국 제국주의와 동맹 연합하고, 미제국주의의 침략정책과 사실상 굳은 단결을 함으로써, 바로 이것이 서부독일(서독)의 연방공화국과 신생국가들과의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모순(충돌)을 더욱 첨예화시키고 있다. 이것이 또한 내적모순(innere Widersprüche)을 첨예화시킨 요소였으며, 지금도 역시 그러하다. 미국 <<문화>>(Kultur)의 <<축복>>(Segnungen)을 위하여 모든 수문(水門=Schleusen)을 열어놓고, 모든 생활영역이 점증하여 미국화되어지므로서 이는 결국 불안(Unbehagen)과 점증하는 저항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세계헌병(Weltgendarmen)적인 역할을 하고 나서며, 선전포고없이, 국제법에 위배되게, 도덕과 인도주의에 반하여 살인행위를 자행하고, 범죄와 잔악한 행위와 비인도주의적행위를 내·외적으로 실행하고, 이와 같은 야만행위를 영화와 텔레비존등에서 칭송하고 있는 나라를 모범으로 선택하는 것—이 모든 것이 결국 모든 단정한 사람들(alle anständigen Menschen)의 혐오(Abscheu)와 점증하는 반대를 불러 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일본의 역할>> (Rolle Japans)

소위(서독의) 대 전쟁때 차관이었고, 지금도 브란트-셸(Brandt/Scheel)정부의 차관으로서 다시 역할을 하고 있는 폰-도나니(von Dohnanyi)에게는 그의 일본 연구여행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분명해 졌습니다. 즉 서부독일에는 <<지도 체계의 결손>>(Führungsdefizit)있었으며, 지금도 그러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부독일보다 더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자본주의 일본의 지배계급들은 일급가는 산업상의 진보를 조직화하여, 자본주의 세계에서 서

부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제 2위에서 서부독일을 제 3위로 축출하는 일을 다해냈으며, 일본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일본의 경제를 미국의 모노포올에 예속시키는 일을 피해낼 수가 있었다. 일본의 독점자본주의자들(Monopol-kapitalisten)은 - 그들의 착취방법 유명하다 - 미국과는 물론 군사조약(Militärvertrag)을 체결하여 군사기지를 미국에 제공해주고는 있으나, 그러나 미국의 군비경쟁(Rüstungswettlauf)에 말려들지 않았다. 군비광란(Rüstungswahn)에 참여하지 않으므로써 일본의 독점자본주의자들은 - 도나니 차관의 추산에 의하면 - 수십억(Abermilliarden)을 절약했으며, 그들은 이 절약된 돈을 산업, 학문과 공학에 있어서의 구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문이 최고의 수준에 달하도록 하는데 쓰고, 그리고 교육등의 분야에 투입할 수가 있었다.

서부독일의 차관 도나니가 말한 서부독일의 <<지도체제의 결손>>이라는 말은 아주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의 말은 옳다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도대체 문제가 되는 것은 산발적인 그릇된 결정(Fehlentscheidungen)인 것이 아니고, 지나간 20년의 결산이기 때문이다. 기민당·기사당의 완고하고 반동적인 정책은 독점 유산계급들(monopolbourgeoisie)까지도 학문 및 공학상의 혁명과제를 해결하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민당·기사당의 <<지도체제의 결손>>은 나치가 만들어낸 독일제국주의의 통치시대에 있었던 <<지도체제의 결손>>과 비교될만한 것입니다. 나치독일의 제국주의는 결국 제 2차 세계대전의 파멸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기민당·기사당의 반동적 정책은 서부독일의 제반 학문을 또한 방해하고 방향설정을 그릇되게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desorientiert)

<<미래 연구>> (Zukunftsforschung)

따라서 예를들어 서부독일의 잡지들의 보고에 의하면 현재 소위 미래학(Futurologie)이라고 불리우는 서부독일에 있어서의 미래연구(Zukunftsforschung) 때론 하나의 힘의투쟁(Machtkampf)이 벌어졌습니다. 대산업의 대표들과 학자들간에는 예리한 대립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부독일의 <<미래 공장들>>(Zukunftsfabriken)에 있어서의 이와같은 위기 분위기는 <<하나의 잠에 취하여 게으름 피우는 민족(eine Verschlafene Nation)이 그의 장래에 관하여 심사숙고하기 시작한다>>는 표시일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정신공장(Denkfabriken)을 에워싼 이 같은 권력투쟁은

합리적인 미래연구를 불가능케할 전제로건들을 만들어 내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일이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이학문을 하는 대표적 학자나, 예게만 하나의 파탄을 의미하게 되는것이 아니고 서부독일 (Westdeutschland) 에 대하여도 하나의 파탄을 뜻하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정확히 (올바르게) 해두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즉 서부독일에 있어서 여기에 문제되는 것이 하나의 <<잠에 취하여 게으름 피우는 민족>>만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즉시 어떠한 이로움을 갖다주지 않는 모든 새로운 것(alles Neue) 에 대하여 저항하고 나서는 반동적인 지배계급 (eine Reaktionere herrschende Klasse) 이 문제되고 있다. 몇몇 서부독일의 작가들도 이와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작가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사람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기업의 대표자들과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군의 미래학자들 (Futurologen) 은 국가독점 정치적 자본주의 (der staatsmonopolitische Kapitalismus) 의 지배체제 (das herrschende System) 를 <<일어나는 변화에 대하여 대처하여 막아내도록 한다>>는 생각이 외에는 아무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우연 (Zufälle) 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충실하게 모든것이 변화하되, 지금 현재 있는 것이 현재 그대로 남아있도록 변화하여 한다 (Es muß sich alles ändern, damit alles bleibt, wie es ist.)

진리의 새로운 인식을 위하여 애써 노력하는 학자들은 이와 같은 반동적인 태도에 대하여 검증하는 저항을 해나갈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Wirtschafts und Finanzpolitik)

사회적으로 생산된 어마어마한 가치의 대부분을 개인들이 자기것으로 횡령해 버리는 역사적 시대착오 (der historische Anachronismus der privaten Aneignung des überwiegenden Teils der gesellschaftlich produzierten Riesenwerte) 이것이 독일 연방공화국 (서독) 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게한 일련의 프로세스에 기본 바탕을 이루는 요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서부독일의 31개 대 주식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자본 (Aktienkapital) 은 서부독일에 1954 년도에 있던 전체 주식회사 2789 개가 가지고 있던 주식자본과 동일한 것이 되도록 한 결과일 것입니다. 서부독일의 주식회사들중에 3억마르크 (DM) 이 상의

공칭(公稱) 자본(Nominalkapital)을 가진 대 주식회사들의 공칭자본은 1954년에서 1968년 사이에 10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기계와 컨베이어 시스템(Fließbande)에서는 자본주의 세계에서 결국은 이미 카알막스가 폭로한바 있는 것과 동일한 제한, 즉 자본주의적인 착취로 등장하는 대중의 소비제한(die Durch die Kapitalistische Ausbeutung hervorgerufene Konsumtionsbeschränkung der Massen)을 결과하는 대량상품들(Warenmassen)이 생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과 공학상의 혁명으로 인하여 가능케 되어진 부(Reichtum)와 노동제급에 대한 검증하는 착취와의 사이에 생겨나는 반목·저항은 점점 더 침여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1967년 상반기에서 1969년 상반기 사이에 이루어진 생산과 임금에 대한 공식통제발표에 의하면 순이익(Nettoprofite)의 증가가 순임금(Nettolöhne)의 증가보다 3배에서 4배까지나 빠릅니다. 임금이 국가(민)소득(Nationaleinkommen)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 기간동안 줄어들었습니다.

국가독점 자본주의(der staatsmonopolistischen Kapitalismus)가 완전히 형성되었어도, 이같은 체제가 내포하고 있는 제반 깊은 모순점들을 극복해 낼수가 없었다.

<<몇 안되는 독점자(Monopolianer)들이 다른 시민에게 가하는 압박이라는 것이 ……몇 백배나 더 가혹하며, 더 민감하게 나타나고, 더 참을수 없는 것이다>>라는 레닌의 견해는 오늘날 그 어느때 보다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여러가지 모순과 정치적 모순을 더욱 크게 나타나게 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는 70년대에 과학·기술면에서 이루어질 혁명과 더불어 의심할 여지없이 더욱 그 도를 가해나갈 하나의 발달과정(프로세스)입니다. 수된세력(Hauptkraft)을 이루는 노동자계급말고도 국가독점적인 자본주의 체제에 대하여, 나서는 계층으로서는 점점 더 많은 지식계급과 농민계급, 증산계층, 그리고 소 부르조아지 계급과 증산 부르조아지 계급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부독일의 기독교민주당(CDU)과 기독교 사회당(CSU)은 서부독일의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완전히 실패하여 제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독일 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에서는 양차에 걸친 세계대전에 대하여 책임있는 세력에 대하여는 즉시에 그리고 영원히 일체의 권력을 빼앗겼습니다. (박탈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이 하나의 새로운 그리고 선량한 독일민족의 국가를 건설하고, 경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고 노동자계급의 이익과 전체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발전시켜 나갈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민족이 과거의 최선의 인도주의적 전통을 되돌이켜 이어받고, 이것을 민족적 문화유산으로 기르고 더욱 계속 발전시켜 나갈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독일 민주주의공화국 인민(국민=Volk)이 이러한 위대한 능력을 지니고, 보통 불리한 여건속에서 이와 같은 일을 다할 힘을 지니고 있다면, 서부독일 연방공화국의 국민도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이와 전적으로 유사한 과제를 다해낼 능력과 힘을 역시 지녀야만 할 것입니다. 본인이 강조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서부독일 연방공화국의 노동자계급 인민에 대하여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정권교체와 권력구조>> (Regierungswechsel und Machtstrukturen)

극단적으로 보수주의적이고 교권적인 기민당·기사당을 정부로 부터 축출했다는 사실은 내내, 외정치상으로 영향력을 갖는 하나의 요소라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에 <<새로운 대동구정책>> (die neue Ostpolitik) 과 관련하여서도, 그리고 소련(UdSSR) 과 서독(BRD) 과의 관계와 동독(DDR) 과 서독(BRD) 과의 관계가 계속하여 발전해 나가는데에 관련하여서도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민당·기사당과 독점자본주의자들의 일부가 사민당(SPD)·자민당(FDP) 연립내각 정부를 될수있는데로 빠른 시일안에 쫓아내려는 노력을 할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새정부가 꽤 오래동안 유지되어 나갈 것이라는 가능성을 고려해 두어야겠습니다.

기민당·기사당내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상반되는 경향과 위약현상이라던지 이들이 야당의 입장으로 그들의 역할을 옮겨나감에 있어서 생겨날 여러가지 어려운 점들은 사민당·자민당의 연정을 안정시켜나갈때 경우에 따라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서독에 있어서의 정권교체는 국가독점적 자본주의의 <<권력구조>> (Machtstrukturen) 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유지되도록 해 두었습니다. 대생산수단(Produktionsmittel) 은 독점자본가들의 수중에 놓여있습니다. 제국주의적 3개 대은행의 세력이 조금도 동요되지 않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대(Armee)

와 사법부 (Justiz) 와 경찰 (Polizei) 과 그리고 베틀들어 슈프링거 콘체른 (독점의 최고형태로서의 기업연합) (Springer-Konzern) 같은 매스콤과 자본주의적인 대출판사들을 마음대로 그들의 수중에 넣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독점자본과 군대세력 그리고 복수주의적인 세력들이 그러니까 예나다름없이 결정적인 권력위치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 구성된 정부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권) 는 서민 및 의회적 정부 (Eine bürgerlich-Parlamentarische Regierung) 이며, 극단적으로 보수주의적이고 복수주의적인 기민당, 기사당 세력의 강력한 압력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독일의 독점 부르주아지의 일부가 새 연립내각에 다음과 같은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새 연립내각이 국가 독점정치적 체제를 새로운 형식과 방법을 써서 기민당, 기사당이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분쟁없이 안정시켜나가고 효과적으로 구성해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장관들의 판단>> (Beurteilung der Bundesminister)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경제부서들인 경제부 (성) 와 재무부 (성) 는 독점자본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대변되어지도록 보증을 해주는 견해를 가진 인물들로 점령되어 있다. 내무장관 뿐만 아니라 외무장관도 자민당 (FDP) 소속이며, 따라서 이들 두 부에의 장관들은 소성당이기는 하나 역시 대 자본의 직접 영향하에 있는 정당에 속합니다. 경제상관 쉴러 (Schiller) 교수는 독일 사회민주당 (SPD) 의 당원으로서 오늘날 독점자본의 중요한 세력층으로 부터 무제한의 신뢰를 만끽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키징거 (Kiesinger) 수상하의 소위 대 연립내각 정부의 경제장관으로서 독점자본의 권력이익 (이해) (Machtinteresse) 과 정치적 이익 (die Politischen Interessen) 을 효과적으로 보호주장해 나갔던 인물을 증명하였습니다. 바로 그가 연방정부의 경제장관으로서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소위 집중적인 조치에 힘입어 노동자계급의 넓은 대중층에 해로운 대 자본주의적 초대형 이익 (Großkapitalistische Superprofite) 이 진정으로 폭발신장되는 일이 행하여 졌습니다.

새 사회민주당 출신의 국방장관 슈미트 (Schmidt) 는 옛 히틀러 장성 (군) 들 (Hitlergenerale) 과 서부독일의 연방군 (Bundeswehr) 의 장성들 및 기타 타부군부축군으로 부터 공공연히 현재 얻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국방장관 (der beste

gegenwärtig verfügbare verteidigungsminister)이라고 극구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취임을 하면서 (서독의) 연방군 장군들을 히틀러 국방군(die Hitlersche Wehrmacht)의 동료장교(Offizierskamerad)라고 까지 칭찬한 것은 도외시하더라도 (서독)연방군의 지위와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를 향상시키고, 포오츠담 협정에서 금지되고, 유른베르크 전범자재판(Nürnbergger Kriegsverbrecherprozess)에서 범죄적 제도(Verbrecherische Institution)라고 낙인이 찍혀진 참모부(Generalstab)를 서독에 다시 설치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촉각 취한 것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핵무기 기획위원회의 지난번 회의가 끝난 뒤에 슈미트는 자기의 선임자였던 기민당 국방장관 슈피더의 계획을 계속시행해 나갈 것이라는 성명을 직접 발표하였습니다. 원자무기(Atomare Waffen)와 탄두탄(Sprengkopfe)보유문제에서 슈미트씨(Herr Schmidt)는 슈트라우스(Straup)의 견해와 별로 차이하지 않습니다. - (히틀러 정권의 군비장관=Rüstungsminister이었던) 슈페어(Speer)의 체제에 따라서 - 저명한 군비산업가(Rüstungsindustriellen)를 군비문제등에 대한 전권자(Bevollmächtigter)로서 불러들이므로써 (임명등) 슈미트는 아마도 미국식 모형에 따라서 현재 형성과정에 있는 산업·군대의 집단체문제(ein entstehender Industrie-Militärkomplex)에 대하여 국가 예산에의 군비지출을 위하여 책정된 수 10억의 분배문제에서 직접 콘트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실히 해두고자 목적하는 것 같습니다. 서부독일의 국방장관으로서 행한 최초의 어떤 공고에서 슈미트씨는 독일 연방공화국(서독)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낯선(생소한) 정치적 의사(ein Fremder Politischer Wille)가 강요되어지는 일>>을 막는 과업을 (서독)연방군대와 서부독일의 군사정책(Militärpolitik)에 부과하였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이와같은 목표설정을 잘려면 독일(서독)연방군대와 군사정책은 우선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와 미국의 세계전략에 반대되는 입장을 취함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간파하였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리고 이들만이 오래전부터 서부독일사람들(die Westdeutschen)에게 하나의 생소하고 반 민족적인 정치적 의사(ein Fremder antinationaler Politischer Wille)를 강요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민당·자민당 연립정부의 정책>> (Politik der Koalition SpD/FDP)

서부독일의 수상(der Westdeutsche Bundeskanzler) 브란트씨(Herr Brandt)는 총 선거가 있기 전에 벌써 득점자본의 영향력있는 중요한 대표자들에게 그의 영도

하에 새 정부가 구성되는 경우에 취하여질 장차 있을 정치노선을 밝혀두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1960년 6월 30일에 웨너(Wehner)에 의하여 연방공화국 국회에서 행하여진 정책을 계속하여 나가면서 자기 자신과 자기가 앞으로 영도할 새 정권이 서부독일에 있어서의 국가독점적 정치적 자본주의의 체제에 귀속한다는 점을 증명해 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독점자본주의의 결정적 중요성을 가지는 세력들의 관용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자리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독점자본주의의 특정한 계층에서는 현재의 사민당·자민당 연립정부를 국가 독점 정치적 자본주의 체제를 위하여 일련의 장점을 지닌 일종의 변형된 체제(Variante)라고 현재의 주어진 여건에서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일들이 속합니다. 즉, 노동계급과 노동단체들과 그리고 지식층과 청·소년층에서 일어나는 불안·동요현상을 억압하는 이에 속합니다. 그리고 학술, 과학, 공학상의 혁명을 위하여 불가결한 일련의 개혁들을 대 부르조아지배급들의 입장에서 볼가피한 것이므로 도입시행시키거나 내지는 이러한 개혁들을 추진시키는 일이 또한 여기에 속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강력한 종교적 의존도를 가진 초보수적인 기민당·기사당 지도층에 의해서 보다는 사민당·자민당 정부에 의하여 더 잘 추진 진행되어질 수 있습니다. 브란트 영도하의 현정부의 구성은 미국의 세계전략의 현단계와는 일치 결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대 동구정책 전략이 실패로 돌아온 뒤 미국 지배계급의 다대수는 기민당·기사당의 보수주의 뿐만아니라 우선적으로 사회민주주의자(Sozialdemokraten)들과 합세하여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항하는 투쟁을 벌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란트와 셰엘(Scheel)정권의 인적 구성을 살펴볼 것 같으면 어떤 측면들은, 특히 몇몇 사민당 출신의 장관들과 차관들이 노동단체들에서 중요한 지도적 기능을 하고 있거나 혹은 나치정권에 의한 박해를 받은 사람들로 자기들의 입장을 룬해나간 사람들이란 사실은 새 내각이 업무를 수행해 나갈 때·내외정책적 분위기를 향상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계 측면들은 서부독일의 내정과 외교정책의 특성에 관하여 현존하는 환상을 장려하거나 혹은 새로운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데도 알맞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의의>> (Bedeutung der Bundestagswahl)

지금까지 20년 이상이란 동안 기민당·기사당에 의하여 추진되고 마지막으로는 지난번의 대 연립내각 정부에 의하여 실현시키고자 했던 서부독일의 독점주의자들의 정치는 개별 항목별로 살펴본다 실대로 돌아간 것이며, 광범위 한 제 분야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들어갔습니다.

대외정책적으로 볼 때 독점 부르조아지 계급은 그들의 정치 및 경제부분의 팽창주의적이고도 복수주의적인 정책을 레나감대 있어서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적인 국가 연합단체 (die Sozialistischen Staatengemeinschaften) 국가들의 세력 (Stärke) 과 통일성 (Einheitlichkeit)에 직면하여 그리고 특히 동독 (DDR)의 세력과 통일성에 직면하여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내정상으로는 이 독점 부르조아지 사상은 그 자신에 의하여 유발되어진 사회적 불안 (Unsicherheit) 과 사회적 불평등 (Ungerechtigkeit) 으로 인하여 실패를 당하였으며, 이들 불안과 불평등은 특히 노동자계급과 도시의 중산계급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독점 부르조아지는 그들의 독점이윤 (Monoprofite)의 이익을 위하여 새로운 호경기를 맞이하여 비교적 위협하던 실업 (失業) 상태가 지배하던 시대로 부터 평강히 급속도로 위외의 경우와 비교되리만큼 또한 위태로운 인플레이적 발전을 해 나가는 시대로 넘어 들어갔습니다. 이 독점 부르조아지는 노동자계급에 대하여 새로운, 종류가 다른 그러나 예전의 것과 똑같이 불쾌하고 (Unangenehm), 위험한 사회적 불안의 짐을 부과해 버렸습니다. 독점 부르조아지는 위기가 있는 직후에 임금은 정체상태에 빠져있는데 대하여, 그들은 평강한 이윤의 증가를 건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그들의 노동단체들을 통하여 지난날 연방공화국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전에 임금의 인상을 강제로 성취해냈을 때 가격나사 (태열 - Preisspirale)의 기제는 벌써 평강이 많이 틀어져서 임금의 증가로 인하여 거의 전적으로 청산되어지고 마는 결과 (즉 올리나 마나 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윤추구의 편협성 (die Engstirnigkeit des Profitinteresses), 상황에 대한 그릇판단, 우유부단함과 그리고 서부독일의 화폐절상을 위한 관계자들의 투쟁면에서 기민당·기사당의 정치가들이 취한 태도들은 그들의 체면을 더욱 떨어뜨리게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민당·기사당과 그리고 또한 대 연립내각정부도 학술, 과학기술

의 혁명과 관계하여 나타나는 대 자본가들의 직접적인 경제범위를 초월하는 필요성에 공평·정대할수있는 구상(Kotgaption)을 수립하고 이를 관철시켜 나갈만한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반동적인 위치에 있는 몇몇 대표자들은 직업목적, 즉 - 자본주의의 조건에 입각하여 - 대 자본의 목적을 위하여 쓰이도록 과학기술(지식)을 넓히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이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점을 결과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이와같은 지식과 점증하는 사고능력(Denkfähigkeit)들이 점점 더 많이 사회적인 여러문제들 뿐만아니라 정치에도 옮겨질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 및 의회에 있어서의 세력관계의 변천과정은 서부독일의 국가 독점정치적 자본주의(der Staatsmonopolistische Kapitalismus)에 내재해 있는 반시대적인 근본 모순이 작용하여 나타난 표현(Ausdruck des Wirkens der grundlegenden antagonistischen Widersprüche)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구성에 참여했던 세력, 특히 기민당·기사당은 그들이 사회적 진행과정에 대하여 통제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하여 이 여러가지 모든 점들을 조작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위 대 연합내각 정부에 의하여 취하여진 정책은 노동자들과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여러 계층들의 이익을 상당히 침해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아 여론이 돌아서므로서(Stimmungsumschwung)총선거에서 정치적, 의회적 세력관계를 변화시키고 기민당·기사당을 내각(정부)에서 축출하기에 충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언급한 제반 모순점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아마도 가까운 장래에 더욱 심화되기에 이를 것입니다. 독점기업의 경제적 팽창, 특히 자본수출(Kapitalexport)은 그들의 최대이익을 높이기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서부독일의 제국주의가 품은 신식민주주의적 구상을 위하여 계속하여질 것입니다. 그밖에도 자본주의적 전체구상은 노동과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생산되는 원료자원(Rohstoffressource)(광유(鎊油), 와 천연가스, 광석, 우라늄, 구리)을 소유할 권리를 획득코자 하는 집요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스(Abs)와 슈트라우스(Strauß)에 의하여 구상된 정책은 상당한 자본수출의 길을 통하여 만이 실현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연립내각의 기회>> (Chancen der neuen Koalition)

조작을 통한 이와같은 모순점들을 적어도 잠정적으로라도 통제 할 수 있을 기회를 새 연립정부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기회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세계시장에서 세계 여러나라의 (독점의 최고형태로서의 기업연합인) 큰체본들의 이해가 서로 상당히 충돌하고 있는데, 서독의 마르크 (Westmark) 가 비교적 높은 비율로 가치 절상되었다는 사실을 통하여 하나의 특징적인 측면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가 내포하고 있는 국내정치상의 목적은 예상되는 높은 비율의 물가상승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자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은 앞으로 몇달동안 안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따라서 이 기간동안 물가가 크게 오를것으로 예상되기는하나, 화폐의 가치 절상의 높은 비율은 서부독일의 산업이 행하는 수출에 아주 크게 브레이크를 걸고, 외국화 산업상품의 수입을 크게 진작시키므로써 지나치게 가열된 서부독일의 상업경기를 후퇴시키고, 특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새로운 경기후퇴현상으로까지 접어들게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밖에도 기민당 전당대회와 기민당, 기사당의 정책은 우익경향 (Rechtkurs) 의 위험이 아직도 추방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케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현상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복주의 정책 (Revanche-politik) 의 수행, 청소년에 대하여 일층강력히 민족주의적으로 영향을 끼칠려는 시도 (경영에 대한) 공동결정권 (Mitbestimmung) 을 요구하는 노동조합들의 주장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와 그리고 계속적인 군국주의화 경향에서 이를 볼 수 있다.

<<시금석으로서의 국내정치와 사회정책>> (Prüfstein Innen- und Sozialpolitik)

사민당, 자민당 건립내각이 무엇보다도 내정과 사회정책부문에 행하는 제반일들이 서부독일의 유권자들에게는 새 정권이 누구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가하는 점을 측정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내정과 경제정책과 그리고 사회정책 부문에 있어서의 1천 6백만 유권자들의 요구와 희망사항에 대하여는 1969년 10월 22일에 있는 <<독일노동조합 연합체기, 새 연방정부에게 대한 성명>> (Erklärung des Deutschen Gewerkschaftsbundes an die neue Bundesregierung) 은 계속 대표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독일 노동조합 연합체 (DGB) 는 - 직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것을 새정부로 부터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신정부는 그 가족을 합치면 서부독일 연방공화국 국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자, 회사원 그리고 판리 (Beamten) 들의 이해를 지금까지 보다 더 배려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서부독일 국민의 80% 이상을 점하고 있는 이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충분히 잘 이해된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노동단체들은 <<한때 부당하게 행하여지던 경제에 있어서의 지배구조>> (die einstige und ungerechte Herrschaftsstruktur in der Wirtschaft) 를 <<모든 결정에 동등권을 갖고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영에 대한 공동결정권>> (die Gleichberechtigte Mitbestimmung der Arbeitnehmer bei allen Entscheidungen) 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모든 대 기업들에 있어서 비례적 공동결정권의 확장을 필요로 하며, 그리고 - 독일 노동조합 연합체 (DGB) 의 기록에는 또한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 <<경제부문 전체 영역에서도 이 경영에 대한 노동단체의 공동결정권의 실현>> (die Verwirklichung der Mitbestimmung auch im gesamtwirtschaftlichen Bereich) 요구하는 것입니다.

<<노동 단체들의 요구>> (Forderungen der Gewerkschaften)

서부독일의 노동단체들은 새 정부의 출현을 가능케한 유권자들의 이름으로 다른 많은 분야들에서도 민주주의 보전 (Sicherung der Demokratie) 과 보다 많은 민주주의의 실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 나치주의적인 독일 민족민주당 (NPD = Nation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의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청·소년의 젊은 세대의 이해가 적극적으로 대변되기를 요구하며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에 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기회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의 확립, 새 시대에 알맞는 형법과 형집행법을 만들고, 계속적인 성장이 이룩됨에 있어서도 가격수준 (Preisniveau) 을 안정시키는 일, 노동자, 회사원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세금경감조치 (Steuerentlastung), 보건사업 (Gesundheitsfürsorge) 의 확충, 나이가 비교적 많은 노동자들과 회사원들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 여성에 대한 직업제한 조치의 재고, 모든 시민계층의 자제들에 대한 동등한 교육 기회들 마련하는 일, 교육과 학문과 연구를 보다 강력히 장려, 촉진하는 일, <<전체 학교 제도>> (Gesamtschulsystem) 와 <<전체 대학제도>> (Gesamthochschulsystem) 의 발전을 위한 제반조치, 유급 교육휴가 (Bezahlter Bildungsurlaub)

성인교육에 대한 보다 강력한 국가적 장려, 직업교육법(Berufsbildungsgesetz)의 개선, 직업교육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직업종사자들이 경영결정에 공동으로 참여할수 있게하는 일과 그리고 이밖의 많은 일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민당, 자민당, 연립내각 정부에 대한 이러한 서부독일 노동단체들의 성명은 이 연립내각을 가능케한 유권자들의 의사이기도 한 것인데,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과 그리고 기업경영에 대한 노동자들의 공동결정 참여권등의 문제들에서 서부독일이 만회할 필요성을 인상적으로 말해주는 현실진단이라고 하겠으며, 동시에 나후와 반동주의(Dunkelmännertum)와 보수주의에 굳어져 버린 지난 20여년간의 기민당, 기사당 정부가 해놓은 일의 결과에 대한 파멸적 선고(ein Vernichtendes Urteil)인 것입니다.

20 년간에 걸쳐 수집되어진 이 일련의 만회필요성(Nachbedarf)에 대한 이 같은 현실진단(Bestandsaufnahme)에 맞추어 새 연립정부의 계획(Programm)과 사업들(Taten)이 측정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각개 개혁들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항상 이들 개혁의 민주주의적 내용이 그 바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입장과 입장을 서로 비교하고, 유권자의 의사와 정부의 계획을 신중히 고려하여 비교하는 일은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일이 못됩니다.

브란트씨는 새 정부는 보다 많은 민주주의를 과감히 실천할 것이라고(die neue Regierung wolle mehr Demokratie wagen) 선언했습니다. 서부독일에서 이제 서야 비로소 민주주의라는 것이 시작될 것이라고 그는 서부독일을 사회적 법치국가(Soziales Rechtsstaat)로 발전, 확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실현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아직 없었다. 언급되어진 것은 선거연령(Wahlalter)을 18세로 낮춘다는 약속뿐인데, 물론 이 사실은 충분히 평가되어야 할 일이라는 하다. 노동자들이 기업경영의 결정에 공동참여하겠다는 요구가 정부선언(Regierungserklärung)에 미지근하게 반영되었는데, 아마도 상당히 오래 연기되어질 것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서부독일의 노동단체들 유권자들의 의사를 표현한것 같은 <<경제 전분야에 걸친 경영결정의 공동참여권의 실현>>(Verwirklichung der Mitbestimmung auch im gesamtwirtschaftlichen Bereich)이라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말도 되지않는 일이다. 독일 공산당(KPD)금지조치를 철회한다고 하면 이는 물론 정말로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의지로 해석되어(평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 나치주의적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선언에서 완전히 무시되었고, 신 나치주의적 독일민족(국가) 민주당(NPD)을 금지시키자는 유권자들의 요구는 전적으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계획(Regierungsprogramm)에는 -가령 예를들어 교육제도 분야에 있어서의 개혁등 - 의 중요한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일련의 개혁들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개혁이 실제로 실현된다면 큰 의의를 지니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 (Bildungspolitik)

서부독일의 연방예산을 볼것 같으면 1969년의 경우 군비예산(Rüstungsausgaben)이 23.2%인데 반하여 교육(Bildung), 학술(Wissenschaft)과 연구(Forschung)를 위한 예산은 3.1%에 지나지 않습니다. 독일 노동단체(DGB)가 교육을 위한 재정계획, 즉 국가수입을 교육에 유리하도록 재편성하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교육(제도)를 개혁함에 있어서 외적인 변경만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꼭 필요한 것은 교육제의 민주주의화(die Demokratisierung des Bildungswesens)입니다. 이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교육내용에서 일체의 나치주의적이고 반동적인 사상을 제거하고 대학제도의 발전과 지도체제를 이룩함에 있어서 학자들(Wissenschaftler)과 학생들(Studenten)이 민주주의적으로 결정에 공동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업정책>> (Agrarpolitik)

정부 선언에는 내적개혁(die Innere Reform)과 관련하여 농업정책면에 몇가지 새로운 측면을 암시하는 일들도 언급되어졌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농업이 처해있는 어려움을 극복하여 나삼에 있어서, 농업을 국민경제의 다른 부문과 같은 지위에 발전하여 오를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농업이 앞으로는 원조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부독일의 농업을 현대화시키는 일이 구조정책상의 큰과제로 지칭되었으며, 여기에서 가격압박(Preisdruck)은 피하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도시와 농촌간에 차이나는 교육상의 차이점(Bildungsgefälle)을 철폐하도록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많은 서부독일의 농부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점들입니다.

니다. 그런데 반하여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농부의 이익이 되도록 실제 진행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전연 모호한채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다른 부문의 경우와 꼭 마찬가지로 브란트의 농업정책계획은 완전히 모순 투성입니다. 가령 서부독일의 농업이 차지하는 민족적 이익이 앞으로 보다 더 강조되어 진수 있을까? 아무런 회의심도없이 서부독일 농부대중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있던 기민당. 기사당의 지금까지의 구공공동시장 농업정책에 결별한다는 내용은 전연 언급조차 없다. 브란트의 견해로는 서부독일의 농업을 경제정책과 통화(화폐)정책면에 불가결한 전체가 이루어지지도 '얇은채 구공시(EWG)에 가입시킨데 그 실책이 있다는 것이나 앞으로는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이러한 농업부문의 구공시와의 관계가 경제정책과 화폐정책상의 발전에 보다 강력히 조화되는 것이 되어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것은 그 어떤 시기가 아니다. 가령 예를들어 서부독일의 농부가 1970년에 망하지 않고, 1973년에 몰락한다면 농부에게 이로운 것이라곤 무엇이 있는가? 지금까지의 구공공동시장(EWG)정책을 계속하는 한 농부들에 대한 생존보장(Existenzsicherheit)이라는 것은 있을수 없다.

농업정책상의 요구사항들이 지닌 모순점들에 대하여 다른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봅시다. - 말로는- 구조정책(Strukturpolitik)을 통하여 서부독일의 농업을 현대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준제는 이러한 것입니다. 농구를 위한 구조정책이며, 농구를 위한 현대화인가 하는 것입니다.

<<농업구조>> (Agrarstruktur)

서부독일의 농부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서부독일의 농부들은 가령 동독(DDR)의 협동조합농민(Genossenschaftsbauern)들처럼 그렇게 통일적인(사회)계급(eine einheitliche Klasse)이 아닙니다. 서부독일에는 오늘날도 노예신분제도(Leibeigenschaft)가 극복된 후의 지난세기의 독일에 형성되었던 농업구조가 그냥 굳어져 있습니다. 서부독일의 촌락(Dorf)은 반(半)프로레타리아(Halbproletarier), 소농(Kleinbauern), 중농(Mittelbauern), 대농(Großbauern)과 그리고 자본주의적이며, 봉건적인 대지주(Großagrarien)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구의 이익을 위하여 구조정책이며 현대화를 한다는 말입니까? 실제 경작에 종사하는 농부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기민당. 기사당의 본보기를 따르며 대지주를 위해서입니까? 정부선언은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읍니다.

농업에 대하여 꺼처지는 재정자본(Finanzkapital)의 영향을 물리치기 위하여 민주주의적인 농업정책을 가능케할 건의를 하는 것을 목표로 서부독일의 식량, 농업·산림성(Ministerium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Forsten)에 자문위원회(Beirat)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벌써 여러해 전부터 서부독일의 농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민당·기사당은 이러한 제안을 조직적으로 물리쳐 버렸읍니다. 이제 이 기민당·기사당이 정부에서 물러난 오늘 농민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알맞게 구성되어야할 이러한 자문위원회를 만들기에 좋은 시점을 맞이했다고 하겠읍니다. 서부독일 농부들 자신에 의하여 벌써 민주주의적 경제정책을 위한 많은 좋은 제안들이 만들어 졌읍니다. 가령 그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겠읍니다.

노동자, 농민간의 공고한 유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농민단체들(Bauernverbände)이 노동자단체들(Gewerkschaften)과 긴밀한 협동을 하는 일.

서부독일의 농업을 독점주의적 이익추구에 귀속시키지 말고 농민과 그리고 모든 다른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Werkstätige)들을 위한 정책을 추구할 것.

농민들을 그들의 농토로부터 축출하는 대신에 민주주의적인 농토개혁(Landreform)을 할 것.

농민대중을 희생시켜 가면서 독점주의를 위한 구조정책을 추구하는 대신 상호협조를 광범히 하게 조직화시키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 서로 다른 기업들간의 협동을 가능케할 광범히 한 체제의 확립을 기할 것.

서부독일에 외국산 농산물을 범람케 하는 대신 국내 농업생산품을 우대하는 조치를 기할 것.

가격압력(Preisdruck)과 하락하는 생산자 가격(die Sinkenden Erzeugerpreise)대신에, 비료, 식료품, 농업기계, 사료(Futtermittel)부문의 대기업 연합인 콘체론들이 취하는 거대한 이익을 줄이고 농업생산 원가에 기준을 두는 가격협정을 취할 것.

높은 이자대신에 싼 신용대부를 가능케할 것. 특히 상호협조와 그리고 기업들간의 협동을 가능케할 방향으로.

서부독일의 농업이 계속하여 부채를 지게하는 대신에, 국가를 통한 일종의 전반적인 부채청산(eine Generelle Entschuldungsaktion) 조치를 취할 것.

<<브란트·셰겔 정부의 계획>> (Programme der Regierung Brandt/Scheel)

우리는 물론 브란트·셰겔 정권이 하나의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시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뿐만아니라 개정자본의 강력의 영향하에 있고 또 그들 사이에 대자본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끼어있는 부르조아지적이며 의회주의적인 정부 (eine solche Bürgerlich-Parlamentarische Regierung)로 부터 이러한 일을 우리는 결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민주주의는 노동자 계급 (Arbeiterklasse)이 승리한 뒤에야 비로소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 (die Entwickelte sozialistische Gesellschaft)에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부독일의 정부 선언에는 몇가지 긍정적인 점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경향 (Ansätze)과 어쩌면 또한 좋은 계획 (Gute Vorsätze)들이 모처럼 주어져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BRD) 시민 (Bürger)는 자신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부독일의 공산주의자들 (Kommunisten)과 사회 민주주의자들 (Sozialdemokraten), 노동단체인들, 청소년들, 농부, 여성들과 기타 다른 진보 세력 (die Fortschrittlichen Kräfte)들은 그들의 유권자 의사가 존경을 받고, 기민당·기사당과 기타 다른 보수세력과 반동세력의 저항이 있더라도 노동자대중의 이익을 위한 실제적 개혁이 관철되어지도록 항상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요한 투쟁을 통하여 이를 성취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디 노동자계급 (Arbeiterschaft)과 진보적 지식층 (die Fortschrittliche Intelligenz)이 다른 민주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세력들과 힘을 합하여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들의 모든 창조적 능력을 투입하기 바랍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혁을 불가능한 것이라고 성명하고 나서는 보수주의 세력이 서부독일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 개혁을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자금이 없다는 것이며, 그리고 예를 들어 교육개혁 (Bildungsreform)만 하더라도 사용가능한 모든 재정수단을 다 필요로 할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를 일련의 발표된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거대한 군비부문의 지출을 계속한다면 (die Fortführung der Riesigen Rüstungsausgaben) 이미 발표된 개혁사업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물론 옳은 것입니다. 군비에 산지출을 50% 대량 삭감하지 않고서는 이미 발표된 개혁사업들이 계속하여 종이위에만 쓰여진 즉 사문화된 계획으로 남을 것이며, 이들 계획이 아무리 진보적인 내용으로 초안되고 계획되어졌다 하더라도 실천되어질수 없다는 것은 서부독일의 경우에도 적용

되는 얘기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민당 연립 내각정부가 일관성있게 평화적이고 민주주의적인 길을 걸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 세정권이 준비자본(Rüstungskapital)의 압력을 받아 그리고 연방군(서독)의 지도하에 소집단의 독점구획과 미국의 세계전략의 제국주의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군국주의적 산업계획의 발전을 계속하여 장려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근본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슈트라우스(Strauß)가 예를들어 <<방위제도(Wehrwesen)와 자연과학(Naturwissenschaft) 사이에 체결된 혼인(Ehe)은……결코 다시 끊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요구한다면, 그는 이것으로써 군비(Rüstung)가 이윤추구(Profitrealisierung)의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며, 군사적 팽창을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그 목적으로 몰고나가는 독점집단(monopolgruppen)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서부독일의 사회질서가 군비(Rüstung)를 앞으로 이룩해 나갈 공학발전의 자극제로 필요로 한다면, ABC 무기 시대에 전쟁이라는 것을 그들의 계산에 넣는 반동세력의 영향을 서부독일의 사회질서가 참여라면, 이러한 사회질서는 민족의 평화문제와 사회문제, 정신문제등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므로 물려나지 않으면 일된다는 선고(Urteil)를 스스로 역사앞에 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독일연방 공화국에 있어서의 내적 개혁>> (Innere Reform in der Bundesrepublik)

브란트정부는 오늘날 이와같은 결정을 내려야할 입장에 처하여 있습니다.

내적 개혁문제에서 브란트·세일 정부는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 처하여 있습니다. 기민당·기사당이 옛날의 지배구조를 복구하고 서부독일을 미국의 세계전략에 끌어 넣어버리고 20년이나 서부독일을 통치한 결과는 두차례나 세계대전의 참화속으로 독일을 몰아넣었던 과거의 세력들과 정치적으로도 이데올로기적으로도 관계를 끊지 못하고 받았던 것입니다. 어마 어마한 액수가 전연 무의미한 군비를 위하여 새로이 탕진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결과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일들에서 찾아 볼수 있습니다. 교육제도(Bildungswesen)와 직업교육제도(Ausbildungswesen)에 나타난 낙후성, 학문(Wissenschaften)과 공학기술(Technologien)의 중요한 부문에 나타난 후진성, 앞으로 닥아올 몇십년간에

있게 될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을 농업구조를 이룩하고, 농민 (Bauern)과 농촌 노동자 (Landarbeiter)를 훈련시키고 교육할 기회를 마련함에 있어서 처해있는 참담한 후진성들에서 우리는 살피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농민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젊은 세대들과 여성들층에서 행하는 기본적인 요구를 증진시키며 그리고 경원하고 있는 데서도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나 경제전반에 있어서 민주주의적인 공동결정참여권 (Mitbestimmung)이 없는 데서도 우리는 이러한 기민당, 시민당의 20년에 걸친 통치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독일 민주공화국에 있어서의 개혁>> (Reformen in der DDR)

서부독일의 공산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자들과 많은 취업 농민들과 진보적인 지식층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에서는 여기에 문제되는 제 부문에 걸친 개혁들이 민주주의 혁명이 수행되고 사회주의가 건설, 확충되던 시기에 이미 행하여졌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노동자 계급은 취업하는 농민들과 사회의 다른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세력과 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사회질서를 세우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노동자 계급은 발전되어 나가는 사회주의 인간 사회에서 인간변화과정 (der Prozeß der Veränderung der Menschen)로 인간 상호관계 변화의 과정 (der Prozeß der Veränderung des Verhältnisses zwischen ihnen)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을 배워 터득하였습니다.

다음의 일련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의 노동대중 (das Werktätige Volk)은 이를 수행할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Gewachsen) 즉 인종적 증오 (Rassenhaß)와 사람을 싫어하는 행위 (Menschenfeindlichkeit) 등의 반동적이며 제국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극복해나감에 있어서, 국민경제와 민주주의적인 토지개혁과 그리고 나중에 뒤따른 농업의 사회주의적 전환을 계획하고 이를 수행해 나가야 하는 크고도 새로운 과제를 다해나감에 있어서, 인간을 통한 인간의 착취제도를 없애는데 있어서, 여성과 청소년들에게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새로운 제도의 관철을 기함에 있어서, 토지투기 (Bodenspekulation)를 제거하고, 도심지 (Staatzentren)를 인간의 사회생활의 중심

으로 꾸며나감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화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우리는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 인도주의사상(die lissen des H-
umanismus)이 생생한 현실로 되어지도 ... 할 것을 터득하였습니다.

<<사회주의 체제>> (System des Sozialismus)

지금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노동대중은 인민전선(nationale Front)에 통합
되어 있는 민족의 모든세력과 함께 현재와 그리고 또한 미래의 위대한 과업들을
완수해나가는 일을 보증하는 사회주의의 진보된 사회체제(das Entwickelte ges-
ellschaftliche System des Sozialismus)를 이룩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습
니다. 서부 독일에는 지금도 여전히 제 2차 세계대전을 유발시켰던 국가독점정치
적 자본주의의 경제법칙들(neue Ökonomischen Gesetze des Staatsmonopolit-
ischen Kapitalismus)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칙들은 학술 및 공학
부문에 있어서 일어난 격정으로 인하여 더욱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60년대에 무엇보다도 자본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기본모순이 특별히 격화되었습
니다. 한편으로는 학술 및 공학상의 혁명과 더불어 완전히 새로운 질의 생산
능력이 발전되어지고 따라서 실제적 가능성이 발전되었으므로 인류역사상 최초로
사회전체와 사회속의 개체가 필요로하는 물질적 필요성들이 만족되어질 수있게 되었
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자본주의적 지역이 되는 이 모든 열매가 거의 대부분의 경
우 극히 적은 독점부력자들의 이익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 다른 모든 제국주
의적인 나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 서부독일에 있어서도 이와같은 발전은 60년
대에 있어서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의 경제독점화로 치닫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에 있어서의 스트라이크>> (Streiks in der Bundesrepubl- ik)

노동대중자신들에 의하여 일어났던 서부독일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전의 때 스
트라이크 선포는 임금인상요구와 <<사회적 파트너관계>>(Sozialpartnerschaft)
가 지닌 허구성(기만)에 대한 저항과 그리고 현 체제에 대한 노동대중의 의견
표시와는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점지배(Monopolherrschaft)와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하여 항거하는 민주주의
운동이 얼마나 뻗어나갔는가하는 것은 부르조아적 민주주의 세력으로 부터도 짐작
하여 제국주의적 체제가 지닌 산발적 피해에 대해서 비판이 가해질 뿐만아니라.

이 제국주의적 체제가 지닌 근본구조자체에 대한 비난이 점점하여가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것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유도해 낼수가 있겠습니다. 즉,
- 서부독일을 포함한 - 제국주의 국가들의 독점세력 (Monopolmacht) 과 국민의 절대다수간에 내재해있는 대립 (Gegensatz) 70년대에 접어들어 하나의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현상들을 종합하여 볼것같으면 서부독일의 경우에도 국가독점정치적 자본주의와 이에서 유출되는 재반 모순이 완전히 전개되어 나가는데, 이는 <<국가 독점 정치적 자본주의는 사회주의 완전한 물질적 준비를 위한 역사발전 단계에 나타나는 바로 직전의 단계자>>는 레닌의 인식을 증명해 주는 것이 됩니다.

이 인식이 바로 오늘날 최대의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식은 제국주의에 대하여 오늘날 전개하고 있는 투쟁의 역사적 성격을 말해주며, 또한 역사적 위대성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회주의의 물질적 전단계를 사회주의 자체와 동일시하지는 않습니다. 서부독일에 있어서는 노동계급과 그들의 동맹자들은 멀고도 어려운 길을 통하여 여기에 달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부독일 사회를 밑바닥까지 근본적으로 민주화하는 진정한 개혁을 위한 투쟁은 어느모로 보든지 간에 극히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입니다.

서부독일 국민의 절대다수의 생활에 관한 이해관계 (Lebensinteressen) 는 오늘날 모든 사회생활 영역에 걸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행에 옮기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독점세력 (die Macht der Monopole) 을 꺾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령적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옛 독점자본주의적 기본구조를 계속 유지시키고 따라서 반동과 전쟁위험의 뿌리를 그냥 유지시켜나가는 개혁으로는 역사적 과업을 완수해 나갈수가 없습니다.

<<개혁에 대한 레닌의 주장>> (Lenin über Reformen)

<<우리는 개혁계획의 지지자들 (Anhänger eines Reformprogramms) 이다>>라고 레닌은 말했다. 그는 <<이 계획은 또한 기회주의자들에게 똑같이 반대되게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개혁의 민주주의적 성격이라는 것은 이를 위하여 끊임없는 대중투쟁 (Massenkampf) 이 전개되고 또한 노동계급의 행동이 이 투쟁의

근본바탕을 이룰때에만 보장되어질 수가 있다. 이러한 의미의 발전이 있을때에만 소위 “개혁”이라는 기치아래 대자본의 착취체제와 지배체제가 현대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개혁제안들이 브란트에 의하여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적지않은 개혁들이 사회주의적인 사회에서나 비로소 완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주주의적이고 사회적인 개혁의 싹이 트는 것에 대하여 모든 경우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 특히 교육제도 부문에 있어서 또한 그러합니다. -

이와 같은 개혁들은 보수적인 세력의 완강한 저항에 대항하여 투쟁으로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의 토론을 통하여 이 부문의 개혁사업을 성취시킬수 있는 가능성이란 극히 적습니다.

서부 독일에는 독점과 보수적인 세력의 강력한 힘이 있으므로 일부 개혁안들은 이미 행하여졌던 본보기에 따라서 위원회같은데서 사장되어지거나 혹은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하여 조작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민주주의적인 개혁의 실현은 서부독일에 있는 모든 민주세력과 진보세력들이 평강히 크게 협력하여 공동의 투쟁을 전개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그 성패가 좌우될 것입니다.

《개혁을 위한 보조제안》 (Hilfsangebot zu Reformen)

서부독일의 취업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독일의 두 국가간에 평화적으로 공존 (Nebeneinanderleben) 하는 발전이 이루어지게 하기위하여 우리는 서부독일의 노동취업자들과 그리고 일체의 모든 진보세력에 대하여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은 개혁을 실현시켜 나감에 있어서 바로 필요할 우리의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각기 해당되는 부문에 서부독일의 시민들을 원조하겠으며, 이미 시험되어진 민주주의적 해결을 이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웃간의 원조 (eine solchenachbarschaftliche Hilfe) 가 특히 다양한 민주주의적이며 사회적인 개혁 부문에서 행하여진다는 것은 서부독일의 시민에게 아주 유용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동독 (DDR) 과 서독 (BRD) 과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데 (zur Schrittweisen Verbesserung der Beziehungen) 공헌할 수 있는 알맞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서독)의 외교정책》(Außenpolitik der Bundesrepublik)

지금까지 언급한 전제상황, 즉 생사문제에 관한 서로 상이한 견해가 집적되어 있는 일. -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미국의 침략전쟁문제 - 그 뿐만 아니라 기민당, 기사당과 그리고 신 사회독일민주당(NPD)이 지난번 선거에서 획득한 유권자의 득표가 50%를 약간 넘는다는 사실 이 모든 사실이 브란트, 세엘 정부의 계획의 성격을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부 계획은 내용상 모호하며, 모순투성이며, 여러가지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내용도 흔히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외교정책 부문에도 꽤 해당됩니다. 독일 연방공화국(BRD)의 일부 여론에 나타나는 변화들은 실리적 정책(eine realistische Politik)에 입각하는 경향의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유권자들의 기대》(Erwartungen der Wähler)

그들의 투표로 기민당, 기사당을 내각에서 축출하고 새로운 연립내각의 형성을 가능케 하였던 1천 6백만 이상의 유권자들은 이렇게 하므로써 20여년에 걸친 기민당, 기사당의 반민족적 정책으로 부터 물러서야 한다는 그들의 요구를 표현해낸 것이라고 봅니다. 이들 유권자들의 대다수는 사민당, 자민당 정부가 구라파의 안전과 군비축소의 보장에 참된 기여를 할 것을 기대하며, 핵확산 금지조약(Atomwaffensperrvertrag)에 서명하고 이를 비준하고, 원자무기를 소유하고 이의 사용력등을 포기하는 일을 통하여 핵전쟁의 위험을 추방하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 유권자들은 파탄적인 보복정치(die Bankrotte Revanchepolitik)로 부터 방향을 전환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진정한 이해를 기대하며, 구라파에 현존하는 모든 경계선을 인정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 유권자들은 천태만상으로 나타나는 단독 대표권을 주장하는 불손한 행위(Alleinvertretungsmaßnahme)와 할슈타인 원칙(Hallstein-Doktrin)으로 부터 물러서고, 완전 동등권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그리고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DDR)과 독일 연방공화국(BRD)을 쌍방이 다같이 아무런 조건없이 인정하는 원칙하에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에 대한 완전계정상화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선언》(Regierungserklärung)

브란트씨에 의하여 발표된 정부 프로그램에는 군비축소(Abrüstung)와 평화의

보장과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이해에 도달하기 위한 기여를 할 의사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 브란트 정권도 역시 이와 동시에 북대서양 동맹기구(NATO-Pakt)에, 군비에산의 증가, 미국에 대한 특별한 유대관계 - 그리고 이에 따라서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한 특별한 유대관계 - 에 신의를 다할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브란트씨는 그의 정부선언에서 일관성(Kontinuität)과 개혁(Erneuerung)을 약속했습니다.

1966년의 에이히트(Erhard)정권의 교서(Note)와 1966년의 소위 대연립정권의 수상(키징거)이 행한 최초의 정부선언 끌어내는 것으로 - 1937년의 국경선에 대한 요구에서 단독 대표권 문제에 이르기까지의 보복주의 정책의 모든 기본 요소들이 여기에 정립되어져 있는 것인데 - 외교정책상의 일관성이 보장되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외교정책》(Außenpolitik)

그후에 행하여진 브란트-세엘 정부의 실제적 대외정책에 나타난 외교정책상의 일관성은 다양한 형태로 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서부독일의 외무장관 세엘씨는 여러 가지 중에서 서부독일 외교공관장들에게 내린 훈령에서 외교정책을 세부적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본(Bonn)정권은 제3국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교역관계를 설립하여 제도화시키는데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본정권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무역대표부의 설치(Handelsvertretung)에 대해서 까지도 반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엘은 또한 말하기를 서부독일 연방공화국의 태도는 《동부 백림(즉 동독)이 조약을 통하여 정돈된 협조적 생활상태(Modus Vivendi)를 이룩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응하는가의 여부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협조적 생활상태라는 것은 그들의 내독관계의 독점대표권을 주장하는 억지성격을 띤 본의 독일정책(Deutschlandspolitik)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엘은 계속하여 말하기를 상업교역과 문화영역에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이 대외 대표부설치를 확장해 나가는 것은 내독관계 정립(Regelungen)에 유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정권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이 제3국들과 문화조약들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 중을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엘씨는 제3국들이 독일 민주주

의 공화국의 수도에 대표부를 설치하는 것을 피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 여기에 뒤따릅니다. 이것은 조금 변화된 어법을 쓴 구대의연한 할슈타인 독트린인 것입니다.

《원자무기 금지조약》 (Atomwaffensperrvertrag)

- 본 당국이 여러가지를 보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우리는 《개신》 (Erneuerung) 의 요소로서 역시 원자무기 금지조약의 서명을 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막을 수 없게된 원자무기 금지조약의 서명뒤에 적어도 비준을 오래 미루어 버릴수 있거나 혹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날 (Sank-Nimmerleins-Tag) 로 까지 미루어 버릴수 있기를 분명히 희망하고 있는 지도적 입장에 있는 서부독일 정치가들의 눈감박거림에 대하여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서부독일의 공산주의자들과 노동조합원들과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자들, 새 연립내각 정부의 안.팍에 있는 서부독일의 진보적이고, 민주적이며 평화를 애호하는 세력들은 핵무기전쟁 (Kernwaffenkrieg) 을 억제하려는데 그렇게나 중요한 국제적 조약에 서부독일의 연방공화국이 아무런 벗어날 탈출고를 마련함이 없이 확실히 참여하여 비준시켜 그 효력이 국제법상으로 가장 신속하게 발생되도록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결코 경계심을 게을리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쏘련에 대한 관계》 (Beziehungen zur UdSSR)

만약에 새로 세워진 서부독일의 연방정부가 사회주의 쏘비에트 공화국 연방 (die Union der Sozialistischen Sowjetrepubliken) 에 대한 그들의 관계를 향상 개선키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이를 환영해 마지않을 것입니다. 쏘련과 시민적 우호관계 (bürgerliche Freundschaft) 를 발전시키고 협동 (Zusammenarbeit) 을 맺어나감으로써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은 오래전부터 독일 역사에서 여러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본에 새로들어선 연립내각정부가 서부독일에 반세기 이상동안이나 쌓아온 쏘련에 대한 적대관계 (Feindschaft) 와 반공 (反共) 이라는 어리석음 (die Torheit des Antikommunismus) 폐지 청산하고 쏘련과 좋은 관계 (Gute Beziehungen) 를 맺고 좋은 협동 (Gute Zusammenarbeit) 해 나갈수 있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서부독일 전체민족 (das Ganze Westdeutsche Volk) 에게 이로울 서부독일 신정권의 이러한 노력에 대하여 우리로서도 기꺼이 지원 (Unterstützung) 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브란트씨는 체코슬로바키아의 분할을 결정해 놓은 뮌헨의 모욕적인 강제명령 (das Münchner Schanddiktat 즉 뮌헨조약) 을 처음부터 무효한 것이라고 선견해 버리는 결단을 아직까지도 내릴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그의 의견발표는 있었기는 하나 분명히 해명하는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오더·나이세 경계선 (die Oder-Neiße=Grenze) 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서부독일의 연방공화국간의 경계선을 포함하는 구라파에 있어서의 영토적 현황을 (der Territoriale Status quo in Europa) 인정하라는 수백만 서부독일 유권자들의 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직접적인 언급이 정부계획 (Regierungsprogramm)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더·나이세 경계선》 (Oder-Neiße-Linie)

✓ 사민당·자민당 정부가 서부독일과 폴란드 협상을 희망하는데 대하여 본인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해두고자 합니다. 와르사와 조약 가맹국가들과 전세계국가들의 대다수의 공통된 견해에 의할 것 같으면 오더·나이세·경계 (국경) 선 (Oder-Neiße-Grenze) 이라는 것은 포오츠담에서 종국적으로 (endgültig) 그리고 국제법상으로 확정되어진 것입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은 지금으로부터 벌써 20년전에 폴란드와 괴를리츠 조약 (der Görlitzer Vertrag) 을 맺고 오더·나이세·경계선을 하나의 평화경계선 (Friedensgrenze) 으로 선언했으며, 이것을 전 독일인의 이름으로 했고 따라서 서부독일 시민 (die Westdeutsche Bevölkerung) 의 이름으로도 서명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부독일 시민은 서부독일이 처해있는 특수상황속에서 그들의 평화에 대한 준비대세 (Friedensbereitschaft) 를 자유로이 그리고 조작됨이 없이 (Unmanipuliert) 표현해 낼 아무런 가능성도 지금까지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민당·기사당이 서부독일에서 20년동안이나 복수주의정치 (revanchepolitik) 를 행했던 오늘날 폴란드의 서부국경 (die Polnische Westgrenze) 을 아무런 유보조건을 두지 않고 국제법적으로 승인하고, 이 국경선의 최종적 종국성 (Endgültigkeit) 과 불가침성 (Unantastbarkeit) 을 인정하는 일이 1969년이나 70년에라도 서부독일 연방공화국의 한 정권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면 이는 환영하여야 할 일이겠습니다.

《구라파 안보회의》 (Europäische Sicherheitskonferenz)

구라파 안보회의 문제에 서부독일이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 어느 정도의

소극적인 면은 있기는 하나 - 서부독일의 연방공화국 수상 브란트는 긍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와 그의 외무장관은 그동안 서부독일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서부독일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DDR) 간의 관계에 관한협상의 진척도와 - 물론 본 정권의 의도에 비추어서 - 그리고 구라파 안보회의에 서부독일 연방공화국이 참여하는가 하는 문제 양자사이에 일종의 일괄처리(Gunctim)를 모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라파 안보회의에 대하여 그러한 방해책략(Störmanöver)에서 손을 떼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태도는 이 구라파 안보회의에 참여하는데 대하여 어느국가도 어떤 사전조건을 내 걸어서는 ~~합성~~한다는 약속에 저촉되는 일이나 더욱 그러합니다.

브란트씨는 11월 9일자 그의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과 평화를 위하는 방향으로 실제 문제들을 규제하는 일>>입니다. 정말 이러한가 하는 것은 불가침조약에 관한 초안작성을 위한 소련과 서부독일 연방공화국과의 사이에 행하여질 협상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이러한 조약에서 모든 현존하는 국경선들(alle bestehenden Grenzen)이 인정되어진다는 것은 평화를 위하여 좋은 것입니다. 본(Bonn)정부 측근의 발언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본 정권은 서부독일 연방공화국의 국경과 그 국경의 불가침성(Unverletzlichkeit)을 인정해 줄 것을 바라지만, 그러나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DDR)의 국경인정에 관하여는 침묵을 지켜서 입을 열지않을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평화조약>> (Friedensvertrag)

여러가지 협상들과 관련시켜 볼때 제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서 생겨난 현상에 대한 불가피하고도 명확한 인정을 하는 것을 소위 나중에 있게될 평화조약을 통한 규제라는 명목으로(구실로) 피하여보자는 브란트.세엘정무의 전략(Taktik)이 밝혀 들어났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 이제 25년전부터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있는 독일제국(D-deutsches Reich)과 - 하나의 평화조약이 체결될때까지는 1937년의 국경이 계속 적용된다는 비현실적인 요구(der Irrealer Anspruch)를 주장할수 있는 가능성을 본 정권에 주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평화조약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부독일 제국주의의 복수주의정책(die Revanchepolitik des Westdeutschen Imperialismus)을 위장하는(Tarnung)수

실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법상으로 구속력을 갖는,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결정을 언제일지도 모르나 한번은 있어야 평화조약을 방패로 삼아서 - 혹은 불가침조약 (Gewaltverzichtsv-
ertrage) 이나 불가침 선언 (Gewaltverzichtserklärungen) 에다가 미래의 평
화조약에 관하여 어떠한 형식으로 언급하는 것으로서 - (그리고 주위 사정이
유리하게 전개되면) 서부독일의 어느 한 정권에다가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부여
토록 하자는 것이 아마도 그 속셈인 것 같습니다. 혹시 있을 수도 있을 모든 잠
정적인 국경선인정 (Grenzenerkennungen) 과 불가침선언 (Gewaltverzichtserklä-
rungen) 과 그리고 이와 유사한 일들을 평화조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위에 언급된 일련의 조약들이나 선언들을 위한 전제조건들이 제
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논리를 전개하여 말살해버릴 가능성을 주자는데 있습니
다.

여기에서 아주 분명한 것은 서부독일 연방공화국의 정부가 제 2차 세계대전
의 결과로 생겨난 역사적인 변화들을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rechtsgültig) 인정
할 때에야 비로소 서부독일에서는 평화조약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 민족은 분할되다》 (Deutsche Nation gespalten)

만일 본 정권이 현실 (die Realitäten) 을 인정한다면, 구라파 안보회의에서 사
실은 심각한 충돌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브란트씨도 역
시 독일민족 (die deutsche Nation) 은 분할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있다
는 얘기입니다. 구라파 안보회의를 속히 개최하여 진행시키는 것은 구라파 나라
들간의 긴장을 그리고 따라서 독일의 두 국가간의 긴장을 줄이는데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뿐만 아니라 독일 연방공화국도 (Sow-
hi die DDR als auch die BRD) 다같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이 구라파 안보
회의에 참여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두 국가 상호간의 관계 (die Bezi-
ehungen beider Staaten zueinander) 는 그들 자신의 문제입니다. 사민당, 자
민당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정부 선언에서 그리고 외교정책적인 실세에서 독일 민
수주의 공화국 (DDR) 과 독일 연방공화국 (BRD) 간의 관계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
니다.

우리들의 관심의 대상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의 관계과 이들

두개의 주권을 가진 그리고 서로 독립된 독일 국가들(diese beiden Souveränen und voneinander unabhängigen deutschen Staaten) 간의 관계가 어떻게 하여야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여 나갈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 <<관계의 정상화>> (Normalisierung der Beziehungen)

기민당·기사당의 영도하에 구라파에서 사회주의를 몰아낼수 있을 것이라는 허망한 희망하에 실제로 행하여졌던 분열(Spaltung)과 적대행위(Feindseligkeit)를 일삼은 20년간의 정치가 있는, 후인 오늘날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서부독일의 연방공화국간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나갈려면 그 과정은 선의(善意)와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의(Dieser gute Wille)와 그리고 이에 동반되어야할 많은 인내가 독일의 사회주의 통일당(동독 공산당 - Die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과 민족전선(die Nationale Front)에 연합 단결되어 있는 정당들과 조직들(Die in der Nationalen Front zusammengeschlossenen Parteien und Organisationen)과, 그리고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정부(die Regierung der Deutschen Republik)에는 있습니다.

서부독일의 신임수상 브란트씨는 -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 그의 정부선언과 그밖의 다른 공개발언들에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국가적 존재사실(die Tatsache der Staatlichen Existenz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을 양지(諒知)하였습니다. 20년이나 늦어진 점에 관하여 우리는 여기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렵니다. 만족하게 생각할만한 동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결국 행동을 기다려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소위 단독 대표권과 같은 불손한 행위등을 일체 포기하는 것이 서부독일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한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전제조건이라는 것입니다.

√ <<규제된 병존(竝存)>> (Geregeltes Nebeneinander)

브란트씨는 더 나아가서 서부독일 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주의 공화국과의 관계를 조약을 통하여 규제하기 위하여 동등한 권리(Gleichberechtigung)에 바탕을 둔 그리고 어떠한 차별같은 것을 배제하는 원칙하에(Unter Auschluss jeglicher Diskriminierung) 협상할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는 규제된 병존을 통하여(Über ein geregeltes Nebeneinander) 서로 함께 같이 사는 상황(Miteinander)을 이룩

할 시도를 할 필요가 있음을 야기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 그의 정부선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독일 연방공화국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DDR)을 국제법적으로 승인한다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독일에 두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들 두 국가는 서로가 외국(Ausland)은 아닌 것입니다. 이들 두 국가 상호간의 관계는 단지 특수한 종류의 것일 뿐입니다.>>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Schade) 정말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Wirklich sehrn Schade!). - 만약에 이러한 발언이 서부독일에 새로 들어선 연립내각정부의 정부독트린(Regierungsdoktrin)으로 실제로 되어진다면 - 이것은 지금까지 언급되어진 긍정적인 점에 내포되어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시 깨어버리고 말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부독일의 새 외무장관 세첼셔가 서독의 모든 외국에나가 있는 공관계 내린 이미 언급된 공식 지시사항에서 서부독일 연방공화국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간의 소위 <<특수관계>>가 어떠한 것인가에 관하여 오해의 여지가 없이 그리고 명확히 언급해주고 있으니, 정부선언에 나타난 정부선언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는 확실합니다.

√<<특수한 종류의 관계>> (Beziehungen besonderer Art)

공식문서(die amtlichen Dokumente)와 성명들을 조사해 볼 것 같으면 소위 서로가 외국일 수는 없다는 두개의 독일국가(die beiden Deutschen Staaten)들간의 <<특별한 종류의 관계>>라는 이상상(理想像)의 모델로서 후견인(後見人. Vormund)과 피후견인(被後見人. Mündel)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서부독일의 연방공화국 뿐만아니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도 독일국가들이므로 본은 - 그리고 이것이 소위 <<특수한 종류의 관계>>라는 기묘한 표현의 핵심인것은 분명하다 - 독립국권을 가진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일(Angelegenheiten)에 참견하고 특히 대외관계에 참견할 권리를 감히 자기들의 것으로 할려고(anmaßen)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정상적인 관계를 수립하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다른 주권국가들의 내정문제들에 대하여도 간섭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정부 선언이나 본의 외무장관이 내린 직무수행지시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본의 새로 들어선 정부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이 대외적으로 갖는 이러 저러한 관계들과 활동에 대하여 그리고 다른 주권국가들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하여 갖는 관계와 활동에 그들이

친절한 동의 (die freundliche Zustimmung)을 하느냐 않하느냐 하는 것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그 시민들이 본의 희망과 요구 (Forderungen) 와 오만불손한 월권 (Anmaßungen) 에 대하여 취하는 방정한 품행 (Wohlverhalten)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물론 절대로 받아들여 질수없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 이미 말한 바와같이 -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DDR)은 서부 독일의 연방공화국에 의존되어 있지않는 독립주권을 가진 국가 (ein Souveräner Von der Westdeutschen Bundesrepublik unabhängiger Staat) 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단독 대표권》 (Alleinvertretung)

신 연립내각 정부의 정부선언에는 단독 대표권에 관한 얘기는 더 이상 직접으로 언급되지는 않고, 간접적으로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파탄적인 단독 대표권이 이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그 국민의 대외관계에 대한 서부독일 정부의 일종의 오만불손한 후견 (後見 - Vormundschaft) 이라는 것으로 대치시키 버리려는 것이 서부독일 신 정권의 의도라 한다면, 이것은 인간의 전전한 상식과 현실상황 (die Reale Lage) 에 위배되는 일일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평등의 원칙 아래에, 그리고 어떠한 차별대우도 일체 배제하고 두 독일의 주권을 가진 국가간의 관계를 규제하기 위한 협상을 하자는 서부독일의 공식적이고도 바라건대 진정으로 말한것일지도 모를 제안에 반대되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부독일 연방정부의 오만불손한 후견 (Vormundschaftsanmaßung) 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물론 옛날식 단독 대표권이라는 오만불손한 태도 못지않게 차별적이며 (diskriminierend) 또한 그에 못지않게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오만에 찬 후견이라는 것은 단독 대표권이라는 오만불손한 태도의 일종의 변형입니다.

현재 서부독일에서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정치가들이 도대체 이러한 차별적이고 균등치 못한 조건을 내걸고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협상을하고 조약을 체결할수 있다고 진정으로 생각한다고는 본인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국제법상의 주체》 (Völkerrechtssubjekt)

서부독일의 연방공화국은 결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보다 더 높은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서부독일 연방공화국은 자기 자신을 국제법상 주체라고 (als Völkerrechtssubjekt) 생각하며, 따라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도 이에 준하여 규제하에 정합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도 똑같이 하나의 국제상 주체이며 독일

주권 국가이며, 제 3 국에 대한 관계를 이 세 문하여 규제하여 정합니다.

《국제법상의 관계》 (Völkerrechtliche Beziehungen)

반드시 필요하며 그리고 유일하게 단하나 가능한 것이라고는 완전한 동등권에 기초를 두고, 어떠한 차등대우도 일체 배제하는 기초위에서만 그러니까 동·서독간의 국가간의 관계 (zwischenstaatliche Beziehungen) 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권국가들 (Souveraner Staaten) 사이에 일반적으로 있는 그러한 국제법적 관계만이 가능하며 또한 꼭 필요한 관계라 하겠습니까. 국제법상으로 그리고 실제로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외국》 (Ausland) 이라는 단어는 항고같은데 넣어버리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후견이라는 오만불손을 약간 은폐시키는 작용을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서부독일의 연방공화국은 - 국제법상으로 승인되고 상호 아무런 예속관계가 없이 독립된 자주국가로서 - 30년째가 되는 시기에 접어들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우리가 특별한 이유때문에 여기에 자세히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특별한 점령지역인 서부백림 (베를린) 이 있습니다. 두 독일국가들간의 관계와 이들 두 국가간의 체결되는 조약은 사실의 성격으로 보아 국제법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당국은 그들 자신은 완전한 권리를 갖는 국가로서 (als vollberechtigter Staat) 자처하고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DDR) 은 덜 권리를 가진 국가요 (minderberechtigt) 그들의 후견을 받는 국가도 본에 대하여는 특별히 훌륭한 행실을 보일 의무가 있는 국가로서 전락시켜 협상하자는 것입니다.

서부독일 연방공화국과 북대서양 군사동맹 (NATO-Militärpakt) 에 함께 들어가 있는 국가들이 본의 기민당·기사당 정부의 권유에 따라서 행하고, 독일 민주주의공화국과 그 시민의 차별대우 (Diskriminierung) 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결정들 (Beschlüsse) 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면, 이것 역시 평등의 기본원칙과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는 본의 신정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일을 제올리 하지 않으렵니다. - 그런데 본 정부의 정부선언에는 이 원칙에 관하여 유감스럽게도 아무런 언급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 즉 다시 말해서 20여년에 걸친 기민당·기사당의 집권의 결과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 많은 서부독일의 법률과 규정과 그리고 기타 다른 관청의 규정들에는 독일민주주의 공화국

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관계를 망쳐버리는 소위 서부독일 연방공화국의 단독 대표권이라는 오만불손이 여전히 법률의 효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해 두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렵니다.

《1937년의 국경》 (Grenzen von 1937)

예를 들어 서부독일의 법률적 주장은 이에 따라 지금도 《1937년 12월 31일의 국경에 따르는 독일》이라는 허구적 생각 (Fiktion) 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독일에 있어서의 공식 지도 (地圖) 지침 (Kartenrichtlinien) 과 기호등의 명칭 표시 지침 (Bezeichnungsrichtlinien) 에 따라서 지금도 변함없이 1937년 12월 31일 현재에 따르는 가구 (假構) 적 (fiktiv) 인 독일제국 국경이 표시되어 집니다. 여러가지 상이한 법률과 규정을 통하여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국민 (Staatsbürger der DDR) 이 서부독일 연방공화국 국민들 (Staatsbürger der Westdeutschen Bundesrepublik) 에 대하여 갖는 관계가 선언되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서부독일 연방공화국의 형벌권 (Strafhoheit) 을 다른 국가들의 국민에게 특히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국민들에게도 확대 적용시키자는 많은 법률제정 상의 시도들이 있습니다. 서부독일 연방공화국이 오늘날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리고 위법적으로 《내국》 (内國 = Inland) 과 외국에 있는 옛 독일제국과 옛 프레이센주의 재산 (Vermögen) 을 서부독일 연방공화국의 재산 (Eigentum)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예 도외시하더라도 - 이것은 단지 몇가지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률적 공격》 (Juristische Aggression)

두 독일 국가간의 관계를 경련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고 (Entkrampfung)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이 법률적 공격행위인 소위 단독 대표권이라는 오만불손의 법률제정상 혹은 그밖의 다른 관청에서 발하는 규정등의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되는 불가결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본인은 아무런 봉사도 가미함이 없이 말해두는 바이지만 - 이 일을 해마감에 있어서 서부독일 연방공화국 정부에 선린 (善隣) 의 법률상의 공조 (共助) (Gutnachbarliche Rechtshilfe) 를 할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습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현황》 (Status der DDR)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은 서부독일 연방공화국과 그 정부와 법질서등에 대하여 결코 내국 (内國 = Inland) 이 아니며 또한 내국일 수도 없다는 사실을 본인은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해 두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은 가령 바이에른주나 혹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 같은 서부독일 연방공화국의 <<주>> (Land) 가 결코 아니며, 서부독일 연방공화국과 완전히 동등권을 갖고, 독립적이고, 주권을 가지고 있고, 국제법적으로 승인된 국가이기 때문이며, 그 국민에게는 고유하고도 단독으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헌법과 법질서만이 그 효력을 발생하는 주권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핵무기 공유권 반대>> (Kein Mitbefugungsrecht für Kernwaffen)

두 독일 국가의 민족들 (Völker) 은 두 나라중 어느 한 나라도 핵무기 공동소유권을 갖지 않으며, 독일의 두 나라에서는 B-무기와 C-무기가 생산되지도 않으며, 저장되지지도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두 독일 국가의 민족들은 국제법의 기초에 입각하여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이들 두 민족은 두 독일 국가간의 평화를 보장하는 협상을 방해하는 파리조약들 (Pariser Verträge) 을 폐기시키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독일 국가의 정부들 (Regierungen) 은 예를 들어 어떠한 전쟁의 사후 (Kriegsbetze) 나 민족사후 (Rassenbetze) 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의무를 질 수 있을 것이며, 이제 절대로 다시는 독일영토로 부디 전쟁이 시작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밖의 다른 조치들도 취할 의무를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법적 관계 혹은 국제법적 관계>> (Staatsrechtliche Oder Völkerrechtliche Beziehungen)

서부독일 연방공화국의 시민들중에는 두 독일 국가들간의 관계는 반드시 국제법적 관계일 필요는 없고, 국가법적 관계 (Staatsrechtliche Beziehungen) 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법적 관계라는 것은 하나의 동일한 국가 (Staat) 나 혹은 연방국가 (Bundesstaat) 내에서만 존재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국제법적 성격을 가져야 하는 서로가 완전히 독립되고 주권을 가지고 있고,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독일 국가들이 이제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법적 관계나 아니면 국제법적 관계나 하는 문제는 본인이 1969년 5월에 개최되었던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 (SED = 동독 공산당) 의 제 10차 중앙위원회에서

그밖에도 벌써 원칙적으로 그리고 상세히 피력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본인은 이 본인의 견해피력을 참고하도록 말해두고 여기에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 더 상세히 언급하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자결(自決)》(Selbstbestimmung)

서부독일의 정부선언에서 여러차례 언급되는 자결의 문제로 말할것 같으면, 우리는 사민당, 자민당 연립내각정부에 서부독일 노동단체들과 그밖의 민주주의적인 조직체들의 결의와 요구의 취지에 따라서 이제 드디어 한번 서부독일 국민들의 자결문제에 마음을 쓰고, 문제를 허공으로 맴도는 일을 그만두라고 권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회해야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으니, 외교정책과 군비정책(Rüstungspolitik) 부문이 그러하며 사회정책과 국내정책과 경제정책 부문이 그러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문제는 평화를 지향하는 정책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전쟁을 추구하는 정책을 지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서부독일 연방공화국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의사와 의지가 강제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인데, 본인은 이점을 여기에서 다시 반복하여 언급하지 않으렵니다. 아무튼 서부독일의 민족이 자결문제에서 아직까지 보잘것없는 자결상태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하여,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국민은 자기들의 자결(권)을 실현시키고, 스스로가 자기들의 운명의 주인공으로 지위를 향상시켰습니다. 자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독일민주주의 공화국의 민족(das Volk)은 어느 곳에서나, 어느 직장에서나, 어떤 집단에서나 그리고 심지어는 가정에서까지 행하여지는 철저하고도 민주주의적인 토론에 바탕을 두어 그리고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민족의 결정(Volksentscheid)으로서 취소할수 없도록 사회주의적인 독일민주주의 공화국과 사회주의적인 사회질서와 사회주의적인 국가질서 및 사회주의적인 헌법을 택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사회민주당 영도하의 서부독일의 신정부는 이점을 인식해야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서부독일의 새정부는 스스로 잘못된 결정을 조직화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을 하게될 것입니다.

《「독일」이라는 개념》(Der Begriff «Deutschland»)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언급되어진 《독일》이라는 개념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는 것도 어쩌면 유용한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을 결과해낸 역사적 연관성과 사건들이 그러한 것처럼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마치 통일적인 국가적 조직체로서 (als einheitliche staatlliche Organisation) 독일이 아직도 존재하고라도 있는 것처럼 하나의 <<독일>>이라는 말이 때로 쓰이고 있습니다. 서부독일에서는 서부독일 연방공화국만을 말하는 때에는 공식적으로 <<독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독일>>이라는 말은 - 역사적으로 볼때에 - 상당히 변하기 쉬운 정치적 지리적 개념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독일민족의 신성로마제국이나 나폴레옹 전쟁 당시의 독일지도에까지 소급해 올라갈 생각은 없습니다. 1914년이후 부터만 보더라도 독일은 여러차례 그의 외형적 모습을 상당히 변화시켰습니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1871년이래로 독일국(제국) (Deutsches Reich)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치스적인 독일제국주의에 의하여 나중에 이 독일제국은 하나의 기대 독일제국 <<(Großdeutsches Reich)으로 확장되어 졌습니다. 이 독일제국 (Dieses Deutsches Reich)은 제2차 세계대전의 포화속에서 히틀러 군대와 함께 망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국들은 여러개의 점령지역 (Besatzungszone)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미제국주의자들과 서부독일의 반동세력들이 1949년에 독일민족 (die deutsche Nation)과 그리고 점령지역들 (Besatzungszonen) 간에 한때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던 - 혹은 포오츠담 협정에 의거하여 원래 존속해 있기로 되어있던 - 나머지 결속부분들을 잘라 잘라 찢어놓고, 그들의 지역에다가는 소위 <<독일연방공화국>> (Bundesrepublik Deutschland)이라는 하나의 서부독일의 제국주의 분할국가 (Separatstaat)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독일연방공화국은 적어도 서부의 점령지역내에서 만이라도 독점자본과 국가독점 정치적 자본주의와 그리고 군국주의의 세력을 복구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와 사회주의적인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가할 타격력 (Stoßkraft) 갖 추기 위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서부독일국가 (der Westdeutsche Staat)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해서 투쟁을 벌임에 이리 저리한 방법들을 적용했던 것입니다.

<<두개의 독일국가>> (Zwei Deutsche Staaten)

지금으로부터 20년전부터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이 수권을 가

지고, 서로 독립되고 국제법적으로 승인된 국가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 국가의 상호관계는 그들이 지닌 본질적인 차이때문에 그리고 그 사회질서의 대립성(Gegensätzlichkeit) 때문에 결코 <<내독관계>>(innerdeutsche Beziehungen) 같은 것으로는 볼수도 없으며, 그렇게 부를수도 없는 것입니다. 본(당국)은 이 내독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이렇게 하므로써 그들의 단독 대표권이라는 오만(Alleinvertretungsanmaßung)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이 그들에게 굴복, 복종해야 한다는 그들의 요구(Anspruch auf Unterwerfung der DDR)를 과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발전이 이와 같이 상이하게 되어 나가 버린 이상 최초의 독일 평화국가(Friedenestaat)인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그리고 군사세력과 독점 자본주의적인 세력에 의하여 지배되는 서부독일의 연방공화국에다가 어떤 하나의 인위적인 공동지붕(ein künstliches gemeinsames Dach)을 - 가령 독일민족의 신성로마제국 같은 취지로 - 만들려고 하는 시도일 한다면, 이는 또한 하나의 환상(Illusion)이라고 하겠습니까.

<<독일문제의 해결>> (Lösung der Deutschlandfrage)

그러므로 오늘날 독일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은 구라파의 평화정책과 안보정책의 긴급하고도 절실한 과제라는 취지에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DDR)과 독일 연방 공화국(BRD) 간에 완전한 동등권과 상호 국제법상의 승인을 하는 기초위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적이고도 규제된 공존관계의 수립(die Herstellung eines geregelten friedlichen Nebeneinanderlebens)만을 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독일문제 해결>>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독일 국가의 민족들이(Völker beider deutscher Staaten)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며, 많은 혈연상의 관계들(Viele Verwandtschaftliche Beziehungen)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서부독일 연방공화국이 미국과 북대서양 동맹국(NATO)의 세계전략에 붙들려 매여져 있고, 그들의 정치적 행적이 위험한, 복수주의적 정책에 기본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조기도 변경시킬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의 선린의 관계가 발전되어 나가야 하는 문제는 서부독일에 평화세력(Friedenskräfte) 성장하는가 여하에 주로 따르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서부독일에 핵무장이 되어있고 복수주의 정책이 행하여지고 있다는 사실에 직면하여, 신나치주의적 정당이 정정당당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직면하고, 미국의 잔인한 베트남 침략이 현재의 서부독일 정부에 의하여 지시되어
지고 있다는 사실 아랍민족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략이 지시되어지고 있다는 사실등
에 직면하여 볼 때 우선 행하여져야 할 것은 독일의 두 국가사이에 선린의 관계
(Gutnachbarliche Beziehungen)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전제조건들이 이루어
지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까지 기술해낸바 있는 서부독일 연방공화국이 담당하고 있
는 숙명적인 역할을 없애버리고, 서부독일내에 현존하고 있는 민주주의적인 세력에
밀받침을 받아가지고 군국주의와 복수주의의 영향을 격퇴시켜 버리는 일을 하는 것
이 사회민주당의 영도하에 있는 현 서부독일 연방정부의 과제라야 마땅할 것입니
다. 브란트·세렌정부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조취를 취할 것 같으면, 아무튼 어
떠한 것이든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의하여 환영될 것이고 지지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은밀한 방법으로 사회주의와 제국주의를 하나의 공통 <<지붕>> 밑에
통합하는 일이 가능하리라고 믿는다면 이것은 하나의 자기기만이 되고 것입니다.

두 독일국가간의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아무도 오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다시 한번 여기에 종합적으로 다음과 같이 확실히
해두고자 합니다.

√ <<통일은 불가능하다>> (Vereinigung unmöglich)

사회주의적인 독일국가를 아직도 독점자본의 지배하에 있는 서부독일 국가와 통
일시킨다 (Vereinigung)는 것은 불가능하다 (unmöglich).

가능하고 (Möglich) 꼭 필요한 것은 (Notwendig) 그리고 우리가 이미 여러차
에 제안했던 것으로 수권을 가진 국가들사이에 현재 일반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동등권 (Gleichberechtigung) 과 그리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Nichtdiskri-
minierung)는 기초위에 세워지는 정상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평화적인 공존 (das friedliche Nebeneinanderleben) 과 점진적인 선린 (善隣)
의 관계형성을 갖는 국제법적 조약들 (Verbindliche, völkerrechtliche Verträge)
을 통하여 보장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의 정상화>> (Normalisierung der Beziehungen)

두 독일국가간의 관계의 정상화라는 것은 국성선의 승인, 독일민주주의 공화국을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수권을 가진 독일국가로서 (als Gleichberechtigter, sou-

veraner deutscher Staat) 승인하는 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그 국민에 반대하고 차별대우를 하는 서부독일에서 행하여진 모든 법률과 규정들을 제거하는 일, 원자무기를 두 독일이 다같이 포기하는 일, 즉 원자무기 (Atomwaffen) 를 함께 소유하거나 B-무기와 E-무기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사용하는 등의 일을 포기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의 국가적 관계 (die Staatlichen Beziehungen) 를 정상화하는 데에는 본의 정국가 제 3국들과 국제기구들에 있어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하는 정책을 포기하고, 20여년간의 기민당, 기사당 통치하의 냉전의 짐으로부터 풀려서는 것이 필요한 조건이 됩니다.

《할슈타인 원칙》 (Hallstein-Doktrin)

한편으로는 소위 할슈타인 독트린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공식 견해 (unverbindliche Äußerungen) 가 브란트씨와 그리고 그의 외무장관 세엘에 의하여 생하여 졌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해외 공관들을 통하여 그리고 서부독일 정치가들의 공식성명에서 브란트, 세엘정부는 사실은 자본주의 국가들과 그리고 특히 후진국가들에 대하여도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DDR) 을 승인하지 말도록 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같은 압력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보복조치라는 막강한 강압적 위협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매일같이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관계의 수립과 상업교역 교환에 까지도 반대하고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제 3국간에 행하는 개별 대외무역사업의 체결에 대하여서 까지도 반대하며, 브란트, 세엘 정부의 지시를 받아 서부독일의 해외공관들에서는 다대한 방해공작이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이 자본주의 국가들과 무역을 하는데 반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볼것 같으면, 브란트, 세엘정부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이 이러한 무역을 하는 것은 《친절히 허락하는 것》 (freundliche Genehmigung) 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이 서부독일 제국주의자들이 내 세우는 조건에 복종하는가 (Unterwerfung) 의 여부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본에 새로 들어선 정부는 또한 이러한 벌레먹은 이빨 (dieser faule Zahn), 즉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며 안된 것입니다.

몇개의 공학기술 부문에 있어서의 두 국가간의 관계로 말할 것 같으면 몇가지 협상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협상용의》 (Verhandlungsbereitschaft)

만약 서부독일 연방공화국의 정부가 동등권과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간의 관계를 규제하기 위하여 두 독일 국가간의 협상을 원한다면, 위에 방금 말한 것 같은 일련의 협상들이 시작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서부독일 연방공화국간의 국제법적 성격을 띤 조약 (ein völkerrechtliche Vertrag) 은 무제한한 상호간의 국가로서의 승인 (die uningeschränkte gegenseitige staatliche Anerkennung) 과 국경의 인정, 완전히 동등권과 그리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기초위에서 행하여 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하간 불가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는 우리의 국가간의 관계를 규제한다는 분명 간단치않은 문제들을 다룸에 있어서 문제해결의 진보를 보기 위하여 서부독일의 현 연방정부에 대하여 그들의 입장을 자세히 검토하고 현실에 적용하도록 부탁하고자 합니다.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 (동독 공산당) 의 태도》 (Die Haltung der SED)

- 새로운 서부독일 정부의 계획이나 몇가지 정부활동면에 나타나있는 많은 모순되는 점들에 직면하여 - 현재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 (die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동독 공산당) 은 서부독일의 사민당의 현 정책과 새로운 서부독일의 연립내각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태도를 취하여야 할읍니까?

물론 우리는 앞으로 무엇보다도 사민당·자민당 연립내각정부의 행동을 특별히 조심성있게 조사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행동 (Taten) 이지 말 (Worte) 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부독일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황과 현재의 발전조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서부독일에서 의회민주주의를 굳히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구라파 평화의 보장과 민주주의의 진보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할수 있는 것은 모두 장려해 나가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일을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서부독일에서는 현재 반 (反) 군국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그리고 신나치주의 등장에 반대하는 성격을 띤 의회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의사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은 의회민주주의는 준비자본 세력과 3개의 자본주의적 대은행 세력에 대한 결정적인 투쟁 (entscheidender Kampf) 에서만이 관철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투쟁은 노동단체들의

하여 제창된 민주주의적이고 사회적인 제 개혁들과 준비족소 요구들의 실천을 위한 결정적인 개입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지원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에 이미 언급되어진 것과 같은 취지의 민주주의적 진보를 위한 이같은 투쟁에서 얻어지는 성과는 어느것이나 규제된 병존과 선린의 이웃관계를 통하여 두 독일국가들의 이해 촉진과정을 장려하는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극단적인 보수주의 세력과 복수주의 정치가들의 극수주의적 공격을 받아가면서, 기민당·기사당 정부들에 의하여 지난 20년간의 통치기간동안에 두 독일국가간의 이해를 방해하고, 이 방해공작을 뿌리깊게 하는데 이용한 갖가지 은폐 편속(隱蔽編索 - Jene spanische Reiter)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본의 새 연립내각 정부에게는 하나의 유쾌하지 못한 일이라 하는 점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부독일의 연립내각 정부로부터 이 일을 받아서 대신 도맡을 수도 없고 면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평화공존(friedliche Koexistenz)의 테두리안에서 우리가 공동으로 좋은 병존의 관계(ein gutes Nebeneinander)를 이룩해 내려 한다면, 냉전(der Kalte Krieg)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본에 들어선 새 연립내각 정부는 이 일을 해낸다고 하여 독일민주주의 공화국의 정부로부터 결코 어떠한 종류의 특별사례(Sonderhonorar)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장애물들은 결국 이들을 부설한 그 사람들에 의하여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수주의 정책을 추구하고 단독대표권이라는 불손한 월권정책이나 혹은 원자무기를 갖춘 군비확장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이점은 사실 분명한 것입니다.

《독일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들의 결여》 (Fehlende Voraussetzungen für Einheit Deutschlands)

브란트씨는 독일 통일의 실현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충분히 현실적인 입장을 그의 정부선언에서 취했습니다. 그도 역시 독점자본의 지배하에 있는 일개 연방공화국에는 군국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정신에 입각하여 교육받고 지도되어지고 있는 연방군을 가지고 있고, 북대서양 동맹기구(NATO)와 미국의 세계전략에 얽매어있는 상황하에서 독일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들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헌법》 (Verfassung der DDR)

그렇지만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헌법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국민 (Volk) 과 서부독일 연방공화국의 국민 (Volk) 에게 돌출구 (Ausweg) 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독일의 두 국가가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상관계를 수립하여 이를 키워나가고 협동을 해나가야 한다는 점은 우리 헌법에 확실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그 국민 (Bürger) 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제국주의에 의하여 독일 민족 (die Deutsche Nation) 에게 강요되었던 독일의 분할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기본위에 두 독일 국가들을 점진적으로 접근시켜 (Die schrittweise Annäherung) 통일에까지 이르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에 입각한 통일》 (Vereinigung auf der Grundlage der Demokratie und des Sozialismus)

이 점은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 (SED = 동독 공산당) 의 제 7 차 당대회에서 이미 설정되었었습니다.

친애하는 남녀 동무여러분!

이 점은 우리의 분명한 국가적 관심사들이며 계급적 관심사 (Klassenperspektive) 이며 또한 앞으로 그렇게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이의 실현은 우리들이 행하는 하루 하루의 일의 성공과 우리나라의 발전된 체제를 형성해 나감에 있어서, 인간을 위하여 행하는 과학, 기술혁명의 완수를 해나감에 있어서, 우리의 사회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를 확장해 나가고 계속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사회주의적 인간의 집단 (Unsere Sozialistische Menschengemeinschaft) 을 확장해 나가고 계속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서 행하는 일의 성공여하에 크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성취할것입니다.

1969년 12월 14일자의 《새 독일》 (Neues Deutschland) 에
서 (동부) 베를린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국가위원회 의장 (Staatsratsvorsitzender) 울브리히트 (Ulbricht), 독일 연방 공화국 하이네만 (Heinemann)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와 조약의 초안 (1969.12.17)

본의 독일 연방공화국 대통령 구스타브 하이네만 박사에게
(Bundespräsiden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Herrn Dr. Gustav Heinemann, Bonn)

존경하는 연방공화국 대통령께!
(Sehr geehrter Herr Bundespräsident!)

《평화공존》 (Friedliche Koexistenz)

구라파에 있어서의 평화의 보장에 기여하고,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에 평화적 공존의 원칙에 입각하여 동등한 권리를 갖는 관계의 정상화를 가능케 하려는 의지 (Wille) 가 주 능기가 되어 본인은 귀하에게 편지 냅니다.

독일에 두 국가가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ein friedliches Nebeneinanderleben) 두 국가간에 선린의 관계를 이룩해 나가려면 현행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규범에 입각한 양국간의 관계의 형성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이 자신들의 국민과 구라파의 민족들에게 남다른 특별한 의무를 지고 있는 구라파의 심장부에 긴장의 완화를 가져오게 하는데 반드시 유리할 것입니다.

《조약의 초안》 (Vertragsentwurf)

그러므로 본인은 귀하에게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국가위원회 (Staatsrat)에 의하여 승인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에 동등한 권리에 입각한 관계의 수립을 위한 조약》 (Vertrag über die Aufnahme gleichberechtigter Beziehungen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의 초안을 보내는 바입니다.

본인은 협상을 진행시키고 조약의 서명을 위하여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내각의 의장 (즉 수상) 빌리슈토프 (Willi Stoph) 씨와 외무장관 오토 뵈처 (Otte

Winzer) 씨를 전권자로 임명했습니다.

《1970년 1월에 협상을》 (Verhandlungen in Januar 1970)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의 평화적 공존이 갖는 의의를 감안하여 본인은 될수있는 대로 1970년 1월에 협상을 시작할것을 제안합니다.

독일 연방공화국 대통령이신 귀하께서 사리에 맞는 협상을 통하여 두 독일국가들간에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국제법상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본인과 같이 힘써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정중한 경의를 표하면서

(Mit vorzüglicher Hochachtung)

발터 울브리히트 (서명)

1969년 12월 17일 베르린에서

1969년 12월 23일에 본에서 발간된 《독일 연방공화국의 언론 공보처 공보》

(Bulletin des Presse- und Informationsamtes der Bundesregierung)

- 첨 가 -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에 동등권에 입각한 관계의 수립을 위한 조약의 초안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국가위원회 (Staatsrat) 의장과 독일 연방공화국 대통령은 구라파에 있어서의 긴장의 완화와 평화의 보호를 위하여 효과적인 기여를 하고, 두 독일 국가간의 긴장상태를 제거하고, 두 독일 국가간에 규제된 공존 (ein geregelttes Nebeneinander) 관계를 이룩하고,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의 선린의 관계를 수립하고, 구라파 안보체제의 수립을 장려하려는 노력을 주 동기로하여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에 동등한 권리를 갖는 관계의 수립을 위한 조약을 체결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이 조약의 전권자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국가위원회 의장은 내각수반 (Vorsitzender des Ministerrats) 빌리 슈토프 (Willi Stoph) 씨와 외무장관 오토 빈처 (Otto Winzer) 씨를 임명하고, 독일 연방공화국 대통령은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 빌리 브란트씨와 연방공화국 외무장관 볼터 셰엘 (Walter Scheel) 씨를 임명하고, 이들은 적절한 형식을 갖춘 전권사항을 교환한 후 다음의 항목에 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제 1 조

《동등권에 입각한 정상 관계》 (Normal Gleichberechtigte Beziehungen)

조약을 체결하는 쌍방 (die Hohen vertragschließenden Seiten) 은 국제법상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제원칙과 규범에 바탕을 두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에 어떠한 차별대우도 하지 않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 정상관계의 수립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들의 상호관계는 특히 주권의 동등성과 영토상의 불가침성 (Territoriale Integrität) 과 국경의 불가침성과 내정에 대한 불간섭 및 상호이익의 제 원칙에 입각되는 관계입니다.

제 2 조

《국경의 인정》 (Anerkennung der Grenzen)

계약을 체결하는 쌍방은 상호간에 현존하고 있는 국경과 그의 불가침성의 조건을 갖춘 현재의 영토적 존립 (存立) (ihr Gegenwartiger territorialer Bestand) 을 인정한다. 계약의 쌍방은 제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서 생겨난 구라파

에 있어서의 경계선들을 인정하며, 특히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 간의 경계선들과 동시에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포올랜드 인민공화국간의 오더강과 나이세강변의 경계선을 인정합니다.

제 3조

《불가침》(Gewaltverzicht)

계약을 체결하는 쌍방은 상호간의 관계에서 폭력(Gewalt)에 의한 위협이나 폭력의 사용을 포기하고 상호간에 모든 분쟁점들을 평화적인 방법과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할 의무를 진다.

쌍방은 본조약의 제 1조에 명시된 내용에 반대되고, 계약당사자를 차별하는 일체의 조치들을 중지시킬 의무를 지며, 본 조약에 반대되는 법률들과 다른 규범조치들은 지체없이 폐지하고 동시에 이에 준하는 법원의 판결을 수정하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제 4조

《핵무기의 포기》(Verzicht auf Kernwaffen)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은 핵무기를 소유하거나 혹은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핵무기를 마음대로 처리하는 일을 포기한다. 쌍방은 군비축소 협상이 권철되도록 힘쓸 의무를 갖는다. 두 독일국가의 영토상에서는 화학무기나 생물학적 무기들은 생산될 수도 없으며, 주문시켜지거나 저장되어질 수도 없다.

제 5조

《외교관계》(Diplomatische Beziehungen)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은 상호 외교관계를 수립한다. 두 국가는 상호간에 그들의 수도인 베를린과 본에 대사관을 설치하므로써 대표된다. 대사관들은 1961년 4월 16일에 제정된 외교관계에 관한 뵘엔나 조약(die Wiener Konvention)에 따른 일체의 면제특권(Immunitäten)과 제반 특권(Privilegien)을 향유한다.

제 6조

부분지역들(Teilgebiete)에 대한 관계는 별도로 조약을 통하여 규정되어진다.

제 7 조

《베를린》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은 서부 베를린 (Westberlin) 의 지위 (Status) 를 독자적인 정치단위로 (als Selbständige Politisch. Einheit) 존중하고, 이 지위를 감안하여 서부 베를린에 대한 그들의 관계를 규제할 의무를

제 8 조

《국제연합 가입》 (Aufnahme in die UN)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은 국제연합기구의 보편성 (Universalität) 원칙에 일치하게 지체없이 정회원으로 국제연합에 가입신청을 제출한다. 두 국가는 다른 나라들이 두 국가가 국제연합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지지하도록 노력한다.

제 9 조

《조약의 기간》 (Vertragsdauer)

본 조약은 10년 기간으로 체결된다. 본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조약비준문서를 교환한 후 1개월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조약은 국제연합 헌장 제 102조에 따라서 국제연합기구의 사무국에 기록되도록 제출된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을 대표하여 독일 연방공화국을 대표하여

1969년 12월 21일자 베를린 (동부) 간행의 《새독일》 (Neues Deutschland) 에서

독일 연방공화국 대통령 하이네만 =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국가위원회 의장 (DDR-Staatsratsvorsitzender) 울브리히트에게 서한
(1969.12.19)

1969년 12월 19일 본에서
독일 연방공화국 대통령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국가위원회 의장 발터 울브리히트 귀하
베를린

존경하는 국가위원회 의장 귀하!

본 서한으로 본인은 1969년 12월 17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우리가 구라파에 있어서의 긴장의 완화를 위하여 커다란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 귀하와 동감입니다. 본인은 역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함께 평화의 보장과 긴장의 완화와 협동할 의무가 상호간에 있다고 느낍니다.

《독일 민족의 통일》 (Einheit der deutschen Nation)

우리의 공동의 관심사는 독일 민족 (die deutsche Nation)의 통일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귀하가 표명한 협상을 개시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을 환영합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은 (귀하의) 제안을 검토함》 (Bundesregierung prüft vorschläge)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 (Grundgesetz, 즉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본인은 귀하의 서한과 서한에 동봉된 첨가물을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에 계속 돌리겠습니다. 귀하가 제기한 제안을 검토하고 사리에 필요한 일의 성격에 알맞게 신속하게 이에 대하여 의견을 말하는 것은 연방정부가 해야하는 일입니다.

정중한 경의를 표하면서 (Mit Vorzügliche Hochachtung)
하이네만 (서명)

1969년 12월 23일에 본에서 간행된

《독일 연방공화국의 언론공보처 공보》 (Bulletin des Presse-und Informationsamtes der Bundesregierung)

연방공화국 장관 프랑케 (Franke),

독일 연방공화국 국회에서 연설

(1970. 1.15)

연방공화국 내각 관계장관 에곤 프랑케 (Egon Franke)는 1970년 1월 15일에 독일 연방공화국 국회에서 행하여진 국정 보고에 대한 발언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다.

국회의장!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아침, 아주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공동관심사에 관하여 본 국회에서 발언했던 본인의 전임자 Herbert Wehner는 독일정책 (Deutschlandpolitik)이 움직여나가지 않으면 안될 어렵고도 험난한 과정에 대하여 다른 기회에 본 국회에의 주의를 환기시킨바 있습니다. 그는 이 기회에 경우에 따라서는 최소한의 성과라도 얻기위하여 손톱으로 긁어서라도 일을 해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영역에서 공동으로 움직여나가야 하는가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두기 위하여, 우리가 또한 환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Wehner씨의 이 연관이 굉장히 많은 상세한 언급을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이 토론회에서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즉 본인은 성과를 얻기위하여,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성과를 위하여 손톱으로 긁어서라도 일을 추진시키는데 필요한 근거를 모색하고 찾아내기 위하여 아무튼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강조하여 두고자 합니다.

본인은 이와같은 노력을 해나감에 있어서 양독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적인 관계 (Menschliche Beziehungen)와 인간적인 문제들 (Menschliche Belange)는 부차적인 것이라고 하는 다른쪽의 (즉 동독측의) 비 인간적 태도에도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감에 갖추어야 할 기본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인간적인 문제들 (die Menschlichen Fragen)이 아주 중요한 랭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어제 국정보고에서 말했고 오늘 아침에는 국회 내각관계 위원회 (Bundestagsausschuss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의장 Gradl 박사가 이에 관하여 연

남이 있었던 연방공화국 수상은 다음 말씀을 동독(DDR)의 당국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기회에 회상시키고자 합니다. <<동독과 우리간에 체결되는 조약은 그 배후에서 인간에게 짐이되는 모든 현실이 조금도 변함없이 그냥 계속 유지되는 알종의 안개벽(Nebelwand)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이 발언을 출발점으로 하여 우리는 적어도 몇개 분야에서 만이라도 동독과 협약에 도달하려는 일에서 진척을 볼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인간적 관계>> (Menschliche Beziehungen)

여기에서 본인 생각으로 우선 그리고 처음으로 언급되어야 할 것은 인간적인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서 무엇이 행하여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나치게 냉정하고(nüchtern) 지나치게 사실적(sachlich)이라고 여겨질 것이라는 점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도대체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능성으로 무엇이 진척되어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그 일체적 기회(가능성)(die Reale Chance)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추구되어야 할 것은 본인의 생각으로는 규제가 직접적으로 독일의 두 부분(bei de Teile Deutschlands)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게 될 테마들에 관하여 동독(DDR)과 협상을 하고 합의(Vereinbarungen)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독일사람들간에 선의의 말에 그치지 않고, 그리고 우리나라(Land)에 있어서의 관계의 정상화과정이 진척되어 나갈때 필요하게 될 인내의 말에만 머물지 말고, 협상을 해나가면서 독일 연방정부와(동독의)내각(Ministerrat)이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두개의 국가가 쌍방이 차면대우를 함이없이 정부차원에서 협약된 공동협력에 도달할수 있는가의 여부를 시험해 보는 일에 임하고 또한 이를 위한 실제적 조치(praktische Schritte)를 취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Vermessen) 일입니까?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상화의 진행과정(der Prozeß der Normalisierung)이 어떻게 달리되어야 하며 또 가능하겠습니까? 동부 베를린이나 베를린시 주변에 있는 가족의 묘를 방문하도록 허락된다면 이것으로 나라의 기초(Grundlagen des Staates)가 흔들려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독일의 두 부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앞으로도 직선히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동독 사람들은 정년퇴직 연령이 되기전에는 독일 연방공화국으로 여행할 수 없다는 사실은 독일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가족과 만나려는 희망이 존재한다면 이것으로 국가의 기틀이 흔들려버릴 것이라는 그 이유가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독일의 두 부분에 나뉘어 살고 있는 약혼자들이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한나라의 기틀(die Grundlagen eines Staates)이 흔들려 버릴수 있다는 것도 또한 똑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언제든지 직접 전화하는 것이(동.서독 사람들간에) 왜 가능할 수가 없는가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건의 차이때문에 그 우열이 나타나는 생명에 꼭 필요한 의약품들을 받는 일이(한쪽 사람들에게는) 가능할 수 없다는 것도 똑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비교적 우피나 내용이 큰 선물이나 우송된다거나 휴가나 만나는 일들이 동.서독에게 행하여질 수없다는 것 역시 똑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실은 아주 꾸밈없고(nüchtern), 소박하고(Schlicht), 단순한(einfach) 테마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간이 하루 하루 살아 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일들이며,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때문에 친구들이 서로 만나는 것이 가능해서는 않 됩니까? 그를 언제라도 만나고 싶을때 그리고 어디에서라도 만나고 싶은 곳에서 그들이 친구지간으로 인간적으로 같이 만나서 이러한 먼저 그들의 개인적인 생활을 자유스럽게 살수 있어서는 않 됩니까?

《청소년 교환》(Jugendaustausch)

어제 연방공화국 수상이 다음 사실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였습니다. 가령 서독으로 부터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와 루마니아로 여행해 들어가는것지, 동독(DDR)에서 이들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며, 그리고 동독에서도 이들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독일의 다른 부분(즉 서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며, 서부 베를린에서 동부 베를린으로 간다거나 즉 이와 반대로 동부 베를린에서 서부 베를린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아예 말할 필요도없이, 아무튼 독일의 한 부분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것보다 같은 독일의 한쪽으로 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불합리성(Absurdität)을 지적하였습니다. 가령 예를들어서 무엇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울란뵈핑기나 세계선수권 대회나 구라파 선수권 대회같은 운동경기에서만 만나야하고, Lei-

Pzig나 München이나 Hamburg 혹은 Rostock같은 데서도 운동이나 기타 다른 회합들에서 만날 수 없어야 합니까? 불란스와 가능한 청·소년 교환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DDR)과 독일 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의 젊은 사람들 사이에도 결국 가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구라파 청·소년(사업)단체(ein Europäisches Jugendwerk)를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동구라파의 청·소년들도 여기에 참여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러나 독일 연방 정부는 이 구라파 청·소년단체가 독일의 다른 지역(즉 동독)에 있는 젊은 이들에게 한번 독일 연방공화국(서독-Bundesrepublik)이나 혹은 서부진영의 외국에 여행할수 있는 기회가 가능하도록 하여주고, -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아직까지 주어지지 않은 것이라도 모든 가능성을 주는 것이라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문제해결의 또 다른 예를 들자면 - 가령 바이어른의 아포스 지대나 혹은 Rügen 섬같은 곳에 큰 청·소년 야영지같은 것을 세운다거나 하는 일을 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길을 통하여, 그리고 이 젊은이들을 통하여 가능한 유대(V-erbindungen)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몇개의 제안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제안을 수록하는 카달로그는 아직도 많은 예를 통하여 물론 그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소한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 일이 아주 사소한 일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서 사소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중에는 아직도 수백만명에게 여전히 이러한 사소한 일이 향유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값있는 일일 것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기에 조약의 초안이 전달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 조약의 초안이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있는 것입니까? 만일 조약이라는 것이 사실 인간의 문제해결이 그 핵심을 이루는,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인간성(Menschlichkeit)이라는 단어가 그 뜻을 가진다고 할때, 그 의미는 단지 서로 서로가 인간적으로 오가고 교류한다(Menschlich miteinander umzugehen)는 것만을 뜻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를 위하여 쉬임없이 노력하여야 하며, 이는 인간성을 위하여 그리고 인간성에 대한 우리의 의무때문이며, 우리는 언제라도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이를 위하여

밝히는 바입니다.

이 국회에는 국정보고를 위한 자료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이들 자료는 냉철하고 사실적이라는 사회와 여론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동일한 뜻으로 본인은 둘째 영역을 다루어 나가려고 하고 있으며, 어느정도의 선의(善意)를 가지고 임한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진보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선의만이 아니고, 쌍방에 다같이 이로운(Vorteile)이 오도록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내독간의 상업교역》 (Innerdeutscher Handel)

독일 연방공화국은 문제의 해결이 독일에 있는 두 국가의 이익에 합당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쌍방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상대방의 이해에 극복할 수 없도록 대치되는 문제에 관하여 자기와 협상하자고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은, 이성을 지닌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여러해 동안 쌍방이 다같이 충분한 경험을 쌓고 수집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우리는 내독간의 상업교역 발전에 대한 협상에서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근거점이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말은 이 테마가 이상적으로 해결되고 규제되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쌍방에 구속력을 갖는 해결(Lösungen)들이 있고, 규제(Regungen)된 일들이 있습니다. 내독간의 상업교역 부문에 우리가 아주 명확히 그리고 분명하게 진보(Fortschritte)라고 부를 수 있는 발전이 행하여졌다는 것은 역시 주목할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련의 진보들은 어떻게하여 이렇게 냉철한 테마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접근하여 문제의 해결에 뜻있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진보들이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본인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을 감안하면서 그 해결책을 모색할 준비가 우리로서 되어있는 일련의 분야들이 있습니다. 연방공화국 수상이 어제 국정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독일 영토상에 있는 두 국가는 이웃(Nachbarn)일 뿐만아니라, 계속하여 많은 공통성(Gemeinsamkeiten)을 지닌 한 민족(Nation)의 부분들(Teile)인 것입니다. 이들 두 국가가 실제 문제들(Praktische Fragen)을 풀 수 있는 대로 이치적

으로 서로 규제한다는 일보가 더 우리에게 가까운 문제들이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들은 이일을 함께 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 및 교통정책 부문》(Wirtschafts-und Verkehrspolitischer Bereich)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경제영역과 교통정책부문에서 앞으로 진척해 나가기를 시도한다면, 우리는 내륙간의 상업교역을 가령 공적인 보증 (Öffentliche Bürgschaften) 과 신용대부를 용이하게 해주므로써 확장시키고 (Ausweitung) 쉽게 가능토록 (Erleichterung) 하는 일을 생각할 수 있으며, 동·서독의 에너지시장간의 교류나 에너지 통합체제 (Energieverbundsystem)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회에 본인은 다시 한번 내륙간의 상업교역과 이 교역의 발전에 언급을 하고, 그리고 1969년 하해의 내륙간의 교역이 27%가 증가되어 37억 어음청산단위 (Verrechnungseinheiten) 에 달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증가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체신 및 교통관계 회담 (Post-und Verkehrsgesprache) 을 진행시키고 있으며, 여기에서 우리는 동독 (DDR) 에서 협상을 행했을 뿐만아니라 여기 본 으로 회답이 있었으며, 회답 전권자들이 동·서독을 상호 방문하므로써 가능성이 측정되어지고 있으며, 이렇게 하므로써 조약을 통한 협정에 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본인은 또한 상기시키고 합니다. 이일이 굉장히 힘든 모험 (ein Sehr mühsames Unterfangen) 이라는 사실은 모든 당사자들과 모든 정통한 사람들에게는 알고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란 것은 없으며, 언제나 쉬임없이 그리고 집요하게 이에 대한 작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교통, 체신 및 장거리 송신 연결》(Verkehrs-, Post- und Fernmeldeverbindungen)

그러니까 새로운 교통연결 (Verkehrsverbindungen) 을 공동으로 확장 건설하고 (Ausbau) 만들어 내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교량, 자동차도로, 수로와 철도같은 것이 여기에 속하겠으며, 체신 및 전화연락등을 개선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리고 바로 전 베를린에 통하는 전화연락망 (Telefonverkehr) 을 건설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일들은 사실 아주 간단하고, 아주 평범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일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사, 숙녀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동독(DDR)은 구라파에 있는 유일한 나라로서 범구라파적 도로(transeuropäische Straßen), 고속도로계획(Autobahnplanung), 교량 프로젝트, 내륙간의 선박교통에 있어서의 통과권(Transitrecht) 등의 문제가 아직 처리되지 않고있으며, 여기에 언급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은 하루 하루의 생활에 커다란 의의를 지니는 문제들이며, 평화적이고 안전된 내일(장래)를 위하여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 문제들입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기여는 상당한 수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 일련의 부문에서 우리는 어떤 결실을 맺도록 모든 노력을 안배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부문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들이 행하여질 수있을 것입니다.

《여행 가능성의 개척》(Verbesserung der Reiseumöglichkeiten)

일상생활을 쉽고 편리하게 하는 문제로 말할 것 같으면 우선 보다 나은 여행의 가능성을 마련하는 일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정상적인 여행교통의 발전(Entwicklung eines normalen Reiseverkehrs)을 목표로 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그러나 우선 제일 시급한 것이 친척들간의 왕래라 하겠습니까. 서부 베를린 사람들이 서독 시민들과 똑같이 동부 베를린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마련하는 일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진보를 이룩하는 것이 될 것이며, 이의 실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할된 베를린에서만 문제들이 있는 것이 아니며, 휴전선(Demarkationslinie) 양쪽에 살고있는 직접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하여 해결하여야할 문제들이 독일의 두 부분 사이에는(zwischen beiden Teilen Deutschlands) 분할선(Trennungslinie)을 따라서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제 및 공학기술상의 목적 공동체》(Wirtschaftliche und Technische Zweckgemeinschaft)

이 분할선을 따라서 흩어져 있는 대소 부락들은 예를들어 그들의 이웃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호 대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쌍방의 복지를 위하여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위하여 사실 경제 및 기술 협동체(Wirtschaftliche und Technische Zweckgemeinschaft) 같은 것까지도 세우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마땅히 그래야만 할 것이며, 이렇게 하는 것은 동. 서독에게 다같이 이로울 것입니다.

<< 지불계정의 간편화 >> (Erleichterung des Zahlungsverkehrs)

실제적 가능성의 범주에 속하는 또 다른 문제중의 하나가 지불계정의 간편화일 것이며, 우리는 내독간의 (이음) 청산 (Innerdeutsche Verrechnung) 과 쌍방의 여행비지불금 (Reisezahlungsmittel) 에치를 통하여 이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에 사는 사람들이 보다 쉬운 조건과 가능성을 가지고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되는 이유의 하나가 역시 이와같은 (어음) 청산계정의 난점에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하고 앞으로도 우리의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지난날에도 그러했던 중요한 테마에 대한 논의가 행하여질 때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역시 실제의 과제들입니다. 이들 실제문제들이 동. 서독관계의 실제 (Substanz) 를 이루는 문제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전력을 다하여 진지하고 중요성을 인정해가며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시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 분산가족의 모임 >> (Familienzusammenführung)

그뿐만 아니라 본인 의약품과 선물교환등의 문제와 분산가족의 해후 및 재결합 (Familienzusammenführung) 등의 문제를 생각하며, 아이들의 반환 (Kinderrückführung) 이라는 비극적이고도 어려운 문제 (das tragische und Schwierige Gebiet) 의 해결책을 모색하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문에 아직까지도 미해결로 남아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검토해보고 높이 평가해 두고자 하는 사건들을 통하여 가족들이 서로 분산되고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알지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영역에 관계되는 한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문에 아주 특별한 큰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서도 직접 영향을 받고있는 사람들에게 여러가지로 일을 쉽게 해주는 방향으로 최대한의 주의와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여 문제의 해결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학술. 과학. 기술의 교환 >> (Wissenschaftlich-technischer Austausch)

독일 연방공화국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학술, 과학, 기술상의 교류는 거의 완전히 제대로 행하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극히 적은 문헌 (wenige

Schriften)을 교환하는 일과 학자들(Wissenschaftler)이 산발적으로 상호간에 오가는 방문등을 통하여 약간의 교류는 행하여지고는 있습니다. 우리는 동.서독간에 관료적인 입장을 떠나서(entbürokratisiert) 대학간에 연구기관들(Forschungsinstituten)간에 그리고 학술단체(학회등)(Wissenschaftliche Gesellschaften)에 교류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서적 및 신문의 교환》(Literatur-und Presseaustausch)

우리는 한결을 더 나아가서 학술, 과학 기술상에 어느정도 시대에 알맞는 형태의 협동을 해나가기를 바라며, 서적, 신문, 잡지등을 아무런 제한조건없이 구입해 보도록 하는 조치를 점진적으로 취할 수 있게되기를 바랍니다.

이들 모든 문제(Fragen)와 제안(Vorschlägen)과 고려(Überlegungen)를 함에 있어서 물론 우리는 동독(DDR)의 경우 이 일련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필요한 성숙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결코 간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이 일련의 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계속하여 노력을 하지않아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와 같은 노력을 피로에 지침이 없이 계속하여 해 나가므로서 이들 문제가 동독의 보다 의식화되어지는 결과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독의 정확한 자기 이익에 대한 평가가 보다 기술적인 생각을 띤 세부부분에서나 비로소 공적인 태도로 반영되어 천다는 점이 또한 있겠습니다.

동독이 독일 연방공화국과 갖는 쌍방에 유리할 장기적인 관계의 발전에 광범히 하게 관심을 갖는 일은 극히 서서히 그리고 중단을 거듭하면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와같은 상황을 잘 알고 우리는 우리의 정착을 계속 추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만약에 모스크바에서 동부 베를린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일을 통하여 이 발전을 강요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경험에 배치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본인은 동부 베를린 정권의 정치적 태도는 현존하는 계수관 방법을 합리적으로 투입하는 객관적 규칙성을 통하여도 규정되어질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아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판단은 일련의 객관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독일의 두 부분간에 지난 몇달 동안 진행되어 오고있는 협상 진행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서도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목적의 종합》(Zusammenfassung der Ziele)

본인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인간적인 문제들(Die Menschlichen Fragen)과 그밖의 문제(Sachfragen)들을 여기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의 생활형편(Lebensverhältnisse)을 전디어 나갈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동.서부 베를린간에도 그뿐만 아니라 바로 이 동부 베를린과 서부 베를린간에야 말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협정(Vereinbarung)의 체결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둘째로 친척(Verwandte), 친지(Freunde) 이웃(사람들)(Nachbarn)자의 방문이나 만나는 일이 보다 쉽게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셋째로 아무런 방해로 받지않고(Ungehindert) 가족들이 함께 모여사는 일(Familienzusammenführung)이 가능케 하자는 것입니다. 넷째로 청소년 단체(Jugendgruppen)와 학교 학급학생(Schulklassen)들 상호 방문(Besuch)과 만나는 일(Begegnungen)들을 통하여 청.소년 및 대학생들간의 접촉관계가 자유스럽게 되고(Freizügigkeit)강화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자유스러운 내독간의 체육운동의 교류(Sportverkehr)를 다시 부활시키자는 것(Wiederzustandekommen)입니다. 여섯째로 문화기관들과 학회등(Kulturelle Institutionen und Vereinigungen)등의 자유 교환과 교류를 장려하자는 것입니다. 일곱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독간의 상업교역(Innerdeutscher Handel)개선 향상(Verbesserung)을 기하자는 것이며, 그내용으로는 수요에 알맞는 해산관계(Postverbindungen)와 전화관계(Telefonverbindungen)의 수립과 그리고 현존하는 이에 관계되는 제 수요를 확장하는 것이겠습니다. 여덟번째로 정상적인 여행교통(Normaler Reiseverkehr)이 가능케 하도록 꼭 필요한 교통관계를 이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사숙녀의원 여러분!

독일에 보다 많은 인권이 인정되고 실행되어지도록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할 것이며 또한 다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노력에 대하여도 꼭같은 논리가 적용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제 연방공화국 수상께서 말씀하셨고, 내용상으로 전 연방수상께서 하신 말씀과도 일치하는 문장하나를 다시 한번 여기에 인용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동부 베를린의 정부가 정치적 동등권(Politische Gleichberechtigung)을 중요시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추상적인 형식(Gewisse Abstrakte Formalitäten)도

중요시 하고 있는 점을 어느정도 본인은 이해 하겠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서독)은 동시에 분할된 독일에 있어서의 사람들에게 사는 일이 좀 쉽게 되는 경우에만 여러가지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가 통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동독측에서도 우리가 동독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할것을 본인은 기대합니다.

《동독과의 협상준비》(Bereitschaft zu Verhandlungen mit der DDR)

신사숙녀 의원여러분! 동독 정부와 실제적인 협상과 대화를 나누는 일이 힘들 것이라는 점을 본인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또한 동독에는 이와 같은 협상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들의 개인적인 권력요구를 위태롭게 할지도 모를 모든 일은 사실 봉쇄해 버리려는 세력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여러가지 제안을 행하였으며, 이를 거듭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일을 오늘 내일에 바꾸어 놓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사태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으며, 만일 이 문제와 이밖의 다른 민족적인 문제들에서 정부와 야당이 보조를 같이하고 또 같이 할 수가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아무런 사전조건없이 (ohne Vorbedingen), 아무런 차별 대우함이 없이 (ohne Diskriminierung) 동독 정부 (Regierung der DDR) 와 실제적인 회담과 협상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련의 대화를 가진 뒤에 협정을 맺고 (Vereinbarungen zu treffen) 조약들을 체결할 (Verträge abzuschließen) 준비도 또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이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분야들에서 결과에 도달하고 유동성이 일어나서 하나의 규제된 병존 (공존) 에 (zu einem geregelten Nebeneinander) 까지 발전해 나갈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쪽의 끊임없는 제안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 제안을 고수할 것입니다.

1970년 1월 15일자의 독일연방공화국 국회 제 23 차 총회 회의록

(Protokoll der 23. Sitz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von 15. Januar

1970).

연방공화국의 Scheel 장관,
독일 연방공화국 국회에서 행한 연설 (1970.1.15)

독일 연방공화국 외무장관 Walter Scheel 씨는 1970년 1월 15일에 연방공화국 국회에서 있는 국정 보고 (Bericht zur Lage der Nation) 에 관한 토론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습니다 :

국회의장 ! 그리고 존경하는 신사 숙녀 여러분 !

동료의원 Strauß씨가 이제 방금 이 테마를 외교정책적인 측면으로 제기하려는 시도를 벌써 한번 행하였습니다. 본인은 내독간의 관계 (die innerdeutschen Beziehungen) 가 좁은 의미로는 외교정책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지만 Strauß 의원이 이 시초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독일의 두 부분 상호간의 관계 (das Verhältnis der beiden Teile Deutschlands) 에 있어서의 특별한 관계라는 개념 (der Begriff der besonderen Beziehungen) 은 정당한 것이라는 사실이 여기에서 이미 명확히 되어집니다.

《 외교정책과 국성 》 (Außenpolitik und Lage der Nation) 그러나 우리의 전체 외교정책은 하나의 전체로 묶인 통일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며, 언제나 국정 전반 (die Lage der Nation) 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독일 문제중에서도 핵심문제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교정책상으로 행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독일문제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들에서 우리는 동시에 이 독일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반드시 이를 염두에 두고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원 여러분, 본인이 하나의 통일성을 지닌 외교정책상의 제 분야와 측면에 관하여 오늘 본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테마에 관련시켜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의 귀결이라 하겠습니까.

동료 Strauß의원께서는 이제 방금 소련이 우리와 갖는 관계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을 통하여 한편으로는 러시아 제국주의 (der russische Imperialismus) 가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볼셰비즘 (Weltbolschewismus) 이 독일과 소련 양국간의 관계에 대하여 갖는 영향을 개선해 보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Strauß 의원은 아주 광범위한 역사적 고찰을 행하였으며 이 고찰은 Carlo Schmid 의원에게 의하여 이제 방금 더 넓게 확장되어졌습니다.

그러나 Strauß의원! 귀하는 귀하의 얘기를 너무 일찍 중단하였습니다. 사실 귀하는 지금의 형편이 도대체 어떠한가, 또 지금의 전망이 어떠한가. 등에 관하여 얘기해야 할 시점에서 얘기를 줄어 버렸습니다.

《조선진영에 있어서의 구조 변천》(Strukturwandlungen im Sowjetblock) 귀하는 얘기를 아주 줄여서 이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 문제에 관하여는 본인은 귀하와는 의견이 다릅니다. 즉 조선진영에 있어서의 블록사상(Blockdenken)이 도대체 더 강화되었느냐 아니면 여기에 하나의 구조적 변천이 일어나고 있는가하는 문제에 대하여 본인은 귀하와는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해 동안에 - 프라그사건에도 불구하고(trotz Prag) 혹은 프라그사건 때문에(wegen Prag) - 조선세력의 영향권내에 있어서의 관계구조에 일종의 변화(eine Wandlung)가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본인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프라그나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여기에서 행하여 지는 어법(語法) (Diktion)에서 이러한 점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귀하가 여기에서 바르게 말씀하신 다음과 같은 견해에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와르샤와 동맹의 가맹국들은 어느정도까지는 자유활동의 가능성(Bewegungsspielraum)을 노력을 통하여 쟁취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서도 귀하는 조선 블록에 하나의 구조상의 변천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의 서방진영에 대한 관계》(Verhältnis der Sowjetunion zum Westen)

그러나 이것이 조선이 우리와 그리고 서구라파에 대하여에도 갖는 관계를 변화시킨 유일한 요인은 아닙니다. 조선이 과학기술과 경제 및 생산 부문에서 보다 많은 발전을 한 서방세계의 나라들과의 협동을 모색하지 않을 없도록 강요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우리 세계의 공학기술상의 발전이며, 세계강대국이 가추어야 할 경제적 필연성에서 오는 강제요건(der Zwang wirtschaftlicher Notwendigkeit auf eine Weltmacht) 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태도에 대하여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이 밖에도 또 다른 것이 있기는 합니다. 즉 중국(중공 - China)에 대한 조선의 관계가 물론 있겠으며 사람에게 따라서는 아마도 평가하는 점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아무튼 이 중공에 대한 관계가 발전해 나가는 제측면들이 조선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될

론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우리에게 대한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는 제3 세계 (die Dritte Welt) 의 의미, 즉 제3 세계가 강대국들이 내리는 정치적 결정들에 대하여 갖는 의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본인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반드시 감안하고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일들이며 본인은 우리가 이 분야에 손을 대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방공화국 수상께서는 현재의 정부가 정확히 말해서 지난 2 개월 반동안에 대 동구정책 (Ostpolitik) 보다는 대 서방정책 (Westpolitik) 를 더 많이 행했다고 어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기 상으로 보아 결코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처하여 있는 현재의 상황에 일치되는 정책의 추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서방진영의 유대 (unsere westlichen Bündnisse) 를 강화하는 일이 성공하는 만큼의 범위에서 만이 우리가 취하는 대 동구정책면에서도 진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 서방정책과 대 동구정책은 상호 기능적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취하는 동부진영에 대한 정치적 활동무대 (unser politischer Bewegungsspielraum) 는 서방진영에서 이룩하는 단결의 척도여하에 따라서만이 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이날을 달리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서방진영에 있어서의 우리의 유대를 아완시킨다면 동부진영에 대한 우리의 활동무대는 이에 따라서 좁혀지게 될 것입니다.

《 평화정책 》 (Friedens Politik) 독일 연방공화국이 취하고 있는 외교정책은 하나의 광범위한 평화정책입니다. 구라파에서 현재 대치하고 있는 상대국들중에 그 어느 국가로 전쟁을 현재의 구라파질서를 정돈하기 위한 가능한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없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세기 (世紀) 의 세제번째로 맞는 3/4 세기에서 전쟁에 대한 태도가 이러하다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블록의 구축이 진전되지 20 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조사력의 축적 (die Aufhäufung militarischer Macht) 은 경제적 이성 (理性) 의 경계선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구라파 제민족의 안전의 필요성은 광범이한 본체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결 (Konfrontation)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필요성은 평화적 접근을 시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디 몇년전만 하더라도 아직 접근키조차 어려웠던 이러한 길에는 오늘날에는 동부 진영

(Ost) 과 서부지역 (West) 에서 널리 퍼져 나가기 시작하고 있으며 , 경화된 상태라는 것은 파멸의 시험없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질 수는 없다는 역사적 경험을 증명해 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

독일 연방공화국의 외교정책은 이와같은 사실에 착안을 두어 이루어진 정책이며 동맹체제 (Bündnissysteme) 의 움직임에 순응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연방공화국의 외교정책은 동맹국들과의 협의를 통한 동의를 얻어서 행하여 지는 것이며 또한 믿을만한 방위준비 (eive glaubhafte Verteidigungsbereitschaft) 를 통하여 그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 신사 숙녀 여러분 ! 추상적인 법적 권리의 주장을 완고하게 내 세운다고 하여서 (eine starre Vertretung abstrakter Rechtsansprüche) 우리는 앞으로 닥아오는 몇해안에 (in den kommenden Jahren) 어쩌면 전체 구라파의 접근이 가능할지도 모를 방향으로 나아가는 오늘을 위한 (für heute) 그리고 우리 시대를 위한 (für unsere Zeit) 규칙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

본인은 전 수상 Kiesinger 박사의 뜻도 이러하였다고 언제나 생각하였습니다 . Kiesinger 전수상이 동독의 Stoph씨에게 조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이 든 편지를 썼는데 , 이것은 본인의 생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목적으로한 일이라 하겠습니까 . 아마도 틀림없이 국가간의 권리 (Zwischen staatliches Recht) 제도를 마련했을지도 모를 하나의 조약체결을 목표로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

왜냐하면 나의 견해로는 그렇지않는 것이라면 이 차원에서는 어떠한 조약이라는 것도 체결되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그러하지만 본인의 견해로는 오늘날 그 방법이나 수단은 아마도 다르지만 유사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감각 (Wirklichkeitssinn) 은 그당시 지배적인 입장에 있던 현실감각에 결코 못지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 신사 숙녀 여러분 ! 우리는 이 모든것을 아주 침착한 태도로 관찰하고 오늘 여기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토론과 마찬가지로 아주 정확하고 , 깨끗하게 서울의 입장을 측정하는 시도를 하여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 구라파의 통일 》 (Europäische Einigung) 신사 숙녀 여러분 ! 우리의 이와같은 정책은 우리의 이해가 구라파의 이해와 일치한다는 표시라 하겠습니다 . 우리의 현 정부가 들어선지 지금 2개월만이 되는 동안 우리는 모든 부문에 걸쳐서 구라파의 통일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

정부에 대하여 언제나 다음과 같은 점을 비난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즉 현 정부는 너무나도 동구라파 (Osteuropa) 에만 눈을 돌린다는 점과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는 비판들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덴 하그 (Den Haag) 과 브뤼셀 (Brüssel) 같은 지역들과는 굉장히 유리한 관계의 발전이 가능하며 이 지역들에 사실은 눈을 돌려야지 지금 현정부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동구라파에만 눈을 돌려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여론이나 비판을 읽을 때면 본인은 항상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봅니다. 그러면 이들 논설을 쓰는 사람들은 누가 덴·하아그와 브뤼셀에서 업무수행하고 있었는가에 관하여 생각이나 해 보았는가? 가령 (중세의 민간신앙에 나타나는) 사람이 한 일을 몰래 해주는 요정들 (妖精) (die Heinzelmännchen) 이나 이지역에서 일을 수행한 줄로 생각하는지? 야당은 선의의 희망을 가지고 이러한 비판을 가하는 것이겠지만 현재로서는 적당한 입장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주어진 상황에서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부문에서 벌써 여러가지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덴·하아그에서의 정상회담》 (Gipfelkonferenz in den Haag) 신사 숙녀 여러분! 덴·하아그에서 개최되었던 정상회담이 구라파 공동체 (die Europäische Gemeinschaft) 의 여러가지 측면을 확장하고 영국 (Großbritannien) 을 구라파에 보다 가까이 접근시켜 놓은 데는 사실 우리가 기여한 바가 지대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라파) 공동시장 (das Gemeinsame Markt) 의 최종단계 (Endstadium) 에 달하여 있으며 집요한 노력을 다하여 구라파 경제공동체 (die europäische Wirtschaftsgemeinschaft) 를 실현시켜 보려는 시초를 하고 있습니다. 서방에 있어서의 정치적 협동은 적지않게 우리 자신의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새로운 건설적인 자극을 받게 되었습니다. 북대서양 동맹기구의 자문위원회 (die NATO-Ratstagung) 는 동맹국들의 모든 긴급한 문제들에 관하여 정치적 조정 (調整) (eine Politische Abstimmung über alle aktuellen Fragen des Bündnisses) 을 할수 있도록 해 놓았으며, 그것도 바로 그리고 특히 동구라파의 가능성도 감안하여 이와같이 정치적 조정을 할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구라파의 범위내에서 행하는 정치적 조정은 최근에 개최되었던 서구라파 연합위원회 회의 (die WEU-Tagung) 를 통하여 새로운 활기를 띠게 되고 내일을 내다 볼 수 있는 상태에 그 출발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라파 정책》(Europapolitik) 신사 숙녀 여러분! 우리는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구라파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파트너들에게 솔직히 알리기 위하여 많은 쌍무 및 다면적인 협상을 개최하고 이를 이용하였습니다. 연방 공화국정부가 취하고 있는 모든 주도적 사업들은 우리의 동맹국들의 동조와 이해를 받고 환영되어지고 있습니다. 현 연방정부는 동구라파의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를 규제하고, 내독간의 관계를 전쟁상태에서 벗어나서 정상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많은 동지들의 도움과 지원을 받아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동구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자신있게 (selbstbewußt) 임할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본인이 겨울해에 거의 얼굴이 그을지않은 모습으로 여기에 등장한것은 사실 지난 몇주동안에 현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가 그의 동맹국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동구 정책에서 의도하는 점이 과연 무엇인가하는 점을 서방의 나의 동료(의무) 장관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거의 휴식도 없이 항상 돌아다녔기 때문이라는 점을 여러 의원들께서는 믿어도 좋을 것입니다.

《동 구라파 정책》(Osteuropa Politik) - 동료 의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결코 두개의 세계사이를 오가는 드내기(Wanderer)는 아니라고 연방 수상께서 이제 본 국회에서 말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28일에 있었던 정부선언만 하더라도 벌써 우리가 취하고 있는 동 구라파 정책은 서방의 동맹(체제)과 조약에 확고히 입각하여 그 바탕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우리가 동독의 배스콤(DDR-Presse)과 정치가들로 부터 듣는 어떤가 모험적인 제안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안들을 우리의 서방 우방국들과 협의하여 조화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사 숙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우방국들과 맺은 유대(Unser Bündnis mit unseren Partnern)를 해체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늦추지도 않을 것입니다. - 이 점에 관하여는 여러분들께서 믿으셔도 좋을 것입니다 -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정부선언에서 발표한 바의 정책을 수행해 나가려면 반드시 필요하게 될 형편에 알맞게 우리 우방과의 유대를 키워나갈 것입니다.

《독·불관계》(Deutsch-Französisches Verhältnis) 신사 숙녀 여러분! 본인은 내일 이곳 본에서 불란서 외무상관과 만나서 이 문하고도 다시 한번 여러

가지 현실문제들을 의논할 것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취하고 있는 동구라파정책의 범위안에서 독·불관계는 아주 특별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독·불조약의 여러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구라파에 있어서의 긴장완화의 노력을 서로 연결시켜 주도록 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선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불란서와는 그 어느 다른 상대국들의 경우와도 달리 우리정책에는 평행적인 관계가 생기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불란서는 우리가 고려한 것과 꼭 마찬가지로 자기자신의 이익과 구라파의 이익을 위하여 구라파에 긴장의 완해가 행하여지는 것을 아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1969년 12월의 모스크바회의 》 (Moskauer Konferenz vom Dezember 1969)

이러한 서방진영의 통일의 바탕에 근거를 두어 우리는 동부진영과의 광범위한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대화가 정치적 협정이나 합의 (Politische Vereinbarungen) 로 까지 발전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는 이 대화가 어떻게 진척되어 나갈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12월 3일과 4일에 있었던 와르샤와 조약기구 가맹국가들의 모스크바회의는 독일 연방공화국의 세 정부와 이 정부가 내린 최초의 정치적 결정들에 대하여 주목할만큼 객관적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 물론 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겠습니다. Stoltenberg 의원! 그렇다고 하여 이 모스크바회담에서 발표된 최종 커뮤니케의 유동적인 형태가 우리에게 대한 극한적인 요구 (extreme Forderungen) 를 덜어주고 있기는 하나 이를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물론 간과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요구가 배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우리가 최근에 다시 보아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점들이 배제되지기를 기대로 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토론을 하거나 여러가지 많은 문제들의 경우에 현재 소련의 정책에서 쓰이는 어법들이 얼마나 기이하게 나타나는가 하는 점과 이 어법들이 얼마나 기이하게 다양하게 (merk würdig, vielgestaltig) 나타나는가 하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인식에 바탕을 두어 경우에 따라서는 개념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읍니다. 이 점에 또한 정치의 가능성이 물론 내재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읍니다. 아무튼 - 우리가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은 -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국가들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 연방공화국간의 관계의 발전에 대한 사전 전제조건들이 더 이상 회담을 개최하는데 대하여 옛부터 잘 알려진 것과 같은 금지적 역할 (die von früher

bekannte prohibitive Rolle) 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정책을 소련에 대하여, 와르샤와 조약기구의 다른 회원 국가들에 대하여, 그리고 동독(DDR)에 대하여 항상 균등(pari passu)하게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또한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세가지 차원을 서로 관련시켜서 조정하는 것은 아주 복잡한 모험이며 이 일은 어려움없이 그리고 아무런 마찰없이는 그냥 성취해낼 수는 없는 일이겠읍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길)은 반드시 쌍방의 상호관계를 개선하는 일을 통하여 행하여 지지 않으면 안되며, 그리고 우리는 이 길을 통하여 실제적으로(Praktisch) 그리고 실용적으로(pragmatisch) 일을 추진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읍니다.

《불가침(무력포기)에 대한 회담》 (Gespräche über Gewaltverzicht)

쌍방에 있어서의 부인할 수 없는 복합적인 관계의 확충 조절관계에 당면하여, 그리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구라파의 안보회의를 감안하여 볼때 이 모든 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상호간의 무력포기(불가침)문제에 관한 회담은 우리와 동구라파의 여러 나라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특수문제의 토의를 할 수 있는 출발점이 우리에게도 된다고 하겠읍니다. 이들 여러문제는 너무나도 상이한 종류의 문제들이므로 그렇게 많이 현재 논의되어지고 있는 구라파 안보회의 같은 복합적인 차원에서는 그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은 거의 실현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Tschechoslowakei und Polen) 독일 연방 공화국과 체코슬로바키아전에 이와같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내륙관계 영역에 이러한 문제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독일 연방공화국과 폴란드간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광범위하게 진척을 볼수 없고 또 동일하게 급속도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쌍무적 원칙(das Prinzip der Bilateralität)가 소련에 의하여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서슴치 않고 환영하여 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구라파에 있어서의 독일인의 자격으로서 소련과 협상하는 것이며 결코 조건이 유리하게 될 경우에 진영을 변경할 수도 있을(즉 서방진영에서 동부진영으로 넘어라도 갈 수 있을) 그러한 독일 민족국가로서 소련과 협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가 우리에게 대한 그들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가

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습니다. 이점에 있어서 우리는 주어지는 제반 가능성을 주의 깊게 검토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쪽으로서도 가능하면 회담제안을 할것입니다.

《포올랜드와의 정치회담》(Politische Gespräche mit Polen) 포올랜드 인민공화국과의 정치회담은 지금 목전에 닥아왔습니다. 독일과 포올랜드 양국은 양국간의 문제로서 현재 그 해결이나 국제의 필요성이 있는 모든 문제들에 관하여 이야기할 준비와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습니다. 독일과 포올랜드 관계의 정상화는 꽤 오랜동안 계속되어나가는 과정에서 만이 성취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양측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달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경제관계의 확충에 관한 협상의 결과 역시 이 과정의 일부분이 될 것이며, 이러한 경제 관계에서는 산업과 공학 기술상의 협력과 제휴와 그리고 차관 대부등이 그 핵심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이렇거나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포올랜드와의 정치회담은 미사여구를 사용하는 구속력 없는 이야기로 시작되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야기 되어야만 할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의의 형태라는 것이 어떻게 발전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도 처음부터 논의되어야 하겠습니까. 즉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더·나이세·경계선(die Oder-Neiße-Linie)에 관하여 얘기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법적인 현황과 정치적 현상이 어떻게든지 허락하는 대로 우리의 선의를 의심할 여지없이 표현해낼 확고한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쪽에도 선의의 뜻이 존재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이렇게 하므로써 이 정말 어려운 문제에서 쌍방에 의하여 다같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담이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베를린》(Berlin) 서로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는 쌍무적인 불가침조약협상(Gewaltverzichtsverhandlungen)들은 서베를린의 현황을 향상시키 보자는 서방 3개 동맹국들의 노력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소련정부에 의하여 발표된 견해는 유익한 점이 있으며, 아직까지는 협상개시를 위한 확정된 일자 같은 것은 아무런 전망을 할 수는 없지만 결코 실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구라파 안보회의》(Europäische Sicherheits Konferenz) 쌍무적 문제들과는 무관하게, 동부진영과의 관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복합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구라파 안보회의에 대한 논쟁은 아무런 변화가 없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회의제안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원칙적으로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긍정적입니다. 그러하지만 이 구국안보회의에 대한 지금까지의 토의상황에 비추어 볼때 아직은 회의적인 입장을 계속유지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의 우방동맹국들과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의의 의제가 결코 경제적 협력같은 문제에 국한되어질 수는 없다는 점은 확실한 얘기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모든 측면문제를 포함한 《안보》(Sicherheit)라는 테마가 결코 배제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소련은 최근에 와서는 구라파 안보회의 (eine europäische Sicherheitskonferenz)라는 말을 하지 않고 전 구라파 회의 (eine gesamt europäische Konferenz)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련은 경제적 협력과 이의 불가피한 필요성에 관하여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면, 우리는 「안보」(Sicherheit)라는 테마는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말은 두개의 안보체제에 관계되는 회담이 여기에서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보에 관하여는 쌍무적으로 협상할 수는 없습니다. 안보체제 (Sicherheitssysteme)들이 서로서로가 얘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은 그의 동맹국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본인이 늘상 되풀이하여 말하는 구라파 안보회의 의제에 관하여 우리의 제안을 발전시키고 동시에 이를 제출할 것입니다.

안보문제에 대한 소련의 입장에서 볼것 같으면 우리는 와르샤와 조약동맹체의 현존하는 단결 (Solidarität)를 붕괴시키거나 혹은 동구라파 파트너를 다른 파트너에 대하여 반목 (反目)시켜서 어부지리를 얻는 식의 일은 할 수 없다는 점은 또한 우리에게 자명한 일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즉 와르샤와 조약내의 단결을 파괴하고 상호의 반목을 시켜서 어부지리를 얻자는) 제안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기는 하나 이는 말할 필요도 없이 환상적이며 (illusionär), 현실성이 없는 (unrealistisch)것입니다. 만약에 복합적인 안보문제 (multilaterale Sicherheitsfragen)들이 성공적으로 처리될 전망을 가질려면 다원적인 안보회의 (eine multilaterale Sicherheitskonferenz)의 차원에서만이 시도되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 두 국가간의 문제 (bilateralen

Probleme) 를 사전에 해명 설명하고 가능한 대로 광범위한 해결을 기하는 것이 이와같은 회의의 성공의 전망을 훨씬 높게 한다는 견해가 또한 타당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쌍무적인 노력 (die bilateralen Bemühungen) 을 하는 것에 특별하고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구라파 안보회의가 아무런 결과를 갖지 못하고 만다면 이것은 아무런 안보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니 보다는 못하고 훨씬 나쁜 (schlimmer)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은 쌍상이 다 같이 알고 일련의 준비를 쌍방은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우리가 이와같은 회의가 양의주도하게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끔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전 조건들 (Vorbedingungen) 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이와같은 회의가 성공할 수 있기 위하여 필요한 실제 전제조건 (die sachliche Voraussetzung) 을 마련하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구라파 안보회의가 개최된다면 이러한 회의는 현재의 우리 독일인들에게는 그렇게도 참기 어려운 여러가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상 (Status quo) 맹목적으로 그냥 확정해 버리는 것 같은 것이 되어서는 결코 없었습니다. 이 점은 이러한 토론이 행하여질 때에 반드시 강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독 (DDR) 이 이러한 회의에 참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간과하여 버릴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 독일에 있어서의 두번째 국가》 (DDR-Zweiter Staat in Deutschland) 우리는 동독 (DDR) 이 독일에 있어서의 두번째 국가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Carlo Schmid 씨가 이 문제에 대하여 그렇게나 신중히 고려된 얘기를 본 국회에서 말씀하여 준것에 대하여 본인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이 이렇다고 확인하는 것 (die Feststellung) 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제3국들에게는 그 결과를 남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나게 될 결과에 대하여는 오늘 오전 키징거 (Kiesinger) 박사가 질문을 제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기회에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바로 이 문제와 이 문제의 취급이 《Neues Deutschland》 (새 독일) 지의 한면 전체에 실리는 의심적인 영광을 본인은 받은 바 있는데 여기에서 본인은 여전히 단독 대표권 수장자 (als Alleinvertretungs-Bühmann) 로 대서 특별되어 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현 연방정부의 태도를 명확히 해준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가 주장하는 체제는 첫 눈에 보면 좀 복잡하기 까지 한것 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이 체제에 따라서 평가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바깥세계에서 독일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사람은 내륙관계의 합리적인 해결조정을 바라게 될 것이며, 또한 반드시 이러한 해결을 희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라파에 있어서의 평화를 위하여 조약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 (eine vernünftige vertragliche Regelung) 을 성취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직한 시도가 결코 바깥으로 부터 방해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체제입니다.

이 원칙에는 하나의 깨끗한 정치적 모란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하나의 다이내믹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이 원칙은 동독에 대한 국제적 존경 (die internationale Respektierung der DDR) 여부를 동 베를린의 집권자들이 평화적 접근 (friedliche Annäherung) 을 바라는 구라파 계 민족의 희망에 대하여, 독일에 사는 사람들의 여러가지 필요성에 대하여 나타내 보이는 통찰과 인식의 정도 여하에 달린 것으로 해놓고 있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라파에 영속적인 평화가 유지될 것을 바라고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두 부분간의 관계》 (Verhältnis der beiden Teile Deutschlands)

독일의 두 부분간의 관계는 이와같은 구라파의 평화에 대하여는 (해결의) 열쇠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 (서독) 에 대한 그의 관계에 있어서 이성 (합리성) 과 절도 (Mäßigung) 를 보이며, 따라서 하나의 구라파 평화질서의 실현을 장려하고 고취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의 여부에 따라서 동독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우리는 독일의 다른 부분에 대하여도 우리의 이해의지 (Verständigungswillen) 를 활짝 두기 위하여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독일 민족내에 존재하는 제 2 국가 (ein zweiter Staat innerhalb einer deutschen Nation) 로서의 동독의 존재에 관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국가에 대하여 (diesem Staat) 되풀이 하여 구속력을 갖는 협정에 도달케 할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 협상을 할 것을 제의 하였습니다.

《민족적 통일》 (Nationale Einheit) 그렇지만 우리는 두 독일 국가 (beide deutsche Staaten) 가 독일 민족 국가 (die deutsche Nation) 를 형성한다는 점과 장기적인 안목에 입각한 선택은 평화적인 질서를 갖춘 구라파

에서 이루어질 민족적 통일 (die nationale Einheit) 을 포기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설대로, 어떠한 타협도 함이 없이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 민족적 통일 》 (nationale Einheit) 이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 국가적 통일 》 (staatliche Einheit) 이라고 할 것인가에 관하여도 그 표현을 놓고 논쟁을 버리고 서로가 다툴 수도 있겠읍니다. 《 국가적 통일 》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것으로 다시 상대적인 개념으로 되어 버립니다. 사실 오늘의 세계에서는 민족 국가적 문제의 해결 (nationalstaatliche Lösung) 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며 어쩌면 이와는 다른 문제의 해결만이 있을 수 있다는 점 (vielleicht nur andere Lösungen) 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더욱 더 그러하겠읍니다.

《 내독정치와 외교정책 》 (Innerdeutsche Politik und Außenpolitik)

신사 숙녀 여러분! 내독정치와 외교정책은 아주 세심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조절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정책은 집중적인 이니시야티브를 합치시킨 하나의 통일적인 정책입니다. 그리고 드물지 않게 제기되고 있는 모험적이라는 문제와도 관련시켜 볼 재에도 이릅니다. 물론 독일 연방공화국 (서독) 정부가 취하는 이러한 이니시야티브가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는 때도 있을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누군들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있겠읍니까? 신사 숙녀 여러분! 이러한 가능성은 우리의 실제로 아무런 환상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객관적이고 담백한 계획 속에는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이니시야티브가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이는 구라파의 질서 (eine europäische Ordnung) 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여기에서는 독일의 두 부분이 서로 접근할 수 있는 제기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우리의 이니시야티브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결과로 남게 되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보강화된 서방진영의 결속 (ein gestärktes westliches Bündnis) 일 것이며 이러한 결속은 모든 세계를 위하여 상호 반대되는 성격의 사회구조 (konträre Gesellschaftsstruktur) 를 가진 민족들 간에도 평화적 질서를 이룩해 보려는 의지에 입각한 것이 될 것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독일 연방공화국의 정치 (책) 는 성실 (Aufrichtigkeit) 과 정직성 (Ehrlichkeit) 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입니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나 국가들에게 있어서 이와같은 성직함이

동일하게 나타나 있는가 없는가의. 그 정도와는 무관하게 우리의 이와 같은 성실과 정직함을 바탕으로 행하여지는 우리의 경치는 세계에 있어서의 우리의 위치를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단지 존재하여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의 제시는 말로 표현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와 먼 장래에 크게 나타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발전을 관망하고 기다려 볼 수 있는 능력도 지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발전이 끝나가는 때에는 무엇인가를 함께 기여할 수 있는 능력도 지녀야 합니다》- 이 말을 쓴 사람은 이 말을 다시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무는 이 말은 어느 고명한 야당의 지도자가 최근에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말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이제 방금 인용한 문장을 본인은 진실적인 아량의 정책을 대변하는 금언(金言 - ein goldenes wort)으로 여기에 말씀드려 놓고자 합니다.

1970년 1월 15일자의 독일 연방공화국
국회 제 23 차 회의록

(Protokoll der 23. Sitz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vom 15.
Januar 1970)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국가위원회 의장
울브리히트(Ulbricht) (1970.1.19)

국제 신문회의에서 행한 연설: 1970년 1월 19일에 있었던 국제신문협회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다.

신사 숙녀 여러분! 친애하는 친구(Freunde), 동무(Genossen)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문제 삼을려는 것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서부 독일 연방공화국간의 관계를 조약을 통하여 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전쟁과 평화의 문제 인간적 창조적 노력을 위하여 그리고 구라파의 모든 민족을 위하여 갖추어져야 할 평온과 안전의 문제를 다루는 여러가지 점들이 중요한 대상입니다.

저는 우선 서두에 다음과 같은 점을 강력히 강조하여 두고자 합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과 독일 연방공화국(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간의 동등권에 입각한 관계의 수립에 관하여》 우리가 제안한 조약을 체결하자는 것은 우리로서는 아주 진지한 일입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DDR)과 독일 연방공화국(BRD)간에 아무런 조약없이 지낸 20여년간의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야말로 관계가 악화상태에 있던 이 20여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이 어려운 시련을 겪은 대륙에 사는 사람들과 국가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만약에 두 독일국가가 지니고 있는 상반되는 사회질서에 상관하지 않고(ungeachtet ihrer gegensätzlichen Gesellschaftsordnungen) 두 국가간의 관계를 국제법상으로 아무런 흠이없이 보장해 주는 평화적이고 정상적인 병존(공존)관계(Nebeneinander)를 조약을 통하여 합의에 도달시켜 보장하는 일이 이루어 진다면, 우리는 이를 환영하여 마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법상의 관계》(Völkerrechtliche Beziehungen) 독일의 두 국가가 평화적 공존을 해야할 역사적 필연성(die Notwendigkeit der friedlichen Koexistenz der beiden deutschen Staaten)과 지난 20년간에 쌓은 경험에 비추어 볼때, 어떠한 차별대우도 하지 않고 국제법상으로 정상적이고 동등권에 입각한 관계를 조약을 통하여 합의에 도달시켜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행하여져야만 될 일이겠습니까.

《독일 연방공화국의 국정에 대한 보고》(Bericht der Beziehungen zur Lage der Nation) 나는 서부 독일의 연방 수상 브란트(Brandt) 씨가 서부 독일의 연방공화국 국회에서 행하는 성명(Erklärung)을 관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브란트씨의 연설에는 반 히틀러 연합측(Antihitler koalition)의 승리가 있는지 25년동안에 불가피했던 큰 역사적 각서(die große geschichtliche Note)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의 연설은 깊은 보수투성이었습니다. 브란트씨는 실제적인 발전조건(die realen Entwicklungsbedingungen)을 그의 연설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고 공론(空論) (Spekulation)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분적으로는 -가령 피흘리는 경계선(blutende Grenze)와 이와 유사한 부류에 속하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말은 우리들 중에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불유쾌한 기억을 남기는 말들입니다.

브란트씨가 과거의 정부는 두개의 세계사이를 오가는 방황자(Wanderer zwischen zwei Welten)가 아니라 한 선언은 의미 심장합니다. 그가 이미 파리 조약들(die Pariser Verträge)이 오늘날로 모든 당사자들에게 유효하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북대서양 동맹기구(NATO)와 미국의 세계전략(die USA-Globalstrategie)에 그의 바탕을 세우고 난 뒤에 위에 말한 점을 아주 특별히 강조하는 것을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서부 독일의 시민들이 브란트씨가 그의 《국정 보고》(Bericht zur Lage der Nation)라는 테마에서 서부 독일 국민의 이해에 일치하는 독일의 평화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서부 독일의 정부는 연방공화국 국회총회의 안전(의제)으로서 《국정》(Lage der Nation)이라는 제목을 확정해 놓았습니다. 브란트씨는 이 야심적인 테마를 처리해 나감에 있어서 성공하지 못하였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민족(Nation)에 관하여는 별로 크게 얘기하지도 않고 도리어 독일 연방공화국(BRD)이 북대서양 동맹기구(NATO)에 통합되어 있다는 문제를 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 때 여기에서 그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DDR)이 제안한 조약초안에 대하여는 실제로 의견표시 같은 것은 제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그는 두 독일 국가들간의 평화적 공존을 가능케 하기 위한 국제법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조약을 통한 합의 주제가 가능토록 할 단 하나의 건설적인 제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특징적인 일입니다.

브란트씨는, 두개의 독일 국가의 공존이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과 독일 연방 공화국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의 공존이란 말을 했습니다. 그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DDR) 과 서부 독일의 연방공화국간의 관계의 특수성은 양국간의 관계가 극히 나쁘거나 내지는 전엔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란트씨는 이미 이전에 그는 재통일 (Wiedervereinigung) 이라는 문제에 관하여는 언급치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으며 그는 독일 연방공화국 국회에서 행한 그의 성명에서 그는 가까운 장래에는 (in absehbarer Zeit) 민족의 분할을 극복하는 일을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브란트씨는 서방강대국들 (die Westmächte) 은 독일의 재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확실히 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통합된 경제적 잠재능력 (das vereinte Wirtschaftspotential) 과 하나의 새로운 민주주의적 발전 (eine neue demokratische Entwicklung) 을 두려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란트씨는 더 나아가서 선언하기를 두 독일 국가에 있어서의 서로 상이한 사회질서간에는 어떠한 혼합 (Mischung) 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있을 수 있다면 단지 하나의 절충 (Kompromiß) 만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브란트씨는 이와 같은 인식에서 오는 결과를 피하고자 합니다. 그는 두 독일 국가간의 특별히 나쁜 관계대신에 아무런 이의나 모순이 없는 국제법적인 조약을 통하여 협약된 동등권에 입각한 관계를 수립하고 따라서 이렇게 하므로써 긴장의 완화를 가능케하는 일을 여전히 저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정말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30년대째에 벌써 접어들고 있는데- 하나의 독일의 평화국가 (ein deutscher Friedensstaat) 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국가는 -역사의 교훈, 특히 포오츠담 협정에 확정되어져 있는 독일인의 평화적 장래에 대한 원칙을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나라로서- 전쟁의 뿌리를 제거해 버렸습니다. 이 평화국가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동독) 인데, 이 국가는 국제법상으로 승인된, 현대적이고 사회주의적인 국가입니다.

소련과의 방위조약 (Beistandspakte) 을 통하여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방위조약을 통하여 그리고 와로사와 조약국가들의 공동체의 일원국가로서 독일민주주의 공화국 (DDR) 민족의 평화적 건설과 평화적 생활에 필요한 안전의 기초는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하나를 성취 못하였습니다. 즉 분리된 서부 독일 국가(der separate westdeutsche Staat)와의 관계의 정상화는 이룩하지 못하였습니다. 서부 독일 정치의 지도층은 지금까지 포오츠담 협정의 기본내용을 실현시키는 일을 완강하게 거절하고 나섰으며 그들은 반히틀러 연합측의 승리의 결과로 나타난 구라파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변화된 점들을 국제법적인 조약들을 체결함으로써 인정하는 일을 또한 완강히 거부해 왔습니다.

《독일 문제》(Die deutsche Frage) 소위 독일 문제가 일반적인 관심을 끄는 이유중에서 덜레스(Dulles)와 아데나워(Adenauer)에 의하여 기초를 닦은 서부 독일의 복수정책(RevanchePolitik)이 절망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달하고 따라서 파산되어 버린(bankrott) 때문도 있다는 것입니다. 슈트라우스(Strauß), 키징거(Kiesinger), 타벤(Thadden) 같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점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가는 이 세상에 극히 얼마밖에 없습니다. 본에 새로 들어선 신 정부에 대하여는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고 절망적인 보복정치를 영원히 내버릴 좋은 시점이 닦아왔습니다. 서부 독일의 연방공화국 수상 브란트 자신이 두개의 독일 국가의 존재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두개의 주권을 가진 독일 국가들간의 평화적이고 국제법적인 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반대의 사회질서》(Entgegengesetzte Gesellschaftsordnungen) 두 국가의 정치지도자들(die Staatsführungen)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DDR)과 독일 연방공화국(BRD)에는 각기 정반대되는 사회질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는 사회주의적 사회질서(die Sozialistische Gesellschaftsordnung)가 존재하고 서부 독일의 연방공화국에는 자본주의적 사회질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서로 상이한 사회질서를 가지고 있는 두 독일 국가의 평화적 공존에 달해야 할 필연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독일 연방공화국의 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DDR)을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에 편입해 넣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결론을 이 사실에서 끌어낸 것입니다.

《평화적 공존》(Friedliche Koexistenz) 우리도 단 한가지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 길이 바로 평화적 공존을 이룩하는 것이겠읍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이니시아티브를 잡았읍니다. 그리고 우리는 1월중으로 이 조약초안에 관하여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내각의장(수상)과 서부 독일 연방 수상간에 협상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였읍니다.

만약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우리 노력의 다음 목표가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우리는 솔직히 이렇게 말하겠읍니다. 우리는 서부 독일을 복수주의로 부터 핵무기 군비정책과 전쟁정책(KriegsPolitik)으로 부터 멀리하게 하려는 것이며 특히 서부 독일의 노동자들과 서부 독일의 청소년들이 평화적이고 안전이 보장되는 장래를 성취해내는 일에 협조해 주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리고 어떠한 차별대우도 함이 없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에 선린의 관계를 이룩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려면 이에 상응하는 국제법상의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독일 민족》(Die deutsche Nation)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독일 민족(die deutsche Nation)이 이제 어떻게 되어 버렸읍니까? 백년전에 비스마르크(Bismark)에 의하여 독일 민족은 혈(血 - Blut) 질(鉄 - Eisen)로 한데 묶어서 만들어졌읍니다. 독일제국의 창건(die Gründung des Deutschen Reiches)이 반(반)민주주의 적이고(antidemokratische), 군국주의 적인 조건(militärische Bedingungen)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정말 좋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이 서부 독일의 연방공화국에 계속 그 뿌리가 빠져 이식되어졌읍니다. 서부 독일의 청소년들이 그들의 장래에 대한 의문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를 서부 독일의 청소년, 젊은 이들은 본 정부의 명령이나 독일 연방공화국의 히틀러상군(Hitlergenerale)들의 명령에 따라 세번째로 모험에 사주(使囂)되어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위기(Krise) - (호)경기(Konjunktur) - 전쟁(Krieg)이라는 순환속에서 이루어진 독일 대자본(가)과 대지주들의 정책을 통하여 독일은 전쟁 하나하나를 겪을 때마다 점점 적어 갔읍니다. 궁극적으로는 독일 민족(국가) (die deutsche Nation)은 미국(USA)과 서부 독일의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분할되어졌읍니다. 그리고 이 문활은 아베나위

(Adenaur) 씨가 서부 독일 민족의 명확한 의사에 반(反)하여 서명한 파리지약들(Pariser Verträge)에 문서로 확인되어지고 확정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독일의 분할은 미국과의 합의하여 아테나워 쿠데타(Staatsstreich)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는 것입니다. 브란트씨는 분명하게 파리지약의 실행에 찬성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는 오늘날 까지도 이 파리지약을 그 모든 세부조항에 이르기까지 유효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독일 민족(국가의 통일(die Einheit der deutschen Nation)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지가 특히 이해될수 없는 일입니다.

브란트씨가 (현) 정부는 파리지약의 바탕위에 서있다고 명확히 강조한 뒤에 이 사실은 기민당(CDU) 대표들에 의하여 상세히 해석되어지고 그 목적이 논증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보장에 기여할 국제법상의 조약을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DDR)과 체결하는 것을 정부측에서도 이를 거부하고 기민당(CDU)·기사당(CSU)도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 두개의 독일국가 》(Zwei deutsche Staaten) 민족의 통일(die Einheit der Nation)에 관한 서부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외 선언은 그런데 그자신에 의하여 반박되어진 셈입니다. 그 자신이 독일에는 두개의 국가가 있고 이들 두개의 국가는 정반대되는 사회질서를 가진 나라들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가 서방진영의 제국주의적 동맹체제에 귀속할것을 고백하고 하나의 독일의 민족국가(ein deutscher Nationalstaat)를 명확히 거절하므로써 서부 독일의 연방공화국 수장은 그의 독일 민족 통일에 대한 그의 선언을 스스로 반박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역사적 현실입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은 하나의 사회주의 독일의 민족국가(ein sozialistischer deutscher Nationalstaat)이며, 서부 독일 연방공화국은 자본주의적 나토국가(NATO - Staat)이며, 이 나라의 이전의 아테나워정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DDR)에 대한 관계의 해결같은 기본권까지도 제국주의적인 서방강대국들에 위임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 서부 독일 연방공화국은 제한된 민족(국가)적 국권을 가진 국가입니다.

《 독일 민족의 분할 》(Spaltung der deutschen Nation) 독일 민족의 분할이 확정됐을 때 독일 공산당(die Kommunistische Partei Deutschlands)은 그 당시 파리지약에 반대하여 투쟁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명한 사회민주당의 당원들과 시민정치가들도 이 파리지약의 결과에 대하여 긴급한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 있는 파울교회 (Paulskirche) 에서는 1955년 1월 24일에 탁월한 서부 독일 시민들이 하나의 선언 (Manifest) 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선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평화와 자유속에서 재 통일이 될 수 있는가 하는 현재 독일 문명에 대한 대답은 오늘 일차적으로는 파리조약에 대한 결정여하에 따랐읍니다》 이 선언을 기초한 사람들은 파리조약이 비준됨으로써 독일 통일을 다시 이룩할 수 있는 문이 닫히고 만다는 큰 위험을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이 선언문을 기초한 사람들은 파리조약을 통하여 우리 민족이 분열되어 조개어지고 만다는 사실에 반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민족의 분열이 이루어 지는 것은 서부 독일 연방공화국에 군사력을 기르기 위한 서방 강대국들의 승인을 얻올려는 목적하에서였던 것입니다. 이 선언은 서부 독일 연방공화국의 현 대통령인 구스타브 하이네만 (Gustav Heinemann) 박사와 그 당시의 사민당 (SPD) 당수였던 에리히 올렌하우어 (Erich Ollenhauer) 그 당시의 서 베를린 시장이었던 에른스트 로이터 (Ernst Reuter) 와 그 밖의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서명되어졌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브란트씨가 과당한 방법으로 민족의 통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DDR) 과 동등권을 갖고 국제법상으로 정상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비 현실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란트씨는 서부 독일의 연방공화국에서도 독일의 통일이라는 말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도데체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혼란시기에는 수십억, 수백억을 가진 사람들과 노동생업을 하는 대중 (Volk) 과의 사이에는 아무런 민족적 통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통일은 멸망하고만 독일 제국 (Deutscher Reich) 에도 존재하지 않았읍니다. 혹은 아니면 브란트씨는 독일 공산주의자들과 사회 민주주의자들 (Sozialdemokraten) 과 노동조합원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간 저 나치스적 독일 제국주의의 강제수용소 (Konzentrationslager) 들 민족 통일의 특별한 표현이라고 생각이라도 하고 있지 않은가?

《독일 민족 (국가) 의 문제》 (Das Problem der deutschen Nation) 비스마르크 제국 건설 이래 독일 민족 (국가) 문제란 대체 무엇인가? 문제는 과거에 그랬고 지금도 봉건주의 적이고 군국주의 적인 그리고 나중에는 독점자본주의와 반공산주의적인 국가질서 (Staatsordnung) 극복이며, 제국주의 적인 점령계획의 포기입니다. 나치주의적 독일 제국주의는 독일 제국의 기본이 되는

악(惡- Grundübel)을 극단으로 까지 추진하여 나갔던 것이었으므로 반 히틀러 연합측의 공격에 직면하여 멸망하여 버렸습니다.

나치주의적 독일 제국주의의 군사적인 완전 패망과 무조건 항복의 결과로, 황제의 제국(Kaiserreich)으로서 바이마르 공화국으로서 그리고 드디어는 대독일 나치 제국(Großdeutsches Naziimperium)로서 전부 합쳐서 75년간 존재했던 한때의 독일 제국은 처음에 이 나라가 생겨났을때와 마찬가지로 혈(血)과 철(鐵)로 다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1945년후의 발전》(Entwicklung nach 1945) 반 히틀러 연합측의 강국들에 의하여 멸망하고 만 독일 제국의 영토상에는 4대국 점령지역(Vier Besatzungszonen)이 설치되었습니다. 그 뒤에 미제국주의자들과 서부 독일의 반농세력들은 1949년에 독일 민족(국가)(die deutsche Nation)과 그리고 점령지역들간에 한동안 여전히 존재하고 있던 나머지 단결마저도 산산히 찢어서 분렬시키고 - 포츠담 협정에 따르면 이것이 그냥 유지되어, 분렬되지않은 채 남아있어야 하는 것인데 - 그들의 통치세력하에 속하는 지역에 다가는 소위 《독일 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이라는 서부 독일의 제국주의적인 분파국가(Separatstaat)를 세웠던 것입니다. 소련과 반 히틀러 연합측의 여러 민족들과 그리고 서부 독일의 반 파손적 민주주의적인 저항세력에 의하여 마쳐진 측정하기조차 어려운 희생들은 결코 무가치한 것으로 돌아가서는 안되었습니다. 이 희생은 독일 영토상에 다시는 복수주의적 세력들과 군비자본주의자들이 민족을 제3차로 숙명적인 길로 몰고가는 일이 결코 다시 허용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으며 또한 허용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우리에게 과하고 있습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있어서는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뿌리가 제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의 새로운 독일 외교정책이 수립되어 졌습니다. 이 외교정책은 소련과 기타 민족들과의 우호에 입각한 정책이며 동등권과 국권의 인정과 명화를 보장하는 기초위에 수립된 외교정책입니다.

《소련과의 국가조약》(Staatsvertrag mit der Sowjetunion)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소련은 1955년 9월 20일에 이루어진 국가조약의 제1조 1항에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DDR)은 <독일 연방공화국에 대한 관계와 다른 국가들에 대한 관계의 발전 문제등을 포함하는 그 자신의 내정과 외교정책에 대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자유스럽다는 점을 약속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있어서는 내정과 외교정책면에서 이미 빼 놓을 수 없는 사실인 것이 서부 독일 연방공화국에 있어서는 이제서야 비로소 시행되어지도록 해야 할 형편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파리조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본 정부는 우리에게 의하여 제안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국제법상의 조약을 맺을 수 있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주권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본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한 독일 연방공화국의 관계의 형성에 관한 결정권을 파리조약에서 미국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은 벌써 오래전 부터 특별히 중대한 결과를 가진 것으로 증명되어 졌습니다.

<조약의 초안> (Vertragsentwurf) 서부 독일 연방공화국에 대한 관계의 형성에 관한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의 구상이나 생각은 명확히 조약의 초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모스크바 커뮤니케> (Moskauer Kommuniké) 우리의 초안은 1969년 12월 초 모스크바에서 행하여 졌던 사회주의 형제국가들의 지도적 인물들의 회합에 관한 커뮤니케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 만장일치로 결정된 커뮤니케에서는 서부 독일 정부에 대하여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 과거의 무가치한 짐(Ballast)을 청산하라는 호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커뮤니케는 모든 국가들이 국제법적인 기초에 입각하여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동등한 관계를 수립할 수 있고 오더·나이세·경계선을 포함한 현존하는 구라파의 경계선을 최종적으로 그리고 불가침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은 그들의 일치된 노력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즉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구라파에 있어서의 긴장을 선린의 이웃관계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라파의 모든 국가들이 그들의 사회질서의 차이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석하는 전체 구라파국가회의(die gesamteuropäische Staatenkonferenz)를 소집시킬 일치된 노력을 다할 것을 사회주의 국가들은 재 확인하는 바입니다.

《포오츠담 협정》(Potsdamer Abkommen) 포오츠담 협정에는 반 히틀러 연합군측의 강대국들에 의하여 독일에 민주주의의 발전이 이룩되고 다시는 독일 영토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는 몇가지 기본 원칙이 천명되어져 있습니다. 준비금지(Entmilitarisierung), 비나치화(Entnazifizierung), 그리고 독점 세력의 제한- 이것이 포오츠담 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입니다. 이 세원칙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서는 20 년내지 25 년전 부터 벌써 관철되어 지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서부 독일 연방공화국에서는 언제 실천되어질 것인지는 아직도 요원한 일입니다. 이 기본 원칙의 이행은 독일인들에게 《세界的 자유와 평화를 애호하는 민족의 대열에 끼도록 하는》 가능성을 주자는 것입니다. - 이것이 포오츠담 협정에 서명한 사람들의 명확한 의지였습니다. -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질문하는 바입니다. 서부 독일은 도대체 언제나 이 포오츠담협정의 원칙을 이행할 것이며, 그리고 따라서 독일 역사와 구라파의 역사에 솔직하게 임할 것인가라고?

《국경의 확정》(Festlegung von Grenzen) 포오츠담 협정중에서 기본이 되는 규정에는 몇개의 국경확정문제가 있습니다. 포오츠담 협정에는 구라파에 있어서의 몇개의 국경들이 새로 설정되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국경의 확정은 구속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속력을 갖고 최종적인 국경의 확정에 따라서 광범위한 부수현상들이 결과로 협약되고 실천되어 졌습니다. - 예를 들어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의 이주(Umsiedlung) 같은 것을 들 수 있었습니다 -

《평화조약》(Friedensvertrag) 반 히틀러 연합군측을 천 강대국들의 원래의 생각은 포오츠담에서 결정된 최종적 성격을 띠는 문제들이 최단시일내에 평화조약을 통하여 확인되어지도록 하자는 것이 었습니다. 그러나 파리조약과 그리고 서부 독일이 북대서양농맹기구(NATO)에 가입되는 일을 통하여 두 독일 국가들과의 평화조약의 체결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 이미 언급한 포오츠담 협정의 기본원칙들은 중구적인 국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파리조약이 체결되고난 처음 몇해 동안에는 그래도 평화조약을 체결하자는 소련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이 낸 제안은 서방 3대국들과 서부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와 서부 독일 연방공화국 국회의 3대 정당들에 의하여 거절되고 말았습니다.

구라파에 있어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모든 구라파의 국가들이 그들이 지닌 사회질서의 차이에는 아무런 관계없이 모든 구라파의 국가들과 관계의 정상화

를 기하는 일은 그러니까 포오츠담에서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확정된 결정에 바탕을 두어 실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두 독일국가에 있어서의 제 2차 세계 대전 상황은 이 포오츠담 협정의 기본원칙에 일치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서부 독일 연방공화국에는 아직도 상당히 만회 보충되어야 할 점이 많습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에 국제법상의 조약을 체결하는 제안에 따른 협상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물론 아주 진지한 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의 정상화》(Normalisierung der Beziehungen) 평화조약이 파리조약 때문에 고의적으로 실패로 돌아가고만 이래 - 더군다나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지 벌써 4반세기가 흘러갔는데 - 독일 연방공화국정부가 소위 나중에 있을 것이라는 평화조약을 통한 합의라는 명목을 내세워 가지고, 제 2차 세계대전과 반 히틀러 연합군측의 승리의 결과로 생겨난 상황을 필연적으로 그리고 명확히 인정하는 일을 피하려 하고 있는 것은 비 현실적(irreal)일 뿐만 아니라,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더 나아가서는 평화에 역행하는 의도의 표현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이와같은 전략의 목적은 이를 통하여 본 정부에 1937년의 국경선이 무한정 계속 유효하다는 비 현실적인 주장을 계속하여 끌고 나갈 가능성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 말은 평화조약의 부재(不在)를 서부 독일 제국주의의 구실로 삼고 더 나아가서는 동시에 위장술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은 성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는 평화조약을 구실로 삼아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는 국제법상 구속력을 갖는 이 결정을 회피하는 것은 - 사태가 유리하게 전개되면 - 서부 독일의 연방정부에게 평화조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에 언급된 조약이나 선언을 위한 전제조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우에 따라서는 삼정점으로 있을 수도 있을 모든 국경선의 인정과 불가침선언이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일을 묵살해 버리는 가능성을 주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명확한 것은 서부 독일 연방공화국의 정부가 제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구라파에 형성되어진 역사적 제 변화현상을 법적으로 흔적을 갖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따라 베로소 서부 독일에서 긴장의 완화를 위한 노력이 행하여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변화시킬수 없는 국경》(unveränderbare Grenzen)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동독)과 독일 연방공화국(서독), 폴란드 인민공화국과 체코슬로바키아, 소련과 기타 다른 국가들의 국경을 포함한 구라파에 있어서의 오늘날에 국경은 변경시킬수 없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하한 이성(理性)에도 반하여 이러한 국경 변경을 시도 한다면 애기할수 없는 파국을 초래할 것이며, 어느 민족에 못지 않고 서부독일 연방공화국의 민족에게 이러한 파국이 초래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본의 사민당(SPD), 자민당(FDP)정부가 우리와 꼭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넘어가는 일》(Über gang vom kapitalismus zum Sozialismus) 본 정부가 역사의 교훈을 배워서 이를 취하기를 바란다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가졌던 모스크바 회의의 권고는 우리가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die Große Sozialistische Oktober Revolution)을 통하여 시작된 혁명의 과정, 즉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살고 있다는 점을 서부독일 연방공화국 정부가 인식하는 일을 보다 쉽게 도와주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소련의 세력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함과 때를 같이하여 레닌(Lenin)과 10월혁명은 독일민족이 제1차세계대전의 피의 시궁창으로부터 벗어나오는데 도왔다는 사실을 독일 연방공화국 시민들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1945년까지의 독일의 지배계급의 정치는 유감스럽게도 항상 그릇된 방향으로 흘러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서부독일로 눈을 돌려볼 것 같으면 독일 연방공화국(BDR)이 또 다시 그릇되고 불화투성이의 길에 들어서 있다는 인상을 어쩔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부독일에 있어서는 모든 시민 각자가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과 사회주의 세계체제(Sozialistisches Weltsystem)의 형성 결과로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독단적 지배가 끝장이 나고, 사회주의적인 세계체제가 형성되므로써 자본주의 체제의 독점적 지배가 제거되어졌다는 사실이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하 세계에는 사회주의 세계체제(ein sozialistisches Weltsystem)와 자본주의 세계체제(ein kapitalistisches Weltsystem)이 병존(공존- nebeneinander)해 있습니다.

<현상의 인정> (Anerkennung des Status quo) 소련과 미국, 양국간의 세력균형으로 말미암아 구라파에 있어서의 현상 (Status quo) 의 인정에 바탕을 둔 정상 관계의 수립과 안전의 보장은 서부 독일 연방공화국에 대하여도 최상의 상대적 가능성 (die optimale Variante) 입니다. 현상을 인정하므로써만이 구라파의 안전 (보) 체제 (ein System der europäischen Sicherheit) 가 이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안보체제는 독일 연방공화국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을 포함한 모든 구라파 국가들에게 평화를 보장하는 체제가 될 것입니다.

구라파와 세계에 있어서의 세력상황은 오늘날 질곡 아데나워, 압스 (Abs), 델레스가 생각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발전해 갔다는 사실을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릇 인식된 독점적 원가무기의 도움을 받아 소련에 압력을 가하고 반 히틀러 연합군의 승리의 결과를 무모 돌려 버리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 갔습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은 이 기간에 안정된 인민 민주주의 국가 (ein stabiler volksdemokratischer Staat) 로 발전 되었으며, 사회주의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는 데로 질곡 옮겨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족해방운동과 식민지로 억압받고 착취당한 민족들의 반제국주의적 민족투쟁이 기간동안 제국주의 국가들로 부터 그들의 옛 식민주의적 영토의 대부분을 (도로) 빼앗겼다는 사실은 이와같은 세력상황이 발전해 나가는 데에 굉장한 큰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1969년의 독일연방국 국회의원 선거> (Bundestagswahl 1969) 세력상황은 오늘날 이선보다도 더 명확히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사실이 1969년에 실시되었던 서부 독일 연방공화국 국회의원 선거가 결과적으로 서부 독일의 후기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주요 정당들을 정부로 부터 멀리한 데에 함께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되므로써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가 이제 실제로 이성 (理性) 에 입각한 하나의 새로운, 현실적인 그리고 민주주의 적이고 평화적인 길을 걸어나갈 시도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동시에 열렸다고 하겠읍니다.

<유엔에서의 회원국자격> (Mitgliedschaft in der UNO) 반 히틀러 연합국중 상대국들이 포오츠담 협정을 체결하고 또한 국제연합 (die vereinten Nationen) 의 상설을 강력히 장려 했다는 점을 우리는 상기해 봅시다. 이

국제연합의 목표는 앞으로 새로운 세계분쟁 (Weltkonflikt) 을 방지하자는데 있었으며 지금도 또한 그러합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이 될 수 있는 데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모든 다른 나라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나라로서- 국제 연합기구의 회원국이 되는 것이 국제연합의 관심과 구라파의 안보 (안전) 를 위하여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기초한 조약의 초안에서 서부 독일 연방공화국에 이점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두 독일국가들간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데에도 커다란 이로운이 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실사 숙녀 여러분! 이 조약의 초안에 포함된 개별항목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이니시야티브를 일반적으로 본 이 두분세에 관하여는 벌써 아주 많이 이야기 되었으며 많이 쓰였습니다. 결국 두 독일국가간에 동등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이룩하자는데 찬성하는 사람들과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거의 한달째 이 조약의 초안은 공개적으로 열렬히 토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면을 담당하는 신문인과 언론인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지금까지 언급된 것을 초월하는- 더 상세한 설명을 하는 것을 여기에서 생략하겠습니다.

본인은 여기에서 단지 몇가지 국적사항만을 더 첨가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최대한의 요구 (Maximalforderungen) 를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서부 독일에서는 우리에게 대한 비난하는 소리가 여기 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아무런 객관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조약의 초안> (Vertragsentwurf) 국가들과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데 대한 국제 규범에 일치하는 것이 우리가 기초한 조약의 초안인데 이 초안에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유리하게 하고, 독일 연방공화국을 불리하게 하는 것과 같은 조항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초안은 관대한 동등권과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또한 완전히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규정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 초안입니다. 이 초안에는 우리가 독일 연방공화국에 대하여서 보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유리한 우선권을 주려고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할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방법으로 의심의 여지없이 명확하게 어떠한 경우에라도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하여서 보다 독일 연방공화국에 더 많은 특권을 인정하는 일을 할수 없다고 말한다고 하여 이것이 최대요구 (Maximalforderung) 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 한 제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최소요구 (Minimalforderungen)를 말하는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고도 남음이 있는 사실입니다.

<두개의 독일국가> (zwei deutsche Staaten) 독일 연방공화국 (BRD)은 국제법상으로 인정된 국가 (völkerrechtlich anerkannter Staat)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DDR)도 물론 이와 동일한 요구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도 20년 이래 국제법적으로 인정된 국가이며 이 국가가 이에 관련되는 모든 의무를 다하고 그러나 물론 이와 관계되는 권리를 요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준다고 하여 이것이 결코 최대요구로 줄어들어 전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독일 연방공화국 (BRD) 정부가 이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결코 문제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서부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그 시민 (Bürger)을 차별대우하는 정책을 드디어 중지시키고 다른 국가들의 외교정책에 늘상 간섭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한 정치의 기본원칙이나 위에 언급한 문제의 경우에 브란트정부가 얼마나 기민당 (CDU), 기사당 (CSU)의 실패한 정책을 이성의 빛을 비추어 보려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가 하는 점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도 동일한 반응이나 영향의 압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동등권과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일> (Gleichberechtigung und Nichtdiskriminierung) 여러분들이 이 조약의 모든 조항을 살펴보시면 어디나 동등권과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두점을 강조하는 기본원칙이 두드러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위 최대요구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을 권한이 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 나라로 보고 독일 연방공화국 (서독)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그 시민을 차별대우를 할 수 있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일종의 감시 (독) 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나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가 두 독일 국가들에 있어서의 상황 (즉 국정)에 관하여 그의 정부기관을 통하여 작성시킨 자료를 분배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흥미 있는 일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두 독일 국가들에 있어서의 국민의 생활수준이 본질적인

면에서는 동일하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는 바와같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은 생활수준이 아닙니다.

<사회 질서> (Gesellschaftsordnung) 이보다 더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은 사실 어떤 국가가 국민의 이익과 행복에 합당하는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질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정치권력 (die politische Macht) 을 지고 있으며, 누가 독일 연방공화국에서 정치권력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야 하고 독일의 두 국가에서 결정적인 의의를 지니는 생산수단은 누구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노동자들 (die Werktätigen) 의 결정권 (das Bestimmungsrecht) 이 독일의 두 국가에서 어떻게 실현되어 있는가?

어떠한 교육제도 (Bildungssystem) 를 두국가는 가지고 있는가? 여성의 동등권은 어떠한가, 젊은 세대의 권리문제는 어떠한가?

독일 연방공화국의 정부기관에서 작성된 자료에는 노동계층 (Arbeiterschaft) 과 전체 취업국민층의 이 모든 생활문제들에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이 서부독일의 연방공화국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는 점이 그전에 시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이 자료는 반환초기를 당하였습니다.

<무력포기 (불가침)> (Gewaltverzichtsabkommen) 브란트씨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에 불가침조약 (Gewaltverzichtsvertrag) 이나 불가침선언 (Gewaltverzichtserklärungen) 교환에 관한 협상제안을 할 뜻을 밝혔습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조약초안에 이미 이러한 제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명백한 진리 (eine Binsen Wahrheit) 입니다. 즉 국제법상으로 유효한 불가침조약들 (Völkerrechtlich gültige Gewaltverzichtsabkommen) 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국제법적으로 인정하는 다시 말해서 국제법상의 국제 (Völkerrechtssubjekte) 로서 인정하는 국가들 사이에만 체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본의 성부가 실제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하여 불가침을 원한다면 그들은 무엇보다도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을 주권을

가진 독일국가로서 인정하고 등등한 권리를 가진 관계 즉 국제법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일을 통하여 그들의 의도가 진지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역사는 가르켜 주고 있습니다. 불가침 조약이라는 것은 당사국들의 국경을 국제법적으로 승인하는 일과 결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목적을 다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역사는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국경선을 명확히 국가경계선 (Staatsgrenzen) 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국가와 맺는 불가침 조약의 체결이라는 것은 결국 국경의 일관과와 타국의 영토에 대한 보복주의적 요구를 합법화하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소련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의 협상> (Verhandlungen Sowjetunion Bundesrepublik)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들과 서부 독일의 연방공화국간에 이루어진 불가침조약의 체결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공동의 관심사 입니다. 그러므로 소련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에 불가침조약에 관한 협상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선 소련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에 지금 행하여지고 있는 협상의 결과를 우선 기다려서 이 협상의 결과에 바탕을 두어 우리가 독일 연방공화국 (BRD) 과 조약을 체결하는 순서가 좋겠습니다. 불가침 조약의 분해는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협상에서 토의의 대상이 되어야 할 근본 순서들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불가침 조약이라는 것은 그 출발점이 현상 (Status quo) 의 인정으로부터 시작되고 폭력 (Gewalt) 으로부터만 관찰되어질 수 있는 성치가 포기되어지는 내용을 포함할 때에만 어떤 실제적 의미를 지닐수 있는 것입니다.

<서 베를린> (Westberlin) 브란트씨 서부 베를린이 서부 독일의 연방공화국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절대로 앞으로도 서부 베를린에 속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부 독일의 연방국회 (Bundestag) 에서 행한 그의 시정연설에서 서부 베를린에 관하여 많이 얘기를 하였습니다. 서부 베를린에 관계되는 세부문제들에 관하여도 나는 오늘은 몇가지 특정한 이유때문에 여기에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서부 베를린이라는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관하여 알기를 원하면 나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외무장관이 최근에 행한 자세한 교서 (Note) 를 보라고 말하겠습니다. 나는 오늘이 최근에 행하여진 외무장관의 교서에 첨가할 것이 없습니다.

<구라파 안보회의> (Europäische Sicherheitskonferenz) 구라파에 안보회의 준비와 소집에 관하여는 우리는 부다페스트 (Budapest)에서 있었던 와르샤와 조약 동맹국들의 회의가 행한 제안을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국가지도층은 구라파 안보회의 준비와 이의 실행에 도움이 될 일을 위하여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차례 천명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을 포함한 모든 구라파의 국가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이 안보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하여진 예비 회담의 결과에 의하면 구라파의 어떠한 나라도 이 구라파 안보회의에 참석하는데 대하여 어떤 사전조건 (Vorbedingungen)을 결부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브란트씨만이 독일 연방공화국 (BRD)이 이 안보회의에 참가할 것인가의 여부를 독일어 두 국가간에 행하여질 회담의 결과 여하에 따라서 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브란트씨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은 이 구라파 안보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독일 연방공화국의 배재 또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한 일종의 후견 (Vormundschaft) 조치에 복종해야 한다는 수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한 형식을 가하여 브란트씨에게 이와같은 종류의 방해공작이나 이와 유사한 방해공작을 구라파 안보회의에 대하여 하는 일을 그만둘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내각수반 (수상)과 독일 연방공화국의 연방수상간의 협상은 오랜시일을 요한다는 사실을 브란트씨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잘 알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간의 긴장의 감소와 완화에 대하여 구라파의 안보회의를 빠른 시일안에 개최하는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된다는 점에 브란트씨는 또한 배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질서의 변경이 전제조건이 아니다.> (Änderung der Gesellschaftsordnung nicht Vorbedingung) 우리가 마련한 제안을 발판으로 삼아 우리가 서부독일에 공산주의를 끌어들이려 시샘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층이 서부독일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 우리는 현재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동독)에서도 아예 설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만들어 제안한 조약의 초안을 단어 하나 하나 (Wort für Wort)를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조약의 초안에 서부독일에서의 사회질서가 변경되는 것을 그 사전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조항이나 요구사항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초안은 독일 연방공화국에 독점자본주의적인 지배체제가 존재하여 있고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는 사회주의 질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평가에 기준을 두고 있는 초안인 것입니다. 이 조약에는 그리니까 서부 독일에 사회주의화를 주장하는 요구가 제기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정치가 (Realpolitiker)입니다. 우리는 서부 독일의 내적인 발전변화는 서부 독일에 있어서의 정치세력 자체에 의하여 결정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점에 관하여 결코 어떤 의심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 이말은 독일 연방공화국에 있어서의 발전은 한편에 노동자와 피고용인, 중민, 지식인, 수공업자들과 소기업인들, 다른 한편에 군비자본과 금융계고위층과 그리고 독일 연방공화국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지주들의 보수적이고 우익적인 세력간의 투쟁속에서 결정되어 질 것입니다.

<독일 공산당의 목표> (Ziel der KPD) 독일 공산당의 발언에 의하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평화를 사랑하고 사회주의적인 발전을 기약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를 유발시키고, 나치세력과 군비자본의 세력과 영향을 제거하는 것이 독일 공산당의 전략적 목표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서부 독일의 집권자들을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복수주의 (Revanchismus)와 전쟁정책 (Kriegspolitik)의 길로 부터 그 방향을 돌리게 하여 그들이 서부 독일의 국민들에게 그리고 특히 서부 독일의 젊은이들에게 하나의 평화적인 장래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점은 본 연설의 서두에서 이미 말했읍니다-

본 정부가 독일 연방공화국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간에 체결될 수도 있을 하나의 조약을 위한 초안을 작성해놓았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인은 브란트씨에게 본 정부가 작성한 이 조약의 초안을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전달하기 전에 노동자 (군중) 대회 (Arbeiterversammlungen)에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이 만들어 송부한 조약의 초안에 대하여 그리고 독일 연방공화국 국회에서 행하여진 토론에 대하여 노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점을 그들과 상의하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만일 브란트 영도하의 현 서부 독일의 정부가 인간적인 정치 (eine menschi-

che politik)와 이성(埋性)에 입각한 정치를 행하기를 원한다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하여 취하여 왔고 현재도 취하고 있는 일체의 복수주의적 계획(alte revanchistischen pläne)을 영원히 포기하고, 독일 영토상에 사회주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만족하게만 되는 것입니다.

서부 독일의 정부는 그 본질과 목표에 있어서 공격적이고(aggressiv) 비인간적인(unmenschlich) 정치와 관계를 끊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요구》(Forderungen der DDR) 이렇게 되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요구됩니다.

- 구라파에 있어서의 현황(Status quo)을 아무런 조건없이 인정하고, 특히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국가적존재(die staatliche Existenz der DDR)를 국제법적으로 인정하는 일을 무조건으로 행해야 할 것이며;
-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DDR)과 독일 연방공화국(Bundesrepublik)간의 경계선을 아무런 조건제시가 없이 국가경계선(Staatsgrenzen)으로 인정할것;
-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단독 대표권이라는 불손한 주장(die Alleinvertretungsanmaßung)을 무조건 포기할 것이며, 할슈타인 원칙에 따른 이러한 단독 대표권 주장 역시 무모한 행위로서 무조건 포기되어야 할 것이며;
-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그 시민에 대한 일체의 차별시하는 태도를 포기하여야 할 것이며;
- 두 독일 국가간의 동등권에 입각한 정상적인 관계의 수립이 국제법적인 기초에 입각하여 행하여 져야 합니다.

동등권에 입각한 관계들 수립하자는 조약의 초안을 작성하므로써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은 현재 주어져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움이 되도록 해결하기 위한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제 본에 들어선 사민당(SPD), 자민당(FDP)정부가 두 독일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가 행하는 이 제안에 응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1970년 1월 20일자로 베를린(동부)에서 발간된 《새 독일》(Neues Deutschland)에서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의 성명

(1970. 1. 19)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는 1970년 1월 19일에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국가위원회 의장(DDR - Staatsvorsitzender) 울브리히트가 행한 신문기자 회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협상에 대한 독일민주주의 공화국의 응할 용의》(Bereitschaft der DDR zu Verhandlungen) 울브리히트씨의 선언에 대하여 독일 연방공화국은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합니다. 즉 울브리히트는 그의 과장한 역사적, 정치적 논설에도 불구하고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내각(Ministerat)이 독일 연방공화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은 국정보고에서 이미 밝힌바와 같이 앞으로 며칠안으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DDR)에 대하여 협상을 시작할것을 제안할 것입니다.

《긴장의 완화》(Abbau der Spannungen) 이에 임하는 독일 연방공화국의 출발점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이 소련과 폴란드와 다르지 않게 행동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조약이라는 것은 협상의 결과만을 뜻하는 것이며, 사전조건으로서 처음부터 알리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약의 초안(Vertragsentwürfe)을 공개적으로 대조시키는 것은 냉전(Dr Kalte Krieg)의 특징이며, 이 냉전에는 울브리히트가 가담해 있었으며, 현재로 이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 정부(서독)는 독일에 있어서의 두 국가간의 양해에도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방정부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동독 - DDR)도 이러한 일을 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브리히트씨는 독일 연방공화국과 소련사이에 불가침 협상(Gewaltverzichtshandlungen)이 우선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는 이러한 협상이 가져올 결과를 사전에 찬성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그렇지만 이러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시간적인 순서(Zeitliche Reihenfolge)를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울브리히트씨는 이렇게 하므로서 아마도 시간을 벌으려 하는것 같으며, 독일 연방정부와의 힘상진행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독일 연방정부는 구라파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전과 협동을 해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에 반대되는 이러한 태도를 유감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독일의 두 국가간의 관계가 공개적인 논쟁 (öffentliche Auseinandersetzung) 을 통하여 그 진보가 성취되어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한 일입니다.

《반박 논쟁을 피함》 (Keine Polemik) 독일 연방정부는 울브리히트씨와 고무한 반박조의 논쟁을 벌리는 것을 포기합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직후의 독일 역사 발전의 과정에 대하여는 사실 유용한 토론을 벌일 수 있을 것인데, 그러나 울브리히트가 여기에 관하여 한 논술은 긴장의 완화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못됩니다.

가령 우리가 (동독의 경우) 독일 공산당 (KPD) 과 독일사회민주당 (SPD) 을 그들이 강제적으로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 (SED) 으로 통합해버린 과정 같은 것만을 생각해 보더라도 그의 얘기가 스스로 부정되어 지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인간적인 문제를 쉽게 해주는 일》 (menschliche Erleichterungen)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는 독일영토상에 현재 주어져 있는 영토적 현황을 하나의 사실로 보는 점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 정부는 울브리히트씨가 말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인정 (Vorbehaltlose Aerkennung) 이나 무조건적인 포기 (Vorbehaltlose Vrzichten) 같은 요구조건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는 책임성 있는 협정을 통하여 독일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공존 (함께 살아가는 일 Zusammenleben) 을 보다 낮게 하려는 것입니다.

(출처) : 1970년 1월 21일자 본에서 발간

《독일 연방공화국 언론 공보처 판보》 (Bulletin des Presse-und Informationsamtes der Bundesregierung.)

브란트 독일연방공화국 수상,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내각 수반(수상) (DDR-Minister-ratsvorsitzender) 슈토프(Stoph)에게 서한을 내다. (1970 1 22)

《불가침 선언》 (Gewaltverzichtserklärungen)

존경하는 수상!

(Sehr geehrter Herr Vorsitzender)

본인은 독일 연방공화 정부의 이름으로 우리 두 정부가 불가침 선언 (Gewaltverzichtserklärungen) 을 교환할것에 관하여 협상을 하자고 제의하는 바입니다.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서 수행될 이 협상은 우리 두 국가간에 존재하여 있는 모든 문제 (alle zwischen unser beider Staaten anstehenden Fragen) 의 해결 (Regelung) 을 위한 광범위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어야 할것이며, 이 문제속에는 동등한 관계 (gleichberechtigte Beziehungen) 에 관한 문제도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

이 협상에 임하는 쌍방에 다같이 그들에게 옳다고 생각되는 일체의 생각 (Erwägungen) 이나 제안 (Vorschläge), 기본원칙 (Grundsätze) 그리고 초안 (Entwürfe) 등을 토의 대상으로 자유로히 제안할 수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 위에 말한 토의의 기회에 또한 속하겠읍니다.

이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설명 (Erörterungen) 과 협상들 (Verhandlungen) 은 어떠한 시간적 압력도 받음이 없이 (Ohne jeden Zeitdruck)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가능해야겠읍니다.

귀하에게 참고되도록 알리는 의미에서 본인은 1970년 1월 14일 이 문제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공화국 국회에서 행한 본인의 성명 및 선언증에서 해당부분을 동봉하여 전합니다.

《인간적인 문제들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상》 (Verhandlungen über menschliche Erleichterungen) 그런데 실제 문제들에 관한 협상을 통하여 분할된 독일에 살고있는 인간의 생활을 보다 쉽게 가능케 할 수 있을 함의에 도달하자는 것이 우리정부의 희망입니다.

《협상에 임할 용의》 (Bereitschaft zu Verhandlungen)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는 언제라도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협상의 진척과 과정에 관한 합의를 보기 위한 첫 회담을 위하여는 에곤 프랑케 (Egon Franke) 장관이 대표로 임할 것입니다.

여 불 비

(Mit Verzügliche Hochachtung)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

(Bundeskanzler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브란트 (서명)

(문천출처 =)

1970년 1월 24일자 본에서 발간된

《독일 연방공화국 언론 공보처 판보》

(Bulletin des Presse-und Informationsamtes der Bundesregierung)

쉐엘 (Scheel) 연방정부 장관.

독일 외교정책의 현실문제 (Aktuelle Fragen der
deutschen Außenpolitik) (1970. 1. 28)

발터 쉐엘 (Waltr Scheel) 독일 연방공화국 외무장관은 1970년 1월 28일
본에서 독일 외교정책학회 (Deutsche Gesellschaft für Auswärtige Politik)
석상에서 다음과 같은 강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사 숙녀 여러분!

외교정책이 당면한 현실문제에 관하여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해있는 현주
의 세계사정이 긴장에 차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적 존재 (Nationale
Existenz)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지 않고 그리고 굴하지 않고 면면히 계속되어
나가고 있는 어떤 중간급에 속하는 국가 (irgend mittlerer Staat)의 외무
장관에게는 직업적 성격이나 흥미가 있는 비교적 간단한 일 (ein relativ-ein-
faches Unternehmen von Professionellen Reiz)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은 우선 이 나라 (Land) (서독)가 차지하고 있는 국제적 지위가 그 어느
누구에 의하여도 이의가 제기되어질 수 없는 확고한 기반에 있다는 점인데, 이
점에 관하여 대체로 그 윤곽을 잡아 보고자 하며, 이밖에 일반의 관심을 어느모
로 보나 상당히 자극하고 있는 몇가지 테마를 별 순서를 따지지 않고 여기에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전개하여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점들
로 값있는 도자기 (wertvolles Porzellan)를 깨뜨림이 없이 (즉 중요한 핵심
문제를 이로 인하여 그르침이 없이)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서 말해서 공개할
수 있게될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독일 외교정책의 현황》 (Situation der deutschen Außen-Politik)

독일 외무장관은 남들이 그리 부러워할 만큼한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교정책이 지니고 있는 모든 큰 문제들은 여러해전부터 어떤 경우에는 극적인
의미로 긴급한 현실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독일 외교정책상
의 모든 문제들은 국내의 여론이나 국제사회에 지나칠 정도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들 문제는 자격이 있는사람, 없는 사람에게 의하여 사변적으로 도처에서 이리저리

취급되고 해석되어진 결과는 국가의 사변에서 때로는 명확성이 아니라 혼란 (Verwirrung) 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외교정책이 지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다시 심심한 우려를 사 아낼 정도로 논쟁의 대상이 되려고 (Kontrovers) 위협하고 있는 것은 사실 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된것은 일의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도 있겠지만, 거기 에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문제에서 그대로는 지나치게 무분별하게 (Undifferenziert)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 세력분포가 양 극화 (Polarisierung) 되어 나간 결과가 더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사람들은 한탄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 행동 (das Politische Handeln) 을 용의국도하게 준비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우리의 민주주의 헌법 (Verfassung) 의 당연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외교정책이 광범위한 의회의 뒷받침을 받을때 얻어지는 모든 강점들이 지나치게 대다수에 의하여 (mit allzu großen Mehrheit) 이루어지는 안일성에 기울어지고 따라서 담당한 외교정책상의 의사형성이 가지는 불리한 점들 (Nachteile schwer fälliger, zur Bequemlichkeit neigender außenpolitischen Willensbildung) 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독일 연방국회에서 비판적으로 (Kritisch) 관찰되어 집니다. 우리는 애써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다음에 본인이 행하는 설명을, 쟁점들 (Kontroversen) 을 논증을 통하여 (mit Argumenten) 당연히 있어야 할 객관성을 지닌 토론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하나의 시도로 부디 생각하여야 할것입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은 수립되어 20년 동안 많은 그리고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성과를 가능케한 길을 걸어왔으며, 국내 정책상의 발전에서, 사회정책 경제정책상의 발전면에서 국제적으로 존경을 받는 결과를 쌓아 올렸으며, 그러나 외교정책 면에서도 성과를 이룩해 왔습니다. 그렇거나 비교를 찾아볼 수 없으리 만큼 빨리 이와 같은 성과를 가능케 해준 길 (Weg) 은 일관성 있게 서방진영에 결속해 온 결과 (der Weg der Konsequenten west integration) 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노선을 취한 것은 옳았으며 (richtig gewesen), 또한 역사적으로도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일것입니다.

《독일의 두부분의 발전》 (Entwicklung der beiden Teile Deutschlands)

우리가 이룩한 이러한 성과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볼때 부분적인 성과 (Teilerfolge) 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성과는 한 부분만을 위하여 쟁취된 것이며, 우리의 분할된 조국의 다른 한 부분인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DDR) 은 이와 달리 그들대로 동부진영과의 계속의 길 (Weg der Ostintegration) 을 걸어 갔으며, 이 동부진영의 계속의 길이란 이데올로기와 정치면에서 서방진영과는 다른 권력체제 (Machtssystem) 로 달리는 길이였으며, 지난 20년동안 이 체제는 조금도 변함없이 우리들에 대하여는 적대적이고 (feindlich) , 도전적 (fordernd) 이었습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DDR) 이 이러한 길에 들어선것은 국민의사의 자유로운 결정 (freie Entscheidung des Volkswillens) 에 따라서 행하여 진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도 그들 나름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방면에서 이루었으며, 그중에서 어떤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Anerkennen) 객관적인 성과도 있으며, 개중에는 동독에서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데올로기 적으로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있는것도 있습니다. 민족 (Nation) 의 분단 (Trennung) 이 이 기간동안 조금도 유화되지 않았읍니다. 도리어 이 민족의 분단 (격리상태) 은 한해가 지나고 또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심화되고 (vertiefte) 더 첨예화 되어 나가서 (verschärfte) 오늘날에는 거의 극복하기가 어려운것같이 보읍니다 (Kaum überwindbar) .

독일의 두 부분 (die beiden Teile Deutschlands) 이 과거에 (즉 지난 20여년동안에) 서로 배치되는 동서 양진영으로의 집결상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이러한 양진영으로의 집단적 단결에 대항하여서 자기라도 독자적인 힘으로 (aus eigener Kraft) 민족적인 분리발전 (das nationale Auseinandergleiten) 을 막을 수 있었을가의 여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1970년에 와서는 쓸데없는 안간한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müßig) .

아무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은 이일을 수행해 나갈 수 없었으며, 뿐만아니라 이를 원치않았던 것이 분명한 것같읍니다. 우리는 사실 이를 원했읍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을만큼의 적절한 방법이나 수단 (taugliche Mittel) 이 없었읍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기간동안 지나치게 민족분단이 물고은 인간적인 비극에 둘러 있었으며, 제통일이라는 희망에만 매혹

되어 있었습니다. 이점에 관하여는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한동안 우리에게서 어쩔 수 없이 이해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 세력전쟁 (동.서 양진영등의) 시대 (Zeitalter der Machtblöcke)에는 분제의 분리된 단독 해결 (isolierte Lösungen)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움직여지려면, 평화적 진보를 약속해 주는 어떤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릴려면은, 이것은 서로 대결하고 있는 동맹체제들 (die konfrontierten Bündnissysteme)의 전체적 수평적 차원에서 (in der gesamten horizontalen Breite)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이와 같은 일련의 가능성들은 70년대 초기에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화적인 의의를 지니는 이미 알려진 어려운 일때문에 (일을 통하여) 부정되어 지지는 않았습니니다. (즉 그만큼 객관적 여건이나 주관적 입장이 성숙되어서 실제로 일어나는 어려운 점들이 많더라도 가능성은 가능성으로서 추구되어 나가고,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가능성을 망쳐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역수),

그리고 나는 이점을 필요한 개념상의 예리한 판단력을 가지고 받아들여 주기 바라며, 이것은 독일 연방정부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가능성 (Möglichkeiten)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이상몽 (理想夢 - Wunschträume)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물론 아직도 현실성 (Gewißheit)은 아닙니다. 확실성이 있을 때에만 실행하라고 기꺼히 권고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이들은 사실 스스로 이러한 정책수행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며, 아무튼 확실성만을 가지고 외교정책에 임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외교정책이라는 일을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소치라 하겠습니다.

외교정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여러가능성을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있게 (geduldig) 그리고 성실하게 (gewissenhaft) 추구하고 재어나가는 일 이외의 다른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독일 연방공화국의 외교정책》 (Außenpolitik der Bundesregierung)

사회 민주당과 자유 민주당 출신으로 이루어진 독일 연방정부. 이치에 맞는 합리적인 외교정책상의 프로그램을 제출하였으며, 이를 실현시킬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현정부의 프로그램은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에서 계속 솔직하고(ehrlich) 정직하고 믿음만한 것(glauwürdig)이라고 간주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 외교정책은 통일적으로 기초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외교정책을 균형(Ausgleich)과 접근(Annäherung)과 평화의 보장(Friedeussicherung)을 위한 전체 구라파의 정책에 대한 우리로서의 기여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서방정책(Westpolitik)과 대 동구정책(Ostpolitik)은 서로가 일종의 기능적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방(진영)에서 의견의 조정(Abstimmung)을 많이 이룩하면 할수록, 협동(Kooperation)을 이룩하고 의견의 일치(Einigung)를 이룩하면 할수록, 우리는 동부진영에 대하여 보다 많은 활동여지를 갖게되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대동구정책상의 이니시아티브는 덜 민족 국가적 독주(獨走) (Nationalstaatliche Alleingänge)로 오해되어 질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서 동시에 여전히 계속하여 미해결로 남아 있는 독일 문제에 직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이 독일 문제는 외교정책의 일부입니다. 독일 문제(die deutsche Frage)는 적어도 1939년 9월 1일 이래로 하나의 구라파 문제(eine europäische Frage)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우리가 되돌아켜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민족국가적 해결(eine nationalstaatliche Antwort)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며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해 집니다.

그러므로 독일 연방정부가,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시도되었으나 아무런 성과를 얻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적으로 있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구조건을 내세우는 정치(eine Politik der juristischeu maximalforderungen)를 행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결코 기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연방정부가 그의 대 동구정책으로 의도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구라파에 있어서의 평화조약에 대한 준비단계에서 독일 연방정부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이 구라파 평화협정체결의 당사국이 되어서 나라들 간의 관계를 향상 개선하되, 이를 통하여 구라파의 분열(Spaltung)에 대한 극복이 장려되고, 구라파 전체가 독일 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해결(eine Vernunftigere und gerechte Lösung der deutschen Frage)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 의지》 (Wille zur Verständigung) 이 목표를 위하여는 동부진영으로 부터 우선 고무적인 징후가 몇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망을 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망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설정하여 놓고 노력을 벌려온지 3개월이 지난 이제와서 벌써 우리의 모든 노력을 용기를 잃고 중지시키고 마는 재기가 결코 될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어디에서나 기꺼히 받아들여지고 있는것은 아니나, 그러나 지금도 역시 정당한 (richtig) 것이라 하겠읍니다. 현 연방정부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떠한 연방정부 보다도 신뢰심을 바탕으로 하는 이해의지 (意志) 를 가진 정부 (eine Regierung des glaubhaften Verständigungswillens) 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비롯하여 대며 편협하게 몰아대어 과소평가 해버리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에 대하여 나는 단지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질 수 있겠읍니다 :

그렇다면 냉전의 얼음같은 분위기 (das eisige Klima des kalten krieges) 는 유쾌한 분위기 였는가? 라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입장에서 출발하여 우리는 광범위한 대화 (Dialog) 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 대화가 정치적인 협정이나 협약 (Politische Vereinbarungen) 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는, 이 대화가 앞으로 어떠한 진척을 보일 것인가의 여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이 대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권력정치상의 규모의 차이와 서열 순서에 따라서 모스크바 당국과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시발점으로는 상호간 불가침조약 (gegenseitiger Gewaltverzicht) 을 체결하자는 독일측의 제안이 있었으며, 이것은 일관성있는 요소 (ein Element der Kontinuität) 로서 취하여 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마는 처음 행하여진 몇차례의 회담에서 우리와 소련사이에 미해결로 놓여있는 모든 정치 문제들을 다루는 토론 (Diskussion) 으로 급히 확대되어 나갔읍니다.

《소련과의 회담》 (Gespräche mit der Sowjetunion) 소련과의 회담이 간단하게 될것이며, 빠른 시일안에 결과를 얻게 될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이와는 반대로 대소 회담은 복잡할 것이며, 빠른 시일내에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정당하다 (richtig) 고 하겠읍니다.

이 때소 협상의 경과에 관하여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철저하게 비밀에 부친다는 약속이 행하여 졌습니다. (Strikte Vertraulichkeit vereinbart), 이러한 점과 그리고 이 어려운 시도가 지루하게 오래 끌게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그밖에도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정치적 견제세력 (Politische Gegenkräfte) 들에게는 여러가지로 회의심 (Spekulationen) 과 특정한 의도를 꾸며대는 일 (Unterstellung) 이 가능케하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얼마전에는 쏘련 정부가 우리로 부터 민족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평화적 노력을 포기할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트려져서 나돌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포기란 것은 맑스주의적 관점에서도 반 (反) 역사적일 것이며 (antihistorisch), 이를 모든형식을 갖추어 선언한다는 것 (즉 이러한 평화적 노력을 포기한다는 선언) 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정부로서는 그 어떠한 독일 정부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기대조차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점을 쏘련 지도자들도 알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독일 문제에 내포되어 있는 모든 모험적인 요소들 (alle in der deutschen Frage enthaltenen Risiken) 은 불가침 조약 (Gewaltverzicht) 을 통하여 가리어질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점을 쏘련지도자들은 또한 알고 있으며, 불가침 조약이 체결되어 그 효력을 발생하게된 뒤에는 독일의 두 부분사이의 접근이라는 것은 이에 관련되는 모든 당사국들과의 합의와 양해하에만 사실상 가능하거나 아니면 전연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쏘련 지도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밖의 다른 문제들에 관하여는 지금은 기다려 관망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독·쏘 회담 (das deutsch-sowjetische Gespräche) 이 모든 공격형식을 갖춘 협상으로 진전되어나갈 때까지 우리가 보기에는 아마도 일이 곧 이렇게 되어져 나갈 것으로 보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모스크바 커뮤니케》 (Moskauer Kommuniqué) 1969년 12월에 있었던 모스크바 회의에서는 새로 수립된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와 이 정부가 내린 처음의 정치적 결정들에 관하여는 우선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듣고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진영의 정치적 전략 (die politische Taktik) 이 그동안 좀 분명해 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스크바 회담의 종결 커뮤니케로 말할것 같으면 그 형식이 유연한데가 있으며 (flexibel), 우리에게 대한 극단적인 요구의 제

거나 주장 (extreme Forderungen an uns) 이 카바되어 지고 있다는 점과 그러나 이와 같은 극단적인 요구가 전적으로 배제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지금까지 동부진영에서 주장해오던 요구들 중에 어떤 것은 더 이상 관계개선에 절대적으로 선행해야될 조건으로는 내세워 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사회주의 국가들과 독일 연방공화국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간의 관계의 발전에 선행조건으로 내세우던 이들 여러 주장들은 지금에 와서는 더 이상 극복될 수 없는 조건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와의, 쌍무적 접촉 (bilaterale Kontakte mit uns) 은 이전에 금지되었던 것이 아니며, 동부 베를린 (즉 동독측) 과 벌리고 있는 우리의 대결이 절정에 달했을 때도 그러하였으며, 지금도 또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방 진영과의 긴밀한 관계와 의견조정을 유지하면서 쏘련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다른 기타의 와르샤와 동맹 가맹국들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그리고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동독=DDR) 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똑같이 (Geeichmaßen) (즉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다른 쪽에 대한 정책을 저버리는 일 없이)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 세계층에 걸치는 차원을 유기적으로 절충시키는 일은 그야말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쌍방의 관계 (die bilaterale Beziehungen) 를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개선해 나가는 일이 없이는, 그리고 상호관계의 조건 (die atmosphärischen Bedingungen) 을 맑게해 둠이 없이는 전 구라파 문제들 (die gesamten europäischen Probleme) 을 영속적으로 해결하는 일 (eine dauerhafte Lösung) 에 우리는 결코 접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 들어서는 첫 단계에 우리는 이제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이것이 이전의 형편에 비추어 보아 아무런 진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포올랜드와의 회담》 (Gespräch mit Polen) 포올랜드 인민공화국과의 정치회담이 일주일내로 시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일과 포올랜드 양국간에 제재되어 그 해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있는 모든 문제들에 관하여 이야기할 준비가 양측이 다같이 되어 있습니다.

독.파 관계의 정상화가 오래 계속되는 회담의 과정에서야 비로소 그 성취

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독.파 양국은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몇달동안 지금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경제 관계의 확충에 대한 협상이 또한 이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이 경제 관계의 확충에는 산업과 공학 기술상의 협력, 차관의 제공등도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특별히 중요성을 갖는 정치회담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다루어 질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문제도 포올랜드의 서부국경이라는 핵심적인 문제에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처음부터 포올랜드와 솔직 정직하게 (freimütig), 그리고 양보할 뜻을 가지고 (mit dem Willen zum Kompromiß) 이들 제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회담에서 우리의 선의의 뜻을 의심할 여지없이 명확히 표현해낼 마음의 결심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회담상대국인 포올랜드로부터도 또한 선의의 뜻의 표시가 있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처하여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협상은 오래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협상은 동부 진영과 광범히 하게 이해를 기하는데에 역사적인 돌파구 (eine historische Bresche) 를 열어 놓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협상은 언젠가에 가서는 독.불화해 (die deutsch-französische Aussöhnung) 가 차지하는 것같은 역사적 차원을 갖는 독파 화해 (die deutsch-polnische Aussöhnung) 에 까지 끌어 올려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제 측면 (Perspektive) 이라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 측면은 관계가 앞으로 발전되어 나감에 있어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DDR) 의 집권자들에게는 그들이 맑스주의적인 부도덕 (die marxistische Immopilität) 에 언제까지나 고집하여 머물러 있는 것을 또한 점증하여 어렵게 할것입니다. (즉 이러한 관계의 개선이 이루어 진다면 농독의 집권층도 마땅히 이의 영향을 받으므로써 지금까지와 같이 그러한 맑스주의적인 부도덕에 머물러 있을 것을 고집하고 나설 수는 없을 것이다.

《농독권에 입각한 협상의 제안》 (Angebot gleichberechtigter Verhandlungen.) 우리는 독일의 다른 부분 (동독) 에 대하여도 이해하려는 뜻 (Verständigungswille) 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천명해수기 위하여 여러가지로 노력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독일 민족 (국가) 내부에 (innerhalb der

einen deutschen Nation) 하나 제 2의 국가로서의 (als ein zweiter Staat)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사실상의 존재 (die faktische Existenz der DDR) 를 인정하고 들어 갑니다. 이 제 2의 독일 국가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일이 되고 말것입니다 (wäre absurd). 위에 말한 사실상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존중한다고 하여 그러나 이것이 이 제 2 독일 국가의 정치 질서 (die politische Ordnung) 와 사회형태 (Gesellschaftsform) 에 대하여 우리가 동의 (Zustimmung)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책임있는 협정의 체결에 기여할 동등권에 입각한 협상을 할것을 새삼 되풀이 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한가지 점만은 제한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 (Bundesrepublik) 에 대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DDR) 의 관계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한 독일 연방공화국의 관계가 그러하드시 절대로 (인제라도) 타국 (他國 = ein fremder Staat) 즉 외국 (Ausland) 일수는 없다는 점을 제한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두 (독일의) 국가 (beide Staaten) 가 합쳐서 독일 (민족) 국가 (die deutsche Nation) 를 이루며, 평화적인 질서에 입각하여 정리되는 하나의 구라파 (ein friedlich geordnetes Europa) 에 있어서 (민족) 국가적 통일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에 입각한 국가 선택 (die langfristige Option auf die nationale Einheit) 과 그리고 자결권의 행사 (die Ausübung des Selbstbestimmungsrechtes) 는 포기되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들 두 국가간의 관계는 국제법적 성격 (Völkerrechtliche Natur) 을 띌수는 없습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DDR) 정부의 태도는, 그들이 바라는 작장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단 그 한가지 목표를 성취하고자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자는데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독일 사람들이 병존하여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그 삶이 좀 쉽게 되도록 우리와 함께 노력을 가하므로서 전체 구라파의 긴장의 완화에 기여하자는데 목적이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해명하는 것이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몇주간의 동부 베를린의 국영 및 반관영 언론신문들을 고찰하여 보면, 맑스주의적인 해결을 보다하더라도 극복되어질 수도 없을 여러가지 장애물들이 놓이게 될것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동독에서는 거의 매일 같이 우리들과의 관계정상화에 아마도 반대되는 요소라고 생각되어서 이제 제거되어지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점들을 들기도 싫은 교훈조로 우리들에게 제시

하는 것처럼 계산해 내 보내고 있다. 그 제거되어야 할 요소들이란 독일 연방 공화국의 법률에 밝혀진 문제에 대하여 이루어진 국제법상의 제 조약을 철회하라는 데서 헌법(기본법)의 개정(Grundgesetzänderung)에 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대체 동·서 양독 쌍방간에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이들 위에 언급한 일들이 선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독일인들이 도대체 이렇게 하여서 평화와 긴장의 완화를 회구하는 세계에서 호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민족(국가)의 통일》(Einheit der Nation) 역사는 명령되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Die Geschichte läßt sich nicht kommandieren) 독일어를 사용하는 스위스인들과 오지리인들을 끌어대는 것(die Berufung auf die deutschsprachigen Schweizer und Österreicher)은 도대체 또 무엇입니까! 이들은 아무리 그들이 가진 문화가 독일에 문화라 할지라도 역시 스위스인이요 오스트리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독일(민족)국가(die deutsche Nation)의 정치개념에 끌어 들이려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동독의 시민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국적(Nationalität)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답변할가요? 그들은 오늘날 그리고 우리 독일 연방공화국의 시민이 그러한 것과 꼭 마찬가지로 2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들은 독일인(Deutsche)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 이상의 것인 우리 독일어는 사실 독일어라는 말 이외에는 아무런 다른 표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문화적인 면과 문학적 면에 걸쳐서 뿐만 아니라 철저히 정치적인 뜻으로도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가 계속하여 독일의 국가적 통일의 재 실현(die Wiederherstellung der staatlichen Einheit Deutschlands)이라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비난하고 있습니다.

1월 15일과 16일에 있었던 연방 공화국의 국회 토론이 있는 뒤인 지금도 나는 이러한 말을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족(국가)의 통일(die Einheit der Nation)이라는 점과 독일인의 자결권(Selbstbestimmungsrecht)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는 장애에 속하는 국가적 통일의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정부 여당간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일인들

제외하고는 이러한 독일의 국가적 통일을 도대체 실제로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국가적 통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가능할지도 알 수 없는 일인데, 설사 가능하다고 치더라도 먼 장래에 그리고 거의 전망도 할 수 없으리만큼 먼 장래에나 생각할 수 있을 것이 이 국가적 통일인데, 무슨 독일정책에 관계되는 어떠한 이니시아티브를 취할 때마다 첫째 소망으로 이 독일의 국가적 통일이라는 문제를 크게 떠들고 나선다고 하여 그것이 무슨 실제적 목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에 대하여 (Sgegenüber unseren Brüdern.) 역시 정직한 태도를 취하고자 하며, 그들에게 대하여 우리는 오늘도 성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오랫동안 성취할 수 없을 희망을 정치의 대용품 (Politik-Ersatz) 으로 부당하게 기대하고 나설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할 의사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어떠한 진보를 이룩한다는 것을 포기하는 정책이 아닌 이상, 정치란 것은 한가지 고집만 되풀이 하고 남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추상적 개념의 나열과 극장난을 일삼아서, 어쩌면 앞으로 닥아오는 1년안에 전체 구라파의 접근이 가능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 방향에 역행하여 나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고립 위험》 (Gefahr der Isolierung) 이 몇주일동안 우리 나라에서 말해지고 글로 쓰여져 언급되고 있는 것들중에 어떤 것은, 만일 이러한 것들이 정부의 정책으로도 되어 진다면, 이것은 외교 정책상의 고립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될 것이며, 이 고립으로 부터 다시 빠져 나온다는 것은 보통 예절을 지켜서 노력한다면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중대한 외교정책상의 고립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립에 빠져 들어갈 가능성은 동독의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위험적인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이 받아 들여질 수 없는 조약의 초안 (inakzeptable Vertragsentwürfe) 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려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하여 협상을 개최하기를 계속하여 고집한다면, 그들은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은 외교정책상의 고립에 빠져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의견 교환》 (Meinungsaustausch)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내각 위원회 의장 (der Vorsitzende des Ministerrats der DDR) 에게 보낸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의 편지는 하나의 이치에 맞는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개 개별문제의 확정에 관한 것을 다루기 전에 우선 의견교환부터 시작하는 것이 국제 관례인데, 연방 수상의 편지는 이 국제 관례에 따르는 방향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제안을 그 무슨 논법을 쓰더라도 거절하고 나선다는 것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에게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벌써 오래전 부터 적들에 의하여 실행되어 오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 지연전술을 우리는 물론 생각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우리와 이야기하는것 자체를 거부하고 나온다면은, 쌍방간에 노력을 다하는 것 (Bilaterale Bemühungen) 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모르고 이를 참기어려울 정도로 과소평가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쌍방주의 (der Bilateralismus) 는 다원적인 협동을 해나가는 시대에서도 (auch im Zeitalter der multilateralen Zusammenarbeit) 불가결한 것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서방세계에서 그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칙은 대등부진영 관계에도 또한 적용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두개의 상대국들 사이에서 쌍무적인 관계가 이루어 지지 않고 비타협적인 방향으로 관계가 발전되어 나간다면 (Bilaterale Intransigenz) 이는 다원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의견의 일치나 통일의 모든 기회를 파괴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두 당사자들이 그들 두 당사자들 에게만 관계되는 특정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처리할 수 없거나 혹은 그렇게 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다수의 파트너들이 모여서 이에 대한 사변적인 논의를 한다고 하여야 이러한 회의로는 이 쌍방간의 문제는 더욱 해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되풀이 하여 사회주의 진영에 속하는 국가들에게 항상 말하여 져야 할 것이며, 그들에 의하여 추진되어지고 있고 또 우리도 원칙적으로 환영하는 구라파 안보회의 (Europäische Sicherheitskonferenz) 와 관련하여 특히 그러하다 하겠습니다.

단결 (Solidarität) 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안전 (die allgemeine Sicherheit) 을 높일 수 있는 것이므로 긍정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서든지 와르샤와 조약 동맹내부에 있어서의 동맹간의 단결을 해칠 수 있는 일은 의식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결 (Solidarität) 이라는 것은 쌍무적인 관계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최대 요구 (Maximalforderungen) 를 대량적인 압력수단을 써서 관철시키는데 약용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침체 (상태) 의 극복》 (Überwindung der Stagnation) 전체 구라파의 전진 (발전) 을 바란다면, 위에 말한 여러가지 원칙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행한 것은 서방진영에도 단결 (Solidarität) 과 유대 (Zusammenhalt) 가 있으며, 이 단결과 유대는 현 연방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음은 엄연한 사실이다.

- 연방공화국 수상께서 자기의 국정 보고서에 분명히 언급한것처럼 - 오히려 지난 3개월 동안에 행하여진 정책을 들어켜볼 것같으면 대동방정책면에서 보다 대서방정책면에서 더욱 적극적인 면 (aktiv) 이 있었다는 점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연방정부는 장래에 관계되는 좋은 결과를 위하여 독자적인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몇가지 일을 성취하였으며, 이는 계속 지속되어 나갈 것입니다.

벨. 하아그에서 개최되었던 정상회담과 그리고 구라파 공동체의 회의에서 구라파 통합작업 (das europäische Einigungswerk) 이 처해 있던 침체상태가 중극적으로 극복되었습니다.

구주 공동시장체의 문호개방을 통한 확장과 내적 확충을 위한 일이 드디어 행하여 졌습니다 - 여기에는 불란서도 참가하였습니다. 영국과 기타 구공시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국가들과의 구공시 가입협상은 구주 공동시장 6개국과 위원회에 의하여 구체적이고도 박력있게 준비되었던 것이므로 영국을 비롯한 이들 가입 희망국가들은 예상보다 빨리 금년에 가입될 수 있을것입니다. 동시에 경제연합 (Wirtschaftsunion) 과 화폐연합 (Währungsunion) 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농업자금의 조달 (Agrarfinanzierung) 과 구주공동체 재정조달과 같은 복잡하고도 어려운 문제들에서도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 졌으며, 이로 인하여 내적 확충을 위한 최종단계에 돌입하는데 방해되는 본질적인 저해요소들이 제거되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이 모든것들이 오래 계속된 그리고 많은 힘이 든 협상들을 통하여 실현되어진 것이며, 이 일련의 협상들의 결과는 결국 정치적 협동을 위한 의지 (意志) 를 또한 결정적으로 강화시켜 놓았습니다. 구라파는 생존해 있으며, 형성되어

지고 있습니다. (Europa lebt und formuliert sich) 힘차게 결합하고 한 마음으로 구라파의 분할을 극복하기 위하여 나설 구라파의 능력은 불굴의 것이며, 지난 7년이 흘러가는 동안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일체감 (das Zusammenhörigkeitgefühl) 은 벌써 6개국의 범위를 넘어서 쉼어 나가고 있으며 이는 지난번의 서구라파 연맹 (WEU) 회의에서 분명하여 졌습니다. 점차적으로 정력 (die politische Kraft) 은 집합된 경제력 (die integrierte Wirtschaftskraft) 에 일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력은 이 대륙이 지난 역사적 역할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 1969년 12월에 있었던 북 대서양 동맹 기구의 각료회의 》 (Ministerkonferenz der NATO 기세 Dezember 1969) 1969년 12월 4일과 5일에 있었던 나토 (NATO) 각료회의 또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치적 의견의 일치를 이룩했다는 점을 본인은 여기에서 상기시켜 두고자 합니다. 북대서양 동맹기구가 이 기회에 또한 공동의 방위태세 (Verteidigungsbereitschaft) 를 고도로 유지해 나간다는 당연한 임무를 인식하는 것 이외에 이 기구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 긴장완화의 노력을 위한 책임을 크게 강조한것은 특징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동 서 관계의 현황 (der Stand der Ost-West-Be-ziehungen) 이 이 나토 각료회의 토의의 중점을 이루었으며, 나는 - 이후에도 여러 다른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러하였던 것처럼 - 여기에서 나의 우방국 동료들에게 현 연방정부의 독일 정책과 대동구 정책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이 우리의 모든 우방국들로 부터 지지되어 지고 있으며 함께 뒷받침되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이미 그당시에 확실히 해 둘 수 있었습니다. 이들 우방 동맹국들은 우리가 행하고 있는 두 국가간의 불가침조약 체결의 노력 (unsere bilateralen Gewaltverzichts-Bemühungen) 이 여러나라가 함께 공동으로 맺는 불가침조약을 위한 합의 (Multilaterale Gewaltverzichts-Vereinbarungen) 보다 우선하여 행하여 져야한다는 점에 우리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 구라파 안보회의 》 (Europäische Sicherheitskonferenz) 농무 진영이 새세운 구라파 안보 회의를 개최하자는 제안 (der Bstliche Vorschlag einer europäischen Sicherheitskonferenz) 을 삼안하여 불패적 이것은 중요

한 의의를 갖습니다. 이 제안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 나는 이 점을 여기에서 우리를 비난하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크게 강조하여 말해 두고자 합니다 - 우리의 우방국들의 태도와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Voll und ganz) 일치하고 있습니다. 두 국가간에 이루어져야 할 진보가 전연 성취되지 않고 이러한 안보회의에 임한 다른 것은 아마도 무의미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같은 안보회의 같은 곳에 전부 임하였다가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때에는, 이것은 모든 열을 단지 더 악화시키고 말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회의는 신중을 기하여 잘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안되고, 이 안보회의에는 물론 미국과 캐나다로 참여해야함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하여진 이러한 군국 안보회의를 위한 의사일정에 관한 제안을 볼것 같으면 너무나 불확정하여 애매할 뿐만 아니라 안전(안보)의 향상에는 어느 정도도 충족할 수 없는 외면적인 문제들(Periphere Fragen)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결의 극복》 (Überwindung der Konfrontation) 구라파의 안전에 관하여 이야기 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들이 (Multilateral) 자리를 같이 한다면, 그 주 목적은 역시 양 진영 체제간의 반 이성적인(反理性的) 대결의 극복이어야 하며, 또한 현상 (Status quo) 을 그냥 묶어두는 것이 그 목적이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아무런 실제성 없는 결과가 없는 일반적인 불가침 조약 (ein allgemeines Gewaltverzicht ohne praktische Folgerungen) 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닌것입니다.

《평화의 연구》 (Friedensforschung)

신사 숙녀 여러분!

한가지 자그만한 여담을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평화의 연구라는 얘기가 아주 많이들 사람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이 평화의 연구를 위하여 곧 많은 일이 행하여 지기를 나는 매우 바라고 있습니다. 1966년에 스톡홀름에 창설되어 스웨덴 정부로부터 재정부담이 행하여지고 있는 국제 평화 연구소 (das Internationale Friedensforschungsinstitut) 가 최근 기 세계군비와 군비축소에 관한 1968/69년 년보 << (Jahrbuch über Welterüstung und Abrüstung 1968/69) 를 발간 하였습니다. 이 책은 아주 자주적인 서적이라 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이 책에서 군비에 관한 것을 살펴 볼것같으면 1968년 한 해에 세계에서 군비 (Rüstung)를 위하여 지출된 돈은 1천 5백 9십 3억달러 (159,300,000,000)였습니다 - 이 액수는 1965년의 것과 비교해 보면 30%가 증가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이 1천 5백 9십 3억 달러중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와 와르샤와 동맹기구가 지출한것이 전체의 85%를 차지 합니다. 여기에 곁하여 말씀드릴것은 1965년에서 1968년 사이에 독일 연방공화국 (서독)의 준비 예산 지출은 매년 4%씩 줄어 들었으나, 이와 동일한 기간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동독)의 군비 지출은 매년 27%씩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숫자는 여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도록 하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이 광범위한 해결책을 모색해야할 절호의 기회 (hohes zeit für über greifende Lösungen)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우방 동맹국들과의 의견 조성을 거쳐서 구라파의 안전 (안보)이라는 테마에 대한 우리의 독자적인 제안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구라파에서 대결 (Konfrontation)을 철폐 (Abbau)하는 일이 시작되도록 하여야 하며, 양대 세력체제 (die beiden Machtsysteme)가 접근하는 데서로 이 대결을 중지시키는 일이 시작되어야 겠습니다. 구라파의 제 상황을 전쟁이라는 수단을 써서 질서를 이룩해 불려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동서양 진영간에 아무도 없을것입니다. 구라파 제 민족의 안전 (안보) 필요성 (das Sicherheitsbedürfnis)은 평화적인 접근 (friedliche Annäherung)을 선대로 필요로 합니다 (즉 구라파의 안전 (안보)은 상호간의 평화적 접근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를 진정으로 반대하고 나올 사람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구라파의 평화질서》 (Europäische Friedensordnung) 그러므로 구라파의 평화질서 생각은 더 이상 하나의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평화질서 생각을 최초의 조출한 결과를 넘어서 정치적 내용으로 추만시키고 현실이 되도록 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독일 연방공화국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살고 있는 독일인들은 여기에서 특별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독일국가들의 외교정책은 구라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희망 (Wünsche)과 동경 (Schnsüchte)에 부응하는 것이어야만

될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교정책은 동맹체제의 육각임계 순응해야 할것이며, 이성적(理性的)인 양보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외교정책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 이상, 이 동독은 아무리 국제적으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을려고 희망하더라도 허사가 될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대카니즘이 위에 언급한 것들이라 하겠으며, 독트린으로 이에 도움이 되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구라파 정책》 (Europäische politik)

우리의 정책은 그 의미를 아주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하나의 구라파 정책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책은 제 민족의 균형과 평화적 접근을 가능케 하고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협동을 위한 것입니다. 이 정책은 현실적(realistisch)이며, 또한 동시에 자 의식이 있는 (Selbstbewußt)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정책은 모든 당사자(국)들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되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한다(realistisch denken)는 것은 추진되어져 가는 어떠한 이니시아티브에서도 실패의 가능성도 예상해 넣는다는 것을 뜻한다.

독일 연방공화국의 한 연방정부가 전체 구라파 접근이라는 어려운 시도를 해 나감에 있어서 어떻게 항상 좋은 성과나 결과만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현 연방정부는 성과(Erfolge)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 성과를 성취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도 버리지 않고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 연방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

즉 만일 독일 연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두 국가간의 쌍무적 노력(bilaterale Anstrengungen)이 동부 진영에서 비 타협적인 태도(Intransigens) 때문에 봉쇄당한다면, 이는 독일 연방공화국이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그리고 서방 동맹체제의 단결을 약화시키는 것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책이 내포할수도 있을 위험(Risiko)을 방지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다했습니다. 어떠한 위험도 무릅쓰지 없이 무슨 일을 할 때는 태도를 취한다면은 우리의 현재 입장으로는 아무런 외교정책을 수행해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험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위

힘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독일 연방공화국 언론 공보처 판보 - 1970년 1월 30일 자의 "본" 진행》
(Bulletin des Presse-und Informationsamtes der Bundesregierung, Bonn,
vom 30. Januar 1970)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DDR) 내각수반 (수상)

슈토프 (Stoph),

본의 브란트, 독일연방공화국 수상에게 서한 (1970.2.11)

매우 존경하는 연방공화국 수상 귀하!

(Sehr geehrter Herr Bundeskanzler !)

여기에 본인은 1970년 1월 22일자의 귀하의 서신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동독) 내각 (위원회) (Der Ministerra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은 이 귀하의 서한과 그리고 귀하가 1969년 10월 28일과 1970년 1월 14일에 본의 연방공화국 의회 (국회)에서 행한 성명 (Erklärungen)을 검토하였습니다.

《동등권과 비차별대우 원칙》 (Gleichberechtigung und Nicht-diskriminierung)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 (Die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는 동등권과 비차별 대우 원칙에 바탕을 두고 진행되어져야 할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 공화국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간의 협상을 시작하는데 대하여 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힌 1970년 1월 22일자의 귀하의 제안을 접수하였습니다. 동등권과 비차별대우의 원칙을 물론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DDR)과 독일 연방공화국 (BRD)이 상호간에 양측이 현재 주어져있는 상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일, 즉 국제법상으로 동등한 권리를 갖고 주권을 갖는 주체 (gleichberechtigte, souveräne Subjekte des Völkerrechts)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조약의 초안》 (Vertragsentwurf) 귀하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국가회의 (Staatsrat)의 Walter Ulbricht 의장이 행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에 동등권에 입각한 관계를 수립할것에 대한 제안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본인은 유감스럽게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제안은 이에 해당되는 조약의 초안과 함께 1969년 12월 18일자로 독일 연방공화국 대통령 Gustav Heinemann 박사에게 전하여 졌습니다.

하이네만(Heinemann) 박사는 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국가회의 의장의 서한에 대한 회답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국가회의 의장에 의하여 전달된 제안들을 검토할 것이며, 일의 성격상으로 보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도로 신속하게 이에 대한 견해와 태도를 표명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조약 초안은 이제 독일연방공화국에 전달되어 진지 거의 2개월에 가까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연방공화국 대통령이 약속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제안에 대한 독일 연방공화국의 의견 표시는 여태까지 행하여 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법상의 승인》(Völkerrechtliche Anerkennung) 오히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동등권에 반대되는 일련의 조치들이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취하여 졌습니다. 동등한 권리를 갖는 동.서독간의 관계를 수립하는 일과 불가침 조약에 대한 협상들 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국제법적으로 승인하는 바탕위에서만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이 제안한 조약의 초안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이 국제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제 원칙과 규범에 기초를 두어, 그리고 어떠한 차별 대우를 하는 일이 전연없이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정상관계를 수립할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는 무엇보다도 주권을 가진 동등권, 영토상의 절대권의 존중, 국경의 불가침성, 내정문제에 대한 불간섭과 상호간에 서로 유리한 이점을 결과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는 등의 일련의 원칙에 그 바탕을 두는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법에 의한 병존》(Geregeltes Nebeneinander)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구라파에 있어서의 평화의 보장과 법에 의한 규정된 병존(ein geregeltos nebeneinanderleben)이 가능케 되고 독일의 두 국가가 선린의 관계를 맺고 주권국가로서(Als souveräne Staaten) 병존하는 것이 두 독일 국가간에 가능토록 하게 하는 최 효과적인 기여를 하게 될것입니다.

- 제 2 차 세계 대전의 결과로 구라파에 생겨난 국경의 승인에 관한 문제이든,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의 국경의 승인에 관한 것이든 그리고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의 국제연합에 동시 가입 요구이든 간에 -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이 제안한 조약의 초안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조항들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뿐만 아니라 독일 연방공화국의 이익을 위하여도 그리고 구라파의 안전을 위하여도 적절한 것입니다.

본인은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즉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가 제안한 조약의 초안은 완전한 동등권과 비차별 대우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며, 두 독일 국가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von gleichen Rechten und Pflichten beider deutscher Staaten ausgehen) 이 조약의 초안에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을 이롭게 하고, 독일 연방공화국을 불리하게 할만한 규정이나 조항은 전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바입니다.

《평화적 공존》 (Friedliche Koexistenz)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규범을 바탕으로 하여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이 두나라의 관계가 조약을 통하여 규정되므로써 그 정상관계를 수립할 수 있기위하여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내각수반 (수상) (der Vorsitzende des Ministerrate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과 독일 연방 공화국 수상 (der Bundeskanzler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이 직접 협상을 위하여 만나는 것이 (Zu direkten Verhandlungen zusammentreffen)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평화나 전쟁이나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며 (Probleme von Frieden oder Krieg),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에 사는 사람들이 창조적인 활동을 해나가는 것이 보장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Um die Gewährleistung der Sicherheit für die schöpferische Arbeit der Menschen in der DDR und der BRD)

《접촉에 대한 제안》 (Vorschlag einer Zusammenkunft) 일의 건박성파 이 일이 차지하는 기본적인 중요성으로 보아 우리 양측 (Unser Zusammen-

treffen)이 될수록 빠른 시일안에 만나 회담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이신 귀하에게 1970년 2월 19일이나 26일에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수도인 베를린에 있는 정부청사(Haus des Ministerrat)에서 오전 11시에 만날것을 정중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시간과 장소에 관하여는 본인은 귀하와 직접 전화로나 혹은 텔렉스로 의견교환을 하여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측에서는 이 회동에 의무장관 Otto Winzer (오토 빈취) 씨도 동석할 것입니다.

경의를 표하면서
(서명)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수상 슈토프

1970년 2월 11일 베를린에서

1970년 2월 19일 자로 본(Bonn)에서 출간된

《독일 연방공화국 언론공보처 관보》에서

독일 연방공화국 브란트 수상,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슈토프 수상에게 서한

(1970.2.18)

수상께서 책임 장관인 호르스트 엠케 (Horst Emke) 교수는 1970년 2월 18일에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의 회답서한을 다음과 같이 텔레크스로 (Mit Fernschreiben)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수상에게 전하였습니다.

베를린의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수상실 차관 미하엘 코올 (Michael Kohl) 박사 귀하

본인은 1970년 2월 11일자의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수상 서한에 대한 독일 연방공화국의 수상의 회답을 다음과 같이 귀하에게 전하게 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970년 2월 18일에 본에서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

(Der Bundeskanzler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onn, den 18, Februar 1970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수상 일리 슈토프씨에게

베를린.

아주 존경하는 수상!

1970년 2월 11일자의 귀하의 서한과 그리고 그 서한에서 밝힌 회답에 대한 귀하의 초청 (Einladung) 을 감사히 받아 보았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 순간에 귀하의 편지가 내포하고 있는 세부사항에 대하여 언급하고 따라서 양측의 입장을 거듭하여 진술하는 점에만 국한하는 일련의 편지 교환을 계속하는 것이 이롭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사전 전제, 조건들 (Vorbedingungen) 을 본인은 수락할 수가 없습니다.

《 두 독일 국가들의 관계 정상화 》 (Normalisierung im Verhältnis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독일에 있는 두개의 국가들의 관계에서 정상화의 시초는 구라파에 있어서의 긴장의 완화와 안전을 도모하는데에 양측이

다 같이 기여하는 것으로 부터 출발하는 것이어야겠습니다.

본인의 견해로는 서로를 분리하고 있는 것들 (das Trennende) 을 도로 합치게 하고 양쪽을 잇는 방법을 모색하는 시도를 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조약을 통하여 협의에 도달하는 것도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상을 시작하는 일이 가능케 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인은 귀하와 만날 용의 (준비) 가 되어있으며, 이 회동에는 프랑케 (Franke) 장관 이외에도 다른 몇사람의 자문위원들 (Berater) 이 본인을 수행하게 될것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제안한 일자는 국회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예산심의 일자들과 중복됩니다.

그리고 국회의 예산심의 일자를 본인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상의 준비》 (Technische Vorbereitungen) 본인의 생각으로는 양측의 관리들 (Beamte der beider seiten) 이 2월 23일에서 27일까지 사이의 주간에 이 회동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준비들을 의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모임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만날 날자를 최종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3월의 둘째 주나 혹은 3째 주의 둘째 날을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우리의 두번째 회합은 본 (Bonn) 에서 개최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경의를 표하면서

(mit vorzüglicher Hochachtung)

연방공화국 수상

빌리 브란트

귀하가 이 회답서한을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수상에게 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의를 표하면서

연방공화국 수상실 책임장관 엠케 (Emke)

1970년 2월 19일에 본에서 발간된

《독일 연방공화국의 언론 공보처 관보》에서

(독일) 연방정부 대변인의 성명 (1970. 2. 18)

독일 연방정부의 대변인 콘라트아알리스 차관은 1970년 2월 18일에 연방정부 각의에 이어서 본에서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내각수반(수상)에게 보낸 서한에 표명된 회담용의 표시는 명확히 의욕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분리된 요소들(das Trennende)을 다시 합치고, 쌍방을 연결하는 요소들(das verbindende)을 모색하고 앞으로 조약을 통한 합의약속(vertragliche Absprachen)에 까지 달할 수 있는 협상을 시작시키고자 하는 의욕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조약을 통한 합의약속은 여러 협상을 통하여 이루어 지는 결과로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지, 그러나 이것이 협상을 위한 출발점(der Ausgangspunkt für Gespräche)이 될수는 없다는 지금까지의 독일 연방정부가 취하여온 입장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내독 관계의 규제》 (법제화) (Regelung der innerdeutschen Beziehungen) 슈토프씨에 대한 이러한 회담과 만나는데에 대한 동의를 하므로써 독일 연방정부는 - 이 내한에 설명되어 있는것 처럼 - 독일에 있어서의 두 국가간에 시작되는 정상화는 구라파에 있어서의 긴장의 완화와 안전의 도모에 양측이 다 같이 기여하는 의의를 지닐 수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여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월 28일에 행한 정부선언에서 그리고 1969년 10월 30일에 연방공화국 국회에서 행한 연방공화국 수상의 설명과 선언에서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가 생각하는 내독간의 관계를 법을 통하여 정하여 놓는데에 있어서의 특수성(die Besonderheit der Regelung)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연방공화국 수상은 독일에 있어서의 (양독간) 이해의 가능성과 그리고 국제적인 영역에 까지 뻗어나가는 문제들간에 서로의 관계가 있음을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베를린 문제》 (Berlin-problem) 베를린 문제도 위에 언급된 문제들과 모종의 관계가 있는데, 이 베를린 문제는 곧 있게 될 베를린과 독일 전체에 관계되어 있는 4대국 협상의 호의 대상이 될것입니다.

이 일련의 유기적 관계들은 슈토프씨와 곧 있게 될 회담에서도 토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 확립을 위한 기여》 (Beitrag zur Festigung des Friedens)

세계의 모든 곳에서 우리의 이와같은 집요한 노력은 평화의 확립을 위하여 기여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독일인들이 그들 스스로가 서로 이해하려는 그 첫 시도를 하는 최초의 시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관하여는 외국에서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남의 힘을 빌어서 독일인 상호간의 이해를 가능케 한다거나 혹은 남의 영향이나 주도에 끌려서 독일인들이 서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이 시도의 주체가 되어 그 첫 노력을 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역주)

독일 이외의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 회담의 추이와 진전을 관심을 갖고 주시할 것입니다. 세계의 나라들은 독일의 두 부분(국가들)을 평가 판단함에 있어서 양측이 이 이해를 도모코자 하는 시도적 노력을 어떻게 인류와 평화를 위하여 다해나가고 이에 임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1970년 2월 19일자 본에서 발간된

《독일 연방공화국 언론-공보처 판보》에서

프랑케 장관,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의 회담에 응할 용의 (준비)

(1970.2.19)

독일 연방공화국의 에곤 프랑케 (Egon Franke) 내무 장관은 1970년 2월 19일에 북독 방송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터뷰를 가졌다 :

- 질 문 -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연방공화국 수상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수상과 만날 용의 (준비)가 있다고 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 모임이 실제로 이루어 진다고 하면 브란트 수상은 에곤 프랑케 내무장관을 이 회담에 대동하고 가게 될 것이라는 것도 이제 벌써 확정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프랑케 장관 (님) :

행정부 수반간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수상의 제안에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가 응하게된 동기를 이루는 생각들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장관께서는 장관 차원에서 우선 회담이 행하여 지는 것을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각료차원의 회담 대표로 귀하를 내정했었던 것인데

- 답 변 -

《브란트 슈토프간의 서신 교환》 어떻게 하여 언젠가 한번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정부와 대화 (Dialog)가 이루어지게 되어질가에 관하여는 사실 그 윤곽이 확정되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다른측 (즉 동독측) 과도 정부차원의 협상을 행하려는 것은 독일 연방정부가 취하에 온 진지한 노력이었던 것이며, 이것은 지금도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이유로 브란트 연방수상의 첫 서한에 연방공화국의 프랑케 내무장관이, 이경우 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회담의 대표로 임한다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대하여 슈토프 수상은 회답을 하였으며, 자기는 이 회담이 개최되는 첫 모임에 바로 참석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연방공화국 수상도 이 모임에 참석하여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상황이 바뀌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서나 의견적인 일이나 혹은 이와 유사한 일들로 인하여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의 진지한 노력을 실패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연방공화국 정부는 합동협의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즉 이 회담보다 반드시 사전에 행하여져야 할 몇가지 해명할 문제를 끝내고서는 이 회담을 성취시키도록 하자는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질문-

장판넬 브란트 연방공화국 수상이 슈토프씨에게 보낸 텔렉스 서한(Fernschreiben)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전 전제조건은 나는 연방 수상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전 조건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로 쓰인것입니까?

-답변-

《사전 부담없는 회담》 (Gespräche ohne Vorbelastung)

그말은 양측이 일방적인 주장을 피력하여 교환하는데만 그치는 아무런 이로움이 되지 않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어떠한 사전 부담도 없이 (Ohne jede Vorbelastung) 회담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회담에서 협상이 발전되어 나갈 수 있고 거기에서 또한 조약이라는 것이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

귀하도 참석하게될 브란트 슈토프 회담의 규모는 귀하의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로 준비되어져야 하겠습니까? 이 회담이 있기전에 기술적인 진행절차만을 준비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은 이 예비회담의 취급범위가 이 규모(한계)를 더 초월하는 것이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답변-

《예비 회담》

《기술적인 전제조건》이라는 개념은 물론 문제되고 있는 전체를 표현해 내기에 그리 완전히 포괄적인 말이 못됩니다. 그런데 이 예비회담에도 역시 본 회담이 개최될 대략적인 기간을 정하는 일이 속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양측에게 다 같이 이 회담에 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고, 이렇게 하므로서 이 회담에 참석하는 양측이 동등한 지위(die Gleichwertigkeit der Beteiligten)를 분명히 인정받게 되는데에 중요한 요인을 이룰 것이라는 점을 물론 다시한번 강조하는 일도 이 예비회담의 대상이 될것입니다.

-질문-

야당인 기민당 기사당 원내교섭단체는 어제 성명을 발표하고 독일 연방정부는

이와같은 결정을 지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야당측의 성명이 귀하를 놀라게 하였습니까?

장관! (즉 예상밖의 일입니까?)

-대답-

《야당의 성명》

놀랐다 (Überrascht) 그는 말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이와같이 분명하게 지지의사를 표명할 것이라고는 사실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야당측이 이러한 지지 성명을 명확히 표명한것은 그만큼 더 인상적인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독일 관계문제에서 진척을 이룩해 내려는 이와같은 접촉 (Begegnungen) 을 하는것 이외에는 다른 가능성이라는 것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야당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취하여진 것이라고 봅니다. 야당측에 의하여 표명된 견해가 현 연방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계속하여 진척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중단됨이 없이 지켜진다고 할것같은면 이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장관님 환상은 금물이라고 경고를 하고는 있지만 브란트와 슈토프같은 양측의 수상이 만나는 것이므로 아주 떠들석한 회담인데 독일의 두 부분에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광범위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희망을 그리고 어쩌면 지나치게 과장된 희망을 갖게 할지도 모르는데, 필요한 경고는 해주지만 그것으로 그와 같은 희망과 기대를 갖는 것을 아마도 막을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장관의 생각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회담에서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그리고 장관 자신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답변-

《환상에 대한 경고》

나는 회담 (Begegnung) 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회담의 성과 (결과) 가 어떤것이 될것인가에 관하여는 나는 미리 예견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환상 (지나친 기대등) 을 갖지않고 있다는 사실은 첫날부터 강조해온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생겨난 희망들은 아주 용의주도하게 이 문제를 놓고 다루어온 결과라고 하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기대나 희망이 생기게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여건이 작용했다고 보겠습니다. 이 문장에 있어

서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여기에 행하여진 일이 없었으므로, 이제 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여기에서도 이제 무엇이 움직여 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느낌을 갖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기대 (Erwartung) 와 희망 (Hoffnung) 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것인지 그리고 도대체 언제라도 어떠한 결과가 성취되어질 수 있을가 등에 관한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전연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질 문-

만일 이 만남이 독일의 두 국가 (die beiden deutschen Staaten) 가 그들의 병존 (ihr Nebeneinander) 합리적으로 (이성에 압착하여) 질서있게 조직화해나가기 위한 일련의 협상들을 행할 서곡 (Auftakt) 이 된다면 그것으로 이미 하나의 성과 (ein Erfolg)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답 변-

일년반이나 2년 전과 비교하더라도 그정도만 되면 벌써 거창한 성과 (ein großartiges Ergebnis)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즉 1년 반이나 2년전에 이러한 회동을 할 용의를 표시하는 내용이 다루어진 서신교환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실제로 만나게 되고 또 솔직한 의견교환이 이루어 진다면, 사실 이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에 비교하면 거창한 일인 것입니다.

-질 문-

장관님, 지금 예정된 브란트 슈토프 회담에서 어떠한 언급할만한 가치있는 모험 (Risiko) 같은 것이라도 있다고 봅니까?

-답 변-

《모험에 관한 문제》 (Frage nach dem Risiko)

정치적 행동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 (Jedes politisches Handeln) 위험 (모험) 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Risikobeladen) 모든것이 성공적으로 되어나갈 것이라는 보증서 같은 것은 절대로 정치적 행동에서는 있지 않습니다. 저래도 위험성 (Risiko hin), 이래도 위험성 (Risiko her) 은 항상 따르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정말로 진척을 볼려고 하면 아니면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다른 쪽이 움직여 도는것을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하는동안 이 방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질 문-

장관님 독일 연방정부가 동부 베를린에서 만나는 것과 관련시키는 그 무슨 사실에 관제된다든가 혹은 프로토콜(의견)관계에 무슨 사전 조건들(Vorbedingungen)이 있습니까?

-대 답-

《아무런 사전 조건이 없음》 (Keine Vorbedingungen)

우리는 이 만남(회담)을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사전조건도 없이 (Ohne Bedingungen und Vorbedingungen) 진행시키고자 한다는 점을 우리는 언제나 되풀이하여 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가 또한 유일하고도 현실적인 기초(Basis)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상호간에 서로 존경(중)하고 (respektieren) 어떠한 트릭을 써서 일을 중요시키는 사례가 없어야겠다는 점에 물론 우리는 유의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이쯤되고서야 상호 접촉하는 형태(Umgangsformen)같은 것이 나타나고, 어떤 의미로는 프로토콜(의견)적인 문제도 등장하겠읍니다.

-질 문-

귀하의 선임자이며, 그리고 현재는 사민당(SPD) 원내총무인 헤르베르트 베너(Herbert Wehner)씨는 이 회담의 결과는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서로가 다른데 있을지는 모르나 쌍방이 다같이 그들의 협상용의를 천명해 내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귀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답 변-

《연방국회에 광범위한 바탕이 되어 있다》 (Breite Basis im Bundestag)

나도 이 문제를 베너씨와 같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적 문제들 바탕으로 하는 노력을 확고부동하게 해 나가므로써 (das entscheidende Festhalten an der sachlichen Bemähung) 그 결과로 지금 생각으로는 독일 연방공화국 국회에 이러한 노력을 지지하는 광범위한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보는데, 이것은 생각하면 정말 다행한 일이라 하겠읍니다.

-질 문-

그런데 프랑케 장관님! 이러한 브란트 수상외 회신에 대해서 행하여진 동부

베를린측의 처음 반응을 볼것같으면, 브란트 수상은 울브리히트의 조약 초안에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고 계속하여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울브리히트는 국제법적이고 외교적인 관계의 수립 (die Aufnahme völkerrechtlicher und diplomatischer Beziehungen) 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브란트 수상에 대한 비난을 볼것같으면 가령 불가침 조약의 체결 (Gewaltverzichtsvereinbarungen) 이란 것은 (그들의 생각으로 는) 두 (독일의) 국가가 서로를 국제법적으로 승인한 후라야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동부 베를린 (즉 동독) 측의 첫 반응을 귀하는 어떻게 판단 (평가. 생각) 하십니까?

- 답 변 -

물론 이 문제에 대하여서도 브란트수상의 회답서한에 한구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로가 문서로 자기측의 견해를 발표하여 표시하는 일일랑 그만둘 때가 되었으며, 이제 양측이 정말로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회담에 임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입장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지의 문구로 볼것 같으면, 분리시키고 있는 요소를 제거하고 (das Trennende zurückstellen), 서로를 결합 (즉) 시키는 요소 (das Verbindende) 와 그리고 가능한 공통점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고 핵심되는 문제라 되어 있습니다.

- 질 문 -

장관님,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만일 이 만나는 일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이 회담 (das treffen) 은 독일 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치적 사건 (eine politische Begegnung ohne Beispiel) 이라고 하겠습니까. 어떠한 느낌 (감정) 을 가지고, 어쩌면 더 적절한 표현으로 어떠한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장관 자신은 동부 베를린으로 여행 떠나시겠습니까?

- 대 답 -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만일에 빠져들어가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매사를 이치를 잘 따져서 처리하므로서 이 전체 문제에 불귀에 알맞는 태두리를 마련하고, 그렇게 하므로서 어떠한 결과라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아 가능케 하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0년 2월 24일자 북에서 발간된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의 언론, 광보서 관보>>에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내각 차관 코을 (Kohl),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실 책임자에게 서한

(1970. 2. 20)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실 책임장관

호르스트 엠케 교수 (박사) 귀하, 본

매우 존경하는 장관 귀하!

《예비회담을 위한 일정》 (Termin der Vorbesprechungen)

1970년 2월 18일자의 귀하의 텔리 타이프 서한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귀하에게 알리는 바입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내각실 부책임자 (der Stellvertreter des Leiters des Büros des Ministers) 게르하르트 쉬슬러 (Gerhard Schüssler) 박사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수상과 독일 연방공화국의 수상간의 회담 (만남) 을 위한 예비회담에 관계되는 기술 (적인) 문제를 처리할 위임을 받았습니다. 쉬슬러 박사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DDR) 과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수반 (Regierungschefs) 이 만날 날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그밖에도 있을 기술적이고, 의전적 (프로토콜과 관계되는) 인 문제들에 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1970년 3월 2일 10시에 베를린에 있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내각실 사무실에서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실 대표자를 만날 준비를 하고 대기하고 있게 됩니다.

귀측의 대표자의 이름과 직능 (Funktion) 을 적시에 우리에게 통고하여 수신키요.

경의를 표하면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DDR) 내각실 차관

미하엘 코을 박사

1970년 2월 24일에 본에서 발간된

《독일 연방정부의 언론·공보처 판보》에서

엠케 장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내각실 차관 코을에게 서한

(1970 . 2 . 20)

매우 존경하는 차관 귀하 !

《자암 (Sahm) 박사에 전 선위임》 (Beauftragung Dr. Sahms)

귀하의 오늘의 텔레타이프 서한에 답하여 울리히 자암 박사 (Dr Ulrich Sahm) 가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수상간의 회담의 준비를 위한 기술적인 문제들을 처리할 전권 대표자로 위임받았음을 알리는 바입니다

자암씨는 세부적인 일들 때문에 쉬슬러 박사와 전화로 연락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경의를 표하면서

연방 공화국 수상실 책임장관 엠케

1970년 2월 24일자로 본에서 발간된

《독일연방공화국정부 언론 공보처 관보》에서

브란트 수상,

독일 연방공화국 국회에서 연설 (1970.2.25)

빌리 브란트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이 1970년 2월 25일에 행해진 독일 연방공화국 국회에서의 토론에서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의 외교 및 독일 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다:

《경기 상황》 (Konjunktunlage)

국회 의장! 신사 숙녀 여러분!

본인은 오늘의 국회 외교정책토론의 범위밖에 속하는 두가지점에 관하여 우선 언급하겠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오늘 마쉴 바르첼 (Barzel) 박사가 제기한 문제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1주일전인 2월 17일에 이 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상기해 두는 바입니다.

즉 연방정부는 경제 (경기) 안정 및 성장법 (das Stabilitäts- und Wachstumsgesetz) 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경기현황을 예의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현황을 예의 검토하기 위하여 금요일 오후에는 경제각료회의가 소집됩니다.

본인은 다음과 같은 얘기는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토론을 중도에서 다 마치고, 이 일을 이제 한번 여기에서 전개시켜 본다고 하는 것말입니다. 오히려 그러는것 보다는 국회에서 이러한 토론을 행한후에, 당해 위원회들이 각의 (Kabinetts-) 준비도 할 점 전체 문제를 다시한번 예의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국회에서 토의되고 그리고 그밖에 일반 사회여론에서도 토의되거나 제안되는 일들을 참고로 감안하면서

그런데 동료의원 바르첼씨!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공개적으로) 도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개, 사회적 토론에 연방정부의 각료들도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현 독일 연방정부에서만 일어나는 새로운 일 (Novum) 은 아닙니다. 나는 여기에서 정 말 반복하여 천명해 두는 바입니다.

이 현 연방정부는 경솔히 그리고 성급히 행동하는 일은 하지않을 것입니다.

《(경제) 안정조치》 (Stabilisierungsmaßnahmen)

그러나 만일 계속하여 (경제)안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면, 본인은 이 며칠간에 추가적으로 안정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던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정부와 언론》 (Regierung und Presse)

두번째로 우선 언급해 두고자 하는 것은 지난 금요일에 국회의 토론이 어딘가 당돌하게 (Abrupt) 끝난데서 연유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사실 당연히 기대되었던 것처럼 기꺼히 한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본인은 정부와 언론의 관계에 대하여 한마디 첨가하여 두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제가 지난번에 하지 못하였던 이점을 오늘 세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해주십시오.

첫째 만일 다음의 일이 이미 이전에 명확히 되어지지 않았으면 아무튼 그 사이에 틀림없이 명확히 되어 졌으리라 믿는다. 다름이 아니라 연방공화국 언론·공보처장 (der Chef des Bundespressesamtes) 이 조작된 뉴스 (Manipulierte Nachrichten) 에 프리테스트를 제기하는 일에 대하여 어느정도의 이해심 (ein gewisses Verständnis) 을 표명한바가 있는데, 그러나 이로써 그가 폭력 행위 (즉 폭력적 수단으로 이러한 항의를 제기하는 행위) 나 혹은 그밖의 다른 법에 저촉되는 행동으로 항의를 제기하는 사람들과 동일시하며, 이에 찬성을 표시한것은 아니라는 점이 아무튼 그간 명확히 되어졌으리라 믿는다.

둘째 벤다 (Benda) 의원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의 생각으로 는 사실 이 문제를 확실히 파악하고 그 성격에 맞는 발언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느 동남 구라파의 나라를 암시하면서- 벤다의원은 이 분쟁의 초점이 기본법 (헌법) 제 5조에 대한 해석을 누군가가 정부측으로 부터 나온사람이나 (Irgendjemand aus der Regierung) 혹은 정부를 위하여 때변코자 하는 사람이 그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서 생겨나는 논쟁 (Kontroverse) 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말은 물론 도매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의사 표시의 자유》 (Meinungsfreiheit)

사실은 이 보다 훨씬 사소한 일이었으며,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 (Entscheidung) 에 관한 문제가 그 초점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의견 (Meinung) 이었던 것입니다.

센다의원이 꼭 원한다면은 의사표시의 자유 (die Freiheit der Meinung) 에 관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 정부와 정부의 위촉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일면제 - 기본법 제 5 조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또 의사를 표시하여도 좋은 그러한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 (Pressefreiheit)

세째 정부는 기본법 (헌법) 이 그러하고 또 자신의 확신이 명령하는 바에 따라 의사표시의 자유 (die Freiheit der Meinung) 와 언론의 자유 (die Pressefreiheit) 를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를 보증할 것입니다.

정부는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걱정스럽고 (bedenklich) 위험한 (Gefährlich) 발전이 행하여지고 있으면 이에 대한 그의 의견을 침묵으로 발표하지 않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즉 의견표시를 할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비판적인 토론 (die kritische auseinandersetzung) 을 두려워 한다거나 혹은 비판적인 토론을 피한다고 하는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좁은 의미의 오늘의 토론대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나간 몇달 동안을 되돌아켜 고찰하고, 요 며칠간의 현재 사정을 또한 밝혀 생각해보면, 우선은 우리의 대화의 범위를 다시 한번보다 넓히는 것이될 네 (4) 가지점에 귀착하게 됩니다. 이 대화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오늘 오전에 외무장관이 또한 의식적으로 대동구정책 (die Ostpolitik) 과 독일 정책에만 그의 발언을 국한시키지 않았던 것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서구라파 단결》 (Zusammenschluß in Westeuropa)

이 4 가지 요점중의 첫째가 서구라파에 연합하여 단결하여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진보를 이룩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결과가 없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구주 공동시장 (EWG) 의 과도기적 상태를 종결시키는 데에 대한 협상은 물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못되었지만 어려운 현상이었으며, 아무튼 성공적으로 끝맺음이 되었습니다. - 이점에 관하여 국회에 보고가 있게 되겠습니다 -

구주 공동시장 (EWG) 확장에 관한 협상이 열리게 될것입니다. 이 이상 더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여간 이 구공시 확장 협상은 열리게 될것입니다.

내주 본인이 (영국) 런던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영국정부와 이 문제에 관하여도 대화를 나누게 될것이며, 이밖의 다른 문제들에 관하여도 일련의 회담을 갖게 될것입니다.

《소련, 폴란드 그리고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동독) 과의 회담》

(Gespräch mit der Sowjetunion, Polen und der DDR)

둘째 대 동구정책인 면에서 볼때에 우리가 행한 것은 우리가 지난해 10 월 28 일에 이 국회에서 예정발표했던, 그리고 독일과 국제 여론에 우리가 예정발표한바 있는 바로 그것을 준수했다고 하겠습니다. 즉 소련과의 회담이 그 하나인데,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전에 이 회담을 재개할것이 제안되었던 것이며, 이것이 실제로 재개되었습니다. 그다음 와르샤와의 회담으로서, 폴란드 인민공화국과 회담을 가졌으며, 끝으로 동부 베를린의 정권과의 회담 또한 피하지 않았읍니다.

세째 우리의 정책은 가상적 공상을 배제하고, 인내를 가지고 그러나 긴장의 해소를 집요하게 추구하는 정책으로서 세계의 많은 부분에서 강력한 정치적, 도덕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책은 우리의 동맹국들로 부터 또한 강력한 뒷받침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 파리와 그리고 또한 런던의 지지를 특별히 받고 있습니다.

네째 본인이 4 월초에 닉슨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모든 중요한 현실문제토의를 위하여 워싱턴을 방문하게 되면, 지금까지 키워오고 증명되어온 미국과의 우호적인 협동이 다시한번 명확히 되어질 것입니다.

《외교정책 현황에 대한 닉슨 대통령의 보고》

(Bericht zur außenpolitischen Lage)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본인이 오늘 아침 암시해 두었던 그러나 아주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광범위한 내용을 갖춘 닉슨대통령의 외교정책 현황에 대한 보고를 본 국회의 토론에 소개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기본동기가 평화의 보장 (die Friedenssicherung) 을 이루고 있는 2 월 18 일자의 보고를 이 토론에 소개함과 동시에 토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대통령의 보고(서)는 구라파에 대한 미국의 유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과 구라파간의 순수한 파트너적 입장을 지지하며, 서 구라파의 통일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강력하고 지지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우리의 평화 추구정책(Friedenspolitik)에 대한 미국정부의 명확한 이해심을 내포하고 있으며, 동부진영의 우리의 이웃나라들과 관계의 정상화를 꾀하는 우리의 노력을 명확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본인은 우선 비난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보고서가 지니는 의의를 본인은 정부만을 대표하여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이 자리에서 감사히 생각하고 높이 평가하고 환영하여 마지않습니다.

<<미국의 구라파 주둔>> (Präsenz der U S A in Europa)

의원 여러분! 본인은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구라파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주둔문제에 관하여 우리에게 불가피하게(zwangs läufig) 불리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방향으로 토론을 전개시켜 나가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저의 이러한 충고를 경청하여 받아들이신다면, 여기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지 말고 포함되어야겠습니다. 즉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개토론같은 경우에는—물론 비공개 토론에서도 또한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미국의 구라파 주둔은 우리를 위하여 직접 관계되는 것이며—우리와는 부차적 관계만 있는것이 아니라—또한 구라파를 위하여 직접관계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구라파 주둔은 물론 미국자신에게도 직접 관계되는 것이며, 세계 열강(Weltmacht)로서의 지위와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그리고 세계의 이 부분(구라파)에서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위치에도 직접 관계되는 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지 않는 토론이라는 것은 그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오류를 범하고 말 것이며, 이렇게 된다면 미국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여러가지 실제 문제들을 해결처리하는 데에도 영향이 끼쳐지겠기 때문입니다.

<<독일 정책의 가능성>> (Möglichkeiten der deutschen Politik)

의원 여러분!

몇분 의원 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쉽게 다음과 같은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분들은 소련에 대하여 주장과 요구조건을 제시하여 이를 판철시켜 나갈 수 있는 독일정책의 가능성에 관하여 언급을 할 때에는 독일 연방공화국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을 이분들은 마치 하나의 세계 강국 (eine Weltmacht) 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보다도 더욱 강력한 막강한 세력 국가들과도 보는 것 같으며,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소련의 위험 (die sowjetische Gefahr) 을 설명하려는 때에는 이를 저지하고 막아낼 수 있는 서방진영의 가능성을 있는 현실보다는 훨씬 적게 과소평가하는 것 같은 인상을 쉽게 받게 됩니다.

이러한 세계정책으로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천진한 사람들의 마음 (naive Gemüter) 은 어찌면 움직일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이것으로 정치를 해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독일 연방공화국의 정치적 힘 (die politische Kraft) 을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전체 구라파적 의미에서 평화를 위한 협동 경향을 강화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이렇게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우리앞에 놓여져 있는 오늘과 내일의 세계에서 어떠한 잠재적 군사적 잉계이지망이 가능한 것인가에 관하여 우리는 정말로 예의 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

(독일) 연방정부는 어느 때에 가서는 동, 서 양진영의 세력의 합류와 협동으로 인하여 하나의 평화질서가 이룩되어 질때까지 구라파에 있어서의 미국의 군사적 주둔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여러 의원들에게서도 믿으셔도 좋을 것입니다.

《비 잉계이지망》 (Desengagement)

미국에 관하여 이야기 할 때에는 《disengagement》이라는 용어를 써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점을 이미 밝힌바 있지만— 미국의 비 잉계이지망을 촉진시키는 세력을 강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오늘아침 이 자리에서 바르셀 (Barzel) 씨가 말한 것에 따르면 정 반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정부가 그 자체로서 —이점을 본인은 여기에 다시 한번 말해두는 바이지만— 아무런 환상을 가짐이 없이 (Illusionsfrei), 그러나 절요하게 언급해 주는 바입니다—

긴장의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따라서 중기간의 기간으로 군사적 부담을 줄이는 일을 위하여 노력을 행하는 것을 저절한다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미국 상원에 이러한 경향이 일어나도록 장려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국회의원 바르첼 박사:수상, 긴장의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말라고 요구한 사람이 이 국회에 누가 있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그 핵심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다음의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전후관계가 또한 현재 주어져 있는 여건에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불가피성과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독일의 위치》 (Die Stellung Deutschlands)

《독일 잡지》 (Deutschland Magaziu) 2월호에 슈트라우스 (Strauß) 의원이 기고한 내용을 오늘 또다시 한번 명확히 반박해 둘러는 생각을 했더라면, 본인은 이미 언급한 4가지 핵심에 한가지를 추가하여 5번째 요점을 추가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 아무튼 제가 슈트라우스 의원의 말을 글자 그대로 인용한다면, 독일의 지위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그 어떤 있을 수도 없는 낙천적이고도 주홍색 빛갈의 독일상 (kein rosarates, unerlaubt optimistisches Bild) 을 그려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 그러나 나는 신문을 읽어 보라고 권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한 외국 신문들을 읽어 보십시오. 나는 상업인들과 사업인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라고 권하는 바입니다. 그밖에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아는 사람들과 또한 이야기 해보라고 권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신문을 읽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게 되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하여 있는 입장은 그전보다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국제 관계에서는 그전보다 어느 정도까지는 더 안전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관심의 대상이며, 결코 한 정부의 관심이 아니라, 이 독일 연방공화국의 관심사 (Nicht das Interesse einer Regierung, sondern das Interesse dieser Bundesregierung Deutschland) 인 것입니다. 즉 지금의 이러한 현황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 나가며, 가능하면 더욱 좋게 향상되어져 나아가야겠다는 것은?

《모스크바 회담》 (Gespräche in Moskau)

그러면 이제 야당의 문제에 관하여 언급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 제기된 문제들 중에서 어떤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부터 다루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모스크바에서 그리고 그밖의 어느곳에서든지 회담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부는 -발언을 문자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그 의미로 보아 인용합니다- 이 국회에 보고제출한 자신의 정부선언의 테두리 안에서 (im Rahmen ihrer eigenen hier abgegebenen Regierungserklärungen) 움직이고 있는가 라는 야당 당수의 질문이 그것입니다.

바르첼 의원께서는 1월 14일자의 정부선언을 주로 생각하고 이야기한것으로 봅니다. 본인은 여기에서 10월 28일에 있었던 성명과 1월 14일에 있었던 성명을 다 같이 착안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질문에 대하여 본인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르첼씨는 여기에 제기된 문제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추측으로는 -이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보는데 바르첼씨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문서화(aktenkundig machen) 시키자는데 그 의의를 두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에 대하여 본인이 이 국회에서 행하는 답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문서화시키자는 것일 겁니다. 나는 이 답변을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1월 14일에 행하여진 이미 언급된바 있는 정부선언은 그 당시 정월에는 그 후 2월에 풀이되었던 보다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지만 -그러나 본인은 이점을 일단 도외시해 둡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28일자로 정부 선언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두 정부선언에 언급되었던 것에 이순간 여기에서 아무것도 더 첨가하고자 하지 않으며, 이 두 정부선언중에서 오늘 여기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우리의 토론의 대상이 되어있는 점들을 강력히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目的)과 의도(unsere Ziele und Absichten)는 그러니까 이미 알려져 있으며, 그리고 이곳 국회에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과 의도는 다른에서도 알 수 있도록 되어지고 있습니다. -불가침 조약(Gewaltverzichtsabkommen)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다른 측들이 그들의 목적을 계속하여 추구해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리만큼 우리는 모두가 천진하지 (naiv) 않습니다.

《민족적 통일》 (Nationale Einheit)

내가 보기에는 사실 세계의 사정과 그리고 세계속에서 독일이 차지하고 있는 입장을 명백히 해 두려는 노력만을 하고 있는데, 민족적 통일을 포기한다고 누구를 이곳 저곳에서 꾸며대는 일들이 있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르셀 의원 저는 아주 특 털어놓고 이야기 합니다.

—내가 귀로 듣기로는— 귀하가 오늘 아침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거의 공포심같은 것을 (fast etwas Angst) 을 느꼈습니다.

즉,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외교정책상의 노력은 슐레지엔, 쾰른, 동부 프러이센 등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였을 때

독일의 외교정책의 중요 목표를 말하며는 그 첫째가 독일 연방공화국의 안전 (안보) 과 복지의 도모입니다. 둘째로는 독일인에 관한 것이며, 그들이 오늘날 살고 있는 곳이 그 문제의 대상이 되겠으며, 세계로 독일인을 위하여 그리고 구라파의 평화질서의 확립에 대한 독일인의 참여를 통하여 무엇이 최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라파의 평화질서》 (Europäische Friedensordnung)

모든 노력이 하나의 구라파 평화질서로 통할 이 어려운 과정에 처하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할 조약을 통한 협정 (vertragliche regelungen) 은 —물론 여기까지 도달하려면 어렵고도 험난할 것입니다— 단순한 형식 이상의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이며, 우리 민족의 정당한 관심과 독일 정책의 평화적 목적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만용을 가짐이 없이 나는 여기에서 한가지 점을 확실히 해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한다면, 하나의 형식화된 불가침 조약 (ein formalisierter Gewaltverzicht) 은 분명 독일 역사 서 (齣) 를 달아 버리지는 않을 것일 겁니다. 아니면 그 반대의 기능을 하는 불가침 조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래됨이 없이 이렇게 불러도 좋다면— 소위 빌스호펜의 이야기 (das Vils-hofener Argument) 라는 것은 나는 여기서 듣지 않았읍니다. 꼭 그곳의 저축은행 (die dortige Sparkasse) 도 독일 연방공화국 중앙은행 (Bundesbank) 을 삼켜버리려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나는 듣지 않았읍니다. 아무튼 이것은 독일 연방공화국과 소련의 관계에 대한 대조와 비교 (Paralle) 로서 생각할 수 있겠읍니다.

《독일사람에 대한 불신》 (Mißtrauen gegenüber den Deutschen)

그런데 독일 연방공화국이 소련을 위협할 수도 없으며 또한 위협할 의사도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기분이 좋던 좋지않던간에 소련과 동부 진영측에, 그리고 공산주의 정부들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기타의 다른 정부들에 있어서도 아직도 여전히 독일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고 또한 독일 연방공화국에 대하여도 불신(不信-Mißtrauen)이 남아 있다는 것은 그러나 또한 사실입니다. 나는 닉슨대통령이 2월 18일자^의 이미 언급한바 있는 그 연설에서 소련은 - 이것은 구라파에서 평화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입니다 - 독일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공포심(die anachronistische Furcht vor Deutschland)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daß die Sowjetunion ----- die anachronistische Furcht vor Deutschland überwinden müsse)는 닉슨대통령의 의견과 일치하며, 이 견해를 앞으로도 계속하여 가지고 있겠습니다.

《동부 진영의 파트너들의 입장》 (Positionen der östlichen Partner)

바르첼 의원은 오늘 아침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동부진영 파트너들의 우리에게 대한 입장이 빈틈없이 (fugenlos) 서로 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부는 -나는 뜻을 따라 인용합니다- 이점에 대하여 야당이 1월에 사태를 정확하게 평가했다는 점을 수락할 용의가 있는가? 라고

(의원 바르첼 박사: 그러한 문제는 권리의 주장과는 상관없는 것이므로, 나로서는 그러한 질문은 전혀 한바가 없다!)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더욱 좋습니다.

(기민당. 기사당 의원들의 높은 소리처럼: 귀하(당신은)는 귀하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손수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의사록(Protokoll)을 뒤져 보십시오. 그밖에도 스스로 질문을 제기하는 것도 허용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질문의 제기들을 여기 이 국회에서 행하여진 질문과 토론과 의견의 주장등과 밀접한 관련을 지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일의 전후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바르첼 의원이 이점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아주 확신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연방수상이 답변을 한다면 이 대답은 수상이 전권을 주어 시작하여 높은 기구의 활동 (Operation) 을 방해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와 비교하여 정부체제 (Regierungssysteme) 가 어떻게 다르던지 간에 아무튼 이들 여러나라는 역시 주권국가들 (soveräne Staaten) 이며, 그러한 주권국가들이 빈틈없이 입장을 같이 한다는 것은 드문일입니다 (selten), 이것이 첫째로 말씀드릴것입니다.

《대 동구 정책》 (Ostpolitik)

슈트라우스 (Strauß) 의원은 이미 언급한바 있는 인터뷰에서 —내가 말하는 것은 연설 (Rede) 이 아니고 《독일 잡지》 (Deutschland Magazin) 에 간행된 인터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위험한 공상론 (ein gefährlicher Illusionismus) 을 얘기 했습니다. 마치 동부진영 (der Ostblock) 을 교환하여 서로 이간시켜 놓을 수 라도 (auseinandermanövriereu) 있는것처럼 위험한 공상론을 피력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의 영역에 속하며, 손수 제기한 질문은 아닌것입니다—

이러한 슈트라우스 의원의 견해는 틀림없이 잘못된 판단 (eine krasse Fehlinterpretation) 이며, 나로서는 이 견해를 정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설사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남을 서로 이간시켜 분리시키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와 다른국가들과 그리고 동부진영의 여러 민족들간에는 믿음 (신망—Vertrauen) 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새로운 불신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슈트라우스씨는 우리가 회담을 하고 있는 대상인 동부진영의 국가들은 서로 밀접한 의견조정을 해가면서 이들 회담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옳은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방법은 완전히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우방국가들과 의견의 조정을 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적으로 조직된 국가들의 입장에서 이일을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독자적인 단독행위 (ein Alleingang) 라는 것은 이쪽이거나 저쪽이거나 간에 가능할수가 없으며, 앞으로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중에 있는 이번의 집중적인 노력이 행하여 지고 있는 일의 경우에는 —이쪽이거나 저쪽이거나간에— 때로는 유기적

관계가 있는 여러 나라들의 이해가 완전히 일치되지 않을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그래도 일치점 (Übereinkünfte) 을 찾아서 이룩해 내려는 시도를 방해하는 요소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되겠습니다. - 나는 다시 한번 명백히 해두는 바이지만- 우리는 동부진영에 의견의 불일치 현상이 일어나기를 추리하여 기대한다거나 혹은 그곳의 정부들이 약화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더욱 더 나아가서 소련과 중국(그러니까 중공화국 의미)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일어나서 논쟁 (Kontroverse) 같은 것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결과로 얻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독일 정치를 역사가가 아직 환상 (Phantasio) 으로 추정해 낼 수 밖에 없을 어쩌면 형이상학적 시점에 까지 뒤로 돌려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된다면 역사의 환상 (die Phantasio der Geschichte) 이 우리와 반대되는 결과를 낳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으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노력이 무의미하게 끝나버린다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합헌성 (合憲性) 의 문제》 (Frage der Verfassungsmäßigkeit)

의원 여러분!

슈트라우스 씨가 오늘 오전에 합헌성이나 혹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 (Verfassungswidrigkeit) 이냐 하는 테마에 관하여 의견표시를 하였을 때 한가지 점에서 나를 이해한 것 같습니다. 슈트라우스씨가 연설에서 인용한 부분에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문장은 애기하지 않고 넘겨버렸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간에 간혹 일어납니다. 슈트라우스 의원! 그러나 나에게서는 귀하가 인용한 두 문장에 연결된 그 문장이 중요하였던 것입니다.

-슈트라우스 의원, 《독일 잡지》 (Deutschland Magazin), 2월호에서 문자 그대로 인용합니다- "만일 브란트 연방공화국 수상이 그의 정책이 지니는 합헌성 (合憲性, Verfassungsmäßigkeit) 에 관하여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의 견해를 밝힌다면" (그는)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귀하는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귀하가 말한 얘기에 뒤이어 나오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그런 한마디 말을 하려하였던 것인데, 이제라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내가 원하는 대로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내가 헌법에 위반되는 일 (Verfassungswidrigkeit) 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말에 뒤따라

약할 증명하는 일을 뒤로 미루어서는 안된다! 라고

이와 관련하여 가령 다음과 같은 일이 나의 관심을 끄니다. 당시 아테나워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이 쏘련정부에 대하여 제안을 하였을때 그 당시의 국방장관 슈트라우스씨는 이를 가리켜 합헌적(Verfassungsrechtlich) 이라고 높이 평가했었는데, 아니면 혹은 그렇게 평가하였을 텐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사실이 (즉 나의 행동이 합헌성을 넘어서 헌법에 위배되는 일인것 처럼 퍼들어 대는데) 나에게는 큰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 제안은 이 국회에서 토의된바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제안이 각의(Kabinett)에서 토의된바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문서에서 이 제안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의 내용인즉 우리가 지금 논쟁을 벌리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는 문제들에서 10이나 20년 동안 북비조약(Stillhalteabkommen)을 체결하자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그는 (당시의 슈트라우스 국방장관) 위에 언급한 숫자의 첫자를 여러개의 다른 숫자들로 대체할 수도 있겠다는 점을 쏘련측에 암시하였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보다 더 분명하게 일을 밝혀 나가야할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사전 조건의 이행》 (Vorleistungen)

의원 여러분!

야당이 제기한 문제에 관계되는 이점과 관련시켜서 소위 잘못 전해진 사전조건의 이행(die vermeintlichen Vorleistungen)이라는 점에 관하여 몇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슈트라우스 의원이 이점을 지난주에 벌써 명확히 해두었습니다. 그렇게 된것이 아무튼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위 매국(팔아 넘겨 버리는 것=Ausverkauf)이라는 이 비난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끔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지금 생각나는 것은 핵(무기) 확산금지 조약(NV: Nichtverbreitung)과 슈트라우스 의원이 두 국가론(Zweistaatentheorie)이라고 부르는 문제입니다. 이 두 테마는 그 형식은 달랐지만 내용적으로는 같은 것으로 오늘 아침 연합정당(기민당, 기사당) 원내총무에 의하여 여기 국회에서 논의되어졌습니다. 본인은 지금까지 언급된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 (NV - Vertrag)

의원 여러분!

우선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관하여 다

음과 같이 이야기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방금 이 핵 확산금지 조약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말은 우리가 10월에 예고 하였던 대로 11월에 이 조약에 대한 서명이 행하여 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폴란드, 유육, 제비바나 혹은 다른 곳들에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영국인들과 폴란드간에 공동으로 가스 초원심 분리기(超遠心分離器— Gasultrazeutrifugen) 프로젝트에 관한 조약에 관계되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들에 대하여 앞으로도 오랫동안 비판적인 질문을 제기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은 나를 그렇게 놀라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선 다음의 사실에 대하여 이해를 확실히 해두어야 하겠습니다: 서구라파 즉 영국과 폴란드와 독일연방공화국에 대하여 중요한 의의를 지니게 될 이 프로젝트는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독일이 이 핵 확산금지 조약에 서명하지 않으므로써 조약의 체결이 이루어 지지 않았더라면 이것으로써 역사는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말을 하는 것은 문서와 그리고 그밖의 모든 전후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완전히 알고서 하는 말입니다. 이점에는 터무니 없는 엉터리 설명이나 해석을 가할것은 전혀 없습니다.

즉 이 중간 프로젝트(Zwischenstück.)가 없다면 실제로 효력발생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는 설명이나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핵 확산금지 조약에 우리가 서명하는 것이 —비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비준은 또 다른 문제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대동구정책적 노력과 간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나는 부인치 않습니다. 이점을 나는 알고 있었읍니다. 때문에 나는 10월 28일에 종합적으로 모스크바, 와르샤와, 동부 베를린의 세가지 요점을 언급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먼저 말해 두었던 것입니다: 몇가지 조항의 해명이 끝나면 우리는 이 핵 확산금지 조약에 서명하게 될것입니다. 라고

《국제연합헌장의 적성국 조항》 (Feindstaatenklausel der UN-Charta.)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무슨 공박을 하기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르셀 의원, 귀하는 한가지 중요한 점을 유표한것은 아닙니다만 감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통한 사람은 모두가 이것이 무슨말인가를 알고 있었읍니다.

국제 연합헌장의 적성국 조항 (Feindstaaten Klausel) 을 우리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내가 통찰해 보건대로는 좀 쉽게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처해있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 해석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내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가능성이 보다 커졌읍니다. 아무튼지 국제연합헌장 제 2 조가 서방강대국들이 우리에게 성명한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물리설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이 핵 확산금지 조약에 우리가 서명하는 것이 - 그런데 일본이 또한 이 조약에 서명하였읍니다 - 이 조약이 차별대우를 함이 없이 통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협상을 벌리는 전제 조건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나에게도 명백합니다. - 불란서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면 - 이테리와 베네룩스 삼국등은 우리가 동일한 입장에 있기 전에는 뤼엔나 (원자력등의) 당국과의 협상에 아예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독일측의 사전 전제조건인 이행 (eine deutsche Vorleistung) 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전제 조약이 문제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우리는 ' 늘상 알고 있었읍니다. 여기에서 의무의 이행 (Leistung) 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명확화하는 어려운 작업을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이행해 내는 의무의 이행이지 - 독일 연방공화국 - 같은 어느 한 국가가 다른 나라들을 위하여 행하는 의무의 이행일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의 선임 수상께서도 이 분야에서 지연시키거나 문제를 피하는 일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지탱해 나갈 수 없는 것일 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두 국가론》 (Zwei-Staaten-Theorie)

의원 여러분!

두 국가론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그러한 이론은 만들어 내지 않았읍니다. 독일 연방정부가 그러한 이론을 발명해 낸 것도 아닙니다. 연방정부는 우리 민족중의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독일 영토상에 두 국가 현실 (eine Zwei-Staaten-Realität) 발전되어 나왔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지 (zur Kenntnis nehmen müssen), 이것은 하나의 이론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다는 현실은 하나의 한탄스러운 현실 (ein beklagenswertes Stück Wirklichkeit) 일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우리는 <<형식>> (Formeln) 과 <<해결>> (Lösungen) 이라는 문제에 접하여 있습니다. 지나간 20년 동안 그런데 형식이라는 어려움 (der Formelkram) 이 지나치게 지배적인 것이었지 않습니까? 나는 이 말을 어떤 비난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 자신도 이에 포함시켜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충분히 오랫동안 같이 이러한 일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연합정당 (기민당, 기사당) 과 기타 사람들에게만 관계되는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1961년 8월 13일>> (13. August 1961)

나는 슈트라우스 의원이 오늘 오전에 말씀한 점을 여기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슈트라우스 의원은 내가 그 당시 베를린 시장으로 있으면서 1961년 8월 13일 며칠 후에 나와 우리모두가 절망한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말한것을 인용하였습니다. 나는 이에 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 기본원칙에 변화가 생겼다고 믿는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그 당시 무대에서 막이 걸혀지고 결과적으로 밝혀진 것은 무대가 비어 있었다 (die Bühne war leer) 는 것을 슈트라우스 의원은 나에게 시인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것을 무슨 고발조 (Anklage) 로 말하는 것이 아니며, 사실의 확증 (Tatsachenerfeststellung) 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연방정부도, 그리고 슈트라우스 국방상을 포함하던 독일 연방정부도 베를린 사람들과 베를린의 브란트 시장을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막강한 미국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었으며,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인식하는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도시를 통과하는 시경계선이 나있다. 이 경계선은 이 세계의 양대 초대강국 사이의 경계선 (eine Grenze zwischen den beiden Supermächten dieser Welt) 과 같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참가하여 말씀드리는데- 누구라도 그후에 이 역점고 무시무시한 울타리장벽 (베를린의) 을 머리로 맞 받아서 무엇을 성취해 낼 수 있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결국 유감스러운 일이나 이 장벽보다 자기의 머리가 더 다친다는 점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독일 국가에 대한 문제>> (Die Fragen nach den zwei deutschen Staaten)

(Freiherr von und zu Gutenberg) 의원 - (기민당, 기사당) - : 현 연방 정부가 두 독일 국가라는 말을 할때에, 귀하는 독일 연방정부가 두 국가론을 세운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의 서술 (Tatsachenbeschreibung) 이라고 이제 방금 말하였는데, 여기에 귀하에게 물고자합니다 : 1968년 9월에서 귀하의 정부선언에 이르기 까지 사이에 도대체 무엇이 변화하였습니까? 1968년 9월에 이 국회 전체가 두개의 독일국가 (zwei deutsche Staaten) 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사민당 (SPD) 원총최도 이렇게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질문할것은 현 독일 연방정부가 두개의 독일국가가 존재한다고 선언한 것은 단순한 사실의 서술보다 말할것도없이 그 이상의 것이 아닌가 라고 수상께 질문합니다. 이러한 정부 선언이 바깥 세계에서는 최고급의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또한 지금까지의 법적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풀이되지 않을까요?)

<<법적 지위>> (Rechtspositionen)

존경하는 구벤베르크 의원!

우리들 모두에게 알려져 있는 법적지위를 저는 절대로 지나치게 과소평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법적지위는 베를린시의 다른 부분에 살고 있는 그들의 가족을 만나게 하는데에는 베를린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읍니다. 이 법적지위는 나로 하여금 게슬러 모자 (Geßler Hut - 독재자의 모자) 에 인사를 하고, 서류를 내보이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는 일에서 나를 보호해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라는 것은 어느정도의 기간동안은 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잠정적인 기간이 지나고 나면 - 이점에서 나는 바르켈 의원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 -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시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 더 이상 형식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die Formeln reichen nicht mehr aus)

문제의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서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형식을 타파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치의 사명이라는 것은 미래에 있을 형편의 개선이 - 이점에 있어서는 우리의 견해가 일치할 것이라고 봅니다 - 과거의 형식으로 인하여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막는데 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여기에 바로 계속하여 이 국회의 제 세력간에 그리고 야당과 정부에

있어서의 정보와 협동문제에 관하여 한마디 더 하고자 합니다.

(Freiherr von und zu Guttenberg - [기민당 기사당] : 수상! 귀하의 이제 방금한 얘기로 내가 물은 두가지 질문을 정말로 답변했다고 믿습니까?)

존경하는 구텐베르크 의원!

정부가 상황을 새로 서술해서 모헌했다는 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 점을 1969년 10월과 1970년 1월 두차례에 걸쳐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귀하의 이 문제를 달리보고 있다는 점을 나는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일이 더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서 그 이유를 반복하여 말씀드린다고 하여 이 순간 우리의 쟁점에서 우리가 의견의 접근에 달하지는 못합니다.

나는 지금 정보와 협동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바르첼 박사 [기민당, 기사당] : 수상! 구텐베르크 의원이 질문한 귀하의 입장이 변화된데 대한 논거(이유)가 지금까지 이 국회에서 밝혀진바 없습니다.

귀하가 지금까지 말한것은 그동안 선거가 있었다는 말 이외에는 더 말한것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9월 이후에 지금까지 무엇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귀하가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논거(이유)들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귀하에게 했던 것이며, 이점에 관하여 우리와 토론할 것을 귀하에게 우리는 요구했던 것입니다. 수상! 귀하의 이 토론을 지금 우리와 행할 책임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바르첼 의원!

선거와 관계되는 것은 물론 부분적인 논리(Teilargument)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의 사실에만 관계되는 것입니다. 즉 선거 논쟁동안의 우리의 확신하는 바로, 나의 확신하는 바로 그리고 많은 나의 동지들의 확신에 의하면 연합당(기민당, 기사당)의 지도자들 중에서 우리(기민, 기사당, 사민당)가 공동으로 수립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철회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책을 계속하여 해명해 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점은 내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실히 말해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가령 우리가 동부 베를린 당국과도 동등권과 비차별 대우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정에 도달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그 출발점으로 삼지 않는다면은 와르샤와 조약 동맹국들과의 협상과 타결은 이룩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우리가 달하였다는 점을 밝혀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오늘의 실제 현실입니다.

《정보》 (Information)

정보와 협동에 관하여, 의원 여러분 우선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나는 책상의 반대편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므로써 객관성을 크게 잃지 않고 있기를 바랍니다 : 지난 4개월 동안 정보와 협동이라는 분야에서 정부(여당)와 야당사이에 그 어느때 보다도 더 많은 정보 교환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점의 하나입니다.

《협력》 (Kooperation)

둘째 요점은 -이것이 그렇게 나에게서 난점입니다-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

바르첼 의원의 말을 빌리면 -협동 (Kooperation)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슈트라우스 의원은 바르첼씨와 슈트라우스씨의 공동 원내교섭단체의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우리가 독일의 이해를 팔아넘기는 정책 (Ausverkauf deutscher Interesssen) 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러한 말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독일의 이해를 《팔아 넘기는 정책》에 협동을 통하여 참여하고자 하지는 않을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정말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바르첼 의원은 협동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슈트라우스 의원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 도대체 우리는 당신(들)에게 무슨 제안같은 것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러한 제안을 할 필요가 또한 없겠습니다. 정보이상의 것을 바랄때에만 즉 대화와 협동을 바랄때에만 어느 한쪽이 다른쪽에 대하여 그들의 제안을 할 용의가 있어야만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점을 서로 심사숙고하기를 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될수록 사리를 따지고, 또한 광범위한 문제에 걸쳐 의견을 교환하는데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형편이 생겨난다면 나의 정부의 활동능력을 불가능케 하고말 요구조건들은 물론 수락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그러한 요구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슈트라우스 의원으로 부터-

《연방정부의 정통성》 (Legitimation der Bundesregierung)

왜냐하면, 의원 여러분 현 연방정부가 이 국회에서 그러한 다수를 점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나도 알고있습니다. 셰엘씨 (Scheel - 자민당 당수이며 브란트 수상과의 연립내각정부에서 부수상 겸 외무장관 직을 맡고있다=역주) 와 나는 이점을 공동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현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는 이 국회에서와 대외적으로 결코 제한된 정통적 적법성 (begrenzte Legitimation) 을 갖는 것이 아니며, 어디 까지나 완전한 적법성 (eine volle Legitimation) 만을 갖는 것입니다.

나의 정부가 행하는 외교정책은 일차적으로 구라파 중심의 외교정책입니다.

그러나 이 외교정책은 서구라파에만 국한되는 외교정책이 아니며, 전체 구라파 (gesamteuropäisch) 적인 성격을 띤 외교정책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 서 양진영간에 존재하고 있는 긴장을 해소하는데 인내를 갖고, 집요하게 임하여 함께 돕고자 합니다. 그러나 대서방 정책적으로 완전한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정책이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대동구 정책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부디 간파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을 또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분단)의 부담 해소》 (Abbau der Last der Teilung)

의원 여러분! 만일 동부 베를린으로 가는 일이 성취된다면 - 나는 이일이 성취될 것이라고 봅니다 - 국토가 강제로 분단된지 25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이 국토 분단의 짐을 해소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하는 시도가 과감히 행하여 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식을 갖고 동부베를린으로의 여행길에 들어설 것입니다. 어제 나는 다른 장소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였는데, 오늘 이자리에서 반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상회담을 동. 서독간에 개최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매우 진지한 시도 이상의 것이 될수는 없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저는 형식에 관한 문제에 언급하고자 합니다. 추상적인 정치이론, 법률적인 유보조항과 《형식》들은 우리에게 별다른 진전을 보게 하는 데에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우리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독일 정책은 일종의 정체상태에 빠져 들어가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와르샤와, 동부 베를린과의 회담》 (Gespräch mit Moskau ,
Warschau und Ost - Berlin)

현 독일 연방정부는 무리없이 모스크바, 와르샤와와 그리고 동부 베를린 당국
과도 과감하게 직접 회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일체의 환상을
떠나서 이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여 나감에 있어서 현시점에
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만을 그 기준으로 삼을수는 없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가능한 것이 무엇이며, 무엇이 불가능한 것인가를
추정해 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인은 다시한번 미국의 리차드 닉슨 대통령과 그분의 2월 18일자
의 광범위한 보고서에 관하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
에 그렇게나 《분위기》에 관한 얘기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 나는 다음과 같
은 점에서 미국정부의 이 보고서와 명확히 의견을 일치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이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분위기는
어디까지나 실제적 변화라고 생각될수가 없다는 것과 그리고 긴장의 완화라는 것
은 말로만 해서는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 긴장이라는 것이 오늘날 까지 벌써 20년동안 단순히 약간한 오해로 인하
여 생겨난 것이 아니고, 이보다 훨씬 더한 그 무엇에 기인하여 생겨난 것이라
는 점에 우리의 이해가 명확히 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 지적되어 있
습니다. 구라파의 안전(안보)이라는 것도 추상적인 개념으로 말만되어지는 것
으로 충분치가 않다는 견해에 나는 또한 동의합니다. 사실 중요한것은 다음의
일이라 하겠습니다: 즉 우리는 불안의 요소 (die Elemente der Unsicherheit)
를 알아내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요소들이 제거되어질 수 있을가를 언제나 되풀
이 하여 검토하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두가지 큰 사명이 주어져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점
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큰 과제라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우리의 서방
동맹국들과 우방들과 접촉을 해가면서, 소련과 그리고 소련과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들에 대하여 관계 개선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가 혹은 이러한 관계개선의 기
회가 마련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하나는 본 (Bonn) 과 동부 베를린 (당국) 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언급된 여러가지 사실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분리를 요인들

(das Trennende) 이 지백적으로 남아있지 않으면 안되는가 아니면 - 비록 최소한의 것일지라도- 서로 접근하는 어떤 이해관계의 모색을 통하여 공동적인 무엇 (Gemeinsames) 에 달할 수 있는가 알아내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두가지 과업을 다해내는 일입니다.

《예상 가능한 모험》 (Kalkulierbares Risiko)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벽에 유명을 그리는 사람들이 (즉 모든 일을 최악으로 생각하는 부정적인 사람들) 을 지 않는다 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안전을 기하고 보다 많은 자유를 이룩하려는 노력은 물론 완전히 모험의 요소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와 관련하여 불확실성에 예상가능한 모험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되겠다고 봅니다. 우리의 동맹정책 (Bündnispolitik) 과 긴장완화정책 (Entspannungspolitik) 은 같은 차원에서 행하여지고 있으며, 우리의 구주 공동시장정책 (EWG - politik) 과 우리의 대동구정책 (Ostpolitik) 은 다른 정책들과 관련하여 점진적으로 이룩되어질 수 있을 구라파 평화질서를 위한 것입니다. 여하튼 신중을 기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두려움 (Angstlichkeit) 을 갖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 필요한 것은 구라파와 평화를 위하여 독일이 보다 강력한 기여를 과감히 해나간 질서있는 용기입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가능한한 어디에서나 이해를 얻으려고 노력하며 또한 신뢰를 얻으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뢰와 비판적인 도움을 받을때 우리민족을 위하여 중대한 사명을 다해나가는 일이 쉽게 되기 때문입니다.

(출처 :)

1970년 2월 25일자의 독일 연방공화국 국회 제 33차 본 회의록에서

브란트 · 연방공화국 수상,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슈토프 수상에게 서함
(1970.3.8)

1970.3.8. 본에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빌리 슈토프 수상 귀하. 베를린

매우 존경하는 수상!

《회담(대화)는 유용하고도 필요하다》(Gesprache nutzlich Und notweud-ig) 우리의 서신 교환에서 그리고 예비회담을 위하여 독일 연방공화국 대표단장이 귀하의 대표단장에게 행한 선언에서 귀하는 본인의 귀하와의 회담(대화)은 유용할(nutzlich)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natwendig)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아셨을 것입니다. 자암(Sahm.)씨가 본인에게 전하는 바에 의하면, 슈쉴러(Schußler)박사와의 대화에서 귀하도 역시 우리 두사람의 회담이 성취되는 데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합니다.

《서로 상이한 견해》(Unterschiedliche Auffassungen) 회담을 위한 기술적인 준비사항을 맡은 양측 대표단간의 회담진전에서 첫회담을 기술적으로 준비하며 이 회담의 자행과는 관계없는 일련의 문제들에서 의견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의견의 대립들이 우리 두사람이 바라는 의견교환의 가능성을 위태롭게(즉 실패에 돌아가게)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우리 양측 대표단들이 우리의 첫회담의 프로그램과 진행을 위한 새로운 기초(바탕)가 발견되어질 수 있는가 - 경우에 따라서는 만나는 장소라도 변경하여서 까지라도 - 이를 공동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과제를 갖도록 하라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의를 표하면서

(서명) 빌리 브란트

1970.3.11 일자로 본(Bonn)에서 발간된 《독일 연방공화국 언론·공보처 관보》에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내각의 성명(1970.3.9)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내각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의 두 수상이 만나는 것(회담)을 준비하기 위하여 진행시키고 있는 기술적인 회담(Die technischen Gespräche)의 현황에 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내각은 현재의 주어진 여건에서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견해(Stellungnahme)를 전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동(회담)을 위한 준비>>(Vorbereitungen für die Zusammenkunft) 기술(적인) 회담에서 이미 전하여진 바와 같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수상과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수도 베를린에서 만나는데 필요한 모든 준비가 우리측으로부터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1970년 2월 11일에 행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빌리 슈토프 수상의 초청이며, 이 초청은 1970년 2월 18일자 의 서한으로 독일 연방공화국의 빌리 브란트 수상에 의하여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측으로서는 모든 것이 명확합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빌리 슈토프 수상과 독일 연방공화국의 빌리 브란트 수상이 만나는 일은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내각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의 평화적 공존을 가능케 해야 한다는 목적을 위하여(Im Interesse der Herbeiführung der friedlichen Koexistenz zwischen der DDR und der BRD) 이러한 만남이(Das Treffen) 곧 이루어지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전 조건을 전제하지 않음>>(Keine Vorbedingung)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는 빌리 브란트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그의 수도를 방문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사전조건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빌리 브란트 수상은 국제적 관례에 따라 우리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독일 연방공화국의 정부수반(Als Regierungschef der BRD)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회담(만남)의 진행에 관한 프로토콜(의견적인 것)이나 조직에 관한 우리의 세부적인 제안은 위에 말씀드린 것에 순하며, 이러한 제안은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의 전권자가 내세운 희망사항에 대부분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일 연방정부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 국가가 상호간에 주권을 가진 국제법상의 주체로서 (wechselseitig als Souverane Völkerrechtssubjekte) 인정해야만이 동등한 권리에 입각한 협상이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서 베를린》(Westberlin) 서부 베를린은 독일 연방공화국(BRD)에 속하지 않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얼마후에는 긴장의 완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4대국 협상이 이 서부 베를린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평화와 긴장의 완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4대국 협상이 독일 연방공화국의 브란트 수상이 서부 베를린을 방문하므로 인하여 어떤 부담이 끼쳐진다거나 혹은 방해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의 브란트 수상이 베를린을 방문한다는 것은 하나의 도전(eine Provokation)이라고 하겠으며,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관여할 수도 없고 그러한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서부 베를린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분쟁의 자료(Konfliktstoff)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를 우리는 배격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떠한 차별대우도 하지 않고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 간에 동등권에 입각한 관계를 수립하자는 최담테마(Thema für Besprechungen über die Herstellung Gleichberechtigter Beziehungen ohne jede Diskriminierung zwischen der DDR und der BRD)의 대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립되는 견해》(Gegensätzliche Auffassungen) 서부 베를린의 상태(Status)를 판단함에 있어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와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간에 서로 상이한(Unterschiedliche) 견해뿐만 아니라 대립되는 견해(Gegensätzliche Auffassungen)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의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빌리 슈토프 수상은 분리시키는 요소(Das Trennende)를 제거하고 서로를 잇는 요소(Das Verbindende)를 모색할 때가 지금이라는 1970년 2월 18일자 독일 연방공화국의 빌리 브란트 수상의 편지 내용을 빌리 브란트 수상에게 환기시키고자 하는 바입니다.

만일 이것이 단순한 말로만 그치는 것으로 되지않아야 할 진대는 독일 연방공

화국의 브란트 수상은 그가 동등한 권리에 입각한 관계의 수립을 위하여 협상을 버리기를 바라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DDR)에 대한(반대되는) 정치적대모(Die Politische Demonstration)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이라고 밝힙니다.

동등권의 원칙은 브란트 수상이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의 행정수반(Regierungschef)으로서 협상대상국인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을 방문할 때에 이 나라의 국권(Die Souveranität)을 존중하고, 여론 도중에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영토권(Die Hoheitsrechte)을 국제법의 세원칙에 따라 존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두 국가의 정부간에(Zwischen den Regierungen Unserer beiden Staaten)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부가 소재해 있는 당해국가의 수도의 기차역이나 혹은 비행장에 도착하고 그곳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내각실 부책임자 게르하르트 쉬쉴러(Gerhard Schüller)는 양국의 정부 수반의 만남(회담)이 예정된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위의 기본태도에 입각하여 예비회담을 성공적으로 종결토록 하는 책임을 위임 받았읍니다.

(출처)

1970년 3월 10일자로 베를린(동부)에서 발간된 <새 독일>(Neues Deutschland)에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
대표단의 커뮤니케 (1970.3.12)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수상간의 회담(만남)을 위한 기술적인 그리고 프로토콜과 관계되는(의견적인) 준비회담을 종결하고 1970년 3월 12일에는 다음과 같은 커뮤니케가 발표되었다.

《「에아푸르트」로 의견이 합의됨》(Einigung für Erfurt)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빌리 슈토프(Willi Stoph)수상과 독일 연방공화국의 빌리 브란트(Willi Brandt) 수상간의 회담을 위한 기술적, 의견적 문제에 관계되는 준비를 위임받은 양국의 대표단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의 제안에 따라서 1970.3.19일에 에아푸르트(Erfurt)에서(첫) 회담(만남: Das Treffen)을 개최한다는 점에 오늘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 통보는 베를린과 본에서 동시에 발표됩니다.

1970년 3월 17일자로 본에서 발간된

《독일 연방공화국의 언론 공보처 판보》에서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 대변인의

성명 (1970.3.12)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대변인 콘라드 아알러스 (Conrad Ahlers) 차관은 1970년 3월 12일에 독일 텔레비전에서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일종의 전체 독일 커뮤니케》 (Eine Art gesamtdeutsches Kommuniqué)

20년 이상 지나가는 동안 오늘 처음으로 일종의 전체 독일적인 커뮤니케가 있었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내각수반 (수상) 과 의 사이에 있게 될 회담을 준비할 사명을 위임받은 양측 대표단의 수석대표 위 일들인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실 자암 (Sahm) 국장과 쉬슬러 박사는 양국 수상의 회담이 3월 19일 에아푸르트 (Erfurt) 에서 개최된다는 데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자암박사가 월요일에 전달한 슈토프씨에게 보낸 서한에서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이 서부 베를린 때문에 생긴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3의 장소에서 만날 것을 제안한 후에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는 오늘 이 회담의 장소로 에아푸르트 (Erfurt) 를 제안하였고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는 이를 즉각 수락하였습니다.

《공동노력의 결과》 (Resultatgemeinsames Anerkennungen) 이러한 협상결과는 양국 수상의 회담준비를 함에 있어서 생겨난 의견의 차이를 극복하고 이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양측이 다한 공동노력의 결과입니다. 이 회담의 목적은 독일에 있어서의 두 국가간의 관계에 긴장의 완화를 가능케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독일 시민의 생활을 보다 쉽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발전을 환영합니다. 독일 연방국 정부는 이것이 독일에 보다 나은 새로운 상태가 이루어지는 시작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은 에아푸르트로 가는 여행을 준비함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각료들과 연방국회의 원내총무단들과 따라서 기민당·기사당 원내 교섭단체의 총무도 협의에 정할 것입니다.

1970년 3월 17일자로 본에서 발간된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의 언론·공보처 관보》에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슈토프 수상(1970.3.19)

《에아푸르트 회담에 즈음하여 원칙적인 제문에 대한 견해피력》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내각위원회의장(수상) 빌리 슈토프는 1970년 3월 19일 에아푸르트에서 빌리 브란트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과 만나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일련의 원칙적인 견해를 피력하였습니다.

매우 존경하는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

본인은 이 회담(만남)을 개최하며 귀하와 귀하의 동행 일행을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환영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귀하가 본인의 초청에 응하던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며 여기에 이점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회담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수도 베를린에서 개최될 수 없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이 회담이 백림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는 이에 대한 원인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충분한 근거가 있는 입장을 또한 알고 계십니다.

《관계의 정상화》(Normalisierung der Beziehungen) 우리의 이 회담(회담)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정치적 중요성을 갖는 사건입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이 수립된 이래 최초로 양국정부의 수반이 동등한 주권을 가진 두개의 국가(Die beiden unabhängigen souveränen Staaten)에 관계정상화의 기본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만납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DDR)과 독일 연방공화국(BRD)의 시민과 구라파의 모든 민족들이 이해심을 가지고 이 회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구라파에 현재 존재하고 긴장에 직면하여 이들은 전부가 이 회담이 우리 양국의 심장부에 평화를 보장하는 일에 건설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방 수상 우리는 사실의 정수를 위하여 무엇인가 미화하는 일도 없이 또 무엇이라고도 숨기는 일도 없이 아주 마음껏 놓고(Ganz Offen) 서로가 이야기 하자는 데에 확실히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귀하와 본인이 여기에서 대표하고 있는 두 국가의 정부들은 앞으로는 절대로 독일 영토로부터 다시 한번 전쟁이 발발하는 일이 않도록 하는 데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세기에 두차례나 무시무시한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제국주의적인 독일의 정권들에 의하여 범하여졌습니다...

앞으로 몇주일만 있으면 피와 총칼로 이루어졌다가 독일 제국이 피와 총칼로 패망하고 만지 25년째 되는 날이 돌아옵니다. 12시 5분까지 이들 파시트적인 독재자들은 수백만의 인명과 엄청난 물질을 희생하여 가면서 여러 전쟁 민족들에게 가장을 해서 결국 이 전쟁을 그들의 고국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는 결국 히틀파시즘의 분쇄, 독일 제국주의의 장성들의 무조건 항복, 제국주의적인 독일제국의 멸망과 그리고 독일이 점령지역으로 분할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평화를 영속적으로 보장하는 일》 (Den Frieden dauerhaft sichern) 독일 제국주의 숙명적인 정치로부터 교훈을 배우고 평화를 영속성있게 보장하는 일

- 이것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의 두 정부 수반의 관심을 끄는 인간적인 관심사라 하겠습니까.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본인은 우리가 이러한 높은 책임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의 전체정책은 평화의 보장 (Die Sicherung des Friedens) 을 위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여기에서 확실히 보장하여 두는 바입니다.

《조약의 초안》 (Vertragsentwurf)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국가위원회위원장 (Der Vorsitzende des Staatsrates der DDR) 발터 울브리히트 (Walter Ulbricht) 가 1969년 12월 17일에 독일 연방공화국 대통령 구스타브 하이네만 (Gustav Heinemann) 박사에게 국제법의 제원칙에 따라서 동등권에 입각하고 비차별 원칙에 바탕을 둔 관계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에 수립하기 위한 조약의 초안을 전달하였을 때에 울브리히트 의장의 정신은 이 책임에 충만되어 있는 것이 이 서한의 동기였던 것입니다.

이 조약은 드디어 순수한 동등권과 평화적 공존관계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에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래와 평화의 보장을 위하여 취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이니시야티브는 지난 20년동안 수 없이 행하여졌으며 다양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책이 지금까지의 독일 연방공화국의 모든 정권에서 아무런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고, 이를 정권에 의하여 더 나아가서는 언제나 되풀이하여 통명스럽게 거부되어 왔던 것을 우리는 항상 유감스럽게 생각하여 왔던 것

입니다. 이러한 일은 독일 연방공화국이 군비를 과속화 하고,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국기를 흔들며 놓음으로써 그 지위를 위태롭게 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원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리자는 (rückgängig machen) 그들의 목적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행하여졌던 것입니다.

《평화적 공존》(Friedlich Koexistenz) 이러한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후니까 이제 우리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에 국제법의 바탕 위에 평화공존의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므로 이 가능성이 이번 기회에 이용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무모히 놓쳐버리는 일이 없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 우리가 2류나 3류급의 문제를 토의 규정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함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모임의 중요한 목표는 구라파의 안전과 우리 두국가와 민족들의 평화적인 생활을 위하여 (Im Interesse der europäischen Sicherheit des friedlichen Lebens der Völker unserer Staaten)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의 관계에 하나의 전기 (eine Wendung) 를 불러 넣을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국제법적 관계》(Völkerrechtliche Beziehungen) 우리 두 국가간의 현재의 관계는 완전히 비정상적입니다 (Völligunormal).

이로 인하여 심각한 위험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모임의 일정속에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의 관계를 영속적으로 그리고 그 바탕의 기틀이 되는 문제의 처리가 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처리는 완전한 동등권에 입각한 국제법적인 관계의 수립위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은 이를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우리의 조약초안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독일 연방공화국으로부터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순수한 동등권 (echte Gleich Berechtigung) 과 차별배우 (Nichtdiskriminierung) 의 원칙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 어느 한쪽의 항복을 뜻한다는 소문같은 것 (Das Gerede wonach es um

die Kapitulation der eine Ader anderen Seite gehe) 은 그러므로 실제 사실을 완전히 의욕시켜 놓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프레스티지 (공지) 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지만- 중요하고 그 핵심을 이루는 것은 인간적인 관심사를 해결하고 평화를 보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본문제들은 모든 쟁점이 되어 있는 문제들을 회담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말로는 그 해결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상 (Der Status quo) 과 구라과의 경계선을 변경시키고, 제 2 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고치려고 하는 한 정책에 봉사하기 위하여 만들어 내어진 저해물 (Hindernisse) 과 장애물들 (Barrieren) 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지난 20 년이 넘는 동안이나 기민당 - 기사당 (CDU/CSU) 영도하에 복고주의와 복수주의 세력에 의하여 추진 실행되어졌던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의 정치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에 있어서의 정권교체》 (Regierungswechsel in der Bundesrepublik) 기민당 · 기사당을 축출한 결과를 낳은 정권교체를 우리는 이러한 정치로선을 축출하고,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기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하여 지난 20 여년 동안이나 취하여진 비 현실적이고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정책 (처) 으로부터 물러서려는 독일 연방공화국 국민의 넓은 시민층의 의지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 이러한 뜻을 귀하의 정부가 고려하는 것이 소망스러운 일인가 봅니다.

아니면 이러한 일 대신에 독일 연방공화국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하여 동등권에 입각한 국제법적인 관계를 수립하자는 것을 자부한데서 생겨난 우리 두 국가간의 긴장된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하여 존속해 있어야겠습니까? 힘의 정치와 물백정책을 강행하고, 근 17 년이 되는 동안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항하고, 그의 국제법적 승인을 반대하여 온 아데나워 통치하와 같은 정치상태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누구에게 무슨 이로움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에 살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평화와 보장된 생활조건을 바라는 구라파 민족들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보복 (Revanche) 과 정복 (Eroberung) 을 지향하는 이러한 정치는 성과를 거둘 전망이 없는 것입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그의 사회주의적 사회질서를 강제적으로 제거하려는 아데나워의 어떤 변형체 (Die variante Adenauers zur gewaltsamen Beseitigung der DDR Und ihr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sordnung) 도 그리고 이와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그밖의 다른 변형정책도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제 명확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증명되어진 사실입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발전》 (Entwicklung der DDR)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이 현대적이고, 사회주의적인 국가로 발전해 나간 것은 막을 수 없었던 발전이며, 이는 현재도 그러합니다.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근시안적인 견해나 혹은 환상을 갖지 않는 사람으로서 사실을 관찰해 보는 사람이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노동자 농민의 세력 (Die Arbeiter-und Bauern-Macht der DDR) 이 민족속에 확고히 뿌리박고 있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은 소련과 그밖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확고한 우호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독일 영토상에서 사회주의를 철폐시켜 보자는 모든 희망이 환상으로 증명되어졌습니다.

그러나 50년대와 60년대에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것이라는 낙인이 찍혔던 것이 오늘날에 와서야 비로소 확실히 헛된 꿈으로 증명되어졌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 귀하는 독일 연방공화국 국회에서 주목할만한 인식을 발언했습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이 성명하셨습니다. <와르샤와 동맹국들과 협상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DDR) 과도 동등권과 비차별대우 원칙에 입각하여 협상해야 한다는 불가피성을 그 출발점으로 삼지 않는다면은 아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독일 연방공화국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간에 정상적이고 국제법적인 즉 외교관계가 수립된다면 이러한 귀하의 인식에 부합되는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구라파의 이해와 그리고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뿐만 아니라 독일 연방공화국의 이해에도 일치되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두 독일 국가는 다같이 구라파의 모든 국가들과 그들의 관계를 정상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유일하게 (einzig Und. allein) 긴장의 침묵에만 기여하고, 독일 연방공화국으로 하여금 구라파에 있어서의 평화를 교란하는 요소가 되도록 할 정책을 계속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실로 위험천만한 정책이야말로 말로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귀하의 모든 연방수상 전임자들이 수상직을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던 정책인 것입니다.

만일 과거의 목적이 단순히 그 형태만을 새로히 하여 계속하여 추진되어진다면 이것을 진보라고 생각할 사람은 물론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추구된다면 도리어 독일 연방공화국은 우리 (구라파) 대륙에서 신경 (통) 지대 (Die Neuralgische Zone) 로 남게 될 것입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의 관계정상화가 봉쇄당하고 중부구라파에 있어서의 평화는 영원히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 두개의 독립된 주권국가의 존립 》 (Existenz zweier Souveräner unabhängiger Staaten)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는 귀하와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의 다른 대표자들이 두개의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로서의 (Als Zweier Souveränen unabhängigen Staaten)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의 존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음을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추출해 낼 수 있는 논리적 귀결은 다음의 사실에만 귀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즉,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에 국제법의 기초위에 동등한 권리를 갖는 관계가 수립되어지고, 이러한 관계는 서로 상이한 사회질서를 가진 두개의 국가가 평화적으로 공존 (Die friedliche Koexistenz der beiden Staaten mit unterschiedlicher Gesellschaftsordnung) 하는 것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 국제법적으로 통용되는 조약 》 (Völkerrechtlich gültiger Vertrag)

귀하는 1970년 1월 22일자의 귀하의 서한에서 동등한 권리와 비차별대우의 원칙에 입각하여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 사이에 협상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이 그들의 상호관계에서

그들이 있는 그대로를 서로가 인정하는 일, 즉 국제법상의 주권을 가진 주체로서 (Als souveräne Subjekte des Völkerrechts) 상호 인정하는 데에 반대할만한 요인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일 귀하가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 국제법의 제원칙을 손수 적용시킨다면, 그것은 또한 그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연유되는 결과를 유도해 내고 국제법적으로 유용한 조약을 통하여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DDR) 을 주권을 가진 동등한 국가로서 인정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귀하가 영도하는 정부(권)는 지금까지의 독일 연방공화국의 정부들과는 달리 실제로 과거의 짐을 벗어버리고 현실이라는 바탕위에서 정부라는 것을 분석화 하는 것일 겁니다.

귀하와 연립내각 정부를 지명할 대표자들의 발언에서 본인이 결론적으로 판결시켜 본 바에 의하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한 국제법적인 승인은 결국은 불가피한 것이다 라는 견해가 널리 퍼져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기전에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이 독일 연방공화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이행해야 할 전제조건이라는 해피한 발언이 이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회주의적인 사회질서와 관련되어 발언되고 있으며, 추리되고 있습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한 국제법적인 승인이 불가피한 것이다라는 견해는 합리적이고 당연한 일이라 하겠으나 이것을 어떤 반혁명적인 의도 (Konterrevolutionäre Absichten) 와 연결시킨다는 것은 당치도 않는 (unsinnig) 일입니다. -이 점을 본인은 여기에서 아주 명백히 말씀드려 놓고자 하는 바입니다. -

《국제법의 기본원칙》(Grundprinzipien des Völkerrechts) 가령 국제법의 기본원칙의 승인같은 자명한 것에 대하여 오늘날 어떤 내가를 치불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국제법적인 승인이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파악한 사람이라면, 즉시 이에 어울리는 형태를 취하여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국제법적 승인을 말할 줄 아는 넓은 정치적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내각의 이름으로 귀하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바입니다. 즉, 귀하는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에 동등권에 입각한 관계의 수립을 위하여 귀하에게 전달되어 있는 조약의 체결에 대한 협상에 이 조약에 대하여 될수록 빠른 시일안에 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응할 용의가 있는가의 여부를 본인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내각의 이름으로 귀하에게 질문하는 바입니다.

《파리조약》(Pariser Verträge) 파리조약을 통하여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하여 갖는 관계에서 제한조건이 주어져 있다는 견해가 독일 연방공화국에서 종종 피력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독일 연방공화국의 주권문제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하여는 본인은 말씀드리는 것을 삼가하겠습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에게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은 사회민주당(시민당)에 의하여 영도되고 있는 현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가 독자적인 정치를 향할 의도가 있으며,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의 주권(Souveränitätsrechte)을 아무런 제한을 받음이 없이(Uneingeschränkt) 행사할 뜻이 있는가의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만일 양측이 선의에 따라 행동하고 평화와 그리고 우리 양국의 시민들을 위하여 어떠한 결과를 얻으려한다면 언(Wort)행(Tat)이 일치되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되겠습니다.

본인은 유감스러우나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의 정치(책)에 이러한 모순점들이 있음을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의 대표되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는 긴장의 완화와 법적인 공존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그러나

시에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기타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하여 위험한 군사계획을 계속하여 발전시키고 완성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냥 무관심사가 될 수 없으며, 이것은 우리들에게 큰 불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의 국방정책》 (Verteidigungspolitik der Bundesrepublik)

독일 연방공화국 방위로 강성들의 철갑설립과 그리고 아마도 역시 귀하의 국방 장관의 설합속에는 - 그 계획의 명칭은 무엇이던가 아무런 관계없이 - 사회주의 제 국가를, 특히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하여 그리고 이들 국가의 제 도시와 마을과 시민들에 대하여 행하여질 전진전략 (Vorwärtsstrategie) 의 세부계획 안들이 완성되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분명히 공격적인 계획을 위하여 독일 연방공화국에 있어서의 군비에산은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그 어느때 보다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리고 말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는 하지만 원자무기를 갖춘 군비 (Die atomare Rüstung) 가 실제로는 계속하여 추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평화적인 의도와 그리고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한 동등권에 입각한 관계의 수립등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성명을 통하여 발표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서로 합치될 수 있겠습니까? 독일 연방공화국에서 영향력 있는 총들이 그러지 않아도 언제나 세력상관 (Kräfteverhältnis) 을 잘못 판단하여 왔던 것인데, 이들이 오늘날에도 위험한 불장난 (ein Gefährliches Spiel mit dem Feuer) 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계획 (Pläne) 과 행동 (Handlungen) 은 계속하여 새로운 (전쟁, 소요 따위의) 모화선 (Zündstoff) 을 쌓아올리고 있으며, 군사적 대결상황의 위험 (Die Gefahr Militärischer Konfliktsituation) 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만일 독일 연방공화국의 연방군담당 (국방) 장관 슈미트 (Schmidt) 씨가 급속도로 군비확장을 (Die Beschleunigte Aufrüstung) 추진하고 있으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그의 동맹국들은 이러한 발전을 무관심하게 그냥 보아 넘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이신 귀하에게 보낸 서한에서 명백히 말씀드려 놓았던 것처럼 -

그러므로 정말 의미로 평화 (Frieden) 나 아니면 전쟁 (Krieg) 이나 하는데

관계되는 것입니다. 귀하는 공개적으로 평화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영토적 현황 (Der territoriale Status quo) 과 구라파의 국경변경을 추구하는 모든 목적이 포기되지 않는 한 확실한 보장된 평화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의 견해 (입장) 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화를 보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분쟁의 모든 점화요소 (Dlle Zundstoffe) 와 활화구 (Herde) 를 이 세상에서 없애 버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평화조약》 (Friedens Versrag) 정치적, 영토적 현황이 명확히 (eindeutig) 그리고 아무런 조건없이 (Vorbehaltlos) 승인되지 않는 한 이러한 이야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생겨난 결과물 평화조약이 없다는 조건으로 국제법적으로 승인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여야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평화조약을 성취시키는 일을 언제나 되풀이 하여 뒤로 밀어 버린 것은 바로 독일 연방공화국의 정부 (권) 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의식적으로 손수 방해해 놓아서 이루어지지 못한 평화조약을 구실삼아서 1970년의 현 국경선들을 인정하는 것을 오늘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단지 이들 국경선을 변경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자는 생각만이 있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구라파의 제민족을 습격을 했고, 독일 제국주의와 파시즘의 범죄행위가 있었고 그의 결과로 무조건 항복을 했던 것인데, 이러한 일련의 일이 있는 이제 어떻게 이를 습격당한 제 민족들에 대하여 그 무슨 <법률상의 청구> (Rechtsansprüche) 를 요구하고 나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구라파에 있어서의 국경선의 인정》 (Anerkennung der Grenzen in Europa)

서방 강대국들과의 유대만을 일방적으로 강화하고 서방진영의 국경선을 인정하되 동부진영에 있어서의 경계선은 로카르노 (Locarno) 조약에 밝히진 것처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두어 버린다는 내용을 지닌 슈트레제만 (Stresemann) 의 정책을 반복할 의도가 혹시라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독일 제국주의자들이 제1차 세계대전후에 그러했고, 히틀러는 그들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것인데, 그때처럼 다시 국경에 대한 요구를 들고 나온다면 (Grenzforderungen) , 우리가 어떻게 과거를 극복하고 평화에 기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라파의 민족들은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가 구라파에 있어서의 국경을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인정을 행할 것이며, 오늘에 있어서 그리고 장래에 있어서도 이 국경의 변경시도를 결코 감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독일 연방공화국의 의무를 발표·선언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경의 변경에 관하여 어떠한 폭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사람은 슈트라우스 (Strauß) 씨와 슈뢰더 (Schröder) 씨의 테제에 매우 접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소위 평화적 방법을 사용하여 국경의 변경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며—이것은 히틀러가 벌써 그의 침략을 준비할 때에 사용하던 책략 (eine Taktik)입니다.

역사의 체험을 무시하는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엄숙한 결과를 응보로 받게 됩니다. 국경선의 변경을 목표로 삼는 제국주의적 강대국 정책 (Die Imperialistische Großmachtpolitik)은 한세기 (世紀) 동안에 두차례나 독일민족을 잔인한 전쟁과 파멸로 몰고 들어가 파탄에 직면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침략을 당했던 민족들이 겪은 고통은 실로 이루말할데 없이 큰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정치집단의 많은 반 파쇼주의자들과 함께 언제나 철저히 파쇼주의와 전쟁에 반대하여 투쟁하였습니다.

그러나 히틀러 파쇼주의가 패망하고 독일제국이 멸망한 후에, 오늘날의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DDR)의 영토에 있어서는 통일된 노동자 계급과 그들의 연합세력은 새로운 반제국주의적인 질서의 수립을 위한 기회를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포츠담 협정》(Potsdamer Abkommen) 모든 민족의 관심과 일치하여 포츠담 협정에 법적으로 통용성을 갖도록 조문하던 것이 여기에 실현되어 졌습니다. 즉, 군국주의와 나치주의와 전쟁의 뿌리를 제거하는 일, 전법자로서 그리고 전쟁을 통한 치복자로서 전쟁의 중요한 죄책을 질머진 초대형 기업황포자들은 누구나 그 세력을 둔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독일 파쇼주의자들에 의하여 습격침략을 당했던 이웃 민족들의 국경을 법에 알맞게 (정당하게) 확정하여 두는 일이 여기에서 실현되어진 것입니다.

대자본을 제거한 후 이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는 준비와 전쟁에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쟁선전 (Kriegspropaganda), 민족박해

(Völkerverhetzung) 와 그리고 민족차별 (증오) 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미 1950년에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인민위원회 (Volkskammer) 는 평화보호법 (Das Gesetz zum Gesetz des Friedens) 을 의결 (제정) 하였으며, 이 법은 침략행위와 침략전쟁의 선전과 준비를 범법행위로 유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노동자 계급 (Die Arbeiterklasse) 은 취업하고는 농민과 지성인들과 그리고 자유직업종사자들과 함께 국가권력 (Die Staatsmacht) 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 (Aufbau d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 대 독일 농민 전쟁이후 의사 일정으로 되어 있었으며, 1848년의 시민 혁명에서도 역시 완성되지 못한채 남아 있던 민주주의적인 개혁을 우리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실현시켰으며, 우리는 그후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시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민주주의적인 토지개혁을 통하여 수백년동안 계속되어 내려오던 농부들과 농촌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일들 (Unrecht) 이 조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귀족 (Junker) 들의 세력을 빼앗으므로써 군국주의의 온상이 제거되어 졌습니다.

이전의 지배계급들이 누리던 부당한 교육특권이 없어졌으며, 쇼비니즘 (Chauvinismus) 과 국수주의 (Nationalismus) 정신이 각급학교와 대학에서 영원히 추방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날의 사회주의적인 교육제도에 대한 결정적인 의의를 지니는 전제조건이었습니다.

《사회주의적인 헌법》 (Sozialistische Verfassung) 우리의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서는 노동하는 백성 (Das Werktätige Volk) 이 자유의사에 의한 자결로 (In Freier Selbstbestimmung) 진보된 사회주의 사회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유의사에 의한 자결로 절대다수의 찬동을 얻은 국민투표에서 사회주의적인 헌법에 의결 결정되었습니다. 국제법 주체가 지녀야 할 모든 부수조건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국가는 그 질서의 기틀이 확고히 정립된 평화질서 (Friedesordnung) 에 바탕을 두어 존립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적인 주권국가로서 우리는 소련과 그리고 기타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영속적인 동맹관계를 체결하였으며, 이 동맹관계는 확고한 우호와 이해의 공통

성(동일성)에 그 바탕을 두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은 하나의 평화주의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오늘날 국제적으로 존경을 받는 평화요소(Ein International Geachteter Faktor des Friedens)로 발전하였습니다.

《포츠담 협정》(Potsdamer Abkommen) 독일 연방공화국내에 있어서의 내적인 발전을 평가하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도 독일 연방공화국 시민이 할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 25년간에 행하여진 이러한 내적 발전에는 독일 연방공화국의 영토(국경)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까지도 무관심하게 있을 수는 없게 하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그 영향면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1945년 이후의 제 가능성들이 이용되지 않은채 그냥 방치되어지고, 포츠담 협정은 의식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과거는 극복되지 않고, 지난날의 권력구조(상황)가 계속 존속하고 있다는 점은 귀국자체에서 확인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과거를 부끄러워하는 태도는 직접적으로 본질을 그 결과로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서부독일 연방공화국 국회의 초대대통령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전체 독일을 어느정도만 갖는 것보다는 차라리 절반 독일을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 낫다>(Lieber das halbe Deutschland ganz, als das ganze Deutschland halb) 구 소유(제도)구조를 구제하고 혹은 재활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힘의 정책(Die Politik Der Starke)을 도움으로 삼아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변경시키기 위하여, 서부독일의 대자본(Das Westdeutsche Großkapital)은 서방 강대국들과 손잡고 독일을 분할해 놓았던 것입니다.

《서구라파의 단결》(Westeuropäische Integration)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바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는 민족의 통일(Die Einheit der Nation)보다 서구라파의 결속(Die Westeuropäische Integration)이 더 중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했던 사람은 독일 연방공화국의 아데나워 수상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데나워 수상은 민족을 파괴하기 위하여(Um die Nation zu zerstören)그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한 뒤에 의식적으로 선언해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1945년 10월 5일에 아데나워는 기자회견들 앞에서 즉각 <3개 서방 점령 지역들을 하나의 연방국가(Ein Bundesstaat)로 만들> 그의 의도를 발표하였던

것입니다.

1948년에는 서로 분리하여 화폐개혁을 감행함으로써 경제적 분할 (Die Wirtschaftliche Spaltung)이 결과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서부의 점령지역들이 분리되어 서방 마르크 (Die separate Westmark)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이들 지역들은 교외적으로 외환거래상의 외국 (Das Devisen Ausland)이 되어 버렸습니다.

일년뒤에는 독일 연방공화국을 세움으로써 분파국가가 생겨났으며 (Die Grundung eines Sepaten Staates), 이로 인하여 민족의 분열 (Die Zerreiigung der Nation)은 완전히 행해져고 말았습니다.

《소련의 평화조약 초안》 (Friedens Vertragsentwurf der Sowjetunion)

우리는 이러한 발전을 저지하기 위하여 언제나 노력하였습니다.

1950년대에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소련은 이해와 평화의 보장을 목표로, 항구적인 분할진로 (Der Permanente Spaltungskurs)를 막기에 알맞는 건설적인 제안을 언제나 되풀이 하여 행하였던 것입니다. 1952년 3월에 있었던 소련의 평화조약 초안은 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현 독일 연방공화국의 대통령이신 하이네만 (Heinemann) 박사가 1958년 3월 25일에 본에 있는 독일 연방공화국 국회에서 이러한 소련의 이니시아티브에서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주 강력히 암시하였던 사실을 본인은 여기에서 귀하에게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도 그 당시의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서부독일에 있어서의 우려하는 여론이 무시되어 가는 중에 민족의 통일은 파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민족의 분할을 반대하고 서부독일의 분파국가 (Der Westdeutsche Separatstaat)를 만드는 데에 반대하고 나선 서부독일의 정당이라고는 유일하게 공산당 (Die Kommunistische Partei)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며, 이 공산당은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에 나중에 불법 금지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파리조약》 (Pariser Verträge) 민족의 분열은 독일 연방공화국이 재준비를 갖추고, 1954년에는 파리조약이 체결되고 그리고 1955년에는 독일 연방공화국이 북대서양 동맹기구 (NATO)에 가입되므로 인하여 굳어져 버렸습니다.

파리조약에 서명함으로써 그리고 우리가 행한 모든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아테나

위에 의하여 이끌어지던 본의 정부(권)는 독일 연방공화국(Die Bundesrepublik)으로 하여금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DDR)에 대하여 스스로 드디어 외국이 되도록(endgültig zum Ausland Gegenüber der DDR)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민당(SPD)당수였던 에리히 올렌하우어(Erich Ollenhauer)가 1955년 1월 29일에 푸랑크 푸르트의 파울교회(Paulkirche)에서 행한 다음의 경고발언을 여기에서 한번 회상시키고자 합니다.

<우리가 파리조약에 서명함으로써 우리는 독일 연방공화국에서 처음으로 자유결정에 따라 이와같이 결정적이고도 광범위한 방식으로 독일의 분할을 고착시키고 말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외교정책상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독일의 분할>>(Spaltung Deutschlands)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이신 귀하는 에리히 올렌하우어가 적절하게 규정해 놓은 바 있는 외교정책의 유산을 오늘날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역사적 진리를 아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독일을 분할한 사람은 우리가 아닙니다. 분할의 책임은 전적으로 독일 연방공화국과 서방 강대국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족의 통일>(Einheit der Nation)이라는 말을 하거나 혹은 <민족의 통일을>을 유지하고자 한다(Die Einheit der Nation Wahren Wollen)는 등의 말은 당치도 않는 얘기입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의 지배계층은 이러한 그들의 말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포기해 버림으로써 이제 20여년이 넘는 동안 민족의 통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 귀하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DDR)과 독일 연방공화국(BRD)간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할때면은 <내독관계>(Innerdeutsche Beziehungen)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리고 귀하의 정부에서 한 부(部-Ministerium)가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이 분할되고 파리조약에 대한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의 서명이 행해진 후에 이러한 표현이 쓰인다는 것은 그러나 이치에 어긋나는 일(absurd)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우리 두 국가간에 동등권에 입각한 정상관계

(Normale, Gleichberechtigte Beziehungen) 를 바라지 않는 정치적 의도를 폭로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내독관계는 존재치 않는다 》 (Keine Innerdeutschen Beziehungen) -- 모든 경고를 물리치고 - 독일 연방공화국이 파리조약을 서명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 에 가맹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하여 자신을 외국으로 선언해 놓은 후에 내독관계 (Die Innerdeutsche Beziehungen) 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가 파리조약에 동의한 것은 반민족적 성격 (Ein antinationaler Charakter) 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침략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성격 (ein aggressiver imperialistischer Charakter) 도 띠고 있습니다. 이 < 독일 조약 > (Deutschland Vertrag) 의 제 2 조를 볼 것 같으면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서방강대국들 (Westmächte) 에 의하여 지금까지 행사되어 왔거나 혹은 소유되어 온 모든 권한을 전체 독일에 대하여 (In Bezug auf Deutschlands Ganzes) 계속 갖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본인은 여기에서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제 7 조는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조약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은 독일 연방공화국의 독점 자본주의적인 사회체제 (Das Monokapitalistische Gesellschaftssystem der Bundesrepublik) 에 병합되고 서방진영의 제국주의적인 조약기구 (Das Westliche Imperialistische Faktssystem) 에 통합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조약이 귀하가 직접 발표한 선언과 같이 현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의 정책의 바탕을 이룬다면은 < 내독관계 > 라는 형식은 도대체 독일 연방공화국의 제국주의적인 지배체제 (Das imperialistisch Herrschaftssystem der Bundesrepublik) 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연장시키고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을 북대서양 동맹기구 (NATO) 에 통합해 버리려는 뜻 이외에 무슨 다른 의의가 있을 수 있었습니까?

《 4 대국 책임 》 (Viermächte Verantwortung) 독일 연방공화국에 널리 퍼져 있는 4 대국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그의 수도 베를린에 대하여도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테제 역시 위에 말한 것과 똑같이 성립될 수 없는 이론입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관한 한 —이점은 누구나 우리의 헌법과 그리고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의하여 체결된 국제법상의 제조약을 통하여 십사리 확신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은 4대국 관할 (Viermächte Zuständigkeit) 에도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3대국 관할 (Dreimächte Zuständigkeit) 에 귀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은 독립되고 주권을 가진 사회주의국가 (Ein Unabhängiger Souveräner sozialistischer Staat) 입니다.

《특별한 내륙관계》 (Besondere innerdeutsche Beziehungen) 라는 형식에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DDR) 은 후견인 상태 (Ein Vormundschaftsverhältnis) 에 예속시켜야 한다던 옛날의 요구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현실과 일치하지 않고 모순에 빠져있는 이러한 구조는 지금까지의 단독 대표권 같은 당치도 않는 주장 (Die alte Alleinvertretungsmaßung) 을 변형된 형태를 취하여 유지해 나가고,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을 지금과는 다른 방법을 써서 차별대우하는 것을 계속해 나가는 일에만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들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들에게는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며, 또한 이러한 것은 그 어떠한 협상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귀하는 이해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귀하에 대하여 그러한 협상을 감히 시도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도 우리에게 대하여 그러한 시도같은 것은 아예 포기하자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은 그밖에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평화조약 제안》 (Vorschläge für einen Friedensvertrag) 독일 연방공화국이 아직 북대서양 동맹기구에 통합되지 않고, 군비 재무장도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평화조약과 통일적인 민주주의 독일 (ein Einbeitliches und Demokratisches Deutschland) 을 위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당당시 우리는 독일 연방공화국에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하여 현실적인 정책을 취하는데 찬성하고 나실 장기적인 인목을 지닌 정치가들이 충분히 많을지도 모른다는 희망하여 국경문제는 보류해 두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 연방공화국에 있는 정치세력은 이 보류시켜 두었던 국경문제를, 독

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한 뻔뻔스러운 투쟁의 대상으로 악이용하였던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독일 연방공화국을 사회주의에 대항하는 공격력 (die Offensivkraft gegen den Sozialismus) 으로 확장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한 내독관계》와 《인간적인 문제의 해결》(Menschliche Erleichterung)이라는 점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러한 말을 들으면 그라지 않아도 나쁜 경험에 대한 어떤 회상들이 생생히 떠올립니다. 국경을 개방해 놓았던 1961년 8월 13일까지 우리는 그 당시의 본 정권(부)의 악의에 찬 간섭정책(Die Feindselige Einmischungs Politik) 때문에 매우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1천억 마르크》(100 Milliarden Mark) 우리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에게 1천억 마르크도 넘는 액수를 지급하여 소위 생활의 <부담경감>이라는 일을 하였습니다. 무시무시한 손해를 불러이르킨 이 경제전쟁(Wirtschaftskrieg)의 전체 규모를 명확히 해두기 위하여 본인은 이 1천억이라는 액수는 1956년과 1957년에 있어서의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전체) 국민소득(Das Nationaleinkommen)에 거의 막대한 큰 액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의 정확한 설명을 위하여 예 하나를 더 들겠습니다. 위에 언급한 손해(배상) 금액(Schadenssumme) 1천억 마르크는 1950년에서 1961년까지의 기간동안에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행하여진 전체 투자를 위한 지출보다도 훨씬 높은 액수인 것입니다.

본(Bonn)에서 사람들이 <동쪽의 가난한 형제 자매들>(Arme Brüder Und Schwester in Osten)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들은 이들 형제자매를 정말로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모든 일을 다시 좋게 하게 하는데에 필요한 규획의 제정이 필요불가결한 일이라는 우리의 견해에 대하여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가 이해심을 가지고 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은 이 모든 손해를 겪어가면서도, 그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덕분으로(dank ihrer sozialistischen Planwirtschaft) 세계의 산업국

가들중에 주목할만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과 그의 시민은 그러나 소위 그러한 <특별한 내독관계> (Besondere Innerdeutsche Beziehungen) 와 그러한 <인간적인 문제(생활)의 해결(Menschliche Erleichterungen)> 이라는 것이 없었더라면 오늘보다 잘 살 수 있는 형편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경의 보장》(Sicherung der Staatsgrenze) 1961년의 우리 국경의 안전조치(Die Sicherung unserer Staatsfeugrenze im Jahre 1961)는 일종의 인간적인 행동(Ein Akt der Menschlichkeit)이었습니다.

(이것은 1961에 동독정권이 베를린 장벽을 쌓은 것에 대한 그들대로 해명시도다-역주). 이 국경의 보장조치는 우리 시민의 생활관심을 고치하였으며, 구라파에 있어서의 평화의 유지에 기여했습니다.

우리의 시민들이 그 어떠한 외부로부터의 손길(Die fremden Finger)이 더 이상 우리의 호주머니를 다치지 않도록 1961년 8월 13일에 우리가 조치를 취한 이후 우리는 최대의 경제부흥을 이룩했다는 점을 그들 자신의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는 그러한 소위 <<특별한 내독관계>>상황(Besondere Innerdeutsche Zustände)을 다시 부활시키는데 동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두 국가간의 관계라는 것은 이들 두 국가가 기타의 다른 국가들과 갖는 관계와 비교해볼 것 같으면 언제나 특별한 관계인 것은 물론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독일 연방공화국이 오스트리아 공화국이나 스위스와 갖는 관계는 가령 그 특별한 특성(ihre besonderen Eigenheiten)이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이 관계는 예를 들어 독일 연방공화국이 프랑스(불란서) 공화국에 대하여 갖는 관계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국가들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권을 가진 그리고 독립된 국가들간의 관계의 기초(기틀)는 그러나 언제나 국제법의 일반규범입니다.

이것은 독립된 두 주권국가들인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의 관계에도 전적으로 그 효용성이 통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차이》(Gesellschaftliche Unterschiede) 우리는 역시 《모두가 독일인》이다(Wir seien doch „Alle Deutsche ”)라는 형식을 가지고 국제법적인 한계를 거부하는 위장전술을 쓰려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세기(世紀)가 시작된 이래 언제나 두 종류의 독일인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전보와 노동자 계급과 그리고 노동하는 민족(인민)측에서는 독일인이었으며, 다른 쪽은 반동의 측에, 자본주의 측에 서있는 독일인입니다.

오늘날 사회주의적인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점 자본주의적인 독일 연방공화국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서로 독립된 두개의 국가들입니다.

이들 두 국가의 시민들은 완전히 서로 반대되는 조건하에서 살고 있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들은 그들의 노동으로 그들 자신의 복지와 사회주의 사회의 복지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독일 연방공화국에서는 적은 층인 백만장자들이 취업에 종사하는 국민(백성)의 노동으로부터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군비(Rüstung)로 돈을 벌고 그들의 팽창주의적인 권력의욕으로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것도 이들 독점자본주의자 계층(Die gleicher Monopolkreise)들입니다.

그러므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살고 있는 국민(인민)과 독일 연방공화국에 살고 있는 국민(인민)간에는 본질적인 사회적 차이(„ Ein Fundamentaler Gesellschaftlicher Unterschied)가 있습니다.

역사가 말해주는 바와 같이 대부르조아지들의 사리사욕에 찬 계급이익(die Eigensüchtigen Klasseninteressen)은 언제나 민족적 이익(Nationale Interesse)이라고 탈바꿈하여 칭하여졌던 것입니다.

《사회주의 이익》(Interressen des Sozialismus) 이것은 언제나 현실을 왜곡시킨 것(Die Entstellung der Wirklichkeit)이었습니다. 대 부르조아지들에게 이로부터 얻었던 것은 아무튼 결국 언제나 창조적 노력을 하는 백성(인민)들에게 해롭고(Schädlich) 숙명적인 것(Verhängnisvoll)으로 밝혀졌습니다.

노동계급과 전체 백성(인민)의 정치적, 사회적 관심(이익)과 사회주의의 관심은 모든 거짓된 민족적 공통성(Alle vermeintlichen Nationalen Gemeinsamkeiten)을 조일을 하는 것입니다.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에 존재하고 있는 서로 상반되는 사회체제 (Die gegensätzlichen gesellschaftlichen Systeme) 간에는 <<어떠한 혼합 (Mischung) 도 어떠한 쓸모없는 양보 (fauler Kompromiß) 도 있을 수 없다고 귀하 자신이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두 주권국가인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은 합칠 수가 (통일할 수가) 없습니다 (Lassen sich nicht vereinigen).

왜냐하면 이들 두 국가의 서로 상반되는 사회질서가 통일되어 (합쳐) 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외형상으로라도 그렇게 보이는— 일치되는 상황판단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에 동등권에 입각한 국제법적인 관계의 수립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현실적인 정책 (Eine realistische Politik) 과 합리적인 정책 (eine Politik der Vernunft) 의 기초가 되어진다면 본인은 이를 환영하겠습니다.

<<모든 나라들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의 승리>> (Sieg des Sozialismus in allen Ländern) 물론 우리는 사회주의자로서 모든 국가들에서 그리고 독일 연방공화국에서도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을 누가 숨기려 하겠습니까— 그리하여 나중에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기초위에 통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주의가 승리하는데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국민 (인민) 투표에서 국민의 절대다수에 의하여 승인된 우리의 헌법에는 이점이 명확히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문제는 오늘이나 내일에 이루어지는 문제들이 아님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 문제는 주권을 가진, 서로가 독립된 국가로서의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에 이루어져야 할 관계에 관한 협상의 대상이 또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독일 연방공화국에 있는 노동자 계급과 모든 취업에 종사하는 계층이 할 일입니다.

서로 독립된 그리고 그 사회질서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는 두 국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생겨나는 분명한 사태 (Sachlage) 와 법적 상태 (Rechtslage) 에 직면하여, 평화를 보장한다는 이익을 위하여는 국제법의 기초위에 평화공존의 관계 (Beziehungen der friedlichen Koexistenz) 를 수립하는 길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길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평화공존》(Friedliche Koexistenz)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 귀하는 어느 외국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 두 국가간에는 일종의 협조방법(Modus Vivendi)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최근 말한 일이 있습니다.

국제법상의 개념으로서의 모루스 비벤더라는 것은 그러나 하나의 일시적인 약속(Eine Provisorische Vereinbarung)이며, 이 약속은 현존하는 상황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와 제국주의 국가간의 현재의 세력균형— 광범위한 목적(Ziele)과 의도(Absichten)를 성취하는 것을 불가능케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약속입니다.

《지속성 있는 규제합의》(Dauerhafte Regelungen) 틀림없이 귀하에 의하여도 높이 평가받고 있을 빌헬름 리브크네히트(Wilhelm Liebknecht)는 상호간에 우호적 관계에 있지 않는 국가들간의 교류를 위한 약속된 형태로서의 모루스 비벤더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풀이한 일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여 아데나우에 의하여 고안된 비평화공존(Die von Adenauer verfundene unfriedliche Koexistenz)이나 혹은 일종의 임시 해결방법(Interimslösung)에는 단지 하나의 다른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뿐이며, 사회주의적인 독일 국가의 존재는 잠정적인 것으로만 처리해 버리고, 그밖에 독일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한 적대정책은 계속한다는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소위 《대기류》(Großwetterlage)의 변동이 있을 시에 인정하지 않고 놔두었던 경계선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현실주의 정책(realistische Politik)일 수 없으며, 더 더군다나 평화정책(eine Politik des Friedens)일 수는 더욱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불가피하게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중요하고도 이룩되어야 할 것은 국제법의 기초위에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의 관계에 관하여 영속성 있고 구속력 있는 제도화된 약속을 이룩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DDR)측으로 말할 것 같으면 평화적 공존한계에 지장(방해)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국제법상의(Gleichberechtigte Völkerrechtssubjekte)입니다.

우리는 국제법상의 주체로서의 독일 연방공화국의 존재를 의심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양국간의 관계의 규제(합의)를 위한 국제법적인 조약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외교정책》(*Außenpolitik der Bundesrepublik und der DDR*)

그러나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의 태도는 이와 다릅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은 우리가 국제법적인 승인, 즉 주권국가로서의 완전한 동등권의 향유를 포기해야 한다는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전조건(*Die Unzumutbare Vorbedingung*)을 예나 지금이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오츠담 협정의 기본원칙을 일관성있게 이행해온 것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여기에서 질문코자 하는 귀하의 정부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한 지금까지의 파괴적인 행동(*Die bisherige destruktive Haltung gegenüber der DDR*)을 변경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연방정부 수상! 귀하의 정부도 실제에 있어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을 국제적 차원에서 계속하여 차별대우를 하고 손상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한 관계의 정상화라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하의 정부의 외무장관이 다른 국가들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 뿐만 아니라 무역대표부의 설치를 쉽게 하기 위한 조치까지를 막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공무수행 준칙을 발표하고 있으며 어떻게 진지한 태도로 동등권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가 제3국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한 그들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시도만 하면 그때마다 얼마나 격렬하게 이에 반대하고 나서느냐를 정확히 추구하여 보았습니다.

국제적인 제기구들에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협동에 참여하는 것을 멀리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점도 이에 해당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여행 위원회》(*Travel - Board*) 이러한 독일 연방공화국의 시도는 큰 인간적인 문제들을 취급하고 다루는 세계보건기구에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이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동맹기구의 다른 가맹국들이

명확히 의심을 품고 있고 저항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서부 베를린에 여행위원회 (Travel-Board) 라는 국제법적으로 저촉되는 기구를 계속 유지·지속시키기 위하여 귀하의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일련의 활동도 역시 모욕적인 차별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점령시기때의 잔재물로서 벌써 시대에 뒤떨어져 버린지 오랜 잔여물이 모욕적인 방법으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들을 차별대우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의 주권까지도 간섭하는 일을 감히 행하고 있습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그 시민을 계속해서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 정책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증명해 주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본인은 귀하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또한 독일 연방공화국의 여러 기구들이 벌써 여러해 전부터 부담토록 되어 있고, 계속하여 점점 늘어나고 있는 재정적 의무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하여 이행하고 이들 기관들이 지고 있는 적지 않은 빚을 드디어 청산해야 한다는 불가피성을 또한 상기시켜 두고자 합니다.

<< 할슈타인 원칙 >> (Hallstein-Doktrin)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 단독 대표권 주장을 계속하고, 할슈타인 원칙을 계속하여 적용시키고 있는 것은 귀하가 벌써 여러 차례 반복하여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을 더 이상 차별대우할 의사가 없다고 한 의도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언 (言) · 행 (行) 간에 심각한 모순당착이 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법률) 조약 을 통한 국제공존 (ein geregelt es Nebeneinander) 이란 것은 이러한 방법으로는 결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제법에 위배되는 단독 대표권주장 (der Völk errechtswidrige Alleinvertr etungsanspruch) 은 그에 수반되는 할슈타인 원칙 (Hallstein Doktrin) 과 더불어 종국적으로 (endgültig) 그리고 여지없이 (restlos) 포기되어 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귀하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그의 동맹국가들이 국제단계의 발전에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이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제3국에 까지도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려는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의 시도를 아무런 대답없이 그냥 보아 넘기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귀하가 인식하실 것을 바랍니다. 제3국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한 그들의 관계를 정상화시킴으로써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의 관계를 부담스럽게 한다는 어떠한 주장도 사실과는 다르며, 그 반대가 옳은 것입니다.

제3국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한 그들의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의 관계의 정상화를 또한 강력하는 것입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한 외교관계》(Diplomatische Beziehungen zur DDR) 1969년 이래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8개국가가 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해에 독일 연방공화국의 정부로서는 최초로 두개의 주권국가인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DDR)과 독일 연방공화국(BRD)이 존재한다는 점을 또한 성명사로 밝혔습니다.

이들 두 주권국가들의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간에는 국제관계상 일반적인 형식으로 공식접촉(Offizielle Kontakte)이 행하여 졌습니다. 여기에 의심할 바 없이 전세계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유기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 만일 귀하의 연방정부가 정말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한 관계의 정상화를 바란다면은, 이와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다른 국가들의 행동도 그 어느 것이나 기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귀하의 정부를 냉전의 참호(Die Schutzengräber des kalten Krieges)로 계속하여 붙잡아 둘러는 세력에 대하여 귀하의 편에 설 동맹자를 귀하에게 마련해 줄 것입니다.

《노동자 및 농민의 세력》(Arbeiter und Bauernmacht) 그리고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 귀하는 그밖에도 사회민주당의 당수이십니다. 원래 귀하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노동자 농민들이 정치권력(die Politische Macht)을 가지고 있고, 모든 국가기관들에서 파시스트는 제거되었으며 그리고 대기업(die Großbetriebe)들은 국유화 되어 있다(Volkseigentum)는 사실을 화영해 마지 않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됨으로써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서는 독일 사회민주당원들이 1891년에 이곳 에아무르트 프로그램(Erfurter Programm)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던 사실들이 그 목적달성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귀하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하여 현실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 기대되며, 이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기대됩니다.

매우 존경하는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

본인은 귀하에게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내각(위원회)의 견해(입장)를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은 우리 두 국가간에 있어서 왜 국제법의 기초위에 이루어지는 동등한 관계의 수립을 위한 조약이 불가피하게 필요한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난 20년에도 종지부를 찍을 시점이 닦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국간의 관계를 정상화 하는 일을 못하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Neubeginn)을 합시다. 이러한 새로운 시작은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일이 성취될려면 선의의 뜻이 필요하며, 참된 평화의 일보틀 내딛을 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하고, 구라파의 안전에 기여하고,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에 동등권의 원칙에 입각한 관계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쓴 역사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복수주의 정책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자는 노력에 대하여는 아무런 양보를 할 수 없음을 자명한 일입니다.

《주된 문제: 국제법적 관계》(Hauptfrage: Völkerrechtliche Beziehungen)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입장으로 볼 것 같으면 주문제-국제법의 기초위에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에 동등권에 입각한 관계를 수립하는 일의 해결을 가능케 하는 조약의 초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는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와 이 조약을 협의하고 체결할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동등권에 입각한 국제법적 관계의 수립을 위한 이와 같은 조약의 체결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의 관계서(舊)에 새로운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국제법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조약의 존재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과 그리고 구라파의 모든 나라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짐을 더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계나하년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보다 많은 평화가 성취될 수 있고 보다 많은 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첫 일보》(ein erster Schritt) 이는 분명히 보다 많은 평화요 단전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계정상화의 수립만으로는 아직 다음에 열거하는 위험을 가지게 했다고는 볼 수 없겠기 때문입니다.

즉, 군비산업을 기르는 대기업들의 활동과 권력으로부터, 그리고 신나치주의자들과 보복주의자들의 단체의 활동과 권력으로부터 독일 연방공화국에 생겨난 위험들과 그리고 보복주의 사상과 심자군 원정사상 같은 것이 독일 연방공화국에 날이 날마다 퍼져나가고 있는데서 생겨난 이 모든 위험을 가지게 할 수는 없는 것이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5년전에 시작하여, 즉 분파적인 화폐개혁과 독일 연방공화국의 단독수립(Die separative Bildung)에서부터 시작하여 군비 재무장과 파리조약에서 북대서양 동맹에의 가입(NATO-Anschluß)에 이르기까지 그릇된 방향으로 행하여진 수백번의 조치들이 있는 후에 하나의 실제적 조치가 첫 발자국을 내 디딘다면 이것이야말로 옳은 길로 나아가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불가침 조약》(Gewaltverzicht) 우리 두 국가간에 동등권에 입각한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가 제시한 조약의 초안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에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불가침조약은 계약당사국가들(Vertragsstaaten)과 그 국가들의 국경을 상호간에 국제법적으로 승인하는 기초위에서 가능하다는 견해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제법적으로 유효한 불가침조약의 체결은 그들의 실체, 즉 국제법상의 주체로서 상호간에 인정하는 국가들간에만 체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전제를 갖추지 아니한 불가침조약이라는 것은 그 대상을 상실하고 만 것이며(Gegenstandslos), 속이 빈 호두(eine Hohle Nuß)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은 여기에 역설해 두는 바입니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구속력을 갖지 않는 단순존경(Eine unverbindliche bloße Respektierung)에 관한 것이 아니며, 국경선과 영토적 통치권을 아무런 조건의 제시없이 국제법적으로 승인하는 일입니다.

《국제연합에 있어서의 회원자격》(Mitgliedschaft in der UNO) 독일 민주

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이 지체함이 없이 국제연합기구에 그들의 가입을 신청한다는 의미 심장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이 그들의 상당한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잠재력을 가지고 동등한 가격으로 국제연합의 세계에 걸쳐 행하여지고 있는 활동에 참여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제민족의 모든 분야에 걸친 평화적 협동에 기여하게 된다면, 이것은 두(독일) 국가와 그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세계기구의 보편성의 이익을 위하여도 좋은 것이라는 점을 반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군비 축소》(Abrüstung)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조약 초안은 두 국가는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포기하며, 그들의 영토상에서 어떠한 화학 및 생물학적 무기도 생산하지 않으며, 주둔시키거나 저장하여 두지도 않으며, 군비 축소를 위한 협상이 행하여져야 한다는 점을 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는 독일 연방공화국과 군비축소를 위한 조치를 국제법적으로 구속력 있게 체결하자는 제안을 새롭게 제기하는 바입니다. 연방공화국 수상! 본인은 귀하에게, 인간을 가장 무시무시하고 가장 위험한 무기에 대한 공포로부터, 독약과 가스과 박테리아에 대한 공포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가장 인도적인 행위의 하나라고 생각지 않느냐고 묻고자 합니다.

《평화의 보장》(Friedenssicherung)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조약초안에 제기되어 있고, 전설적으로 해답되어져있는 구바파의 심장부에 있어서의 평화의 보장에 관한 결정적인 문제에 대하여 직접 이야기할 기회를 우리의 회담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이 평화적 공존을 실천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국제법상의 관계를 수립하게 된다면, 그리고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정책이 포기되어진다면, 그러면 다른 문제들에 관하여도 의견을 교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적 공존에 대한 기본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그밖의 모든 다른 문제들에 대한 전제조건이 됩니다.

본인은 귀하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의하여 제안된 조약의 초안에 관한 협의에 들어갑시다. 우리의 토의의 목적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이 동등한 권리원칙에 입각한 국제법적인 관계를 상호간에 수립할 것인가에 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자는 데서 있을

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는 우리가 협의를 계속하여 나가는 과정에서 귀하에게 전달되어져 있는 조약의 초안에서 출발하여, 그리고 그 초안에 근거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 (Zusammenfassung)

1.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그리고 어떠한 차별대우도 없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에 정상적이고 동등한 관계를 수립하는 일. 독일 연방공화국의 정부가 모든 형태로 (독자적) 단독 대표권이라는 당치도 않는 주장을 포기하는 일.
2. 다른 국가의 외교정책상의 관계에 개입하지 않는 일. 할슈타인 독트린을 충국적으로, 그리고 명확히 포기하는 일.
3. 국제연합헌장 제 2조 제 4항에 의거하여,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에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일 : 동시에 양국의 국제법적 주체성과 영토적 통치권과 현존하는 국경선들의 불가침성을 상호간에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일이 수반되어야 한다.
4.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이 국제연합 (기구) 에 가입신청을 내는 일.

《새독일》 (Neues Deutschland) 에서

5. 핵무기를 구입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를 소유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일.
B - 무기 (생물학적 무기) , C - 무기 (화학무기) 를 생산하고, 사용하고 그리고 이를 저장해두는 일을 포기하는 일.
군비 예산지출을 50%를 삭감하는 일.
6. 제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모든 잔여 현상들을 불가피하게 반드시 제거해 나갈에 있어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에 대한 토의.
7. 독일 연방공화국의 모든 학교 (각급학교) 들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각급학교를 동일하게 하는 일 (Begleichung) 과 독일 연방공화국을 통하여 행하여져야 할 (손해) 배상의무 (Wiedergutmachungsverpflichtung)

《독일 연방공화국에 있어서의 회담》 (Gespräch in der Bundesrepublik)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

끝으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의 건설적인 문제해결에 임할 단호한 결의를 다시 한번 강조하여 천명해 두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번 일의 중요성과 복잡한 성격으로 보아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계속 합의하는 일이 있더라도 아무튼 두 정부의 수상이 직접 만나서 회담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중요하다는 견해를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회담이 계속하여 필요하게 되는 경우 본인은 독일 연방공화국의 국경에서 가까운 곳에서 귀하와 회동할 용의가 있음을 여기에서 선언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다음과 같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만일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가 앞을 멀리 내다보고 용기가 단호한 결의를 보인다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의 관계를 법제(국제)화 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평화와 구라파의 안전을 위하여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본인은 확신합니다.

본인은 귀하께서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출 처)

1970년 3월 20일자의 (동부) 베를린에서 발간된

《새독일》 (Neues Deutschland) 에서

브란트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 에아푸르트 회담에 즈음
하여 원칙적인 문제에 대한 기초 연설하다. (1970.3.19)

『 빌리 브란트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은 1970년 3월 19일 에아푸르트 (Erfurt) 에서의 빌리 슈토프 (Willi Stoph)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수상과의 만남 (회담) 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한 기초 연설을 하였습니다. 』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수상!
신사 숙녀 여러분!

《 아무것도 미화 (美化) 함이 없이 》 (Nichts verniedlichen) 본인이 여기에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가 기초연설을 통하여 밝힌 견해와는 많은 문제들을 아주 달리 생각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놀랍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지 그러나 우리가 지난 20년간이나 혹은 25년간의 우리가 겪은 세월에 대한 결산을 서로가 자기들 대로 상이하게 여기에 밝혀서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무엇이 이루어 진다고는 결코 볼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으로는 평화와 인류 (인간 - 독일사람) 를 위한 진보를 성취할 수 있는 공동의 분야를 모색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양쪽의 이익을 공동으로 추구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의 요청이라 하겠습니다.

본인은 본론으로 들어 가기전에 귀하가 이곳 에아푸르트에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한 영접에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양측의 실무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용의주도한 준비작업이 우리 두사람의 회담이 정확히 앞으로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보장이 됩니다. 귀하가 귀하의 정부와 이 군 (郡) 과 그리고 이 에아푸르트시에서 우리들의 회담을 위하여 직접 참여하거나 혹은 협조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인이 이 여러분들이 평한 일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찬양하는가 하는 점을 말씀해 주신다면 본인은 기쁘게 생각하겠습니다.

《역사에 대한 공동책임》 (Gemeinsame Haftung für die Geschichte)
나치 사회주의적 폭력지배 (통치) (die nationalsozialistische Gewaltherrschaft) 가 독일제국의 파멸과 더불어 그 종언을 고한지, 앞으로 몇주일만

있으면 25년째가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들을 서로 분리시키는 요소가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이 역사적 사건은 여기 회담탁자에 둘러 앉은 우리들 모두를 한데 묶어 놓는 요소입니다.

세계는 독일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진 범죄 (Untaten) 와 독일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러진 제 파피행위에 대한 공포와 전율 (Grauen) 에 떨고 있었었습니다.

앞으로 운명이 우리를 어디로 움직여 나가더라도 우리들 전부가 여하한 한이 있더라도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세계가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데에는 당연하고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며, 우리가 지고 있는 이러한 책임 (Haftung) 이 독일에 있어서의 현재 주어져 있는 상황에 대한 여러가지 이유들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역사적인 고찰을 하고 이에 대한 논쟁을 버린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으로 어떤 전보가 지금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 민족의 길 (der Weg der deutschen Nation) 이 분리되고, 1945년 이후에 이 독일민족의 길이 국가적 통일이라는 형태로 출발해 나갈 수 없었던 것을 사람들 중에는 개인이로나 전체적으로 비극적이라고 (tragisch) 생각하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는 그러나 우리는 없었던 것입니다. -

그러므로 본인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상은 평화 (Frieden) 를 위하여 그리고 독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die Menschen in Deutschland) 을 위하여 진보 (Fortschritte) 를 성취하는 것이 가능한 영역 (Bereiche) 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명령으로 제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3월 19일은 모든 독일인들에서, 독일 연방공화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 뿐만 아니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DDR) 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대하여도 하나의 중요한 날 (ein wichtiger Tag) 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일에 두 국가가 존중하게 된 이래 처음으로 양국정부의 수뇌 (수상) 가 공동관심의 대상되는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자리를 맞대놓고 앉아 있으면, 요구되는 것은 합리적 이성 (der Verstand) 뿐만이 아니라 역시 감정 (Gefühle) 의 느낌도 함께 흔들려 지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모임 (회담) 이 독일영토의 국경을 칠

선 넘어서 세계에 커다란 주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우리들 쌍방이 다 같이 잘 의식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에아푸르트의 중요성》(Bedeutung Erfurts) 우리들의 공동의 역사가 지난 며칠동안 이 에아푸르트(Erfurt)가 독일인에게 벌써 역사적으로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받아 왔습니다. 이곳은 예를 들어 1808년 10월 2일 나폴레옹이 쾰데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한 곳입니다. 《정치는 운명이다》(Die politik ist das Schicksal.)

이곳 에아푸르트에서는 1850년 3월 20일 - 그 당시로서는 독일을 평화적이면서도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통일시켜 보려던 최후의 시도가 행하여진 곳이기도 합니다.

사회민주당원들에게는 그 밖에도 1891년의 걸진하던 독일 노동운동에 대하여 에아푸르트 프로그램이 지녔던 중요한 역할을 생각하게 되는 계기도 됩니다. 사람들이 이 에아푸르트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념사(理念史)적으로 다루든지 간에 - 하 여간 민주주의를 지행하는 의지(der Wille zur Demokratie), 보다 큰 사회정의의 위한 의지(der Wille zu größerer sozialer Gerechtigkeit)와 그리고 평화를 위한 의지(der Wille zum Frieden)가 때에 알맞게 관철되어졌더라면 독일 민족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불행이 생겨나지 않고 그냥 지나갔을 수 있었을 것이다. 구라파를 위하여 많은 불행이 필요 없었을 것이며 또한 전 세계에 그렇게나 큰 불행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건설업적》(Aufbauleistungen) 우리 민족이 몰락을 당할 운명에 처한 것처럼 보이던 시기는 지나가고 - 그 주어진 상황조건은 서로가 매우 다르기는 하지만 아무튼 - 새로운 시작을 시도할 기회가 우리 민족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독일의 두 부분에 있어서의 재건(Wiederaufbau)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새로운 도시들이 폐허에서 생겨났습니다. 경제와 학문이 존경을 받는 수준(ein achtunggebietender Stand)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두개의 서로 분리되어 있는 국가 체제로 나누어진 것(die Aufteilung in zwei voneinander getrennte Staatswesen)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를 어느 쪽에서 보는가의 여하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상의한 가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동-서독이 서로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간 것을(die Auseinanderentwicklung) 주로 하나의 해악(ein Übel)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다음의 사실로 명확해 집니다.

죽 사람들이 이와 같이 동·서독이 서로 상이한 발전을 해나가게 된 데 대한 잘못의 원인 (Schuld) 이나 이에 대한 책임 (Verantwortung) 이 서로가 다른 쪽에 있다고 그 책임을 받드시 전가시켜 왔던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점으로 보아서 명백해 집니다.

1945년 이후의 독일의 정치 (Deutsche politik) 는 - 동·서독에 있어서 이루어진 여러가지 모든 건설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사실 독일에 전쟁을 이기고, 독일을 점령하였던 강대국들의 정치의 기능 (eine Funktion der politik der Mächte, die Deutschland besiegt und besetzt hatten) 을 담당해 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동·서양 진영간의 세력대결은 그후 계속하여 독일의 형편을 지배하여 왔으며, 구라파를 쪼개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할을 단순히 전연 없었던 것처럼 보아 넘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같은 분할 (분단) 이 물고은 결과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진력할 수 있으며 그리고 구라파에 있어서 우리를 분리시키고 따라서 독일에 있어서도 우리를 서로 떼어 놓고 있는 무덤들을 흙을 채워 덮어버릴 수 있는 발전이 이룩되도록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독일민족의 현실》 (Wirklichkeit einer deutschen Nation) 여기에서 본인은 독일민족 (eine deutsche Nation) 이 처하고 있는, 계속하여 진행되어 나가고 생생하게 나타나 있는 현실을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난날의 국수주의적인 사상을 배격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앞으로 있을 구라파와 국제적인 협동과 연합 발전에서까지도 국가민족적 요소들 (die nationalen Komponenten) 은 그 효용성을 상실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상당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체험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역사의 강력한 유대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가정을 통한 유대, 언어적 유대, 문화적 유대와 그리고 이밖에도 우리들로 하여금 공동귀속감정을 느끼게 하는 사고이전의 모든 것들, 이것은 하나의 현실 (eine Realität) 입니다. 이러한 민족생존의 기본 (dieses Fundament nationaler Existenz) 을 부인하거나 혹은 이를 경시하려는 정책은 실패로 돌아갈 운명을 지닌 정책이라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심각한 차이》(tiefgreifende Differenzen) 우리는 이와같은 현실성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 모든 일에 임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은 독일애, 즉 1970년 현재에 있어서 존재하고 있는 경계선으로 보아, 두개의 국가가 생겨나 업존하고 있으며, 이들 두 국가는 공존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출발점으로 우리가 삼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양측에 저마다 존재하고 통용되고 있는 서로 다른 사회질서를 평가하는 면에서 우리 양측간에는 심각한 의견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견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이것이 우리로부터 구라파에 있어서의 평화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명을 태어 가는 것이 아니며, - 구라파의 평화질서 측면에서 - 우리 두 국가들간에 합의된 어떤 평화공존(eine geregelte Form friedlicher Koexistenz) 형태를 모색하는 사명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직시할 때에만 우리의 이 만남(회담)이 정당한 의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다할 때에만 역사앞에 몇몇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 앞에 놓여있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생각할 때 결코 아무도 어떤 그릇된 희망을 가져서는 않될 것입니다. 우리 국가들의 시민(die Bürger unserer Staaten)은 비록 우리 양측에 동일한 의지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두 정부의 수상들이 오늘(당장) 국가적 통일을 이룩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하는 점을 알기에는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세계사정이 이를 허락치 않을 것입니다. 위협한 불안을 세계에 불리 이르지 않고서는 이러한 일이 오늘의 세계사정으로 당장 이룩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분리시키는 요소를 극복할 의무》(Verpflichtung zur Überwindung des Trennenden) 그러나 우리는 우리 두 국가의 이익과 그리고 우리가 서로 동맹을 맺고 있는 강대국들의 이익을 평화와 인류에 이로움이 되도록 조화시키는 노력을 현실을 뛰어넘어 공동으로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독일 영토상에 존재하고 있는 두 국가간의 현 상태가 한탄스러운 형편이 꽤 있는 것도, 사실은 독일의 두 부분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상호관계가 외국(fremde Staaten)과, 외국의 국민들간의 교류에나 있을 수 있는 처차원에 까지 끌어내려져가 있는 데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특수사항(diese negative Sonderlage)을 완화시키고, 가능한 대로 이를 극복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긴장대신에 긴장의 완화》(Entspannung statt Spannung) 긴장 대신에 긴장의 완화를 이룩하고, 군사적 대결 대신에 평화의 보장을 이룩하는 일 이것이 본인의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본인이 이러한 목표를 추구해 나감에 있어서 독일 연방공화국에 있는 책임있는 세력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 이 회담이 사실 일반적으로 국가들 간의 고섭이나 회담의 경우에 보통 있는 것처럼 관리(Beamte)에 의하여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과 우리가 정상회담(Spitzengespräch)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이 아닙니다. (ungewöhnlich) 이러한 사실도 역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관계의 특수성을 특징지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처해있는 문제들은 너무나도 큰 것이므로 정부차원의 직접 접촉이 없다고 하면 아예 시작조차도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날까지 우리 민족의 분할은 점점 더 심화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공동책임이 연유하는 것입니다. 두 국가간의 관계를 상호간에 법적으로 규제 정리하기 위하여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행하거나 혹은 무엇을 행하지 않거나 간에, 이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역사에 돌릴 수 없으며, 특수하게는 또 이에 대한 책임을 리틀러에게 돌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들 자신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환상 없이》(ohne Illusion) 본인의 협력자와 본인은 우리 양측이 가지고 있는 견해들이 친절한 설득(freundliche Zureden)을 통하거나 혹은 우리가 도대체 만났다는 단순한 사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이곳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칙적인 차이점들(die prinzipiellen Unterschiede)이 있음을 보고 있으며, 이를 냉철하게 확인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우리 양측중 어느쪽도 상대방의 견해(관점)를 잘 이해하고 파악하여 자기 자신의 정책수행에서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구라파의 평화질서》(europäische Friedensordnung) 우리는 실제로 주어져 있는 상황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구라파의 심장부에 있어서의 관계가 상해받아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면, 동·서(양진영)간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개선되어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것은 우리들 두 정부가 우리 두 국가에

게 이로우미 되고, 독일민족에게 이로우미 되고, 우리 대륙에 있어서의 안전에 이로우미 되어야 하고 또 이로우미 될수 있는 것을 모색하는 정직한 시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일을 해 나갈때 있어서 본인은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견해를 갖는 점에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의 성의표시가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이렇게 하므로써 우리가 어두운 과거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종류의 관계》》(Beziehungen besonderer Art) 우리들 두 국가의 주민들 사이에는 기타의 다른 나라들이나 혹은 상호 우호관계에 있거나 혹은 냉랭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주민들 간에는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종류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국가간에는 다른 국가들 간에는 존재하지 않는 공통점들 (Gemeinsamkeiten)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호 버티고 있는 대결 (Auseinandersetzungen)도 서로 낯선 민족들간에 존재하는 대결이나 분쟁의 경우와는 그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이 논쟁들은 민족의 통일 (die Einheit der Nation)을 위하여 행하여지며, 이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다른 공통점들이 또한 있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DDR)은 -최고의 준비를 갖추고- 독일 영토상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조약기구들 (paksysteme)의 회원국들입니다. 이것은 구라파에 있어서 힘 (세력)의 균형이 가능케하고, 지난 여러해 동안에 전쟁을 억제할 수 있었고 오늘날 상대적으로 안전의 보장이 가능케 되는 데에 기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고되고 실제적인 평화와 안전 (wirklicher Friede und Sicherheit)은 구라파의 평화질서가 이루어져야만이 장기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구라파 평화질서가 이룩되면 그 속에서 양 진영간의 대결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며, 독일에 있는 두 국가간의 시대착오적인 여러가지 일들로 그 양상을 달리하여 종식을 고향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평화가 최고의 선 (善) 이다》》(Frieden höchstes Gut)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는 평화를 최고의 선 (das höchste Gut) 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독일영토로 부터 어떠한 전쟁이 발발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독일의 두 국가들(die beiden deutschen Staaten)은 그들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을 폭력(Gewalt)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사용할 위협(Androhung von Gewalt)을 통하여 실현, 추구할 권리(das Recht)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가능성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적이고, 평화를 애호하는, 통일적인 독일(ein demokratisches, friedliebendes, einheitliches Deutschland)은 절대로 전쟁(Krieg)이나 시민전쟁(Bürgerkrieg)을 통하여 세워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에 입각한 사회법치국가》(freiheitlicher und sozialer Rechtsstaat)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목적은 문구상으로는(zwar den Worten nach) 두 독일 국가에 공통되는 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상으로는 귀하와 귀하의 정부가 생각하는 점과 우리가 생각하는 점이 서로가 아주 다르며, 현격한 거리가 있습니다. (weit voneinander entfernt), 독일 연방공화국의 기본법(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자유주의에 입각한 사회법치국가를 신봉합니다. 그러나 어찌면 역사(歷史)만이 대답할 수 있을지도 모를 한 테마를 놓고 우리가 여기에서 논쟁을 버리고 다투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날 구라파의 여러 나라들을 서로 분리시켜 놓고 있는 무덤들을 채워서 덮어버리는 역사적 발전을 결코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독일 민족이 어떻게 함께 모여서 살기를 원하는가를 자유에 입각한 자결 원칙으로 스스로 결정하는 일을 우리는 불가능하게 하여서는 또한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두 정부에게 중요한 의의를 가질수 있는 그 밖의 문제들에 관하여도 똑같은 논리로 어떠한 불명확한 점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4대국 협정》(Vier-mächte Abkommen) 1944년 이후의 몇해 동안에 이루어진 4대국의 독일에 관한 협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두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의견의 일치와 합의는 4대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존 권리와는 무관한 것이며, 이 권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도(ersetzen)아닙니다. 이것은 독일 연방공화국이(서방) 3대국과 체결한 조약이나 협정의 경우도 마찬가지며,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이 소련과 맺은 조약이나 협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입해 있거나 체결한 2개국가간의 조약이나 2개국이상의 조약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협정들은 우리 양국간에 존재하고 있는 장벽을 허물어 내는 데에 방해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방해하는 일을 하여서도 없을 것입니다.

《베를린》(Berlin) 본인이 여기에서 4대국 협정과 그리고 우리가 (서방) 3대국과 체결한 협정들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은 베를린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일련의 사실의 확증을 귀하가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실 것을 여기에 청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독일문제가 해결을 보지 않는한 베를린의 현재지위(Status)를 변경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한편으로는 현실의 인정(die Anerkennung der Realitäten)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어져 있는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화시킬 것(eine einseitige Änderung der gegebenen Lage)을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서부 베를린이 (독일) 연방(공화국)에 의하여 (행정) 관할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서방) 3대국으로 하여금 독일 연방공화국에 특정한 과제(임무)를 맡기는 일, 즉 서부 베를린을 대외적으로 대표한다거나 주의 자격을 가진 베를린의 경제상의 생활 능력을 틀박주는 일을 맡기는 것을 저지하지는 않았읍니다.

서부 베를린은 실제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보아 독일 연방공화국과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베를린은 완전히 우리와 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4대국에 의하여 확정되어진 베를린의 현 상태를 변경시키는 것에는 (서방) 3대국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독일 연방국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이 문제에 직접 해당되는 베를린사람들도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4대국에 의하여 확정된 베를린의 현 상태를 변경시킨다면은 이를 가능케 했던 조건의 변경을 결과적으로 초래하고 말것 입니다.

4대국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베를린에 대한 그들의 최고 (통할) 권(oberste Gewalt in Berlin)을 어떻게 행사하는가 하는 것은 이들 4대국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만일 현재의 베를린 상태를 향상시키는 데에 4대국간에 어떤 이해가 성립된다면, 독일 연방공화국은 이를 환영하여 마지 않을 것입니다.

《관계의 정상화》(Normalisierung) 아무튼 본인은 다음의 일련의 문제에 관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이 명확한 태도를 표명해 두고자 합니다. 즉 본인의 정부로 볼 때는 구라파의 심장부에 있어서의 관계의 정상화와 긴장의 완화를 가져 오기 위한 일련의 노력은 베를린에 있어서의 현화와 베를린을 에워싸고 있는 현황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있는 긴장의 완화와 관계의 정상화(Entspannung und Normalisierung der Situation in und um Berlin)와 서로가 직접적으로 밀접

한 관계가 있으므로 결코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조약의 초안》(Vertragsentwurf) 본인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국가위원회 의장(der Vorsitzende des Staatsrates der DDR)이 지난해 12월 18일에 우리의 독일 연방공화국 대통령에게 우리 두 국가간에 동등권에 입각한 관계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의 초안을 작성하여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물론 여기에서 외면코자 하지 않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는 그 뒤로 이 조약의 초안이 내용으로 삼고 있는 여러가지 대상들을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조약의 초안에 밝혀져 있는 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회답이나 대화로 나누어 봄이 없이 사전에 이러한 조약의 초안을 인쇄하여 발행해 내는 것을 별로 뜻있는 일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의 태도는 우선 의견의 교환부터 시작해나가는 것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을 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독일 연방공화국정부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가 행한 조약의 초안에 대하여 우리들대로의 독자적인 조약의 초안(Gegenentwurf)을 제기하지 않았읍니다.

이러한 의견교환의 목적은 우리가 협상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러한 협상의 끝에 가서 독일 연방공화국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간의 관계를 조약을 통하여 규제 정리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협상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야겠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 정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은 물론 자명한 일입니다. 즉 우리들간에 이루어 지는 조약(ein Vertrag)이나 어떤 협정(ein Abkommen)은 우리가 제3국과 체결하는 협정과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은 자명합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정부의 기본원칙》(Grundsätze der Bundesregierung) 우리들의 두 정부간에 행하여져야할 협상의 종류(Art)와 대상(Gegenstand)에 관한 본인의 생각은 본인이 1970년 1월 22일에 귀하에게 보낸 본인의 서한에서 귀하에게 이미 전달하였습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수상! 우리 독일 연방공화국정부가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 기본적 입장과 그리고 본인이 귀하에게 전달한 기본원칙을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확인해 두고자 하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1. 두 국가는 다같이 독일민족의 통일을 유지해 나갈 의무(Verpflichtung

zur Wahrung der Einheit der deutschen Nation') 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국가는 서로가 외국 (Ausland) 이 아닙니다.

2. 그 밖에는 두 국가간에 적용되는 법 (das zwischenstaatliche Recht) 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제 원칙들이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어떠한 상대방의 지위를 떨어뜨리는 차별대우를 배제한다는 원칙, 영토적 불가침성 (die territoriale Integrität) 의 존중, 모든 분규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의무와 그리고 양국간의 국경을 존중할 의무 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들입니다.

3. 이러한 원칙에는 조약의 당사국의 영토내의 사회구조를 폭력을 사용하여 (gewaltsam) 변경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져서는 않된다는 의무가 또한 포함됩니다.

4. 우리 두 정부는 이웃간으로서 협동에 진력하여야겠으며, 무엇보다도 전문 기술적인 협동의 문제를 법적으로 협정하는 일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일은 정부간의 협정으로 공동으로 여러가지 일을 쉽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할 수 있습니다.

5. 전체로서의 독일과 베를린에 관한 4대국의 현존하는 권리와 의무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6. 베를린에 있어서의 현황과 베를린을 에워싸고 생겨난 현황을 개선하기 위한 협정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4대국의 노력은 지지되어야 합니다.

《불가침 (조약)》 (Gewaltverzicht) 수상! 본인은 우리가 상호 불가침 (조약) 에 관하여 의견교환을 하자는 제안을 특히 1월 22일에 귀하에게 하였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두 독일간의 관계의 바탕 (기초) 은 우리 두 국가가 그들의 상호관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구라파와 국제적인 안전을 도모한다는 문제에 있어서도 국제연합의 제 일반원칙과 목적을 그 지침으로 삼아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분쟁문제들을 전적으로 평화적인 수단이나 방법으로만 해결해 나가도록 마음머지 않으면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구라파의 안전에 관한 문제나 우리 두 독일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나 국제연합헌장의 제2조에 따라서 폭력 (Gewalt) 의 위협이나 폭력의 사용을 포기

한다는 의무를 받아 드리지 않으면 않됩니다.

우리 두 국가간의 관계를 조약을 통한 기초위에 세워 놓는다는 것은 구라파에 대하여는 하나의 대사 (eine große Sache für Europa) 일 것이며, 구라파에 있어서의 그리고 구라파를 위한 안전과 협동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회의 (Konferenz) 가 이루어지는 일을 촉진 강려하게 될 것은 틀림없는 일이라 봅니다.

《국제기구들에 있어서의 협력》 (Mitarbeit in internationalen Organisationen) 독일 연방공화국은 국제연합과 그밖의 다른 국제기구들에서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나간다는 점을 본인은 1969년 10월 28일에 행하였던 정부선언에서 이미 확실히 해두었던 것입니다. 본인은 또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이 갖는 국제적인 관계에 대한 우리 친구들 (우방) 의 견해는 결국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자체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점을 말하였습니다.

본인은 우리가 회담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회담이 되어나가는 진척도에 따라서 이 문제들에 관하여도 이야기 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룩되는 진보는 우리 독일 사람들의 능력과 우리 경제의 능력 그리고 우리 학문의 능력을 지금 보다 더 많이 평화와 발전과 세계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아 (굶주림) 에 대한 투쟁에 이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될 것입니다.

《군비축소를 위한 노력》 (Bemühungen um Abrüstung) 이러한 의미에서 효과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동·서간에 군대 (Streitkräfte) 와 군비 (Rüstung) 를 균형있게 제한하는 일에도 진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 독일 사람들은 군비 축소와 군비감시 (Rüstungskontrolle) 를 위한 노력에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겠으며, 그리고 우리 양국이 가입되어 있는 동맹들에 대한 우리의 충성을 완전히 지켜나가면서 건설적인 경쟁에 돌입할 힘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에 있어서의 평화적 관계를 강려·촉진하려는 모든 노력은 우리가 우리들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의 시민을 위하여 평화를 이룩할 때에만 믿음만한 것이 되고 남을 확신시킬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문서만을 가지고는 상호간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동·서 양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어려움을 면하게 하는 일》(Der menschlichen Not abhelfen)
본인은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한 우리가 면하게 해 주어야 할 인간적인 어려움을 무엇보다도 그리고 첫째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두가지 예만을 들어 본다면 이러한 것이 있겠습니다. 자식들(아이들을 포함 - Kinder)이 부모와 아직도 합쳐서 살고 있지 못하는 경우 우리는 그들이 한때 모여 같이 살수 있도록 하는 길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혼자들이 국경선의 이쪽과 저쪽에서 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우리는 그들에게 결혼을 가능토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무 역》(Handel) 상업 교역의 양이 줄던 것이 다시 늘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본인은 확인하고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1년반 동안에 좀 형편이 나아졌다고하여 이에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우리는 우리양측의 당해 기관들에 말하여 두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경제와 공학부문에 있어서도 상호간의 교역을 늘려서 본질적인 교역의 강화를 이룩해 내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 통》(Verkehr) 이러한 것은 기타의 다른 부문에도 적용됩니다. 육로 교통면에서 (im Straßenverkehr) 우리는 원거리 도로 건설 (der Fernstraßenbau)에 관하여 우리 양측의 도로건설계획 (당국)과 다른 나라들의 도로건설계획 (당국)들과 합리적으로 뜻있는 사전 조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국경을 넘어 왕래할 수 있는 국경 통과지점을 지금 보다 더 많이 개설하고, 품무니케 이손이 쉽게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도 더 많이 취하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여행교통의 왕래를 신속히 가능하도록 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임금 (화물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어떤 통일적인 운송법 (ein einheitliches Frachtrecht mit durchgehenden Tarifen)을 마련하고, 그리고 철도행정당국들간에 기술적인 면에서 협동과 연락을 개선해 나가는 일련의 일들이 바람직한 것들입니다. 내륙 (수로)의 항해 (교역) (Binnenschiffahrt) 부문에 있어서도 관제의 향상이 가능합니다.

《전화, 전보 및 텔레타이프통신》(Telefon-, Telegramm-, Fernschreibverkehr) 개별개인들 (Einzelpersonen)과 회사 (Firmen)들이 독일의 다른 부문에 있는 그들의 파트너들과 보다 향상된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전화통신과 전보통신 그리고 텔레타이프 통신 (Fernschreib-

verkehr) 을 강화하는 협약 (Vereinbarungen) 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며, 장거리 통신부문 (Fernmeldewesen) 의 다른 시설들도 보다 유용하게 사용하는 협정과 어음청산 거래면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동서 양독의 국경 설정으로 생겨난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와 행정적인 문제들을 생각하며, 또한 지방에 국한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두 국가간에 독일과 베를린에서, 가령 독일 연방공화국과 구라파의 다른 국가들간에 오늘날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 만큼이라도, 방문의 가능성과 문화교류와 그리고 체육 접촉같은 것이 행하여진다고만 하더라도 이는 틀림없이 하나의 진보를 뜻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도 하찮은 첫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관계의 정상화 (Normalisierung) 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체결되는 조약들이 실속없는 텅빈 것으로 되어 남지 않도록 하자면은 도대체 우리는 이제 부터라도 우선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장벽의 극복》 (Überwindung von Murnern)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본인은 만천하에 다음과 같이 천명하여 둡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관계의 정상화는 두 독일 상호간의 국경장해와 장벽을 극복하는 데에 (zur Überwindung innerdeutscher Grenzverhaue und Mauern) 기여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일들은 지금 우리가 처하여 있는 현상이 내포하고 있는 한탄스러운 특수성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 내일중으로 그렇게 쉽사리 변화되어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회담을 하는 목적 (Ziel) 과 의의 (Sinn) 는 보다 많은 관용 (Freizügigkeit) 을 가능케 하고 인권 (Menschenrechte) 이 통용되는 진보를 이룩해내려는 데에 있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앞으로도 계속하여 주장하겠습니다.

《동등권》 (Gleichberechtigung) 본인은 우리의 관계가 비차별대우의 원칙과 동등권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견해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들중에 누구도 다른 (쪽)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할 수가 없으며, 우리들 중에 누구도 독일의 다른쪽 부분을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서든지 간에 인식하고 있는 하나의 사태발전의 결과인 것입니다.

독일에 존재하고 있는 두 국가는 하나의 특별히 긴밀한 관계를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물론 양측이 어떠한 관계의 수립에만 성공하더라도 이것이 하나의 진보를 뜻하는 것이 되겠지만, 그런데 본인은 금년 1월 14일에 본인이 독일 연방공화국 국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열거한바 있는 입각점들(Orientierungspunkte)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임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결코 다른 쪽을 후견하겠다(bevormunden)고 마음먹어서는 안됩니다. 본인이 이곳에 온 것은 결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이 맺고 있는 어떤 유대(관계)를 파기하라고 요구하거나, 혹은 그 어떤 사회형태를 없애버리라고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독일 연방공화국에 대하여 어떤 이에 준하는 요구들이 행하여 진다면, 본인은 이러한 요구를 수락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이한 견해》(unterschiedliche Auffassungen) 수상! 본인은 우리의 오늘 이 회담이 그리고 앞으로 계속 될 이 회담이 진척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귀하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때에 말씀하신 일련의 중요한 개별문제(Einzelfragen)들에 관하여 우리가 기꺼이 이야기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인은 또한 같은 이유로 본인이 말씀드린 것들을 귀하가 예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 기회에 단 한가지 점만은 이미 말해두고자 합니다. 만일 본인이 개별사항 하나 하나를 반박하고 나서지 않는 경우에, 귀하는 본인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입을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즉 본인은 귀하가 독일 연방공화국내에 있어서의 내정 발전상의 여러가지 측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판결과, 독일 연방공화국내의 정치적 집단들 하나 하나에 대한 귀하의 판단이나 정치인물들에 대한 귀하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리고 귀하가 독일 연방공화국의 발전에 관련하여 행한 분석과 그리고 독일에 두개의 국가가 형성된 때 대한 귀하의 분석에 대하여도 본인은 대체로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귀하는 알고서 입을 시작하여야 하겠습니다.

《국방 정책》(Verteidigungspolitik) 귀하는 독일 연방공화국이 북대서양 연맹(NATO) 기구내에서 차지하고 행사하는 역할에 관하여 방금 언급하였는데, 이것을 본인은 또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특히 귀하가 독일 연방공화국의 국방

장관이며, 사회민주당의 한 부당수로서 본인의 대리를 맡고 있는 본인의 친구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t) 씨에게 책임을 덮어 씌우거나 혹은 감히 생각 하고 있는 특수 역할과 개인적인 역할에 대하여 내리고 있는 견해에 본인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공격을 위한 국방정책(die verteidigungspolitik der Aggression)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하여 있는 동맹국들에 대하여 충실한 파트너입니다. 이점은 귀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양측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려면 다음과 같은 경우라야만 가능하겠습니다. 즉 동.서 양진영간에 있어서의 동맹체제들 사이에 구라파에 영향이 끼쳐지므로써 어떤 변화가 생겨 날 때에만 우리 양측에도 변화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수상 귀하! 귀하는 본인이 보기에는 이러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문제들(die allgemeinen und prinzipiellen Fragen) 다루는 데에 주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제2차적인 문제와 제3류에 속하는 문제들 때문에 시간을 낭비해버려서는 안된다고 말하셨습니다. -몇가지 보충설명을 첨가하여 해야겠습니다- 아무튼 본인은 본인이 생각하는 관점을 토대로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문제들(allgemeine und prinzipielle Fragen)과 실제적인 문제들(praktische Fragen)을 병렬적으로 나란히 동열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문제들이라는 것은 그 하나 하나를 놓고 보면 원칙적인 문제들과 같은 비중을 물론 차지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 실제적인 문제들을 한데 합쳐서 보면 우리 양측을 위하여 많은 일이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고 또한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강조해 두고자 하는 사실과 반대되는 내독(內獨)적인 의미에서가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양측의 상호관계는 비차별대우의 원칙과 동등권의 기초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과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즉 다른 쪽 국민)을 대신하여 행동할 수가 없다는 사실(dasß niemand für den anderen handeln kann)과 우리들중 누구도 독일의 다른 부분을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없다는 사실(dasß keiner von uns den anderen vertreten kann)과 같은 일에 모순되는 상태에 있는 내독적인 의미에서 아닙니다(zwar im einem inner-deutschen sinn, der dem widersprechen würde, was ich gerade gesagt habe und was ich aus diesem Anlaß noch einmal unterstreichen darf)

《두 독일(국가)간의 관계》(zwischendeutsche Beziehungen) 이러한 뜻에서 귀하는 내독(간)의 관계(innerdeutsche Beziehungen)라는 말 대신에 두 독일(국가)간의 관계(zwischendeutsche Beziehungen)라는 말을 사용하여도 얼마든지 괜찮겠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존재하는 두 국가간의 관계(Beziehungen zwischen den beiden Staaten in Deutschland)라는 말을 귀하는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본인이 협상에 임할 용의가 있는가를 두군데서 구체적으로 질문 하였습니다. 본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협상할 시기가 도래하였는가를 -본인은 이러한 시기가 도래하였는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아볼 용의가 우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의식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덧붙여 말하여 둡니다. 즉 이 협상에 관하여 우리 쌍방중 그 어느 한쪽이든지 이미 제안하였거나 혹은 우리의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 제안하게 될 모든 것에 관하여 협상할 시기가 도래 하였는가를 타진할 용의가 있습니다.

《주권자로서의 국민》(Das Volk als Souverän) 본인은 통일적인 독일을 예상하고 만들어진 우리 두 국가의 헌법에 관하여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 연방공화국 뿐만 아니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도 체결한 일련의 조약들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서방) 3대국과 체결한 조약에는 귀국이 소련과 체결한 우호조약(Freundschaftsvertrag)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적통일(die staatliche Einheit)을 가능성으로 내포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표현들도 양측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조약을 통해서나 그리고 어떤 의도나 목적면에서도 자결권(das Selbstbestimmungsrecht)에 입각한 이 측면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일한 권리를 갖는 관계》(Gleichberechtigte Beziehungen) 이러한 때문만으로도 벌써 본인은 국제법상의 승인(völkerrechtliche Anerkennung)이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내정문제에 대한 불간섭(die Nichteinmischung in die inneren Angelegenheiten)이란 개념도 독일 연방공화국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간에 이룩해 내려는 동등한 권리에 입각한 원칙의 수립의 경우에 우리에게 중

요한 의의를 갖는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두 국가들중 어느한 국가뿐만 아니라 저마다 그들 정부의 저마다의 영토상에서 갖는 권능의 범위내에서 법률적으로 정돈되어있는 것을 존중할 의무를 다 같이 지고 이행해 나가야 할것으로 봅니다. 여기에는 다음의 경우가 또한 속한다고 하겠습니까. 즉, 독일 연방공화국에 대하여 혈통은 비난 공격을 하고, 독일 연방공화국의 지도적 인사에 대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명예훼손적인 비난공격이 중지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비난모략을 중지하는 것이 우리 두 국가간에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일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차별 대우를 하지 않고 (Nichtdiskriminierung), 동등권에 입각한다는 기본 원칙은 원래부터와 진짜 주권자인 독일 민족에 언젠가는 그들의 주권을 행사하고 연계하는 일을 가능케 하려는 우리의 목표(적)를 조금이라도 전드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까.

《의견교환의 계속》(Fortsetzung des Meinungsaustauschs) 수상!

귀하의 기초연설과 본인의 기초연설에서 우리들은 다같이 기쁘게야 길고도 어려운 길 (ein langer und mühseliger weg) 의 첫 출발점에 겨우 서 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밖에도 다음과 같은 두번째의 사실이 또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현재 우리를 분리시켜놓고 있는 모든 일들에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고도 어려운 길에 걸어 들어설 용의가 있다는 사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서로 분리시켜 놓고 있는 요소들을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견의 합의나 일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우선 준비의 성격을 띤 생명 (vorbereitende Erklärungen) 을 발표한다는 사실은, 독일에 존재하고 있는 두 국가의 정부 수반 (Regierungschefs) 이 처음으로 만난다는 보기도문 비상한 상황을 감안하면 (angesichts der außergewöhnlichen Umstände)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의견 교환이 사실의 중요성으로 비추어 보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믿음수 있는 형태 (jene vertraulichere Form) 를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상대방을 도외시하고 창밖으로 던져버리는 듯한 인상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벌써 오늘 오후부터 이러한 방법으로 문제

의 토의에 입할수 있다고 하면 본인은 이를 환영해 마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므로써 소련정부와 포올랜드 인민공화국정부가 독일 연방공화국정부와 의 견교환을 행할때에 중요한 의의를 지녔던 양식(스타일)에 우리도 또한 적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슈토프에 대한 초대》(Einladung an Stoph) 수상! 본인은 이 연설을 끝내기 전에 오늘의 이 회담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다음 차례에는 귀하가 독일 연방공화국으로 오시도록 귀하를 초대하고자 합니다.

《전권자의 임명》(Benennung von Beauftragten)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회담을 계속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오늘 오후에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 두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회담한 후에 우리들 양측으로 부터 행하여진 제안들을 우리의 제2차 회동 때까지 평가하여 정리할 위임 전권자를 임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전권자는 몇사람의 보조원(Mitarbeiter)의 협조를 받도록 해야겠으며, 우리의 제2차 회동일자는 5월초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이들 양측으로 부터 임명되는 전권자들은 이밖에도 검토되어야 할 문제들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가 제2차로 회동하는 때에 그들은 우리에게 이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의 목록에 입각하여 우리는 또한 앞으로의 절차등에 관하여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우리의 전권자들 내지 위원회(Kommissionen)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의 과제에 관하여 토의할 수 있겠습니다.

《영구적인 작업의 가능성》(permanente Arbeitsmöglichkeiten) 그런데 우리가 이들 전권자들에게 우리 정부의 소재지에 적당한 항구적인 직무의 가능성을(angemessene permanente Arbeitsmöglichkeiten)(그러니까 일종의 상설기구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 제공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관하여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의 목적에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들이 본인의 절차에 관한 제안입니다. 이들 제안은 너무 순서에 들어맞는(allzu maßvoll) 인상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첫단계 일을

행하지 않고 그전에 제 2 단계의 일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behutsam - 즉 상대방을 존중해 가면서 신중하게) 현실적으로 (realistisch) 문제에 접할 때에만 우리는 우리 동포들과 그 뿐만 아니라 동. 서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부터 기대하고 있는 일들을 공정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 입니다.

(출처)

1970년 3월 20일자로 본에서 발간된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의 언론 공보처 관보>>에서

에아푸르트 회담에 관한 공동 커뮤니케
(Gemeinsames Kommuniqué über das
Treffen in Erfurt) (1970.3.19)

[에아푸르트에서의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수상간의 회담을 종결하면서 1970년 3월 19일에 다음과 같은 공동 커뮤니케가 발표되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내각위원회 의장 (der Vorsitzende des Ministerrate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즉 수상) 빌리 슈토프 (Willi Stoph) 의 초청으로 1970년 3월 19일에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내각수반 (수상) 은 에아푸르트에서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 빌리 브란트 (Willi Brandt) 를 만나 제 1차 회담을 가졌습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수상은 이 회담에서 오토 윈처 (Otto Winzer) 장관과 미하엘 (Michael Kohl) 코울 차관 (박사) 과 귄터 코오르트 (Günter Kohrt) 차관 내각 (위원회) 실 (Büro des Ministerrates) 부실장 게르하르트 쉬슬러 (Gerhard Schäbler) 박사과 그리고 한스 보스 (Hans Voss) 과장 (박사) 을 수행원으로 대동하였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의 수행원으로는 에곤 프랑케 (Egon Franke) 장관, 볼프람 도른 (Wolfram Dorn) 차관, 콘라드 아알러스 (Conrad Ahlers) 차관, 울리히 자암 (Ulrich Sahm) 국장 (박사) 과 위르겐 바이헤르트 (Jürgen Weichert) 국장이 동행하였습니다. 이 회담에는 이밖에도 양측으로 부터 고문 (Berater) 과 전문가들 (Experten) 이 참석하였습니다.

《카셀로의 초대》 (Einladung nach Kassel)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수상은 1970년 5월 21일에 카셀 (Kassel) 에서 제 2차 회담을 개최하는데 대하여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이 행한 초청을 수락하였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 브란트는 부헨발트 (Buchenwald) 의 경고 및 기념관 (Mahn- und Gedenkstätte) 에 화환을 헌화함으로써 나치의 독재정치에 의하여 희생된 사람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오토 빈처 장관의 대동을 받았습니다.

(출처) 1970년 3월 21일에 본에서 발간된

《독일 연방공화국의 언론·공보처 관보》에서

브란트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 독일
연방공화국 국회에서 성명 (1970.3.20)

「빌리 브란트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은 1970년 3월 20일 독일 연방공화국의 제 41차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하나의 강력한 체험》(Ein starkes Erlebnis)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에아푸르트로 갔던 본인의 짧은 여행은 모든 것을 제쳐 놓고서라도 확실히 하나의 강력한 인간적인 체험(ein starkes menschliches Erlebnis)이었습니다. 이것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과의 만남의 경우에 특히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본인은 어제 에아푸르트에서 되풀이 하여 하나의 독일민족(eine deutsche Nation)의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그리고 생생한 현실(die fortdauernde und lebendige Wirklichkeit)이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것은 결코 하나의 가상적 얘기(eine Fiktion)가 아니며, 하나의 현실(eine Realität)이라는 것이 실증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에 관하여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이해 하시리라 믿습니다. - 이것 역시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안될 하나의 현실(eine Realität)입니다. 내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수상 슈토프씨와 만난 첫 회동은 나에게 정치적으로도 강력한 인상(starke Eindrücke)을 주었다는 점을 덧붙여 두고자 합니다. 경험은 우리에게 언제나 되풀이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회담이 편지를 통하거나, 외교교서를 통하거나 혹은 공개적인 연설같은 것을 통하는 것보다 우리가 대하는 파트너나 그 파트너의 견해를 보다 낮게 파악하고(begreifen), 보다 잘 이해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는 점이 우리의 경험으로 언제나 되풀이 하여 실증됩니다.

《공통된 일면》(Ein Stück Gemeinsamkeit) 그런데 다음의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충분히 명확하게 생각하고는 있지 못합니다. 즉 아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치적 사건같은 것을 도외시한다면(제쳐놓는다면), 독일의 다른 부분에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분야에서 그들의 일상활동중 동일한 문제들이나 혹은 서로 비슷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를 해결해 내려고 우리를 자신이 그러한 것과 같이 애쓰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언제나 충분히, 확실히 생

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이렇게 표현해도 좋다면,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우리는 하나의 공통점 (ein Stück Gemeinsamkeit) 이라고 또한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의 생각으로는 제가 지금 정말로 시초적인 첫 보고 (eine erste Unterrichtung) 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점을 여러분께서는 모두가 이해해 주시리라 봅니다. 제가 에아푸르트에서 쌓고 수집한 경험 (die Erfahrungen) 과 인식 (die Erkenntnisse) 을 충분히 제대로 평가해 낼려면 (auswerten) 적어도 앞으로 여러 날은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가지 점을 역시 여기에서 미리 확실히 말해 두고자 합니다. 에아푸르트로의 여행은 옳은 것이었으며 (richtig), 이 여행은 반드시 필요한 여행이었으며 (notwendig), 그리고 이 여행은 유용한 여행이었읍니다. (nützlich). 이 여행이 유용했다는 것은 슈토프씨와 본인이 우리의 상호 의견의 차이가 큰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상관없이 의견의 일치를 보아 (übereinstimmend) 서로가 확증하였던 것입니다.

이 에아푸르트에서의 회담에서는 어디까지나 시초적인 의견의 교환 (ein beginnender Gedankenaustausch) 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확실했던 것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교환을 함에 있어서 양측간에 존재하고 있는 심각한 의견의 차이 (die tiefgreifenden Differenzen zwischen den beiden Seiten) 가 숨김없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평화의 보장 (die Sicherung des Friedens) 을 위한 일반적인 필요성의 인정과 몇가지 실제성을 지닌 문제들을 토의하는 것을 넘어서 양측의 상이한 견해가 어떠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며, 그리고 실제로 아무도 이를 기대하지 않았읍니다. 만일 우리가 진일보하여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독일에 존재하고 있는 두 국가간의 관계가 어떤 향상을 도모하기를 원한다면은 아뭏든 어떤 차원에서이든간에 이러한 회담이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에아푸르트는 단지 첫 시발에 지나지 않는다》 (Erfurt nur ein Anfang)

에아푸르트는 단지 첫 시발 (ein Anfang) 에 지나지 않았읍니다. 그것은 첫 시발이 었읍니다 (Es war ein Anfang). 나는 이 첫 상면 (diese erste Begegnung, 즉 첫 회담) 에 이어 제2 상면 (회담) 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 외에 커 큰 대담한 목적은 처음부터 세우지 않았읍니다. 제2 차로 우리가 회담을 갖는 계획은 슈토프씨와 완전한 의견의 합의를 보았읍니다.

《실제적인 결과의 성취 가능하다》(praktische Ergebnisse denkbar) 양측은 5월 21일까지의 앞으로의 8주동안, 그들이 예아푸르트 회담으로 부터 어떠한 결론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 생각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앞으로 있게 될 카셀(Kassel)에서의 회담에서 실제적인 결론(결과)를 성취해 내도록 노력할 것인가에 관하여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결론(결과)의 성취가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 독일의 분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제 결과현상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일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denkbar)는 사실 -조금도 확실한 면은 없지만(wenn auch alles andere als sicher), 아뭏든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denkbar !). 현재로서는 물론 여기에 많은 회의적인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한 일이 었그제(즉 지난날 vorgestern)보다 역시 오늘날(heute) 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나는 가능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봅니다.

의원 여러분! 원칙적인 문제들(prinzipielle Fragen)에서 어떻게 하나의 접근(eine Annäherung)이 가능할 것인지는 예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위에 말씀드린 일들이 가능하다(möglich)고 생각합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DDR) 정부나 전적으로(ganz und gar)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승인(Anerkennung)을 관철시키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들은 독일사람들이 함께 살아나가고(zusammenleben), 두 독일에 존재하고 있는 두 국가가 협동해 나가기 위하여(zusammenarbeit)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positive Veränderungen)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있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암시도 주지 않았습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정부는 또한 실현될 수 없는 일련의 요구조건들(eine Reihe von Forderungen)을 내세웠습니다. 이들 요구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keine rechtliche Grundlage)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아무런 도덕적 근거를 갖지 아니하였기 때문에(keine moralische Grundlage) 이행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unerfüllbar)

《독일 연방공화국에 있어서의 현황에 대하여 완전히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음》(völlig falsche Vorstellungen über die Lage in der Bundesrepublik)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사람들이 독일 연방공화국의 현학과 독일 연방공화국정부의 정치에 관하여 완전히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이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문제의 토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우리가 반박하여
배척해야 할 것입니다. (zurückweisen). 그리고 나는 예아푸르트에서 명확히
이러한 견해를 반박하고 배격해 두었던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의 정책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책은 통
일적이며 (einheitlich), 일관성이 있는 정책입니다. (konsequent). 지난해
10월 28일에 행한 본인의 정부선언에서 본인은 동등권 (Gleichberechtigung)
과 비차별대우 (Nichtdiskriminierung)의 원칙에 입각하여 조약을 통한 협약으
로 하나의 협동이 (eine vertraglich vereinbarte Zusammenarbeit) 가능토록
하는 결과를 끌어낼 협상 (Verhandlungen)을 하자고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내각 위원회 (즉 내각 - Ministerrat)에 제안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입장을 고
수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nach unserem Willen) 이와같은 협상은 다른 국
가들 (andere Staaten)과 체결하는 조약 (Verträge)과 동일한 법적의의 (die
gleiche rechtliche Bedeutung)를 지녀야 한다고 봅니다.

《두 국가는 서로가 외국이 아니다》 (Beide Staaten füreinander nicht
Ausland) 그렇지만 본인은 독일에 존재하고 있는 두 국가가 서로가 그냥 외국
일 수가 없다 (daß die beiden Staaten in Deutschland füreinander nicht
einfach Ausland sein können)는 점과 그리고 현재 수어져 있는 부정적인 특
수 상황에서 언젠가는 평화와 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그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하에 우리 두 나라의 상호간의 관계가
서로의 특수상황에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daß ihre Beziehungen zueinander
der besonderen Lage entsprechen müssen) 점을 본인은 또한 고수합니다.

본인은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금년 1월 14일에 이 국회에서 행한 국정보고
(der Bericht zur Lage der Nation)에서 그 배경과 근본 태도를 밝혀서 천
명하였습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국가 위원회 의장 (der vorsitzende
das Staatsrats der DDR)이 1969년 12월 17일에 독일 연방공화국 대통령에게
전달한 조약의 초안은 이러한 특수상황 (die besondere Lage)과 이 특수한 필
연성 (die besonderen Notwendigkeiten)을 감안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부합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와는 다른 종류의 조약을 위한 협상이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자유의사에 의한 자결≫ (Freie Selbstbestimmung) 슈토프씨는 에아푸르트에서 도메체 독일 연방공화국정부의 정치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하여 원개 추구하고 있는 목표 (die eigentliche Zielsetzung der politik der Bundesregierung gegenüber der DDR) 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나에게 던졌습니다. 우리는 물론 아무런 공격적인 의도 (keine aggressiven Absichten) 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이웃간으로서의 선린의 협동 (eine nachbarliche Zusammenarbeit) 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과, 독일에 존재하고 있는 두 국가간의 평화적 공존 (eine friedliche Koexistenz zwischen den beiden Staaten in Deutschland) 을 우리는 희망하고 있으며, 그러나 동시에 그리고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일은 모두 피해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슈토프씨에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즉, 독일민족 (das deutsche Volk) 이 - 비 교적 먼 훗날이 될지도 모르지만 - 아 물론 언젠가는 구라파의 평화질서 범위내에서 그들이 공동으로 함께 살아나갈 정치적 형태에 관하여 (über die politische Art seines Zusammenlebens) 자유의사에 입각한 자결권의 행사를 통하여 그들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싹틔워 버릴지라도 만들어 버릴지도 모르는 모든 것을 피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본인은 슈토프씨에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본인의 의무가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에아푸르트에서 독일 연방공화국정부가 취하는 입장을 대표하였습니다. 독일에 존재하고 있는 두 국가간의 조약과 이들 두 국가의 대외관계 (Außenverhältnisse) 를 법적으로 규제 정리하는 일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실에서 도외시 (度外視)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속하는 것으로는 - 다른 것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 독일에 관한 4대국 협정 (die Viermächteabkommen über Deutschland) 이 있으며, 독일 연방공화국이 (서방) 구대국과 체결한 협정도 또한 여기에 속합니다.

≪베를린의 지위≫ (Status von Berlin) 베를린의 지위 (der Status von Berlin) 도 본인이 에아푸르트에서 가졌던 회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나는 독일 연방공화국은 현재 주어져 있는 지위 (der gegebene Status) 를 변경시킬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독일 연방공화국은 베를린에 있어서의 현황과 베를린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상황의 개선을 환영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만일 다른측 (즉 동독) 이 현실의 인정 (die Anerkennung der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내각수반 (수상) 슈토프, 인민의회
(Volkskammer)에서 보고를 행하다. (1970. 3.21)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내각위원회 의장 (수상) 빌리 슈토프 (Willi Stoph)는 1970년 3월 21일 인민의회 (Volkskammer) 제 16차 회의에서 에아푸르트 (Erfurt) 회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보고를 행하였다]

의장! 존경하는 국가위원회 의장 동무 (Genosse Vorsitzender des Staates!) 존경하는 인민 의회 의원 여러분!
에아푸르트에서 돌아와서 본인은 1970년 3월 19일에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DDR)의 정부수반 (수상) 과 독일 연방공화국 (BRD) 정부의 수반 (수상) 간에 있었던 회담의 내용 (Inhalt) 과 경과 (Verlauf) 에 관하여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에게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알고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회담에서는 근본이 되는 의의를 지니는 여러 문제들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즉 평화 (Friede) 와 구라파의 안전 (안보) (die europäische Sicherheit) 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깊이 관계되는 문제들에 관한 토의가 이 회담에서 행하여 졌던 것입니다.

《조약의 초안》 (Vertragsentwurf) 이 회담의 이니셔티브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부터 행하여 졌습니다. 이 회담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국가위원회 의장 발터 울브리히트 (Walter Ulbricht) 동무에 의하여 독일 연방공화국 대통령 하이네만 (Heinemann) 박사에게 전달된 동등권의 원칙과 국제법의 원칙에 따른 관계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에 수립하기 위한 조약의 초안이 었습니다.

우리는 본인이 독일 연방공화국의 수상을 초청한 에아푸르트회담에 대하여 그 제기를 마련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았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동시에 우리의 조약 초안을 제시하므로써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에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하는데 필요한 건설적인 기초 (eine konstruktive Grundlage) 를 마련하였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빌리 브란트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과 만났을 때에 처음에 발표한 본인의 성명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아실 것으로 몸니다만. 이 조약의 초안과 이 초안에 포함된 세밀치

Realitäten)을 주장한다면 그들은 또한 서부 베를린의 현실과 이 서부 베를린이 독일 연방공화국과 갖고 있는 여러가지의 다양한 관계를 인식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나는 아주 명확히 해 두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서는 포기되어질 수 없는 입장 (eine unverzichtbare Position)입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의 협정》(Vereinbarungen mit der DDR)이 밖에도 본인은 -물론 형식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는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독일의 두 국가간에 체결될 조약을 통한 관계 (die vertraglichen Beziehungen)의 형식 (die Form)이 아니라, 이러한 관계가 지니는 실제적 내용 (ihr tatsächlicher Inhalt)이 중요하다는 점을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내각 위원회 의장 (수상)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약을 통한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본인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 간에도 하나의 불가침 조약 (ein Gewaltvertrichtsvertrag)을 체결할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본인의 희망을 되풀이 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련의 조약들이 도래해 어떤 의의가 있을려면 독일에 있어서의 관계의 개선과 현재 주어져 있는 현상의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반드시 밝혀 말하자면은- 제2차 세계대전 이래 독일에 존재하고 있는 두 국가의 정부수반 (수상)이 처음으로 만난 이번 회동 (회담)의 결과를 철저히 분석, 평가해서 보고할 수 있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시기상조라는 점을 본인은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정돈된 병존 (ein geregeltes Nebeneinander)을 넘어서 평화적으로 함께 살 수 있는 (즉 한데 모여서 살 수 있는) (ein friedliches Miteinander) 길을 마련하기 위한 이 생각가능한 기회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확신합니다. 가까운 장래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무엇을 성취할 수는 없을 것이며, 나는 이 점을 확신합니다.

《외교정책》(Außenpolitik) 이러한 의미로 보아 에아푸르트로 간 본인의 여행은 우리의 외교정책의 일반적인 테두리안에 정리 귀속시켜질 수 있는 성격을 띄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북대서양 동맹 (NATO) 기구에 충실하며, 이 동맹기구는 우리에게 안전 (Sicherheit)과 보호 (Schutz)를 약속해 줍니다.

이러한 동맹 (Bündnis)과 그리고 우리의 우방들과의 우호관계에 바탕을 두고

우리는 동 구라파의 모든 국가들과의 관계의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소련과의 관계 개선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은 독일의 다른 부분인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DDR)과의 관계를 또한 감안하여 추진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독일인들 상호간에서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계도 - 동부진영세계와 서방세계가 다같이 -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모든일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즉 독일 연방공화국(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DDR)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단순히 두개의 국가가 아니라(nicht einfach nur zwei Staaten wie andere) 이들은 서로가 다른 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면서도 거기에 꼬치지 않고, 거기에는 독일사람들이 살고 있고, 노동하고 있는 국가들인 것이요, 이들 두 국가와 독일인들은 한탄스러운 그릇된 발전으로 인하여(durch beklagenswerte Fehlentwicklungen) 서로가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을 서로 결합시켜주는 많은 요소들을 또한 지닌 국가들이라는 점을 하나의 기정사실로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황개선을 위한 성실한 노력》(Ehrliche Bemühungen zur Verbesserung der Lage) 어제 하루가 지난후 두 분리되어 있는 부분들간에 하나의 관계 개선이 서서히 가능하게 될 것인가에 관하여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 저는 아무튼 알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관계의 개선을 도모하는 데에 우리가 성실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성실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누구든지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창한 말(große Worte)을 한다고 하여 여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이와 관련시켜보면 이러한 거창한 말들이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아푸르트에서의 만남(회담)은 하나의 (큰)사건(ein Ereignis)이었으며 이 회담의 실제적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던지 간에, 앞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며, 적어도 선의(善意-der gute Wille)의 한 예가 될것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본인은 앞으로 있을 카셀(Kassel)에서의 만남(회담)을 준비할 것입니다.

(출 처) 1970년 3월 20일자의 독일 연방공화국 국회 제41차 회의록(protokoll der 41. Sitz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von 20. März 1970)

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대표단의 등장에서 그 중심점을 이루었습니다.

《만남은 유용했습니다》(Treffen war nützlich) 본인은 어제 돌아온 직후 즉시 보고를 행한바 있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내각위원회(즉 내각)는 이 에아푸르트회담(단담)을 유용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우선 여기에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은 평화를 위하여, 현상(Status quo)의 유지를 위하여 그리고 전쟁같은 분쟁(Kriegerische Konflikte)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에 정상적이고 동등한 권리에 입각한 관계의 수립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두 정부간에 회담을 개최하여 지행시켜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notwendig). 지금까지의 본(Bonn) 정권(부)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독일 연방공화국(BRD)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DDR)에 대한 관계는 완전히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습니다.(Völlig unnormal). 그러므로 - 결국 우리는 어떠한 환상에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러한 회담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 여부는 현재의 독일 연방공화국정부가 지금까지의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하여 취하여온 적대행위와 평화를 위협하는 낡은 정책을 말로서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포기할 의사를 보이는가에 따라 있습니다. 서로 독립되고 주권을 가진 우리 두 국가(unsere voneinander unabhängigen, souveränen Staaten)간에 평화적 공존관계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하려면 행동(Taten)이 요구됩니다.

《사회체제의 근본되는 상반성》(Unvereinbarkeit der gesellschaftlichen Systeme) 이 점을 본인은 에아푸르트에서 브란트씨에게 아주 솔직히 말했습니다. 아주 차이 나고, 그뿐만 아니라 서로 대립되기 까지는 쌍방의 견해(die sehr Unterschiedlichen, ja gegensätzlichen Standpunkte)가 이번의 회담에서 확실히 들어 났습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세계여론은 사회주의(Sozialismus)와 자본주의(Kapitalismus)가 지니는 사회 체제의 근본적인 상반성과 양립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trotz der grundlegenden Gegensätzlichkeit und unvereinbarkeit der gesellschaftlichen Systeme von Sozialismus und Kapitalismus)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정부는 우리 두 국가간에 평화적 공존을 수립할 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만남의 온 과정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회담(대화)에서도 우리는 성화물

영속성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한다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치의 기본 원칙을 항상 우리의 행동의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본인은 우리들 사회주의자들은 바로 이점에 가능한 최고의 인간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점을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 브란트씨에게 솔직하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에서 서로가 엇갈리는 답밖에 얻지 못하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런 답도 얻어 낼수가 없었다는 점을 본인은 여기에서 숨겨두고 싶지 않습니다. 이점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조약 초안에 내포되어 있는 구체적인 제안 (die konkreten vorschläge) 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평화 정책》(Friedenspolitik)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대표로서 우리는 에아푸르트 회담에서 확고한 기초에서 일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사회주의 평화국가 (ein sozialistischer Friedensstaat) 의 시민입니다.

우리의 이 사회주의 평화국가에서는 역사 (Geschichte) 의 교훈과 국제법과 완전한 일관하여 침략정책 (Aggressionspolitik) 과 전쟁 (Krieg) 의 사회적 원인을 그 뿌리부터 완전히 뽑아서 근절하여 버렸으며, 국민 (인민) 의 힘으로 (durch die Macht des volkes) 하나의 진정한 평화질서 (eine wahre Friedensordnung) 를 이룩해 놓았습니다.

본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성명 (기초 연설) 에 답하여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 브란트는 자기와 자기에 의하여 영도되고 있는 정부도 (앞으로) 독일 영토에서 새로운 전쟁이 반반되지 않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하였습니다. 본인은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는 오늘날 그러던 이를 위하여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있느냐고 브란트씨에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확고한 보증 (feste Garantien) 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아무리 평화를 부르짖어도 (verbale Friedensbetuerungen allein)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점 역시 본인은 아주 솔직하게 말해 두었습니다 - 이렇게 평화를 부르짖어 보았자 아무런 진보가 생기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 보았자, 이미 생겨난 긴장을 원망하였자 이는 아무 소용 없는 일입니다. 긴장과 전쟁위험에 대한 원인을 기탄없이 말하고, 이들 원인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전쟁의 위험은 남아 있을 것이며, 그 밖에도 무책임한 평화명서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전쟁의 위험은 국민 (인민) 앞에 위장되어질 것입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의 관계를 감안하여 볼때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졌습니다. 즉 20여년 이상 동안이나 모든 지금까지의 독일 연방공화국 정권(취
들에 의하여 행하여진 복수주의 정책 (politik der Revanche), 적대행위 (Fe-
indseligkeit) 정책, 준비확장 (die Aufrüstung) 정책과 그리고 국경 불승인!
정책 (die Politik der Nichtanerkennung der Grenzen)을 이제 드디어 끝장
내야 한다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브란트씨에게 그의 정부가 구
라파에 있어서의 영토적 현황 (der territoriale Status quo)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인정할 용의가 있으며,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하여 국제법적인 관계를
수립할 용의가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국제법적인 관계》 (Völkerrechtliche Beziehungen) 사실 사태는 아주
명확합니다. 평화를 위한 보장은 국가들 간에 있어서의 관계에서 국제법을 완전히
승인함으로써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국제법을 완전히 승인하는 일이 행하여져야만이
평화에 대한 보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문제가 부동상태에서 미해결로 남아 있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점은
브란트씨의 발언에서 언제나 되풀이되어 표현되는 이야기입니다- 일이 이렇게
된다면 평화의 보장에 관한 이야기와 관계의 개선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런 실제
적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우리는 에아푸르트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오해의
여지없이 명확히 말해 두었습니다. -어떠한 구실을 내세우든지 간에 그리고 어떤
전략을 쓰든지간에-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그리고 기타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하여 복수주의 정책 (die Revanchepolitik)과 차별대우정책 (die
Politik der Diskriminierung)을 계속하는 사람은 미래에도 이에 상응하는 대
가 (대담) (die gebührende Antwort)를 받게 될 것입니다.

《건설적인 제안》 (Konstruktive Vorschläge) 본인에 의하여 인솔된 대표
단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국민 (인민)의 이익에 알맞게 그리고 우리가 제시한
조약초안에 바탕을 두어 에아푸르트에서 건설적인 제안을 내 놓았습니다. 평화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전적으로 인식하고 긍정적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의 가능한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당장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이
제시한 조약의 초안에 관하여 협상에 돌입할 용의가 있으며, 이 조약에 서명할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브란트씨에게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

공화국간에 즉시에 외교관계 (diplomatische Beziehungen) 를 수립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에 대한 응의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본인은 -우리가 제시한 조약의 초안에 바탕을 두어- 즉시 협회에 들어가야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기본 문제들》(Grundfragen) 만일 다음과 같은 기본문제들에 관하여 협의가 행하여지고, 거기에서 참된 진보가 이루어지고 합의에 도달하게 된다면, 이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DDR) 과 독일 연방공화국 (Bundesrepublik) 의 국민들과 모든 구라파 국가들의 민족들 (Völker) 에게 큰 장점과 이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첫째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에 국제법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그리고 어려운 차별대우도 함이 없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정상적인 관계를 수립하는데 대하여 협의와 협상을 하는 일. 이를 위하여는 물론 서부독일의 연방공화국 (die westdeutsche Bundesrepublik) 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DDR) 에 대하여 제기하고 있는 소위 단독 대표권이라는 당치도 않는 주장 (die Alleinvertretungsanmaßung) 이 포기되어져야만 하겠습니까.

둘째 다른나라의 외교정책상의 관계에 간섭하지 않을 것에 대한 협의를 하는 일. 이에는 할슈타인 독트린을 영구히 (endgültig) 그리고 명확히 (eindutig) 포기하는 일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셋째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에 불가침 조약을 체결할 것에 대한 협의와 협상을 하는 일. 여기에는 국제연합헌장 제2조 4항에 따라서 양국의 국제법적 주체성 (Völkerrechtssubjektivität) 과 영토적 불가침성 (territoriale Integrität) 과 그리고 양국간에 존재하고 있는 국경선의 불가침성 (die Untastbarkeit ihrer bestehenden Staatsgrenzen) 을 아무런 제한없이 (무제한으로) 상호간에 인정하는 일 (uneingeschränkte gegenseitige Anerkennung) 이 행하여져야할 것입니다.

넷째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이 국제연합기구에 회원국 자격을 신청하기 위한 문제에 대한 협의

다섯째 핵무기 (Kernwaffen) 를 획득하거나 혹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러한 핵무기를 소유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에 관한 일과 생물학적 무기 (B-Waffen) 와 화학무기 (C-Waffen) 를 생산하고, 사용하고 그리고 저장하여 두는 일을 포기하

고 그리고 군비에 산지출 (Rüstungsausgaben) 을 50 % 줄이는 일들에 관하여 협상을 하는 일

여섯째 제2차 세계대전의 모든 잔재를 불가피하게 제거해 내는 일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협의하는 일에 관한것

일곱째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비할때 독일 연방공화국의 모든 학교들이 차지하는 지위를 동일하게 만드는 일에 관한 협의와 협상, 그리고 독일 연방공화국이 지고 있는 보상조치에 대한 의무 (die Wiedergutmachungsverpflichtungen) 를 법적으로 규정해 놓을 일에 관한 협상을 하는 일

-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이렇게 하므로써 평화를 위한 실제적 보강과 그리고 동시에 인간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참된 생활의 간편화가 마련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교관계를 거부하다》 (Diplomatische Beziehungen abgelehnt) 서부 독일의 연방공화국 수상 브란트씨는 에아푸르트에서의 회담에서 유감스럽게도 또 다시 평화나 전쟁이냐하는 모든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본 문제에 대하여 명확하고 (klar) 의심의 여지없이 (unzweideutig) 그의 견해와 태도를 밝히는 일을 회피하였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선의 (善意) 라는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제시한 조약의 초안에 대하여 협상에 들어갈 용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의 수도들인 베를린과 본에 다른쪽 국가의 대표 (단) 이 없다는 것을 (Keine Vertretungen des anderen Staates) 한탄하였으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관계를 맺고 대사를 교환하는 것은 반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본인은 독일 연방 공화국 수상 브란트에게 양측 대표단의 협의시에도 그러했고, 개인적인 사담에서도 지금의 독일 연방 공화국 정부의 정책이 추구하는 전략적 목적 (das strategische Ziel) 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히 (klipp und klar) 말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내가 설명하기는-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간단합니다.

즉 귀하의 정부가 나아가는 길이 어디인가? (Wohin will Ihre Regierung?) 라는 것입니다.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는 이제 드디어 보복 (Revanche) 과 전쟁 (Krieg) 의 다적 범주 (Teufelskreis) 를 벗어나서 박차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용단을 내리는 대신에 구라파의 국경의 변경을 그들의 정책의 목표로 삼으므로써 구라파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즉 위협의 대상이었던. 지금까지의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들의 저 모험적인 정책 (Jene abenteuerliche Politik) 을 계속해나갈 심산인가 라고 나는 브란트씨에게 물었습니다.

《파리 조약》 (Pariser Verträge)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파리 조약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DDR) 을 독일 연방공화국의 제국주의적인 사회체제 (das sozialistische Gesellschaftssystem) 에 병합시켜 버리고 (einzuverleiben)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체제 (das NATO-Paktsystem) 에 끌어들여 버리자는 서부 독일 연방공화국 (die westdeutsche Bundesrepublik) 의 전략적 목적을 내포하고 있는 소위 독일 조약 (der sogenannte Deutschlandvertrag) 의 제 7 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대표단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위협이 그들에게 대하여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므로, 지금의 독일 연방국의 정부도 이와같은 지금까지의 정부들이 추구해오던 목적을 고수하고 있는가를 확실히 잘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독일 연방공화국의 시민들과 더 나아가서는 다른 구라파의 민족들도 이를 알고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위험한 정책이 계속되고 앞으로도 행하여진다면 이들도 다 같이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고생을 하게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위험한 정책의 결과에 시달리게될 것이겠기 때문입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에 전환점이 생기고 있는가?》(Wende in der Bundesrepublik?) 우리는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에게 또한 이렇게 물었습니다. 즉, 20년 동안이나 《해방》(Befreiung)이라는 등의 이름아래 추적되던 옛 정치진로가 오늘에 와서는 다른 미명아래 가령 계속되어질 것인가에 관하여 물었습니다.

브란트씨가 이미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말해온 바 있는 개혁(Die Erneuerung)이라는 말은 단지 전략의 변경(eine Veränderung der Taktik)이라는 것을 뜻하는가? 우리는 여러가지 점으로 매우 심각한 회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민당·기사당이 반대하여 그들의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독일 연방공화국의 정치에 있어서 하나의 참된 전환점을(eine echte Weende) 불러일으키기를 원했던 독일 연방공화국의 1천6백만 시민의 기대가 헛된 것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는 아직도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모든 방법을 다하여 심각하게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정치가들과 서부독일의 사회민주당의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은 기민당·기사당의 기본목적의 설정과 추구와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고 분명하고도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그들은 이러한 그진부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단지 보다 그 전망이 많은 전략적 변형과 새로운 방법만을 달리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점을 우리는 심각하게 지적하였습니다.

《특수한 내독간의 관계》(Besondere Innerdeutsche Beziehungen) 존경하는 인민 의회의원 여러분! 에아푸르트 회담에 우리가 취한 태도와 입장은 처음부터 건설적이었습니다(Konstruktiv).

우리 자신이 독일 연방공화국에 대하여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독일 연방공화국으로부터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항상 되풀이하여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법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제원칙을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의 관계에 적용시키자는 우리의 유일하게 현실적인 입장에 대하여 서부독일측(Die westdeutsche Seite)은 소위 《특별한 내독간의 관계》(Besondere Innerdeutsche Beziehungen)라는 얼핏 보기에도 너무나도 형식적인 개념으로 대응해 나왔습니다.

협의를 시작하는 첫 마당에서 행한 본인의 성명에서 이미 본인은 이와 같은 얘기는 지금까지의 소위 단독대표권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형태를 바꾸어 계속 유지해 나가고,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한 차별대우를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계속해 나가자는 그 하나의 목적위에는 다른 것을 추적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의심할 여지없이 명확히 말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브란트씨에게 아주 단순히 이렇게 말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독일 연방공화국에 대하여 그러한 협상을 도대체 제시할 의향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시도가 우리에게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또한 이제와서는 중단되어지기를 기대한다.

이 소위 <<특별한 내륙간의 관계>>라는 형식이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진다는 것입니까? 브란트씨는 여기에서 <<독일에 있어서의 특별하고 특수한 조건>> (Die Besonderen, spezifische Bedingungen in Deutschland) 이라는 말을 하였읍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국가 (Ein Staat Deutschland) 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두 국가들간의 관계에서 아무런 특별한 특수조건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keine besonderen spezifischen Bedingungen in den Beziehungen zwischen unseren Staaten). 이러한 태도는 그들이 아무리 이와 반대되는 주장과 약속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주권을 가진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을 서부독일의 연방공화국의 후견국가로 전락시켜 버리려는 시도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언제라도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내부 문제들에 간섭할 수 있는 요구를 가지려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국제법을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한 관계에서는 제외시켜 버리자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소위 <<특별한 내륙간의 관계>>라는 태두리를 주장함으로써 불가침 (조약), 비차별대우, 국경과 영토의 불가침성등의 존중에 관한 모든 협상들이 가령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실체를 박탈당하고 만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 국제법적인 책임있는 실체는 실제로는 그 대상을 상실하고 만다고 봅니다.

우리 국가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행동)은 -본에 있어서의 정치적 상황이야 어떻던지간에- 아무튼 <<내독간의 문제(일)>> (Innerdeutsche Angelegenheit) 라고 불릴 수도 있겠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어 나간다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시민은 이 소위 <<특별한 내독간의 관계>>라는 일로 충분히 많은 경험을 쌓아 겪은바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이나 본 당국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하여 적대행위 (Bonner Feindschaft gegen die DDR) 를 해왔던 것으로 나는 이점을 예아푸르트세에서 나의 회담 상대방자에게 아주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1956년과 1957년도의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총 국민소득을 합한 총액에 거의 해당하는 금액 -이것이 1천억도 넘는 액수인데, 특별한 내독간의 방법으로 (auf diese besondere Innerdeutsche Art und Weise)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들에게 <<간소화 시켜준>> (erleichtert) 혜택입니다. (역주=명목상으로는 이렇게 특별한 관계이니, 모든 생활의 편의등을 제공하고 협동함으로써 동독 시민을 위한다고 말하고는 있으나, 사실인즉 예를 들어 1956년과 1957년도 7년간의 총주민생산에 해당하는 만큼 큰 피해를 동독에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위 특별한 내독간의 관계라는 말을 브란트 수상이 예아푸르트 회담에서 하고 나서는 것은 동독측으로 볼 때에는 그 속셈이 뉘히 들여다 보이는 또 무슨 장난이니 그들로서는 도대체가 믿을 수도 없고 그럴만한 일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앞으로 절대로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시 이러한 슬로간의 이름이래 곤욕을 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국경 (unsere Staatsgrünze) 을 확실히 (zuverlässig)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역주: 동독은 베를린 장벽이라고 일컬어지는 울타리를 동·서 베를린의 국경선에 쌓음으로써 동독국민이 서독이나 기타의 다른 자유우방 국가로 피난하거나 탈주 혹은 이주해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베를린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밖의 다른 동·서독간의 국경선에도 이러한 국경방위조치를 취함으로써 동독국민이 서독을 비롯한 국외로 이주해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러한 그들의 조치를 서독의 침략해치는 수단정적 때문에 자기 방위적인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말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

은 서독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있어서는 결코 어느 누구도 소위 이러한 특별한 내독간의 실제 (solche »besondere innerdeutsche« Praktiken) 가 다시 적용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법상의 관계》 (Völkerrechtliche Beziehungen) 상황은 사실 분명합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DDR) 과 독일 연방공화국 (BRD) 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두개의 주권을 가진, 서로가 독립된 국가들 (zwei souveräne, voneinander unabhängige Staaten) 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 국가간에는—모든 다른 국가들간에서와 마찬가지로—국제법의 기초에 입각해서만이 성립되는 정상적이고 동등권이 인정되는 관계 (normale gleich berechnigte Beziehungen) 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예아푸르트에서 시종일관 서로가 비차별대우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우리의 기본태도를 주장하였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조약의 초안도 이러한 점에서 확실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약초안은 선의의 뜻을 가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수락할 수 있는 초안인 것입니다.

브란트 독일 연방국 수상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아푸르트에서의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차별대우의 원칙 (Prinzip der Nichtdiskriminierung) 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본의 요구에 대하여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때에만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DDR) 이 국제생활 (das internationale Leben) 에 그리고 국제기구들에 동등한 권리를 갖고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것도 없이 이러한 태도를 단호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불손한 태도 (eine solche anmaßende Haltung) 는 비차별대우의 기본원칙과 일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슈타인 독트린》 (Hallstein Doktrin) 주권 국가들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어느 한쪽이 다른 측을 대신하여 협상한다거나 다른 측을 대변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볼 때는 당연지사로서 논의의 일인 것입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으로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독일 연방공화국의

주권 (souveräne Rechte) 을 우리의 것으로 요구하고, 독일 연방공화국을 제 3국들과 국제기구들에서 대표하겠다고 어리석게 나서거나 이를 주장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독일 연방공화국의 정부들은 줄곧 이와 정반대의 일을 해 왔습니다.

단 대표권이라는 불손은 이들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들에 의하여 국지 (Staats-Doktrin) 로까지 끌어 올려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외교정책의 핵심부분을 위하여 소위 할슈타인 원칙 (Hallstein Doktrin) 이라는 개념을 손수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 연방공화국의 브란트 수상은 예아푸르트에서 그도 역시 어느쪽도 다른쪽을 후견하거나 다른쪽을 대변하거나 혹은 다른쪽을 대신하여 협상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점을 나는 큰 관심을 가지고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논리적 귀결로 당연히 제기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브란트씨에게 물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독일 연방공화국의 정부가 지금까지의 남아빠지고 복수주의적인 소위 단독 대표권이라는 불손한 주장을 아무런 조건없이 전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뜻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러한 입장의 결과로 나타나야 할 결론은 다음과 같은데 있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 즉 단독대표권이라는 불손한 정신에 의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진 제 규칙들과 규범행위들 (Normativakte) 과 지시 (Anweisungen) 와 행동 (Handlungen) 등은 폐기내지는 중지되어야 한다 (aufheben bzw. unterlassen) 는데서 그 결과를 찾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평화적 공존>> (Friedliche Koexistenz)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대표단은 평화적 공존의 지속적 관계 (dauerhafte Beziehungen der friedlichen Koexistenz) 를 수립하고 아무런 뒷생각없는 협정 (Abmachungen ohne Hintertur) 을 체결하자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진지한 것 (ernst) 이라는 점을 예아푸르트에서 확실히 해두었습니다.

우리의 조약초안이 이에 대한 실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부독일의 대표단은 서부독일의 연방공화국 정부는 이에 대하여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생겨난 문제들은 구라파의 평화 질서 (eine europäische Friedensordnung) 가 이루어질 때에만 이에 뒤이어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는 태도

입니다.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 브란트는 우리 국가들간의 조약을 통한 관계의 수립 (vertragliche Regelungen zwischen unseren Staaten)은 이러한 규정을 해치는 것이어서는 않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는 파리조약의 조문과 연관시켜서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

이러한 점으로 보아 우리들은 본에 있는 정권(부)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파리조약을 적용하여 이 협정을(그들이) 원하는대로 언제나(beliebig)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유보조건을 전제로 했을 때에만 이에 응하겠다는 태도라는 점을 주리해 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독일 연방공화국(BRD)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DDR)간에 체결되는 협정들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단지 잠정적인 성격을 띄거나(Provisorien) 아니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을 언젠가는 서부독일 국가에 병합(합병)시켜 버리자는 소위 독일 조약의 제7조에 밝혀져 있는 팽창주의적인 목적을 실천에 옮기는 수단으로 까지 쓰이게 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러한 방법은 아마도 나중에 내외의 여건이 바뀔때 행동의 자유를 얻는데 기여케 할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은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은 경험으로 보아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므로 그 배후에 숨겨져 있는 의도를 간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독일 제국주의(der deutsche Imperialismus)는 과거에 이러한 이중적인 바탕을 가지는 전략을 씀으로써 이해에 달할려는 용의가 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을 죽여 놓고는, 그들은 동시에 앞으로 행할 침략의 준비를 되풀이 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은 예를들어 슈트레제만 정책(Die Stresemann-Politik)입니다.

<<서부 베를린>>(Westberlin)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인은 에아푸르트에서의 회담에서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 브란트가 여러차례에 걸쳐서 서부 베를린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려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서부 베를린에 관계되는 문제들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수반(수상)들간에 행하여지는 회담의 대상이 아닙니다. 서부 베를린은

독일 연방공화국에 속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절대로 독일 연방공화국에 속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서부 베를린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DDR) 영토 내부에(in-mitten) 그리고 영토상에서(auf dem Territorium der DDR) 존재하는 하나의 자주적인 정치적 단위(eine selbständige politische Einheit)라는 점에 대하여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이 분명한 법적상황(Rechtslage)은 소련과 기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 의하여 괴롭혀 하여 강조되어 왔으며, 국제조약들을 통하여 구속력 있게 확인되어 왔습니다. 나는 서방 3대국 정부들도 이러한 서부 베를린의 법적상황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이 테마의 경우에도 우리는 회의장소에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서부 베를린이 아무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살속의 가시(Pfahl im Fleische der DDR) — 늘 마음에 걸리는 일, 걱정, 가슴아픈일등을 말함)로서 특정지워졌습니다. 서부 베를린은 전위 도시(Front-stadt)로 선언되어졌습니다.

서부 베를린은 그뿐만 아니라 가장 값싼 원자탄(Die billigste Atombombe)이라고 까지도 지칭되어졌습니다. 이것들은 텅빈 미사여구(Floskeln)들이 아니라 실제로 추구되었던 정책(eine Politik)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노동자 농민세력(Die Arbeiter Und Bauern Macht)에 해(Schaden)를 끼치고 언젠가는 이 세력을 석권해 버릴 수도 있을 근거점(ein Stutzpunkt)을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심장부에 소유하려는데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베를린을 중심으로 하여 긴장이 있었고 그리고 또 현재도 있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도시가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해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해를 끼치도록 남용되는 결과로써 생겨났던 것이며 또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1차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서부 베를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직면하여 불대 다음과 같은 일은 완전히 이치에 맞지 않는 모순 투성입니다. 즉, 이러한 일의 결과가 서부 베를린 시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한탄을 하면서도, 그러나 이에 대한 원인을 제거하자는 일은 이번 회담에서도 거부하는 것은 완전히 모순에 빠져있는 태도인 것입니다.

<<조약의 초안>>(Vertragsentwurf) 나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의 이

롬으로 브란트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에게 서부 베를린에 있어서와 서부 베를린을 중심으로한 상황에 부담이 되는 일체의 활동을 앞으로는 중지하라고 긴급하고도 절실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중지하는 것은 지금 예정되고 있는 서부 베를린에 대한 4대국 협상뿐만 아니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의 관계의 발전에도 커다란 이로움이 될 것입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이 제시한 조약초안의 제 5 조에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은 독자적인 (자국적인) 정치단위 (selbständige politische Einheit)로서의 서부 베를린의 지위와 그리고 이러한 지위를 감안하여 두 국가가 서부 베를린에 대하여 가질 한계를 범으로 경찰 문제에 대하여 협의한다고 제안되어 있습니다.

《체신과 교통》(Post Und Verkehr) 에아푸르트에서 회담동안 우리는 두 국가의 체신 및 교통부들간에 행하여지고 있는 협상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관하여 독일 연방공화국의 브란트 수상에게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어려움은 서부 독일 대표들의 파괴적인 태도 (die destruktive Haltung) 에 기인하는 것이였음도 지적하였습니다.

브란트씨는 그의 연설에서 개별문제 목록을 상당한 범위까지 포함시켜서 제시하였으므로 우리의 이러한 지적은 그만큼 시의에 알맞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중시하는 사람은 특정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협상들이 계획된대로 결과를 남도록 배려해야 옳을 것이다.

《배상》(Wiedergutmachung) 서부 독일측은 독일 연방공화국이 배상조치를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이 배상조치라는 것이 아랍제국가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략을 재정지원하기 위하여 독일 연방공화국이 지출한 수십억 (die Milliardenbeträge) 을 말한다며는, 이것은 배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인은 에아푸르트에서 있었던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내각위원회회의장 (수상) 과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간의 회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문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여기에서 이제 행한 보고로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이 보고를 본인이 모든 문제를 여기에서 반복하지 않더라도 아무튼 본인이 에아푸르트에서 행한 성명과 관련시켜서 고찰해 주시기를 바랍

니다. 이 두가지를 비교 고찰해보실 것 같으면 여러분께서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대표단이 인민의회 (die Volkskammer) 에 의하여 결의된 우리 국가의 외교정책의 기본노선을 일관성있게 대표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수주의 (der Revanchismus) 에 단호하게 대항해나가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의 동등권에 입각한 관계의 수립을 촉진시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하여는 건설적이고 허심탄회하게 임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카셀》 (Kassel) 1970년 5월 21일에 독일 연방공화국과의 국경에서 가까운 지점인 카셀 (Kassel) 에서 독일 연방공화국 수상 브란트씨와 제 2차 회담을 갖기 위하여 만나자는 초청을 본인은 수락하였습니다.

《조약의 초안》 (Vertragseutwurf) 독일 연방공화국의 정부가 본인에 의하여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에아푸르트에서 제안된 견해를 이에 상응하는 진지성을 가지고 검토해 주고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동등권에 입각한 국제법상의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에 끌인할 준비를 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에 다시 한번 본인은 여기에서 우리의 희망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카셀에서 갖게 될 회담을 감안하여 볼때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1969년 12월 중순에 전하여진 우리의 조약초안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태도표명을 할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매우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간에 동등하고 국제법에 입각한 관계의 수립에 도달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본인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다함에 있어서 우리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민족 (das Volk der DDR) 의 이익과 모든 구라파 국가들의 민족의 이익과 그리고 이들의 영속적인 평화와 안전에 대한 희망을 기본으로 삼아서 임할 것입니다.

끝으로 에아푸르트 회담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기에 몇가지 점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는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장 (Spannung) 을 없이 하고, 안전과 평화를 최구하는 제민족의 갈망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들과 공동으로 앞으로도 이를 위하

여 단호히 임할 것입니다.

독일 연방공화국과 북대서양 (NATO) 조약기구 가맹국가들중 몇몇 국가들에는
어제도 그러했고 오늘도 에아푸르트에서 있었던 회담을 현실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결하여 이들 현실을 바탕으로 하여 보지 않고 환상을 불러 이르는
공상적인 관찰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견해》 (Gegensätzliche Auffassungen) 물론 분위기는
사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발표된 양측의 견해 (입장) 와 실제현황을 냉
철하게 고찰할 것 같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평화의 보장이라는 기본 문제들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
간의 평화적 공존 수립한다는 기본문제에 있어서 아직도 예나 마찬가지로 서로
상치되는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복수주의 정치 (die revanche
Politik) 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의 연방국회에서 행하여진 토론이 이
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형태는 어떠한 그리고 어떠한 민족주의적인 포장을
하고 등장하든 이와는 전혀 상관없이 복수주의적인 정치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경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방선거》 (Kommunalwahlen) 평화적 공존을 성취하는 일은 오래동안 계
속되는 그리고 집요한 투쟁을 통하여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투쟁과 노력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의 여부는 우리가 우리의 공화
국을 앞으로 어떻게 다방면으로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모든 시민은 지방선거에서 민족 (주의)
전선 (die Nationale Front) 후보들에게 그들의 투표를 던져줄 것이 요구됩니다.

소련과 그리고 기타의 다른 우리와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과
함께 우리는 우리 민족들 (unsere Volker) (역주 : 동·서 양독의 민족을 따로
따로 생각하는 견해) 의 평화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와 마찬가지로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출처 :)

1970.3.22 (동부) 베를린에 간행된

《새 독일》 (Neues Deutschland) 에서

프 랑 케 장 관

길을 찾게 될 것이다 (Man Wird

Wege finden) (1970.3.23)

독일 연방공화국 내무장관 에곤 프랑케 (Egon Franke) 씨는 1970년 3월 23일
에 슈피겔 (Spiel -역주 : 독일의 주간지) 지와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슈 피 겔 :

장관! 귀하는 빌리 브란트와 빌리 슈토프간의 회담의 진전을 어떻게 될 것이라
고 생각합니까?

프 랑 케 :

내 생각으로는 5월 21일에 카셀에서 있게 될 제 2차 회담에서는 에아푸르트
회담에서 발표된 양측의 기본태도의 피력에 대한 평가가 행하여질 것이며, 이것은
지금까지 협의된 것을 더 집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봅니다.

슈 피 겔 :

그러면 에아푸르트에서 벌써 어떤 특정한 테마들에 관하여 의견의 일치된
것이 있습니까?

<< 조약의 초안 >>

프 랑 케 :

없습니다. 아직은 문제가 그 범위를 좁히는 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에아푸르트에서 독일 연방공화국이 제시한 조약의
초안 이외에는 아무것에 관하여도 회담을 진행시켜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측이 이 초안에 대하여 물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조약의 초안을 수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태도로는 협상할 수 없다는 것이 예아푸르트에서 명확히 되었습니다.

슈 피 겔 :

그런데 슈토프씨가 독일 연방공화국으로부터 요구한 1천억 마르크 (100 Milliarden Mark)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프 랑 케 :

<< 1천억 마르크 >> (1,000 Milliarden Mark) 그것은 아주 고정된 액수입니다. (Das ist so eine fixe Summe) 이 액수속에는 베를린 장벽을 쌓기 전에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으로부터 일급가는 능력을 가진 노동력 (hochqualifizierte Arbeitskräfte) 이 이주해 감으로써 그쪽이 주장하는 국민경제상의 손실 (der Volks-wirtschaftliche Verlust)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슈 피 겔 :

그러면 연방공화국 수상은 이에 대하여 무어라고 대답하였습니까?

프 랑 케 :

자! 그무어라고 할까요, 연방공화국 수상은 이러한 이주 (현상) 은 어느정도까지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있어서의 사회정책적인 상황에도 물론 그 원인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하나의 공동 소위원회 (Arbeitsgruppe) 에서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토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슈 피 겔 :

국제법적인 승인문제가 두 국가가 국제연합의 정회원국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그 도가 좀 둔화되어진다는 것을 귀하는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까?

프 랑 케 :

<<조약 체결 당사자들의 동등한 가치>> (Gleichwertigkeit der Vertragschließenden) 국제법적 승인이라는 문제가 이상한 방법으로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양측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조약을 통한 의무 (die vertraglichen Verpflichtungen) 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어느 한쪽이 다른쪽과 다른 지위에 있어서는 않되고 (즉 동등한 지위) 그리고 조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은 동일한 가치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슈 피 겔 :

우리는 국제연합 회원국이 되는 것에 대하여 귀하에게 물었습니다.

프 랑 케 :

이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가 질서있는 협동에 달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가를 아주 객관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연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슈 피 겔 :

그러면 귀하가 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 랑 케 :

<< 3개 문제분야 >> (Drei Sachkomplexe) 3대 문제분야 (drei große Sachkomplexe) 가 협의되어야겠다고 우리는 제안하였습니다.

그 첫째가 병존과 공존문제 (das Neben-und Miteinander) 인데, 그러니까 독일 연방공화국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간의 관계가 되겠으며, 둘째는 이 두 독일국가 (die beiden Deutschen Staaten) 들간의 의사소통의 개선 (die Verbesserung der Kommunikation) 이겠습니다.

슈 피 겔 :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프 랑 케 :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령 사람의 왕래를 쉽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전체 분야가 이에 속하겠습니까.

우체 (Post) 문제, 철도 (Bahn) 문제와 그리고 이에 준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슈 피 겔 :

그리고 세계는?

프 랑 케 :

세계 문제분야가 차별대우 (Diskriminierung) 를 없애버리는 것인데, 우리 두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차별대우 철폐문제가 그 하나이겠고, 다음은 우리 두 국가가 대외적으로 갖는 관계, 즉 제 3국들과 갖는 관계에 있어서의 차별대우 철폐문제가 되겠습니다.

슈 피 겔 :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가지 서로 다른 문제가 제기되어 있다고 하겠습니까. 우선 그 첫째가 내독간의 관계 (die innerdeutsche Beziehungen) 겠습니까.

프 랑 케 :

그렇습니다. 이 관계를 무엇이라고 사람의 차이 여하에 따라서 부르던지간에 독일 영토상에 존재하고 있는 두 국가의 관계와 연관시켜 볼때에 제기되는 문제들이겠습니까.

슈 피 겔 :

그리고 두 국가가 외국 (Ausland) 에 대하여 갖는 관계는?

프 랑 케 :

독일 연방공화국 (die Bundesrepublik) 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DDR) 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독일 연방공화국은 독일 전체에 기여하는 관심사 (Interessen die dem Ganzen dienen) 를 대리로 맡아 볼 수는 있습니다 (wahrnehmen).

슈 피 겔 :

<< 공동위원회 >> (Gemeinsame Kommissionen) 사전에 공동위원회가 문제의 사실적인 (실제적인) 준비를 함이 없이 카셀에서 그냥 만나는 것이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프 랑 케 :

도대체가 양측이 만난다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뜻있는 일입니다. 준비문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준비는 양측대로 서로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셀에서 회담을 갖게 될때까지는 그러한 (공동) 위원회 같은 것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가 관철될 수도 있는 문제겠습니다.

아무튼 선언 (Deklamationen) 같은 것으로는 문제가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하는 진지한 의도 (der ernsthafte Wille) 는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나 있습니다.

슈 피 겔 :

그런데 자유 안전통행권 (보장) 법 (das Gesetz für Freies Geleit) 은 다른 쪽은 차별대우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그들은 1968년 여름에는 연사교환 (der Redneraustausch) 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데에 그 동기로 이용하였던 것이 이 법인데, 슈토프의 카셀 방문시까지 이 법을 폐지 (aufheben) 시키기 위하여 (독일) 연방정부가 무엇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까?

프 랑 케 :

<< 자유안전 통행권 (보장) 법 >> (Gesetz für freies geleit) 이 법을 제거하기 위한 (ausräumen)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이에 알맞게 개정되거나 혹은 그에 대한 대안을 제정해 둬서 없이 그냥 폐기되어 갈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일은 아주 빨리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카셀에서 있게 된 회담같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차원높은 회담 (ein politisch so hoch eingestuftes Treffen wie in Kassel) 이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슈 피 겔 :

장관님 ! 귀하는 나치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귀하는 악명이 자자한 999 형 (집행) 보병대대 (Strafbataillon) 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 나치시대의 강제수용소 (Konzentrationslager) 부헨뵐트 (Buchenwald) 가 있던 곳에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DDR) 국의 군대사열을 받았을때 귀하의 기분이 어떠했습니까 ?

프 랑 케 :

아, 압니까 이 군대예식이라는거, 모두가 아주 부끄러웠습니다 (alles so Schemenhaft) .

그러한 도시들과 접촉하게 되면 개인개인이 체험한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이것을 표현해서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식은 경의의 표시였으며, 이러한 일에 접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각자가 스스로의 내면 문제를 해결해서 처리해 내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출 처)

1970년 3월 23일자의 <<슈피겔>>지

東西獨關係文獻集

1973年9月29日 印刷

1973年9月30日 發行

발행처 國土統一院 調査室

인쇄처 서울輕印刷株式會社

電話 75~4477. 73~8144番

